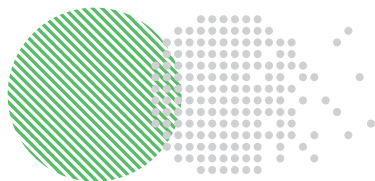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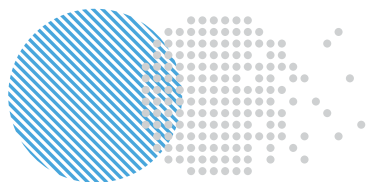


연구보고25-기본04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김형주 ·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저 자 김형주, 장근영

연구진 연구책임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김지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수요자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구분됨
- 첫째,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임
- 둘째,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임

### ■ 연구내용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평가모형, 정책평가,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 평가,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임. 정책평가 및 평가모형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며, 청년정책과 청년정책 평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평가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 수요자 관점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논의하고, 평가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 수요자 중심 평가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청년정책 평가에 관한 주요국 해외사례 고찰임. 유럽, 미국, 일본에서 그동안 진행된 청년정책 진단 혹은 평가 동향과 그 시사점을 살펴봄
- 셋째,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개발임. 수요자 중심 평가의 분류, 영역, 지표 등 평가체계를 설계하여 평가모형(안)을 구안함. 구안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체제 및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발된 수요자 중



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해 AHP를 통한 평가가중치를 도출함. 이와 같이 타당화된 평가모형을 근거로 현장 적용을 위한 평가도구 및 조사도구를 제작함

- 넷째,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을 위한 평가임.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정책수요자인 청년 당사자 평가로 구분됨. 전문가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별 평가를 시행함. 수요자 평가는 청년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인구수,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으로 추출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수요자 평가를 시행함. 수요자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와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정성평가로 운영하고, 청년 대상 수요자 평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수요와 욕구 조사가 병행됨
- 다섯째, 정책 제언 및 시사점임.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자중심 평가의 진단 결과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임. 정책의 개선 방향 및 필요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가모형의 일반화가능성과 정책 현장 적용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 ■ 연구방법

-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헌연구임. 이론적 평가모형과 정책평가의 유형을 고찰하고,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평가 동향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 평가의 청년정책 적용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임. 수요자 중심 평가체계, 평가지표 설계에 대한 자문, 평가에 따른 진단결과 및 정책방안 제언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함
- 셋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임.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서 설계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체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함

- 넷째, 개발된 평가체제의 평가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함
- 다섯째,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따른 전문가 평가임. 전문가 1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된 평가체제와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여섯째,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따른 정책수요자 당사자인 청년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요구 조사임. 개발된 평가체제와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수요자 평가를 시행한다.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7개 시도 표본수 약 1,000명 내외를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으로 추출하고, 청년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IDI)을 시행함. 수요자 평가를 위한 조사에서는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인식을 묻는 설문과 면담을 병행함
- 일곱째, 정책연구실무협의회임.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원사업 기관 등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를 통해 연구방향, 결과에 대한 평가,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협의를 함
- 여덟째, 정책포럼의 개최임. 수요자 중심 평가를 통한 청년정책 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진, 관련 전문가들과의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심층적인 협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함

## ■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

- 수요자 중심 평가의 분류, 영역, 지표 등 평가체계를 설계하여 평가모형(안)을 구안하였으며, 구안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체제 및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3개 평가영역 15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모형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함
- 수요자 청년의 양적 진단결과에 있어서 첫째,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있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음. 둘째,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있어서 5개 중점 분야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청년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청년의 평가점수 보다 전문가의 평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음. 셋째,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있어서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실제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수요자 청년의 질적 진단결과(심층면담)에 있어서 첫째,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있어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립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 둘째,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의 경우, 청년들은 5대 중점 분야 설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일자리와 주거 분야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했음. 셋째,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음.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공정 채용 및 직장 문화 개선의 미흡을 주요 문제로 여겼음
- 수요자 청년의 정책 요구조사 결과, 청년 당위성과 배경을 분석하여 파악함에 있어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현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나타냈음
-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자 청년의 진단 평가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제 구축이란 비전 하에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6개 분야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및 청년정책 평가 동향 고찰

- 평가모형과 정책평가의 유형과 시사점
- 청년정책 평가 동향과 시사점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과 청년정책 활용의 의의

● 청년정책 평가에 관한 해외 사례

- 유럽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 미국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 일본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개발

- 수요자 중심 평가의 분류, 영역, 지표 등 평가체계를 설계하여 평가모형(안)을 구안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체제 및 평가지표에 대해 델파이조사를 통해 3개 평가영역 15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모형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여 개발함.
-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해 AHP를 통한 평가가 중치를 도출함
- 이와 같이 타당화된 평가모형을 근거로 실제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및 조사도구를 제작함

● 수요자 청년의 양적 진단결과

- 첫째,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있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음. 청년과 전문가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였음. 청년의 경우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1점을 기록했음. 이어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에 대해 3.35점의 평균을 기록했으며,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는 3.26점의 평균을 보였음. 반면,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음. 한편,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를 4.3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이는 청년의 평균 점수(3.41점)보다 0.92점 높은 수치임. 다음으로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가 4.07점,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가 4.00점으로 평가되어, 각각 청년 점수보다 0.93점, 0.74점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와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항목은 각각 3.73점과 3.40점으로, 청년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그 격차는 각각 0.38점과 0.15점으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청년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둘째,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있어서 5개 중점 분야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청년 응답자의 54.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청년 전체 평균은 3.52점, 전문가 평균은 4.13점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책 과제 설정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가 고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음. 주거 및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정책 참여에 대해 전문가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음. 다양성 고려의 경우 일자리, 교육, 참여·권리 분야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지만 주거,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정에 청년 참여가 고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전체 타당성 평가 중 가장 낮은 2.50점으로 평가되었음
- 셋째,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있어서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실제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전문가들 또한 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한 평가는 주거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보다 더 낮게 평가했음. 청년들은 주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해 전문가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와 ‘삶의 질 개선 기여

여부'를 전문가보다 높게 평가했음.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음. 분야별 정책의 지속 필요성은 대체로 약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참여·권리 분야에서 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청년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특히 참여·권리 분야의 해당 점수가 2.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또한, 참여·권리 분야에서 해당 정책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67점의 평가가 나타나 전문가의 전체 효과성 평가 중 가장 낮았음

### ● 수요자 청년의 질적 진단결과(심층면담)

- 첫째,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있어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립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 특히 '격차 및 기회 불평등 심화'에 대한 환경 분석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였음. 하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정책 수립 배경이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거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원인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음
- 둘째,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의 경우, 청년들은 5대 중점 분야 설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일자리와 주거 분야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했음. 정책 과제들이 청년들의 '기초 자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세부 내용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다양한 직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음. 또한, 남성 응답자들은 다양성이 고려된다고 느낀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나 특정 전공의 취업 어려움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응답했음. 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비용 경감 등의 정책 과제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허위 매물 단속이나 전세 사기 예방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그러나 '주거 취약 청년'의 모호한 기준이나 부모 배경에 따른 혜택 제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음.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와 같은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정책 내용이 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았음. 또한, 정책이 지나치게 대학 중심적이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깨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청년 도약 계좌, 내일 저축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높은 공감대를 보였음. 정책이 군 복무 남성,

청년 예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특정 정책의 경우 중복 지원이나 지원 대상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음. 청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도성을 확대하는 것에 중요성을 공감했음. 하지만 '청년 참여위원회' 같은 제도의 홍보 부족과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으며, 정책 참여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수에게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음

- 셋째,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음.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공정 채용 및 직장 문화 개선의 미흡을 주요 문제로 언급했음.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제감 효과는 미흡하다고 보았음. 또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현황 파악과 채용 비리 감시 등 질 관리 및 개선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음. 주거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평가했음. 하지만 현 정책 만으로는 집값 안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책의 혜택이 특정 소득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했음. 정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이나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등록금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았으나, 과도한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음. 교육과 일자리의 실질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되었음. 청년 적금, 군 적금, 청년 도약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러나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화' 분야 정책이 일반 청년보다는 예술가 등 특정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청년들은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음. 정책의 인지도가 낮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된다는 인식이 강했음.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대표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수요자 청년의 정책 요구조사 결과

- 우선, 청년 당위성과 배경을 분석하여 파악함에 있어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현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 반영'이 6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음. 이 응답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만30~34세: 64.0%) 더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수도권 지역 격차 및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청년 육성 정책 필요성'(59.9%),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청년 역량 강화 필요성'(58.1%)이 뒤를 이었음. 청년들의 삶의 환경을 분석할 때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음. 이 응답은 만30~34세 집단에서 72.9%로 가장 높았음. 또한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66.1%),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53.4%)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음.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할 때는 '다양한 청년 집단(연령, 지역, 계층 등)의 요구 반영 정도'가 68.9%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음. 이는 특히 만30~34세 응답자(70.8%)에게서 높게 나타났음.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이 5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음.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가 69.5%,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가 58.2%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가 32.7%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음.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 지원'이 27.3%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연령이 낮을수록(만19~24세: 28.5%) 이 응답이 높았음.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는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가 3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주거 분야에 있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은 69.5%로 나타나 주거 분야는 청년들이 가장 기대하는 변화로 나타났음.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25.7%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가 2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는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24.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음
- 교육 분야에 있어서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 촉진'이 26.1%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만19~24세 응답자(29.4%)에게서 특히 높은 응답을 보였음.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학금 및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가 21.2%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음.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가 2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대학 원격교육 지원 강화 및 질적 향상'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확충'이 23.7%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으로 꼽혔음
- 복지·문화 분야에 있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저축계좌 확대'가 33.8%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강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청년 건강증진 정책으로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이 34.1%로 가장 중요하게 꼽혔으며,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28.5%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음.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건강검진 정책개선 및 확대'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년 자산운용 및 재정안정 지원'이 22.0%로 높게 나타났음

- 참여·권리 분야에 있어서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가 28.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만19~24세 집단에서 30.6%로 가장 높았음.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청년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이 30.6%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이 20.7%, '청년의 국제활동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19.7%, '글로벌 이슈에 관한 청년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가 1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30.3%로 가장 높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 핵심 정책제언

### 핵심 정책제언(1)

-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계 구축의 비전과 분야
  -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자 청년의 진단 평가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계 구축이란 비전 하에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6개 분야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년정책 수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의 요구 반영 체계 구축
  - 청년 삶 분석의 리얼리티 제고를 위한 패널 조사 추진
  -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요자 연차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강화
  - 청년정책 비전 수립 청년 테스크포스 운영
  - 청년의 변화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미래사회 예측 연구 추진
-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취업 청년의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일터 안전망 구축
  -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체 지원
  - 공정 및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청년 근로 환경 모니터링 사업 추진
- 청년정책의 주거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주거 영향 평가 추진
  - 안정적 주거를 위한 청년의 정책요구 실태조사 실시
  - 청년의 전월세 주거 지원 정책의 다양성 확대
  - 청년의 안전한 주택 거래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장기 주거 지원 로드맵 수립

## 핵심 정책제언(2)

- 청년정책의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지역-산업기반 미래 첨단직무 캠퍼스 구축
  - 평생교육 바우처 및 AI 진로설계 플랫폼 구축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이동학습권 보장
  - 사회취약·저경험 청년 진로·생활 통합 동행코치 시스템 구축
  - 디지털·AI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형 온라인 학습인프라 구축
  
- 청년정책의 복지·문화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청년 맞춤형 심리·정서 건강 클리닉 네트워크 구축
  - 청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허브 구축
  - 지역문화 재생을 위한 유스컬처랩 구축
  - 청년 개인별 복지자원 통합플랫폼 ONE 복지허브 구축
  - 청년생활기술성장센터 프로그램 사업 운영
  
- 청년정책의 참여·권리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디지털·데이터 시대 청년 권리보호 및 정보주권 강화
  - 온오프 융합 청년정책시민의회 설치
  - 청년 참여 미디어 모니터링 패널 운영
  - 지역별 청년참여 환경격차 해소 및 청년참여지원 거점센터 구축
  - 청년참여 정책실명제·예산배심제 추진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연구보고 25-기본04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구내용 ..... 8
- 3. 연구방법 ..... 9

## II.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및 청년정책 평가 동향

- 1. 평가모형과 정책평가의 유형과 시사점 ..... 13
- 2. 청년정책 평가 동향과 시사점 ..... 23
- 3.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과 청년정책 활용의 의의 ..... 35

## III. 청년정책 평가에 관한 해외 사례

- 1. 유럽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 43
- 2. 미국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 51
- 3. 일본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 60

#### Ⅳ.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의 개발

- 1.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 구안 ..... 77
- 2. 델파이 조사 및 분석결과 ..... 79
- 3. AHP 조사 및 분석결과 ..... 99

#### Ⅴ.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의한 청년정책 양적 진단

- 1. 진단 및 조사 개요 ..... 109
- 2. 정책수요자 청년의 청년정책 양적 진단 결과 ..... 111
- 3.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청년정책 진단 결과 ..... 162
- 4.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및 전문가 진단 총괄비교 :  
가중치 반영 ..... 168
- 5. 양적 진단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71

#### Ⅵ.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의한 청년정책 질적 진단

- 1. 면담조사 개요 ..... 177
- 2. 정책수요자 청년의 청년정책 질적 진단 결과 ..... 180
- 3. 청년정책의 일반적 이해 ..... 243
- 4. 질적 진단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48

#### Ⅶ.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청년의 요구 조사

- 1.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요구 ..... 255
- 2. 요구조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315

#### Ⅷ.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 323
- 2. 정책 제언 ..... 326
- 3. 결론 ..... 386

#### 참고문헌 ..... 395

#### 부 록 ..... 405

## 표 목차

표 I-1. 고용률 및 실업률 연도별 추이 .....	4
표 II-1. Tyler의 목표 중심 모형에서의 평가 절차 .....	15
표 II-2. Provus 격차평가모형의 절차별 평가내용 .....	15
표 II-3. Scriven 평가모형의 고려 요소 .....	18
표 II-4. 정책평가에 대한 정의 .....	19
표 II-5. 정책평가의 유형 .....	20
표 II-6. 정책평가에 대한 기준 .....	21
표 II-7. Fisher의 다차원 정책평가 방법론의 단계별 평가초점 .....	22
표 II-8.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정책 (2023년 기준) .....	24
표 II-9. 청년정책 시행계획 현황 (2024년 기준) .....	26
표 II-10. 2024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평가지표 .....	27
표 II-11.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평가지표 .....	28
표 II-12. 이행노동시장 유형과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군 .....	30
표 II-13.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	32
표 II-14. Scriven의 평가요소와 정책평가 요소간 연계성 .....	35
표 II-15. BSC 모형의 4가지 관점 .....	37
표 II-16. 정책평가 추진모형의 분석 .....	38
표 III-1. 평가지표와 평가문항 .....	47
표 III-2. 미국 교육부 청년정책 프로그램 개요 .....	52
표 III-3. 미국 노동부 청년정책 프로그램 개요 .....	53
표 III-4. 미국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프로그램 개요 .....	55
표 III-5. 미국 법무부 청년정책 프로그램 개요 .....	57
표 III-6. 아동·청년 인덱스보드 항목 .....	69
표 IV-1. 델파이 조사 개요 .....	79
표 IV-2. 델파이 참여 전문가 .....	79
표 IV-3.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1차 구안(안) :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 .....	80
표 IV-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1차 구안(안) :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	80



표 IV-5. 평가 영역 적절성 평가 .....	81
표 IV-6. 평가 항목 적절성 평가 .....	82
표 IV-7.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	83
표 IV-8.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	84
표 IV-9.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	85
표 IV-10. 평가 영역 적절성 평가 .....	86
표 IV-11.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	87
표 IV-12.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	88
표 IV-13.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	89
표 IV-14.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	90
표 IV-15. 2차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구안(안) .....	92
표 IV-16. 평가영역 적절성 평가 .....	93
표 IV-17.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94
표 IV-18.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	95
표 IV-19.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	96
표 IV-20.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최종 개발(안) .....	98
표 IV-21. AHP 조사 개요 .....	99
표 IV-22. AHP 참여 전문가 .....	99
표 IV-23. 쌍대비교의 척도 .....	100
표 IV-24. 쌍대비교의 예(이원비교행렬) .....	101
표 IV-25. 정규화의 예(이원비교행렬) .....	101
표 IV-26. 평가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	102
표 IV-27.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102
표 IV-28.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	103
표 IV-29.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	104
표 IV-30. 종합 중요도 .....	104
표 V-1. 조사 응답자 특성 .....	110
표 V-2.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	111
표 V-3.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	112
표 V-4.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	113
표 V-5.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14
표 V-6.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	115
표 V-7.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 설정은 적절한가 .....	116
표 V-8.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17

표 V-9.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	118
표 V-10.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	119
표 V-1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120
표 V-1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21
표 V-1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	122
표 V-1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	123
표 V-1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124
표 V-16.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25
표 V-17.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	126
표 V-18.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	127
표 V-19.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128
표 V-20.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29
표 V-21.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	130
표 V-2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	131
표 V-2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132
표 V-2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33
표 V-2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	134
표 V-26.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	135

표 V-27.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136
표 V-28.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37
표 V-29.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	138
표 V-30.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139
표 V-3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	140
표 V-3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141
표 V-3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42
표 V-3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	143
표 V-3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144
표 V-36.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	145
표 V-37.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146
표 V-38.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47
표 V-39.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	148
표 V-40.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149
표 V-4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	150
표 V-4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151
표 V-4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52
표 V-4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	153
표 V-4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154
표 V-46.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	155

표 V-47.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 공급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156
표 V-48.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57
표 V-49.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	158
표 V-50.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159
표 V-5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	160
표 V-5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 공급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161
표 V-53.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162
표 V-54. 일자리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	163
표 V-55. 주거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	164
표 V-56. 교육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	165
표 V-57. 복지·문화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	166
표 V-58. 참여·권리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	167
표 V-59.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평가지표 .....	168
표 V-60.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평가지표 .....	169
표 V-61.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평가지표 .....	170
표 VI-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	178
표 VI-2. 면담조사 주요 내용 .....	178
표 VII-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배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256
표 VII-2.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배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	256
표 VII-3.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257
표 VII-4.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	258
표 VII-5.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 성과 및 문제점 진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259

표 VII-6.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 성과 및 문제점 진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	260
표 VII-7.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261
표 VII-8.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	262
표 VII-9.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263
표 VII-1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	264
표 VII-11.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265
표 VII-12.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66
표 VII-13.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	267
표 VII-14.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68
표 VII-15.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69
표 VII-16.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70
표 VII-17.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71
표 VII-18.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72
표 VII-19.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273
표 VII-20.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	274
표 VII-21.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	275
표 VII-22.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76
표 VII-23.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	277
표 VII-24.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78
표 VII-25.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79
표 VII-26.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80
표 VII-27.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81
표 VII-28.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82
표 VII-29.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283

표 VII-30.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	284
표 VII-31.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	285
표 VII-32.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86
표 VII-33.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87
표 VII-34.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88
표 VII-35.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289
표 VII-36.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90
표 VII-37.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 ..	291
표 VII-38.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92
표 VII-39.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293
표 VII-40.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	294
표 VII-41.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 .....	295
표 VII-42.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96
표 VII-43.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	297
표 VII-44.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298
표 VII-45.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	299
표 VII-46.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300
표 VII-47.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 .....	301
표 VII-48.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302
표 VII-49.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303
표 VII-50.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	304
표 VII-51.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305
표 VII-52.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306
표 VII-53.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	307

표 VII-54.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308
표 VII-55.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	309
표 VII-56.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310
표 VII-57.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	311
표 VII-58.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	312
표 VII-59.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313
표 VII-60.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	314

## 그림 목차

그림 I-1. 2025년 8월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4
그림 I-2. 연령별 인구 및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천명) .....	5
그림 I-3.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의견 반영 정도 .....	6
그림 I-4. 정부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청년들의 참여 .....	6
그림 I-5. 청년들이 정부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	7
그림 II-1. Hammond의 평가모형에서의 평가 구조 .....	16
그림 II-2. Stufflebeam의 의사결정모형 .....	17
그림 II-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체계와 비전 개요 .....	24
그림 II-4. 청년정책의 성과측정 프레임워크 예 .....	31
그림 II-5. 청년정책 평가모형의 예 .....	33
그림 III-1. 정책평가포털사이트 홈페이지 .....	63
그림 III-2.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개요 .....	65
그림 III-3. 일본 정책평가방법 .....	65
그림 IV-1. 평가 영역 적절성 평가 .....	81
그림 IV-2. 평가 항목 적절성 평가 .....	82
그림 IV-3.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	83
그림 IV-4.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	84
그림 IV-5.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	85
그림 IV-6. 평가 영역 적절성 평가 .....	86
그림 IV-7.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	87
그림 IV-8.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	88
그림 IV-9.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	89
그림 IV-10.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	90
그림 IV-11. 평가영역 적절성 평가 .....	93
그림 IV-12.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94
그림 IV-13.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	95
그림 IV-14.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	96
그림 V-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	111



그림 V-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	112
그림 V-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	113
그림 V-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14
그림 V-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	115
그림 V-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 설정은 적절한가 .....	116
그림 V-7.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17
그림 V-8.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	118
그림 V-9.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	119
그림 V-10.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120
그림 V-11.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21
그림 V-1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	122
그림 V-1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	123
그림 V-1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124
그림 V-15.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25
그림 V-16.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	126
그림 V-17.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	127
그림 V-18.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128
그림 V-19.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29
그림 V-20.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	130
그림 V-21.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	131

그림 V-2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132
그림 V-2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133
그림 V-2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	134
그림 V-2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	135
그림 V-26.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136
그림 V-27.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37
그림 V-28.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	138
그림 V-29.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139
그림 V-30.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	140
그림 V-3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141
그림 V-3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42
그림 V-3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	143
그림 V-3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144
그림 V-3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	145
그림 V-36.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146
그림 V-37.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47
그림 V-38.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	148
그림 V-39.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149
그림 V-40.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	150
그림 V-4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151

그림 V-4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52
그림 V-4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	153
그림 V-4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154
그림 V-4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	155
그림 V-46.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156
그림 V-47.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57
그림 V-48.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	158
그림 V-49.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159
그림 V-50.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	160
그림 V-5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161
그림 V-52.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168
그림 V-53.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	169
그림 V-54.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	170
그림 VI-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180
그림 VI-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일자리) ..	188
그림 VI-3.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주거) ..	194
그림 VI-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교육) ..	198
그림 VI-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복지·문화) ..	203
그림 VI-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참여·권리) ..	208
그림 VI-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일자리) ..	213
그림 VI-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주거) ..	219
그림 VI-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교육) ..	225
그림 VI-10.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복지·문화) .....	231
그림 VI-1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참여·권리) .....	237
그림 VI-1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년정책의 일반적 이해 .....	243
그림 VII-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배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255

그림 VII-2.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257
그림 VII-3.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 성과 및 문제점 진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259
그림 VII-4.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261
그림 VII-5.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263
그림 VII-6.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265
그림 VII-7.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	267
그림 VII-8.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69
그림 VII-9.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71
그림 VII-10.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273
그림 VII-11.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	275
그림 VII-12.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	277
그림 VII-13.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79
그림 VII-14.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81
그림 VII-15.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283
그림 VII-16.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	285
그림 VII-17.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87
그림 VII-18.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289
그림 VII-19.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 .....	291
그림 VII-20.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293
그림 VII-21.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 .....	295
그림 VII-22.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	297
그림 VII-23.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	299
그림 VII-24.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 .....	301
그림 VII-25.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303
그림 VII-26.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305
그림 VII-27.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	307
그림 VII-28.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	309
그림 VII-29.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	311

그림 Ⅷ-30.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313
그림 Ⅷ-1. 정책 비전 및 분야 .....	323
그림 Ⅷ-2. 정책당위성, 일자리, 주거 분야 정책과제 .....	324
그림 Ⅷ-3.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 .....	325
그림 Ⅷ-4.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326
그림 Ⅷ-5.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328
그림 Ⅷ-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330
그림 Ⅷ-7.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332
그림 Ⅷ-8.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334
그림 Ⅷ-9.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336
그림 Ⅷ-10.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일자리) ..	338
그림 Ⅷ-11.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 .....	340
그림 Ⅷ-12.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 .....	342
그림 Ⅷ-13.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344
그림 Ⅷ-14.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	346
그림 Ⅷ-1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주거) ..	348
그림 Ⅷ-16.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	350
그림 Ⅷ-17.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	352
그림 Ⅷ-18.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	354
그림 Ⅷ-19.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356
그림 Ⅷ-20.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 ..	358
그림 Ⅷ-21.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	364
그림 Ⅷ-22.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	366
그림 Ⅷ-23.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 .....	370
그림 Ⅷ-24.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378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이후에 본격화된 청년세대의 위기는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국가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회 문제라는 공감대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되고 같은 해 8월에 시행되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올해 다음 5개년 동안의 새로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은 어떤 성과를 거뒀으며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의 효과와 개선점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향후 중장기 정책이 보다 실효적이고 수요자인 청년에게 체감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여러 청년 정책연구에서 시행한 청년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의 청년정책을 돌아볼 때 청년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거나, 정책의 효과나 성과가 충분히 있었는지에 대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평가는 관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할 때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인식과 판단을 파악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정책의 질 제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청년의 삶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 중에서 2024년 한해 동안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9.5%로 전년에 비해 0.3%p 올라간 반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6.1%로 0.4%p 낮아졌다. 전체 취업자 수는 2,857만 6천 명으로 15만 9천 명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14만 4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5a).

1)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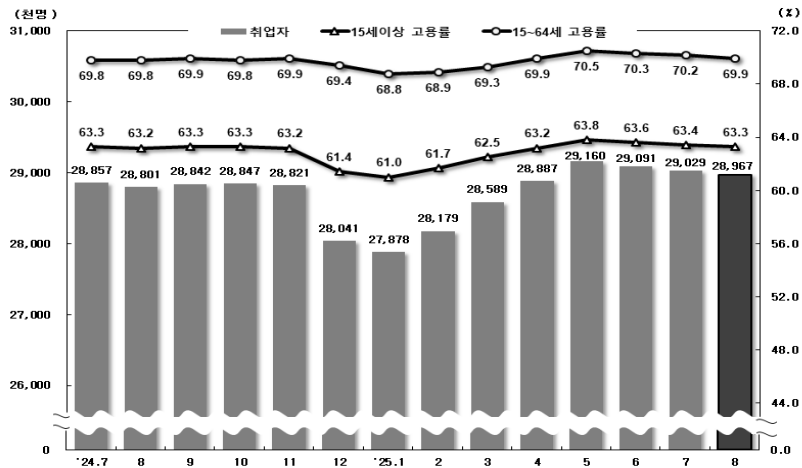


표 1-1. 고용률 및 실업률 연도별 추이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고용률(%)	60.1	60.5	62.1	62.6	62.7
• 15~64세(OECD비교기준)	65.9	66.5	68.5	69.2	69.5
• 15~29세(청년층)	42.2	44.2	46.6	46.5	46.1
취업자(만명, 전년대비증감)	-21.8	36.9	81.6	32.7	15.9
• 15~64세(OECD비교기준)	-45.5	15.0	54.4	6.8	-12.2
• 15~29세(청년층)	-18.3	11.5	11.9	-9.8	-14.4
인 구(만명, 전년대비증감)	28.1	29.5	18.0	14.7	16.3
• 15~64세(OECD비교기준)	-15.3	-14.1	-26.5	-27.8	-33.8
• 15~29세(청년층)	-14.9	-14.1	-20.3	-17.7	-23.8
실업률(%)	4.0	3.7	2.9	2.7	2.8
• 15~29세(청년층) 실업률	9.0	7.8	6.4	5.9	5.9
• 25~29세	8.1	7.3	6.0	5.9	5.6

\* 출처: 통계청(2025a).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25.01.15.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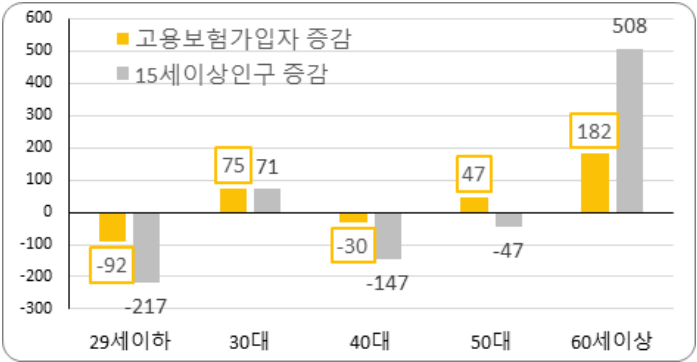
가장 최근 발표된 동향인 2025년 8월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15세이상 취업자는 2,89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6천명 증가하였다(통계청, 2025b).



\* 출처: 통계청(2025b). 2025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25.09.10. p. 3.

그림 1-1. 2025년 8월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성별, 연령별 인적 속성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남성 가입자는 85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 증가하였고 여성 가입자는 70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2천명 증가하였다. 하지만, 연령별 증감에서 30대(+75천명), 50대(+47천명), 60세이상(+182천명)은 증가한데 반하여, 29세 이하(-92천명)와 40대(-30천명)는 감소하였는데, 29세이하는 인구감소 영향을 받으며 제조업(-22천명), 정보통신(-19천명), 도소매(-17천명), 전문과학기술(-8천명)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증감률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들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3.9%p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5).



\* 출처: 고용노동부(2025).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09.08.p. 13.

그림 1-2. 연령별 인구 및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천명)

2022년 시행된 청년대상 조사에서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4.3%로 나와, 반영한다는 의견(25.7%)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청년정책이 정책고객이자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의 관점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형주, 김기현, 배정희, 신선미, 기현주,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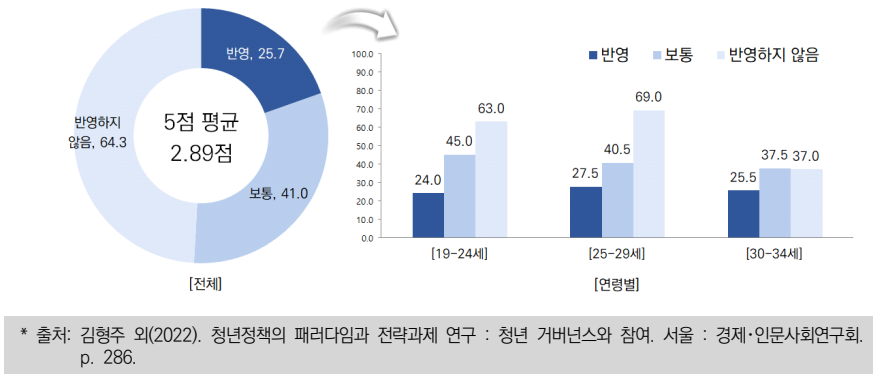


그림 1-3.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의견 반영 정도

동 조사에서 정부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청년들의 참여에 관해서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34.8%로 충분하다는 의견(26.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정부(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7.5%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응답(32.5%)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김형주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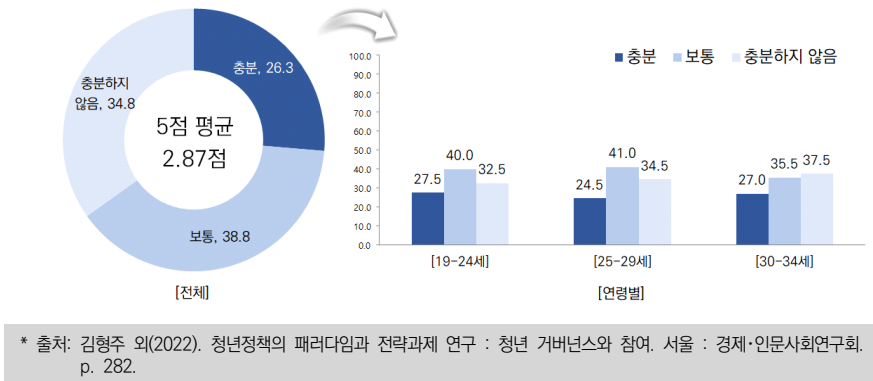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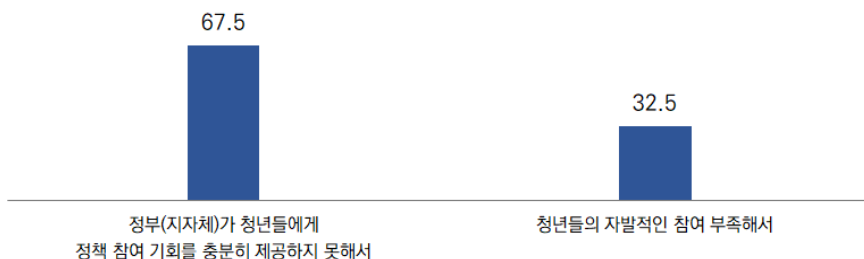


그림 1-4. 정부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청년들의 참여



\* 출처: 김형주 외(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 청년 거버넌스와 참여. 서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284.

**그림 1-5. 청년들이 정부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세부 실행계획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나, 청년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청년기본법 제2조의 이념 구현을 위해 계획되어 시행계획의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에서 청년정책 본격 궤도 진입, 일자리 위주 전개로 인해 청년특성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청년정책으로 전환 필요를 간략히만 언급하고 있어, 정책의 청년 친화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관계부처 합동,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 평가를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고객의 욕구와 시각을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 평가는 청년의 참여·주도성,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시행계획 이행도의 3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시행계획 이행도의 배점이 가장 높아 정책고객인 청년의 욕구 반영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인 평가 체계에서 평가의 주체가 전문가 그룹과 정책고객인 청년들이 되어,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의견과 욕구에 부합하는가를 파악하고 정책수요에 부합하는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며, 둘째,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모형, 정책평가,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 평가,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이다. 정책평가 및 평가모형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며, 청년정책과 청년정책 평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평가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 수요자 관점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논의하고, 평가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 수요자 중심 평가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청년정책 평가에 관한 주요국 해외사례 고찰이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그동안 진행된 청년정책 진단 혹은 평가 동향과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셋째,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개발이다. 수요자 중심 평가의 분류, 영역, 지표 등 평가체계를 설계하여 평가모형(안)을 구안한다. 구안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체제 및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해 AHP를 통한 평가기준치를 도출한다. 이와 같이 타당화된 평가모형을 근거로 현장 적용을 위한 평가도구 및 조사도구를 제작한다.

넷째,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을 위한 평가이다.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정책수요자인 청년 당사자 평가로 구분된다. 전문가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별 평가를 시행한다. 수요자 평가는 청년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인구수,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으로 추출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수요자 평가를 시행한다. 수요자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와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정성평가로 운영하고, 청년 대상 수요자 평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수요와 요구 조사가 병행된다.

다섯째, 정책 제언 및 시사점이다.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자중심 평가의 진단 결과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이다. 정책의 개선 방향 및 필요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가모형의 일반화가능성과 정책 현장 적용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3. 연구방법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이론적 평가모형과 정책평가의 유형을 고찰하고, 청년정책 및 청년 정책평가 동향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 평가의 청년정책 적용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이다. 수요자 중심 평가체계, 평가지표 설계에 대한 자문, 평가에 따른 진단결과 및 정책방안 제언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한다.

셋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이다.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서 설계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체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다.

넷째, 개발된 평가체제의 평가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따른 전문가 평가이다. 전문가 1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된 평가체제와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여섯째,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따른 정책수요자 당사자인 청년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요구 조사이다. 개발된 평가체제와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수요자 평가를 시행한다.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7개 시도 표본수 약 1,000명 내외를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으로 추출하고, 청년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IDI)을 시행한다. 수요자 평가를 위한 조사에서는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인식을 묻는 설문과 면담을 병행한다.

일곱째,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원사업기관 등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를 통해 연구방향, 결과에 대한 평가,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협의를 한다.

여덟째, 정책포럼의 개최이다. 수요자 중심 평가를 통한 청년정책 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진, 관련 전문가들과의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심층적인 협의와 토론의 장을 갖는다.



## ○ — 제2장 수요자 중심 평가 모형 및 청년정책 평가 동향

- 1. 평가모형과 정책평가의 유형과 시사점
- 2. 청년정책 평가 동향과 시사점
- 3.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과 청년정책 활용의 의의





## 1. 평가모형과 정책평가의 유형과 시사점<sup>2)</sup>

### 1) 평가모형의 유형 및 시사점

정책을 평가할 때 평가체계의 설계 즉, 평가절차 및 차원, 평가영역 및 지표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평가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만들 수 있지만, 일반화가능성이 검증된 이론적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평가체계를 설계한다면 평가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평가항목간 공변량성과 인과성의 오류를 상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모형은 20세기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는데 여기서 주요 평가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이론모형이 토대가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학자들이 구분하고 있는 평가모형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 기준과 비교하여 성취결과와 불일치 정도 혹은 차이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수집하는 과정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정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과 판단,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강점이나 가치가 어떠한지를 결정하거나 탐색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김성렬, 1999).

그 밖에도 평가모형은 또 다른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전적 모형과 대안적 모형이 그것이다. 첫째, 고전적 평가모형에는 목표달성 확인을 위해 다양한 평가준거 활용을 강조한 Metfessel과 Michael의 평가모형과 프로그램기관행동 차원의 3차원 입방체를 강조한 Hammond의 평가모형, 그리고 목표중심 평가모형과 인정평가모형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대안적 평가모형에는 수요자(수혜자), 의사결정, 전문

2) 이 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성, 판단, 참여반응, 대화 중심의 평가모형으로 구성된다(이영만 외, 2004).

평가모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목표달성모형(의도한 목표의 달성 정도 파악), 가치판단모형(평가결과가 얼마나 유의미하고 바람직한가), 의사결정모형(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정모형(전문가 협의체에 의하여 결정한 평가준거나 평가기준에 부합한지 혹은 도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프로그램 혹은 기관 자체를 인정), 체제접근모형(평가 대상을 하나의 체제로 파악하여 일반적 체제 원리를 적용하여 평가), 참여자만족모형(조직 참여자의 욕구 충족 정도 측정), 자연주의모형(새롭게 등장하는 상황과 요구에 적응 대응하여 평가자와 평가 의뢰자간 협상을 통한 평가) 등으로 구분한다(이승희, 최금진, 박은실, 2005).

여기서는 평가모형의 구분을 목표중심 평가모형, 의사결정중심 평가모형, 수요자중심 평가모형의 3가지 유형으로 각 평가모형의 의도와 이론적 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목표중심 평가모형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에 주안점 두고 평가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할 때 전략적으로 성취해야 될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에 설정한 목표이다. 대표적인 목표 중심 평가모형의 유형은 Tyler의 목표달성모형(objective-oriented evaluation model)과 Provus의 격차평가모형, Hammond의 평가과정모형 등이 있다(김형주, 김영애, 조선하, 2009).

Tyler의 목표달성모형의 특징은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에 있다. 정책의 시작 단계에서 향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를 측정가능하도록 기술하는 것이 이 평가모형의 핵심이 된다.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의 목표가 추상적이고 측정가능하지 않다면 Tyler의 목표달성모형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다음 표는 Tyler의 목표달성모형의 기본적인 평가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II-1. Tyler의 목표 중심 모형에서의 평가 절차

절 차	평가 내용
1. 목표 선정	일반 목표를 설정한다
2. 목표 명시	일반 목표를 행동 목표로 진술한다
3. 도구 제작	평가 방법과 도구를 선정 또는 개발한다
4. 자료 수집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5. 가치 판단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목표의 달성도를 파악한다

\* 출처: 김형주 외(2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12.

목표의 성취 여부를 중요시 하는 평가모형으로 Provus의 격차평가모형이 있다. Tyler 는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Provus의 경우는 목표와 성취 사이에 어떤 격차가 존재하는지 즉, 그 불일치의 내용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 즉, 목표와 성취간에 격차가 존재한다면 어떤 격차이고 왜 그와 같은 불일치가 있었는지까지 살펴보고자 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Provus의 모형을 격차평가모형이라고 부른다. 달성 여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성의 수준과 내용, 그리고 불일치의 원인이라는 정책의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일정 부분 고려했다는 점에서 Tyler의 모형과 차별화된다. 다음 표는 Provus 평가모형의 절차별 평가활용과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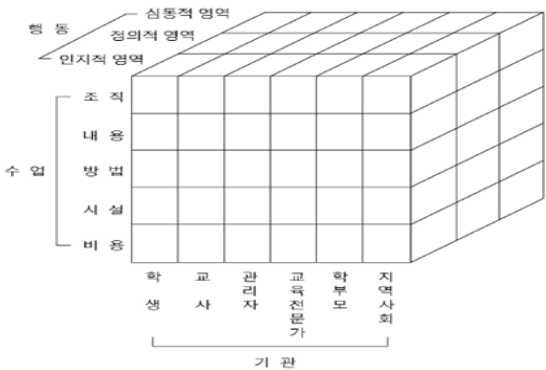
표 II-2. Provus 격차평가모형의 절차별 평가내용

절차	평가내용
설계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변인을 각각 명시적으로 기술한다
실행	평가의 표준(S) 및 준거를 열거하고 그 적합도를 확인한다
과정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성과	평가의 표준(S) 및 준거를 열거하고 그 적합도를 확인한다
비용-효과 분석	수행성과와 목표달성을 위해 투입된 예산, 인력, 시간, 노력 등을 비교한다

\* 출처: 김형주 외(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5.

목표 중심 평가모형에서 Hammond의 평가모형은 교육프로그램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평가 활동이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진술해 놓은 행동 목표들을 달성하고 성취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를 교육 상황에 적용해 보면 평가는

수업 차원과 기관 차원, 행동 차원의 3차원 입방체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첫째, 수업 차원의 경우 내용, 방법론, 조직, 비용, 시설 측면에서, 둘째, 기관 차원의 경우 가족, 교사, 학생, 지역사회 측면에서, 셋째, 행동 차원의 경우 신체·인지·자각·정의적 목표 측면을 제시하여 정책의 성과나 효과를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배호순, 1994). 다음 그림은 Hammond 평가모형의 평가구조를 3차원 입방체로 나타낸 것이다.



\* 출처: 김형주 외(2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14.

그림 II-1. Hammond의 평가모형에서의 평가 구조

둘째, 의사결정 중심 평가모형이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주체자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 정보 제공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 모형은 정보처리 평가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평가모형은 Stufflebeam의 CIPP 평가모형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4가지 단계로 평가를 구분한다. 즉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유용한 정보를 취합·정리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Stufflebeam, 1981). 다음 표는 Stufflebeam의 의사결정 중심 평가모형의 4가지 단계를 목적과 수단 측, 의도성과 실제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의도성	실제성
목적	계획수립 관련 결정에 대응한 <b>상황평가</b>	재순환(재투입) 관련 결정에 대응한 <b>산출평가</b>
수단	구조화 관련 결정에 대응한 <b>투입평가</b>	실행에 관련된 결정에 대응한 <b>과정평가</b>

\* 출처: 김형주 외(2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15.

그림 II-2. Stufflebeam의 의사결정모형

Stufflebeam은 의사결정의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planning decision),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structure decision), 실행에 대한 의사결정(implement decision), 순환에 대한 의사결정(recycling decis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평가,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입평가, 실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평가, 순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산출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다.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확인, 판단할 때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을 순환 의사결정이라고 한 것은 정책이라는 것을 하나의 연속적인 활동으로 보고 상황, 투입, 산출 평가가 순환적으로 계속 돌고 돌아 산출 평가가 다시 상황평가의 대상으로 재투입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민병제, 2002).

셋째, 소비자 및 전문가 중심 평가모형은 평가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구분되는 평가모형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한 평가를 그동안 공급자가 중심이 되어 하던 것을 이를 소비하는 주체가 직접하거나 이해관계자에서 자유로운 제3의 전문가 그룹의 주도 하에 하는 것이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평가가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평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자 혹은 소비자 지향적 접근(consumer-oriented evaluation approach)의 평가모형은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그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산출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데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지향적 접근은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원 할당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더욱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평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주로 엄격한 기준과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활용한다(Scriven, 1991). 다음 표는 Scriven의 평가모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3. Scriven 평가모형의 고려 요소

평가 대상 기술	평가 의뢰자 및 발주자 확인
평가와 평가 대상의 배경 및 상황 파악	자원의 파악
기능	실행체제
수혜자	수혜자 집단의 요구와 가치 확인
평가 기준	과 정
산출 결과	일반화 가능성
비 용	비 교
중요성	제 언
보고서	메타평가

\* 출처: 김형주 외(2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17.

그리고 평가가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전문성 지향적 접근(expertise-oriented evaluation approach)의 평가모형이다. 이는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가, 평가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가, 설정된 평가 준거를 공표하는가, 다양한 전문가가 관여하는가, 평가결과가 공식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따라 공식적 검토 체제(formal review system), 비공식적 검토 체제(informal review system), 임시 패널 검토(adhoc panel review), 임시 개별 검토(ad hoc individual review) 등으로 구분된다. 대표적 공식적 검토 체제는 대학 인증 평가와 같은 인증(accelitation) 제도이고, Eisner의 교육적 감식안(educational connoisseurship)도 전문성 지향적 접근에 해당된다(김형주 외, 2009).

이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모형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각 평가모형이 평가에서의 중점과 접근 방식이나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고객의 관점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정책을 평가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여러 평가모형에서 이에 부합하는 시각, 차원, 기준, 지표들을 차용하여 새로운 모형을 구안하고 이를 타당화하여 정책을 진단하고자 한다.

2) 정책평가의 유형 및 시사점

정책평가의 사전적 의미는 관련 정책의 전략과 수단을 채택함으로써 유발된 영향을 조사하고 그것의 파급 효과가 처음에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측정하는 일이다(국립국어원, 2025)

정책평가란 정책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정책의 효과 혹은 성과를 증진시키려는 활동으로 정의하거나(Poister, 1979), 정책에 있어서 형성과정, 집행과정, 정책성과를 점검하여 확인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윤수재, 2003). 또한 평가를 정책과정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는데, 정책을 형성하거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전체를 정책과정으로 여겨서 정책평가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요소인 정책효과, 정책평가, 산출평가, 정책집행 종료 후의 활동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김승훈, 2003). 다음 표는 주요 학자들의 정책평가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4. 정책평가에 대한 정의

학자	정의
Poister(1979)	설정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
윤수재(2003)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정책성과를 확인, 검토하는 활동
김승훈(2003)	정책의 형성, 결정에서부터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
Anderson(1979)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의 내용, 집행 및 집행의 결과, 그 영향 등을 추정하는 것

\* 출처: 김형주 외(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1.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평가하는 국무조정실에서는 정책평가를 정부업무평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관련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평가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



보센터, 2025).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로 정책평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가모형의 접근 중 정책의 단계와 영역별 평가요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적 접근의 평가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책의 기획, 집행과정, 결과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주체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 그룹에 의한 판정을 의미한다.

정책평가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평가 업무에 따라 예비평가와 본평가로 구분하며, 평가 대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총괄평가, 과정평가, 종합평가, 메타평가, 통합평가로 구분한다. 평가 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평가 시기에 따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되며, 체제이론 근거 유형으로 투입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영향평가로 구분하기도 한다(이윤식, 2018).

표 II-5. 정책평가의 유형

분류	유형
1. 평가 업무에 따라	- 예비평가 - 본평가
2. 평가 대상에 따라	- 총괄평가 - 과정평가 - 종합평가 - 메타평가 - 통합평가
3. 평가 주체에 따라	- 내부평가 - 외부평가
4. 평가 시기에 따라	- 사전평가 - 사후평가
5. 체제이론 근거 유형	- 투입평가 - 과정평가 - 결과평가 - 영향평가

\* 출처: 김영수(2023). 정책평가 척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pp.4-5. 재인용.

정책평가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평가의 포괄성과 일반화가능성의 전제 하에 다양한 평가기준 혹은 평가영역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학자에 따라서는 정책평가의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다음 표는 여러 연구자가 제시한 정책평가 기준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봉민근(1995)은 정책평가를 적합성, 충분성, 효과성, 능률성(효율성), 실현가능성의 다섯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노화준(2001)은 착수 직전 단계의 분석과 평가성 사정, 형성적 평가,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책 영향 평가, 프로그램 전략 평가, 능률성과 적합성 평가, 그리고 최종 종합평가 등 보다 세분화된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표 II-6. 정책평가에 대한 기준

학자	정책평가기준
봉민근(1995)	적합성 평가, 충분성 평가, 효과성 평가, 능률성 혹은 효율성 평가, 실현가능성 평가
노화준(2001)	착수직전분석, 평가성 사정, 형성적 평가,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책영향성 평가, 프로그램전략 평가, 능률성 평가, 적합성 평가, 평가 종합
김명수(1993)	효과 평가, 효율성 평가, 집행 평가, 정책구조평가
송근원, 김태성(1995)	정책설계 평가, 정책집행 평가, 정책영향 평가
Suchman(1974)	노력, 성과, 충분성, 능률성, 과정
Nakamura & Smallwood(1980)	정책목표달성, 능률성, 대상집단의 만족도, 고객의 대응성, 체제유지

\* 출처: 김형주 외(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3.

이상과 같이 여러 학자들이 구분하고 있는 정책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능률성, 충분성, 적합성 등이 공통적이며, 그 외에 효과성과 효율성 등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단계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접근과 요소를 중심으로 한 요소적 접근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형주 외, 2009).

정책평가 방법론을 다차원적 접근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다음 표는 Fisher의 4단계 다차원으로 구성된 정책평가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7. Fisher의 다차원 정책평가 방법론의 단계별 평가초점

학자	정책평가기준
프로그램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이 실증적으로 정책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li> <li>- 정책의 목적을 희석시키는 예기치 못한 효과가 존재하는가?</li> <li>- 채택된 정책이 다른 대안보다 더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가?</li> </ul>
상황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목표가 문제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li> <li>-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 존재하는가?</li> <li>- 둘 이상의 목표가 문제 상황에 동등하게 적절한가?</li> </ul>
시스템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가 전체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li> <li>- 정책목표가 중대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가져오지 않는가?</li> <li>- 정책목표에 대한 공약이 형평성있는 결과를 가져오는가?</li> </ul>
사회적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질서를 조직화하는 근본적인 이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당하고 공평한 기준을 제공하는가?</li> <li>- 만약 사회 질서가 기본적인 가치 체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회적 질서가 적절한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가?</li> <li>- 규범적 성찰과 경험적 증거들이 이러한 대안적 이념과 사회질서를 수용하는가?</li> </ul>

\* 출처: 김형주 외(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2.

Fisher의 정책평가 방법론은 다른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평가의 과정과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이 당시 상황에 적절한가를 다루는 상황적 타당성, 사회적으로 공통 가치와 설득력있는 공감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사회적 선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그만큼 정책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중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형주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의 유형 중에서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을 중점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평가유형, 평가영역, 평가기준 등을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개발 과정에 반영하여 평가가 포괄성, 타당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2. 청년정책 평가 동향과 시사점<sup>3)</sup>

### 1) 청년정책 현황

#### (1) 청년정책 개요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 단위로 사안이나 주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되어왔던 청년 정책은 2020년 2월에 제정되어 2023년에 개정된 「청년기본법」을 계기로 국가 단위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항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로서 청년 정책의 수립과 조정,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법에서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으며, 2026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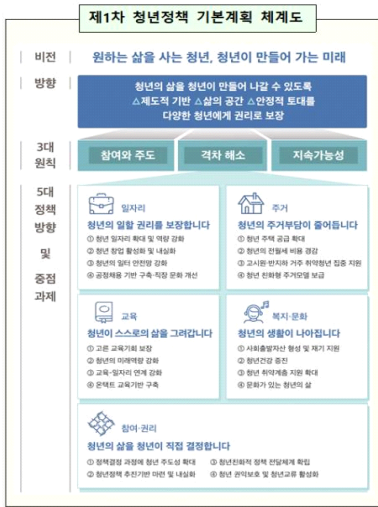
#### (2) 청년정책기본계획의 현황

2021년에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3년 수정·보완을 거쳐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본 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청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삶의 공간 및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권리를 청년들에게 보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3대 원칙과 5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3대 원칙은 ①참여와 주도, ②격차 해소, ③지속가능성이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자산형성), 참여 및 권리 영역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중점과제를 수립한 바 있다(그림 참조). 각 영역별 주요 추진 정책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3) 이 절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p.6-7

그림 II-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체계와 비전 개요

표 II-8.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정책 (2023년 기준)

분야	내용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실업대책 중심에서 진로탐색, 일경험 지원으로 전환</li> <li>청년일경험 활성화방안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 중심에서 내 집 마련까지 주거정책 확대</li> <li>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청년 등 국민주거안정 강화방안 등 추진</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인재양성 체계 전환</li> <li>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li> </ul>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 및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li> <li>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추진계획</li> <li>청년도약계좌 출시,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 수립 및 추진</li> </ul>
참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제도화</li> <li>청년보좌직·2030자문단의 24개 부처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추진</li> </ul>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p.3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시행은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주도로 각 부처별로 추진되어왔다. 관계부처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총 23.8조원의 예산으로 308개의 과제가 추진된 이후, 과제와 예산은 점차 증가하여 2024년에는 각 부처에서 27조원의 예산으로 총 356개의 과제가 진행되었다.

특히 정부에서 중점을 둔 분야는 청년의 참여 영역으로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9개 부처에 구성되어 운영되었던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을 24개 장관급 기관까지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총 211개의 청년참여 위원회를 지정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매년 정책 효과 평가를 실시하고 연단위 정책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시행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행계획 전 과제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17개 시·도 지자체 및 중앙 정부 사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앙과 지역 사이의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연계와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4).

모든 정책의 추진에 있어 실적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만 특히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1차 년도 시행 계획부터 정책 대상인 청년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II-9. 청년정책 시행계획 현황 (2024년 기준)

분야	기본계획 수정	23년 지원내용	24년 시행계획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맞춤형 고용 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li> <li>• 청년친화적 공정고용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일경험 8.4만명 지원</li> <li>• 재학생, NEET 청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li> <li>• 공정채용법. 개정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일경험 10만명 지원</li> <li>• 15만명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li> <li>• 창업 주기별 지원 및 로벌 진출 지원 확대</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 (~27년, 58만호)</li> <li>• 청년가구 주거부담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공공분양 5.3만호, 공공임대 4.8만호 공급</li> <li>• 초장기 모기지(최대50년) 지원</li> <li>•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 공급</li> <li>• 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 ‘청년 주택드림통장’ 출시</li> <li>•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li> <li>•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접근성 강화</li> <li>• 지역혁신 인재 양성 위한 자자체 및 산·학·연 협업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헬스, 반도체, 환경·에너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방안 수립</li> <li>• 교육과 일자리 연계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대학 역할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li> <li>•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li> <li>• 지역대학-산업 연계로 지역인재 양성</li> </ul>
복지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li> <li>• 취약청년 긴급자금 1조원 지원 (25년까지)</li> <li>•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도약계좌 신설(‘23.6) 및 청년 병사 목돈마련 등 자산형성 지원</li> <li>•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자 편의 제고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li> <li>• 희망적응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li> <li>•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li> <li>• 청년 마음건강 진단 지원</li> </ul>
참여 ·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li> <li>•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지정(221개)</li> <li>•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대목 확대(9개 → 장관급 24개 부처)</li> <li>• 청년정책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li> <li>•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시스템 구축</li> <li>• 청년지표 신규 개발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참여 확대(지자체)</li> <li>• 청년보좌역·자문단 내실화</li> <li>* 제안내용 정책 반영에 인센티브강화, 우수사례 공유 등</li> <li>•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li> <li>•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li> <li>• 청년친화도시 지정</li> </ul>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p.6

2) 청년정책 평가 동향

(1) 청년정책 평가의 현황

2022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2022년에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제출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정책평가는 2023년부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되었다. 그와 함께 실적에 대한 평가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정부업무평가, 즉 기관평가의 일환으로 그 의미와 비중이 확대되었다(김기현 외, 2024).

2024년도 청년정책 종합평가(김기현 외, 2024)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 평가는 ①청년정책 추진성과, ②청년 참여 및 소통 확대의 수준이라는 2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청년정책 추진 성과는 기관별 대표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기타 신규정책 발굴 및 기존 정책의 개선 사례에 대한 평가였으며, 청년 참여소통 확대 항목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지정 실적, 청년인턴 채용목표 대비 실적, 그리고 청년관련 소통행사 실적에 대한 평가였다.

표 II-10. 2024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배점
청년정책 추진성과	기관별 대표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기타 신규정책발굴 및 기존 정책 개선사례 평가	정성	±0.5
청년참여·소통확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지정(정량) 청년인턴 채용목표 대비 실적(정량) 청년관련 소통 행사 실적(정성)	정성/정량	±0.5

\* 출처: 국무조정실(2023) 2024년 청년정책 평가지침: 2023년도 실적; 김기현 외(2024). 2024년 청년정책 종합평가연구. p.17에서 재인용

지자체 청년정책 평가에 있어서는 청년의 참여·주도성,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청년의 삶 개선, 청년의 정책 이해 수준의 4개 영역에 대해 하위 7개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표 II-11.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평가지표

항목	평가지표	측정내용	방법	배점
청년참여 주도성 (20점)	계획수립에 청년의견 반영도	계획수립 단계에서 청년의견을 수렴·검토·반영 정도	정량	10
	집행시 청년소통 충실성	정책 집행 단계에서 청년 소통기구 운영·활용, 접수의견에 대한 검토·대응 정도	정량	10
청년삶 환경 반영도 (20점)	사업대상 청년규모 정확성	사업 대상 조건부합 청년 규모 파악의 정확도	정성	10
	사업내용 청년실태 반영도	사업 내용이 청년의 사회경제적 환경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정성	10
청년의 삶 개선 (50점)	성과지표와 청년 삶 연관성	성과지표가 사업의 핵심성과를 대표하는지 여부	정성	5
		성과목표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정량	5
		성과지표/목표가 청년 삶 개선에 직접 연관되었는지 여부	정성	5
	실제 청년 삶 개선 정도	성과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비율	정량/ 정성	15
		청년이 체감하는 삶 개선 정도	정성	20
청년 정책이해 (10점)	청년들의 정책 친숙성	청년친화적 매체와 표현을 통한 적극적 정책 홍보	정량/ 정성	10

\* 출처: 김기현 외(2024). 2024년 청년정책 종합평가연구. p.19

## (2) 다요인 청년 정책평가 모형의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청년정책 평가는 단기적이고 양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당면한 청년 문제의 빠른 해결과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정부기관의 입장,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표 특성, 구체적 정책 목표 제시를 통해 정책 집행을의 당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의 여러 현실적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문제의 복잡성과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다요인 평가를 고려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었다. 정책 성과 평가의 내용도 청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정책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 당사자들을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피드백 강화에 대한 요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성은 외(2023)은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한 청년정책 사업을 청년정책의 고유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평가를 시행했다. 청년정책의 고유성은 해당 정책이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취합이 아니라 처음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안된 정책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2021년 시행계획 사업을 평가한 결과, 실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총 346개 중 43.8%인 151개였으며, 청년이 주 수혜자인 사업은 97건(28.1%), 청년에게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은 8건(2.3%)로 나타났다(조성은 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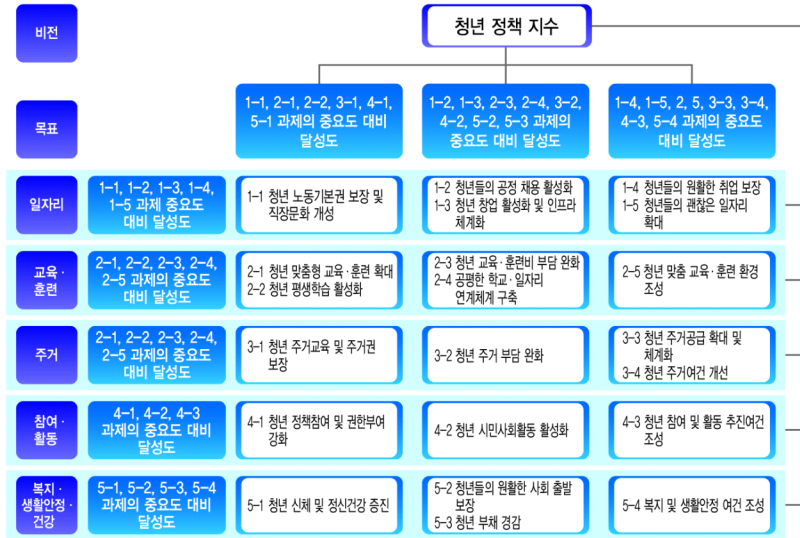
김문길 외(2022)는 조성은의 평가 기준에 덧붙여 이행 국면 대응성, 정책 도입(발굴)의 적극성, 정책영역 대응성을 기준으로 청년정책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이행 국면 대응성은 청년기의 특성상 교육에서 취업으로(일자리 이행), 부모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주거 이행), 출생한 가족에서 스스로 구성한 가족으로(가족 이행) 이행한다는 청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정책이 이를 얼마나 적절히 지원하거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김문길 외, 2022). 위 연구에서 슈미트(Schmid)의 이행노동시장(TLM: Transition Labor Market) 이론이 제시한 5개 이행 유형별 청년정책을 평가한 결과, 노동시장에서 가사 노동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행하는 유형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은퇴하는 이행, 그리고 고용 상태에서 다시 교육생으로 돌아가는 '요요 이행' 등에 대한 정책의 부재를 발견했다(표 II-12 참조). 정책도입(발굴)의 적극성 차원의 평가 결과,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308개 과제 중 2017년 5월 이후 도입된 과제는 185개(61%), 2021년 신규 도입 과제는 43개(13.9%)였다(김문길 외, 2022). 마지막 기준인 정책영역 대응성은 정책이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청년당사자와 전문가의 기준을 교차 적용했다. 그 결과, 청년과 전문가 모두 경제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으나 그 다음 순위에서 청년은 건강을 2순위로 주거보다 중시한 반면, 전문가는 주거를 2순위로 평가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김문길 외, 2022).

표 II-12. 이행노동시장 유형과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군

이행노동시장 이론		청년정책시행계획	주요사업
이행 유형	정책수요		
〈유형1〉 고용-고용 이행	소득 안정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유형2〉 고용-실업 이행	소득 유지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유형3〉 교육-고용 이행	소득 능력 확보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고졸 청년 취업 지원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지원 강화
〈유형4〉 고용-가사 이행	소득 지원	-	-
〈유형5〉 고용-장애/은퇴 이행	소득 대체	-	-

\* 출처: 김문길 외(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p.33

정책의 비전과 목표 체계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량적·정성적 평가의 방안을 제시한 예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김기현 외, 2020)의 평가 프레임을 들 수 있다. 매년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정책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설계한 이 평가 프레임에서는 ① 개별과제들의 성과측정, 위 성과 측정을 기반으로 산출한 ② 5대 정책 영역별 성과지표, 위의 5대 대영역 별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③ 제1차 기본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들의 성과측정, 위의 3단계 측정을 기반으로 측정한 ④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전체의 성과 산출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정책 평가 모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청년정책 182개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분야, 21개 중분류 과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뒤, 각 과제와 정책 목표 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청년정책 지수를 개발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장기적이고 질적인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김기현 외(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p.279

그림 II-4. 청년정책의 성과측정 프레임워크 예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을 앞두고 2020년 청년정책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정책평가 이론(이근주, 2018)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배정희, 김기현, 2020).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전년도 정책평가 결과가 차년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2차년도 부터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 지표에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의 충실성'을 추가하도록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당해 말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1개월간 평가 실시, 이 결과를 반영해서 2월 말에 당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이런 방안은 정책평가의 피드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에서 실행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표 II-13.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속성	배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40점)	계획수립시 청년의견 수렴도	정량 / 정성	10
	사업목적의 타당성	정성	5
	사업내용의 적절성	정성	20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성	5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의 충실성(2차년도부터 포함)	정성	(-)
정책집행의 충실성 (30점)	사업 집행의 충실성	정량	10
	정책모니터링 및 소통 충실성	정량 / 정성	10
	유관기관 협업 정도	정성	10
정책성과의 달성도 (30점)	성과목표 달성도	정량	10
	정책 효과성	정성	10
	정책 체감도	정량	10

\* 출처: 배정희, 김기현(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p.120-121

### (3) 청년정책에 대한 2차원 평가모형의 예

김형주 외(2022)는 Stufflebeam의 CIPP모형 4단계 평가 프레임에서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를 제외한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결과평가(product evaluation) 단계를 참고해 '정책의 체계성'을 평가하고, Scriven의 수혜자 모형을 참조하여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의 인지도,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정책 고객의 평가'를 진행하는 2차원 정책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II-5 참조).

이 평가모형에서 1차원인 정책 체계성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2차원인 정책고객의 평가는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로 이루어진다. 연구진은 위의 평가모형을 통해 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체계성 평가와 더불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한 평가를 종합하고자 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정책의 체계성을 평가하는 1차원 평가에서는 정책상황의 타당성, 정책투입의 체계성, 정책효과의 담보성이라는 3개 평가영역에 총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고객의 평가인 2차원 평가에서도 정책의 인지도,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효과성이라는 3개 평가영역에 총 15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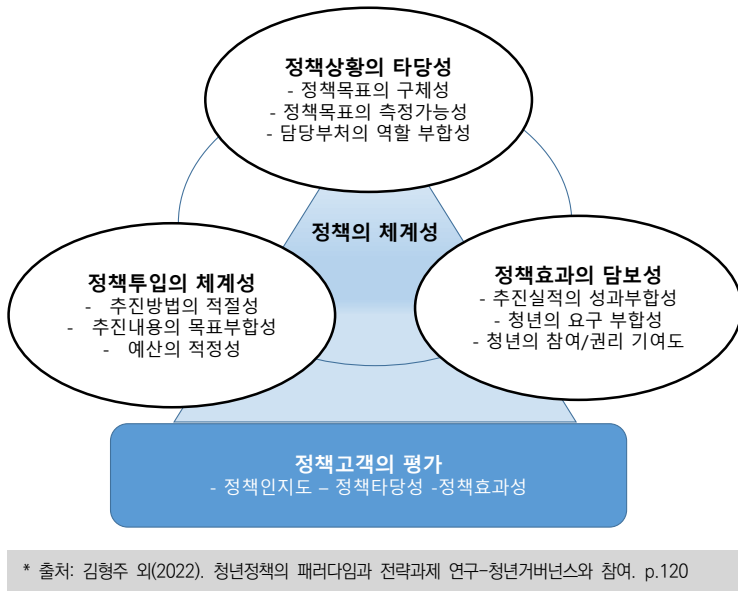


그림 II-5. 청년정책 평가모형의 예

### 3) 청년정책 현황 및 평가 동향의 시사점

#### (1) 청년정책 현황과 시사점

청년정책은 과거 부처 및 지자체 단위로 분산 추진되었으나,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동 법은 5년 단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단위의 정책평가와 정책 반영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청년정책 평가는 양적 성과 중심의 정량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책의 질적 평가와 함께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평가 참여 확대와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존 청년정책 평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고유성, 이행 국면 대응성, 정책 도입의 적극성, 영역 대응성과 같은 다면적 평가지표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 실효성, 그리고 청년들의 삶의 질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기 위한 평가 모형들도 제안 되었다. 실제 정책평가에서도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평가의 결과를 다양한 경로로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청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려는 노력도 발견된다.

## (2) 청년정책 평가 동향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청년정책 평가 동향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책의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방법은 가장 명료하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년 문제의 복합적 특징을 고려하면 사업의 실효성이나 정책 효과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중심의 정량 평가와 함께,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삶의 질과 정책 수용도 등 정성적인 측면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평가가 단순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평가-정책수립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청년들의 현황과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피드백의 효과를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참여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정량적인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인식, 만족도, 경험 기반의 정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차원적 평가 기준의 도입이 요구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년정책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정책의 실효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평가 지표 구성이 필요하다. 여러 평가 기준 중에서도 특히 체계화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심층적인 정성 평가와 더불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환경 변화와 만족도의 반영이 요구된다. 특히, 수립된 정책이 현실에 얼마나 잘 구현되고 운영되는지와 더불어, 청년들이 정책을 통해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얼마나 만족하는지(체감도 및 수용도)를 두 축으로 하는 2차원 평가 모델은 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실행, 결과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줄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과 청년정책 활용의 의의<sup>4)</sup>

#### 1)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개념 및 적용

본 연구에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은 수혜자 혹은 고객 중심의 평가모형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즉, 정책이나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가 이를 소비하는 수요자들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이 추진의 정당성과 실질적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평가모형이다.

평가모형 중에서 수혜자 중심에서 평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표적인 모형은 Scriven의 평가모형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대상이 되는 수혜자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점차 국민 주권주의가 강화되고 사회의 변화가 수혜자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Scriven은 이러한 수혜자 중심의 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핵심 평가 점검 목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배호순, 1994). 다음은 Scriven의 평가요소와 정책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간의 연계성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II-14. Scriven의 평가요소와 정책평가 요소간 연계성

Scriven의 평가요소	정책평가에서 고려할 요소
평가 대상 기술	성과관리 대상 파악
평가와 평가 대상의 배경 및 상황 파악	정책수요자의 여건 및 국가 차원 정책 추진 상황 파악
기능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능
실행체제	해당 정책의 추진 체제
수혜자	각 정책의 수요자
수혜자 집단의 요구와 가치 확인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성과 기준
평가 기준	정책평가 지표의 측정 가능성, 적용 가능성 고려
과정	성과지표의 측정 수단의 개발 및 자료 수집

\* 출처: 김형주 외(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9.

4) 이 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이상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Scriven은 평가에서 평가대상 사업이나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수혜자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혜의 내용, 범위, 시간을 구체화하여 이를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이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이나 정책의 질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 정책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이 해당 정책을 통해 얻게 될 수혜를 상세화함으로써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의 타당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할 것이다.

기존의 평가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발된 평가모형으로 주로 경영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Card) 모형을 들 수 있다.

BSC 모형은 기존 평가에서 강조하던 계량적 지표의 한계성과 결과적인 평가요소를 중요시 했던 과거의 평가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BSC 모형은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혁신 및 학습 관점이라는 4가지 관점의 측정 영역을 균형 있게 포함시킨 것이다. BSC 모형의 기본 논리는 각 관점 및 측정(성과) 지표들 사이의 균형이 장기적 생존 및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산출하고, 추진과정이 효율적이냐는 관례적인 평가에만 그친다면 중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보아서 수요자인 고객들의 요구와 필요성을 충족했는지와 만족했는지라는 평가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Olve, Roy & Wetter, 1999/2000).

BSC 모형에서 재무 관점은 매출과 순익, 수입과 지출 등 재무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고객 관점은 소비자, 국민, 이해관계자, 정책 수혜자를 비롯하여 내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원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만족도와 효능감을 의미한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효율적이고 적절한가를 다루는 과정이며, 학습 및 성장 관점은 다른 3가지 관점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으로서 구성원의 역량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BSC 모형은 과거의 성과지표들에 대한 측정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다(Kaplan, & Norton, 1998).

다음 표는 BSC 모형의 4가지 관점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II-15. BSC 모형의 4가지 관점

관점	주요내용
재무관점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과정
고객관점	순수한 소비자로서의 고객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격과 부문에 따라 국민, 이해관계자,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내부 고객인 구성원 모두 포함
내부프로세스관점	정책을 추진할 때 고객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과정
학습 및 성장관점	미래 지향적인 선행지표이고, 다른 3가지 관점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으로서, 특히 구성원의 역량을 강조

\* 출처: 김형주 외(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33.

BSC 모형이 기존의 여러 평가모형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투입 비용 대비 실적이라는 재무적 관점을 평가의 중점으로 보고, 고객 관점은 단순 만족도 위주의 보조적 평가지표로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BSC 모형의 경우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 이외에 고객의 다양한 반응,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고객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반영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의 기획, 시행, 성과 관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이 증진되고 성장했는지까지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객의 반응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청년정책 활용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수요자 중심적 접근을 통해 청년정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정책이 정책고객인 청년들에게 정확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보다 주안점을 두기 위함이다.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된다. 그러나 청년정책과 같이 지난 수년동안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눈에 띄는 성과나 효과를 자신있게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년정책이 실제 청년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었는가부터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지표를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응성은 특정 집단이나 전체 국민의 필요와 욕구, 선호와 가치 등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냐를

뜻하는 것이며 국민의 만족도나 수혜자의 호응·만족 등을 의미하고, 형평성은 남녀간·지역간·계층간·인종 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회의 균등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적절성 내지 적합성이란 정책목표나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동원되는 정책수단·방법이 적절한가,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적합한가 하는 것을 의미하며, 충족성은 정책의 목표와 성과의 달성이 문제해결에 충족했느냐의 여부와 목표달성의 과정에 있어서 곧 집행과정에서 동원된 정책수단이 목표를 성취하는데 충족하였느냐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민병제, 2002).

실제 평가가 진행된 정책평가 모형별로 평가받는 정책 단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6. 정책평가 추진모형의 분석

구분	정책 단계
여성정책 평가모형	여성정책의 목표 및 방향, 형성 → 여성정책의 집행과정 → 여성정책의 성과와 영향
교육정책 평가모형	형성 및 결정 → 정책결정단계 → 정책집행단계 → 집행 후 단계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모형	정책형성 → 집행 → 성과 → 정책 연계, 조정
간호정책 평가모형	정책방향 및 내용 → 정책과정 → 정책결과
Fisher의 다차원적 정책 평가모형	프로그램 검증 → 상황적 타당성 → 시스템 입증 → 사회적 선택

\* 출처: 김형주 외(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3.

실제 추진되었던 정책평가의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정책 형성, 정책 과정,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분야의 정책평가에서 견지하고 있는 기본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 지향성으로 측정 및 평가의 초점은 최종 성과 및 산출물에 맞추어야 하며, 둘째, 중요한 핵심적 지표의 강조로서 성과의 핵심적 지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선정된 지표를 중점 관리하여야 하고, 셋째, 신뢰할 만한 자료 활용으로 자료는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넷째, 의사결정자에게 유용성 제공으로 평가시스템은 정책입안자 또는 프로그램 결정자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하며, 다섯째, 자료 접근의 용이성으로 공공 부문의 노력으로 달성된 결과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누구나가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김형주 외, 2009).

이상의 여러 정책평가의 유형과 구성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평가가 정책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시행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가 얼마나 일을 잘 수행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분히 공급자가 하는 일의 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관점을 반영한 평가모형으로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피드백하여 개선하는 것이 국민적 호응과 시행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 — 제3장 청년정책 평가에 관한 해외 사례

- 1. 유럽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 2. 미국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 3. 일본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청년정책 평가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유럽연합,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세 나라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 유럽연합의 경우 청년정책을 효과성과 효율성, 관련성, 통합성과 가치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중간평가 결과 EU 개선의 필요사항과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분야에서의 제도적 지원과 청년 문제의 예방 중심의 조기 개입과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등 중점 정책분야를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통계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증거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중점 정책영역으로 구분하며, 증거 기반 평가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해외사례 국가로 선정하였다.

## 1. 유럽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sup>5)</sup>

### 1) 유럽 청년정책 평가<sup>6)</sup>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유럽 지식센터(European Knowledge Centre for Youth Policy, EKCYP)를 통해 유럽의 청소년과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오고 있다. 유럽 지식센터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및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해

5) 이 절은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이 의뢰를 받아 번역 및 집필하였음

6) 본 절은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Youth Partnership 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발간한 Insights into Youth Policy Evaluation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Irina Lonean (2021). Insights into Youth Policy Evaluation <http://youth-partnership-eu.coe.int>. Council of Europe and European Commission.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Irina Lonean, 2021:5). 그러므로 본 장은 유럽 지식센터의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이 청년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서 청년정책의 문제점 분석이나 정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은 유럽 지식센터의 증거기반 청년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제시한 평가의 목적과 과정, 평가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다.

## 2) 청년정책의 개념과 목적

청년정책 평가는 청년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경험, 기회의 조건을 조성하는 공공 개입으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여 정책의 설계, 제공 및 적응을 지원하는 복잡한 과정이다(Irina Lonean, 2021:7) 유럽연합의 청년정책은 회원국 전체에 해당되는 보편성과,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한국의 청년정책과는 다른 복잡성을 갖는다. 게다가 청년 정책이 고려해야하는 주제 영역 자체의 복잡성, 즉, 교육, 취업, 사회 통합 등을 다루는 부문별 정책과 책임 기관 간의 협력 정도, 이에 대한 평가 등은 유럽연합 청년정책 평가에 대한 복잡성을 더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Irina Lonean, 202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밝히는 청년 정책 평가의 주요 목적은 청년의 참여를 통한 정책 수혜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며, 청년이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는 과도기에서 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Irina Lonean, 2021:8)

## 3)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

유럽연합이 밝히는 공공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Irina Lonean, 2021:7). 첫째, 각 정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평가를 통해 관련분야에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기관과 기관, 대중과의 소통을 지원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의 결과에 대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는 정책 수혜자를 포함하여 이해관

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Irina Lonean, 2021:8-9).

정책 평가에서는 청년 정책이 가진 범부처적 특성(cross-sectoral nature)과 교육·사회통합·고용·보건·스포츠·주거 등 다른 부문 정책들과의 수많은 상호 연관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된 각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청년 분야에서 얻은 구체적인 성과들을 모든 관련 정책 결정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Irina Lonean, 2021:9).

청년정책 평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가 공공정책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이 청년 정책을 수정하고, 변화하는 청년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는 투명성, 우수한 거버넌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청년 정책 평가 결과는 급속히 변화하는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Irina Lonean, 2021:9)

유럽연합 청년정책 평가의 특징은 참여적 평가이다. 즉, 참여적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는 청년 사업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청년정책 평가에 청년이 참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여할 수 있다.

- 정책의 적합성(relevance) 확대
- 수혜자인 청년들이 정책의 적절한 이행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 청년들이 적극적인 시민(active citizens)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게 하며, 청년 정책 평가에 참여했던 수혜자들은 성인이 되어 공적 및 시민적 참여(public and civic participation)에 더 크고 올바른 관심을 갖게 됨(Irina Lonean, 2021:8)

#### 4) 청년정책 평가 유형

시간과 계획된 역할에 따라 세 가지의 평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Prospective evaluation(예상평가, 사전평가) 혹은 ex ante evaluation이라고 부르는 평가이다. 이 평가는 계획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예측하는 것으로 정책이 대상 집단의 필요를 정확하

게 파악하고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정책집행에 필요한 구조와 자원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며 의도하지 않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기도 한다. 두 번째 평가는 과정평가(중간평가)인데 정책 실행의 과정, 정책 과정의 질, 어떻게 정책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책 실행과정에 관련된 정책입안자와 대상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세 번째는 Retrospective evaluation(사후평가, 요약평가, 종합평가) 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정책개입의 실제적인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어떤 정책이 종료되었을 때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사후평가는 정책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는 후에, 즉 평가 기간과 결과 및 효과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 했다고 판단될 때 시행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Irina Lonean, 2021:9).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청소년과 청년정책인 EU Youth Strategy의 경우도 이러한 유형에 의해 실제로 평가되고 있다.

## 5) 청년정책 평가 방법

유럽지식센터가 제시하는 청년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Irina Lonean, 2021:10).

(1) 정책 기획단계에서 모니터링과 평가 계획 세우기 :

- 성공/성과 지표 설정
- 평가시기 결정, 정책 개발 중 (정책주기 결정)
- 평가 기준 및 평가 질문 구성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선택

(2) 성공/성과지표를 위한 기본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 단계

- 주요 정책 수혜자로서 청년을 포함 하여(서베이, 다른 연구 보고서 활용, 인터뷰나 FGI 등의 방법 활용) 청년 정책의 실행을 위한 청년 의견 반영

(3) 계획된 일정과 평가기준, 평가문항과 방법에 따라 평가 실시

- 청년정책의 실행, 사전 평가, 또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청년의 의견이 항상 수렴될 수 있도록 함

## 6) 청년정책 평가 주요 단계

이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청년정책 평가의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정책집행 전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기

평가를 계획할 때, 평가지표와 평가문항을 사전에 구성해야한다. 즉, 평가지표와 평가문항은 평가의 목적을 규정하고 평가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평가 기준과 평가 문항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Irina Lonean, 2021:11-12).

표 III-1. 평가지표와 평가문항

평가문항	평가문항의 예시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정책의 목적이 청년의 필요와 관련이 있는가?</li> <li>내용이 계획된 목적과 제시된 결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한가?</li> <li>다른 청년정책과의 연속성과 통합성에 부합하는가?</li> </ul>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의 청년정책이 목적을 달성했는가?</li> <li>기존 청년 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li> <li>문제 해결이 적절했는가?</li> <li>결과에 영향을 준 내적, 외적 요인은 무엇인가?</li> </ul>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이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가?</li> <li>처음에 예상된 비용보다 적게 소요되었는가 아니면 더 많이 소요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정책 집행이 계획된 시간대로 이루어졌는가?</li> <li>청년정책의 실행을 위한 조직의 구조의 효율성은 어떠했으며,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li> </ul>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의 결과가 지속가능한가?</li> <li>지속가능을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있는가(조직적, 법적, 환경적, 사회적 이유 등)</li> <li>위험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li> </ul>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li> <li>즉각적으로 혹은 넓은의미에서 변화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li> <li>어떤 정책이 실현되었으며,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중 어떤 정책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li> <li>정책의 영향력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무엇인가?</li> </ul>

\* 출처: Irina Lonean(2021:11-12). Insights into Youth Policy Evaluation <http://youth-partnership-eu.coe.int>. Council of Europe and European Commission. 에서 연구자가 번역하고 재구성함

## (2)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은 지표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정량적 데이터는 숫자나 수량을 표현하는 가치로 표현되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에 반해 정성적 데이터는 현상을 묘사하거나 가치가 있으나 측정할 수 없는, 즉 왜, 어떻게 같은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은 첫째, 관련성 및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준 자료를 수집하거나, 둘째, 청년 실태 조사를 위한 정기적 연구 수행, 셋째, 정책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입 및 산출, 결과에 대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는 것, 마지막으로 평가 과정에서 도출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Irina Lonean, 2021:18).

## (3) 정책 집행 과정과 정책 집행 이후 평가

과정평가는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대해 집중하는 것으로 주요 목적은 필요한 경우 정책을 수정하거나, 집행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정평가는 때로 형성평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실시된 유럽연합회원국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절반에 가까운 14개 국은 청년 정책을 대상으로 과정평가, 즉 형성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6.7%의 국가에서 청년 정책 중, 고용과 교육에 대한 부분은 과정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평가는 공공의 개입에 의해 도출된 성과를 측정하고 그 정책이 목적과 목표 달성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각각의 다른 층위(지역, 국가, 유럽 수준)에서 공공적 개입의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나, 정부부처, 혹은 기관, 관리자와 실무자들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Irina Lonean, 2021:22). 또, 물적 인적자원을 집계하고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분야 간 협업을 지원하고 다른 분야에서 모인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정책에 궁극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과정평가는 수혜자는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평가의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등 과정평가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Irina Lonean, 2021:23).

## 7) 유럽연합 주요 청년정책(EU Youth Strategy 2019-2027) 중간 평가 결과<sup>7)</sup>

### (1) EU 청년정책의 목적

EU 청소년 및 청년정책은 2018년 유럽의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시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내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적, 시민적 참여를 지원하고, 참여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자 제시되었다. 세부 목표는 청소년과 청년 모두 EU의 가치와 유럽 정체성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시민이자 연대와 긍정적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과 고용, 교육, 건강, 사회적 포용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청소년 및 청년정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빈곤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청년의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24:2).

이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는 2023년 2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가량 이루어졌으며 효과성과 효율성, 관련성, 통합성과 가치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중간평가 결과 EU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유럽연합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은 확인 할 수 있었다.

### (2) EU 청년정책 중간평가 결과

#### 가. 효과성

EU 청년 정책이 회원국내 청년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유럽연합 회원국내 청년정책 수립 시 EU 청년정책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참여와 연대, 임파워먼트와 적극적 시민성 함양 부분에 있어서도 기여하고 있어 EU 청년 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4: 4). 또한 이를 통해 EU 정책과 자국 정책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의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책기획 등을 위하여 이해 당사자들에게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었다.

7) 본 절은 유럽연합 청년정책 중간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하여 요약하였음. European Commission(2024).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EU Youth Strategy 2019-2027,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나. 효율성

EU 청년정책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즉 유럽연합 수준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적인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국가 청소년정책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간소화된 절차와 보고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개선점으로 도출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4: 9)

## 다. 통합성과 가치

유럽연합의 여러 정책과 청년정책의 시너지도 매우 중요하다. EU 청년정책은 공유된 우선순위와 목적과 가치를 통해 다른 정책과 조화롭게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특히 아동, 청소년, 청년의 참여에 있어서 특히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데 아동 대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한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성평등과 차별금지, 세대통합 같은 영역에서의 참여가 확대되어 정책간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중간평가를 통해 밝혀졌다. 다만 향후에 건강과 웰빙, 환경, 기후변화, 교육, 국제협력과 유럽의 가치, 고용과 사회통합 정책들과의 조화와 통일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 지적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4: 9-10).

## 8) 유럽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청소년정책에 비해 비록 역사가 짧은 청년정책 역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의 지식센터처럼, 평가를 위한 별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에 앞서 지표와 내용이 충분히 숙지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인 청년은 물론 다양한 층위의 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럽 청년정책 중간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평가에서 다루는 영역인 효과성과 효율성 이외에 통합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정책의 특성 상 다른 세대를 위한 정책 혹은 다른 여러 분야의 정책과 상호작용하고 필수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다른 부처의 정책과 세대 정책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가에 대한 환류와 성과 관리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 미국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sup>8)</sup>

### 1) 들어가며

생애 발달단계에서 청년기는 사회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OECD 국가들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 및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다(OECD, 2024). 미국 또한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교육, 고용, 건강, 복지, 사법 관련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청년정책은 연방정부의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를 통해 집행된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층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며 교육부에서는 청년층의 교육 및 학업 지원 정책을 실행한다. 청년층의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노동부에서 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법무부는 청년 범죄 예방 및 관련 사법개혁을 담당한다.

미국 정부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정책을 추진하며 각 부처가 협력하여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청년층이 여전히 실업, 교육격차, 정신건강 문제, 주거 불안정, 사법제도의 불평등 등 다차원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Díaz, Hessel, Avendano & Evans-Lacko, 2022; Park et al., 2022; Phan, & Kloos, 2023). 범 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간 연계 부족, 실효성 한계,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Greer, Dubin, Falkenbah, Jarman & Trump, 2023).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현실 속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연방 및 주 정부,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증거기반(evidence-based)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청년층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정의를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반 중재의 필요성 또한 논의되는 중이다(Lerner et al., 2021; Nation et al., 2021).

본 절은 미국의 주요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청년정책 관련 실증자료 및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정책의 공과(功過)를 논의하는 문헌들을 검토하

---

8) 이 절은 김수혜(단국대학교)가 의뢰를 받아 번역 및 집필하였음



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교육, 노동시장, 정신건강 및 복지 정책,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정책의 요지를 정리하며 성과 및 한계점을 도출하고 청년정책의 개선 방안을 위한 합의를 논의할 것이다.

## 2) 주요 정책 분석 및 평가

### (1) 교육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청년층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TRIO Programs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TRIO Programs은 저소득층, 장애 학생, 소수계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HEA)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대학 입학 준비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전반적인 교육 지원을 아래의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다.

표 Ⅲ-2. 미국 교육부 청년정책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주요 내용
Upward Bound	저소득층 및 학업 성취도가 낮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수학, 실험 과학, 작문, 문학 및 외국어 학습을 비롯하여 튜터링, 상담 등을 제공
Talent Search	대학 진학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입학 준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잠재력이 충분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을 독려하며 대학 졸업률을 제고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Student Support Services (SSS)	대학생들에게 학업 상담, 멘토링, 재정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 자금금을 통해 중도 탈락률을 낮추고 대학 졸업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s (EOC)	성인 및 비전통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 및 직업 훈련 정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증진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Ronald E. McNair Post baccalaureate Achievement Program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및 소수계 대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업 잠재력이 뛰어난 학사학위 청년층이 연구 및 기타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

\* 출처: U.S.Department of Education (2025). Federal TRIO Program. <https://www.ed.gov/about/ed-offices/ope/trio#home> 에서 2025년 3월 10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9) U.S.Department of Education (2025). Federal TRIO Program. <https://www.ed.gov/about/ed-offices/ope/trio#home> 에서 2025년 3월 10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요약하면 TRIO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장애 학생, 소수계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 교육부 정책으로 세대 내 대학진학을 처음 시도하는 청년층과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적, 재정적 성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TRIO Programs 성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참여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일관되게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 및 졸업률 관련 TRIO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참여 학생들에 비해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일례로 Upward Bound 프로그램 참여자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14%, 졸업할 가능성이 13%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0). 학업성취도 또한 Upward Bound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높고, GPAs 또한 비참여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TRIO 프로그램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심리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는 환경을 통해 자신감을 북돋우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과 자율권을 신장하는 데에도 유효한 것으로 논의된다(Quinn, Cornelius-White, MacGregor & Uribe-Zarain, 2019).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비해 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문제 제기과 함께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엄존한다(Bowden & Belfield, 2015).

## 2) 노동시장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중 고용 혁신 및 기회법(WIOA)은 청년층(16~24세)과 취약 계층의 취업 및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WIOA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sup>10)</sup>.

표 III-3. 미국 노동부 청년정책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주요 내용
Youth Program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16~24세 저소득층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학력 취득 지원, 취업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기반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함

10) U.S. Department of Labor (2025). WIOA Workforce Programs. <https://www.dol.gov/agencies/eta/wioa/programs>에서 2025년 3월 20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프로그램	주요 내용
Youth Build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16~24세 저소득층 및 교육 소외 계층 청년 대상으로 건설업과 의료, 정보기술, 호텔업을 포함한 수요가 많은 직종의 직업기술 훈련을 제공함. 청년들이 주택 및 건축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며 GED(일반 교육 개발) 또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 과정 제공함
Job Corps	1964년부터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16~24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 대상 직업 훈련 및 취업을 지원함. 다양한 직종의 전문 기술 교육과 숙식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GED 또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을 돕고, 직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함

\* 출처: U.S. Department of Labor (2025). WIOA Workforce Programs. <https://www.dol.gov/agencies/eta/wioa/programs>에서 2025년 3월 20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세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취약계층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교육, 학업지원, 실무경험 제공, 직업훈련과 고용연계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및 교육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지만 관련 연구들을 참여자의 고용 및 교육부문 성과 관련 엇갈리는 결과를 보고한다. 먼저 고용 혁신 및 기회법(WIOA)에 대한 백악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직업 탐색 지원 및 경력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이러한 개입만으로는 장기적인 소득 증가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2019). 구체적으로 직업탐색 지원을 받은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분기별 평균 소득이 약 310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추가적인 직업 훈련을 받은 집단의 임금상승 효과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직업 탐색 지원을 넘어 보다 심층적인 훈련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무작위 배정 실험(Random Assignment Research Design)을 통해 YouthBuild 프로그램을 성과 분석한 연구결과는 해당 프로그램이 직업교육, 학업지원 및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고용 및 소득 향상에는 미미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Miller, Cummings, Millenky, Wiegand & Long, 2018). 다시 말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년층은 유익한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를 얻었지만 이들의 장기 고용 증가 또는 소득 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프로그램의 직업 연결성 강화 및 지속적인 후속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Job Corps 프로그램에 대한 중단분석에서도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가 차별적으로 발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chochet, 2021). 중장년층의 경우 고용률 증가, 장애연금

수급 감소, 세금 신고율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였지만, 청년층은 지속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아 청년층 대상의 정책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 3) 건강 및 복지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청년정책은 포괄적 지원체계를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간주하고 부처 내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이 컨트론타워로서 청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 자살예방, 약물남용 방지, 지역사회 기반 치료지원 등에 초점을 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다차원적 위기에 놓인 가출 및 노숙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RHY)도 대표적 정책 사례로서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4. 미국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주요 내용
System of Care, (SOC) <sup>11)</sup>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상담 프로그램과 치료비를 지원하며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Children’s Mental Health Initiative (CMHI)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가 감지되는 21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함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SPRC) <sup>12)</sup>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 위기상담과 학교 및 지역사회 자살 예방교육을 제공함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sup>13)</sup>	중독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조기개입을 제공하고 주정부 및 지역사회 재정지원을 통해 약물예방 및 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 (RHY) <sup>14)</sup>	부처 산하 청소년 및 가족청(ACYF)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노숙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보호 및 긴급 주거지원과 개인 및 단체 상담, 생활 및 대인관계 기술 훈련, 신체 및 행동 건강 관리 등을 지원함

11) SAMHSA (2025b). Grants for Expans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Comprehensiv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with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https://www.samhsa.gov/grants/grant-nouncements/sm-23-013> 에서 2025년 3월 7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데이터 기반 정책성과 분석 및 사례연구에 따르면 예방교육, 조기개입 및 지역사회 기반 개입은 상당한 성과를 담보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미국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증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Griffin & Botvin(2010)에 따르면 개인, 가족 및/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위험 및 보호요인을 도출하여 사회심리적 접근에 따라 개입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약물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데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향후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Saitz et al., 2014), 학교를 기반으로 약물예방 조기개입 또한 청소년의 약물사용 시작을 늦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scher, 2022). CDC(2022)는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과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 하며 사회환경이 자살률과 자살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자살위험 관련 규범적 교육의 중요성과 관련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살예방 종합교육은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낮추는 데 실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Walsh et al., 2024). 또한 RHY 정책 성과와 관련 16~21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 주거를 제공하는 전환 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의 효과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78%가 프로그램 완료 후 영구 주거지를 얻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획득한 것으로 보고된다 (Mahathey et al., 2021).

#### 4) 사법제도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Law)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적 개입은 Second Look Act과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가 대표적이다. 두 법안 모두 사회통합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적 시스템에 의해 청년층이 지나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재범을 줄이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청년층의 권리 보호와 재활을 목표로 운영되며

12)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25). <https://sprc.org/>에서 2025년 3월 7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13) SAMHSA (2025a).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https://www.samhsa.gov/about/offices-centers/csap>에서 2025년 3월 7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14)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25). Runaway and homeless youth. <https://acf.gov/fysb/programs/runaway-homeless-youth>에서 2025년 3월9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사법개혁을 바탕으로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회복적 정의를 위시하여 범죄를 저지른 청년층이 사회로 원활하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대상, 목적, 세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5. 미국 법무부 청년정책 프로그램 개요

법안	주요 내용
Second Look Act <sup>15)</sup>	특정 범죄로 수감된 청소년에게 형량 재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후 가능한 재할과 재사회화를 고려하여 형량을 재조정하는 데 목적을 두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성인과 같은 강력한 형벌보다는 재할을 목표로 한 적절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재할을 촉진하고자 함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sup>16)</sup>	법원 시스템 내에서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나 가정불화, 학교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법 시스템 개선, 범죄 예방, 재할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청소년들이 처벌이 아닌 교육과 재할 중심으로 교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재할 치료, 직업 훈련, 심리 치료)을 운영함.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행 청소년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지역사회 기반에서 재할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재범률을 줄이고, 사회 재진입을 독려함

주 별 Second Look Act의 집행 및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이후 재심을 받은 사람들의 재범률은 낮아지고, 재할 프로그램을 완료한 이들의 사회 복귀를 또한 제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관련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3년 재수감률이 23%나 감소했는데, 구체적으로 35%였던 2008년 재수감률이 2019년에는 27%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U.S.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Justice Center, 2024).

JJDP Act 도입 또한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었는데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의 자료분석 결과 미국 전역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절도와 관련된 청소년 법정 사건의 수는 27% 감소했으며 같은

15) Becky Feldman (2025). The Second Look Movement: A Review of the Nation’s Sentence Review Laws. <https://www.sentencingproject.org/reports/the-second-look-movement-a-review-of-the-nations-sentence-review-laws/> 에서 2025년 3월 11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16) OJJDP (2025). Legislation. <https://ojjdp.ojp.gov/about/legislation> 에서 2025년 3월 11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기간 동안 강도 혐의로 기소된 18세 미만 청소년의 체포 건수도 43% 감소했다(Hockenberry & Puzzanchera, 2024). 특히 Mendel(2023)은 미성년자들이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수감되기 보다 대안 중재 프로그램(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멘토링, 가족상담 및 지원)의 효과를 지지한다. JJDP Act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의 개입으로 논의되는데, 청소년 범죄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중재 효과를 메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범을 억제하는 데 가족 기반 개입, 특히 가족치료와 지역사회 기반 개입의 효과가 발견되었다(Aazami, Valek, Ponce & Zare, 2023).

## 5) 미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미국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노동시장, 건강 및 복지, 사법제도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TRIO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청년의 고등교육 진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이 취약계층 청년층의 학습 아비투스 부재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논의되기도 한다(Smith, 2023).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장기적인 소득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Miller et al., 2018). 청년층의 정신건강 및 복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약물남용 예방, 정신건강 치료 지원, 가출 및 노숙 청년 보호 프로그램(RHY)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개입이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었다(CDC, 2022). 사법제도 측면에서는 Second Look Act와 JJDP Act를 통해 청년 범죄자의 재활과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회복적 정의에 따른 대안적 중재가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U.S.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Justice Center, 2024).

이처럼 미국 청년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교육, 고용, 사법,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청년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미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환경의 변화가 추동하는 재난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 제도적 개입이 보다 포괄적 접근에서 청년층의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Nickerson, & Sulkowski, 2021). 특히 유사한 신자유주의 복지레짐로 분류되는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함과 포괄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적 논의(Béland, Dinan, Rocco & Waddan,

2021)와 함께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청년들이 직면하는 위기가 교차되는 속성을 지니며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와 정책이 생태체계적 접근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담론도 주목할 만하다(Nadeem, & Van Meter, 2023).

전술한 논의로부터 한국의 청년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요구를 세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년을 사전에 파악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며 청년층의 자본과 아비투스 축적의 다중격차가 목도된다는 연구를 고려했을 때(박해남, 박미희, 2021), 대학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된 지원체계가 포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년들의 학업과 노동시장 참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직업훈련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얻을 수 있도록 근시안적으로 제공되는 직업기술 교육보다 미래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및 현장실습 기회의 확충 또한 요구된다.

나아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조기 개입과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의 위협에 처한 청년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 및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 또한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관련 국내연구(송도훈, 정규형, 김이슬, 이약남, 2025)에서도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주거 및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종합해보면 한국의 청년정책은 생태체계적 접근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취업, 건강 및 복지 등을 아우르는 거버넌스의 혁신과 동시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청년층 맞춤 서비스 제공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 3. 일본의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sup>17)</sup>

#### 1) 일본의 청년정책의 이해

일본은 청년의 연령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년정책의 대상 및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본은 한국의 「청년기본법」과 같이 청년의 법적 연령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정책분야를 명시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서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연령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상의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청년의 고용촉진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若者雇用促進法(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5-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内閣府(2022)가 매년 발간하는 「子供・若者白書(아동청년백서)」에 따르면, 청년과 관련이 있는 정책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 지원,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상담체계 구축 및 운영, 사회적 위기 청년(은둔형외톨이, 미취업자, 구직단념자 등)에 대한 지원, 청년의 지방도시 이주 및 지역활성화 추진 등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子ども家庭庁(2024)의 「こども白書(아동백서)」에서는 청년 대상 주요 정책으로 취업 및 고용 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생활 지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상담체계의 구축 등을 들고 있다.

한편, 宮本みち子(2023)는 일본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자립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정책의 종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자립이란 단순히 경제적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교육, 복지, 사회참여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일본의 청년정책을 사회보장, 노동분야, 주택분야, 결혼, 가족형성 및 결혼지원분야, 진로지원, 자립지원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시책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분야에서는 일본학생지원기구(日本学生支援機構, JASSO)를 통한 대학생 대상 장학금제도 마련, 산학연계를 통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전문대학원 설립, 재직 청년층 대상 재교육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제도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

17) 이 절은 강영배(대구한의대학교)가 의뢰를 받아 번역 및 집필하였음

둘째, 취업지원분야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청년층의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잡카페(ジョブカフェ) 설치 및 운영, 공공직업안정소(ハローワーク)를 통한 신규학교 졸업자 및 청년층 대상 취업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노동환경 개선(최저임금의 인상 및 노동시간의 적정화), 근로형태의 다양화(원격근무, 프리랜서 등), 창업지원(창업자금지원,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등)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복지정책분야에서는 경제적 지원과 정신건강 대책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는 생활보호제도의 적용 기준 완화, 쉼어하우스형 공유주택의 정비, 임대료(월세)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이 있다. 정신건강대책으로는 학교상담사 배치, 24시간 대응 가능한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SNS를 활용한 상담체계 강화 등과 같은 사업을 들 수 있다.

넷째, 지역창생(創生)과 청년분야로, 지방이주촉진과 지역활성화사업을 들 수 있다. 지방이주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sup>18)</sup>의 확충(청년들이 지방에서 일하면서 지역활성화에 공헌하는 프로그램), U/I턴지원(도시부에서 지방으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및 취업 지원), 지역벤처기업지원(지방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네트워킹 강화). 등이 있다. 지역활성화사업으로는 대학과 지역사회간 연계 강화, 청년 대상 다양한 이벤트 개최,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를 활용한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정책으로 ‘청년회의(ユース議会)’의 설치(지자체 단위에서 청년들이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비영리단체, 시민활동 지원(청년들이 사회활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보조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 2)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 (1) 정책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정책평가법)」(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政策評価法, 이하 정책평가법)) (20

18) 地域おこし協力隊(2025). 「地域おこし協力隊」ってどんな制度?. <https://www.iju-join.jp/chiikiokoshi/about.html> 에서 2025년 3월 8일 인출.

01년 법률 제86호)<sup>19)</sup>이다. 이 법률은 2001년(平成13年)에 제정되어 2002년(平成14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평가법은 각 행정기관이 정책의 기획 입안과 실시상황을 적절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평가의 의무화이다. 각 행정기관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 사전평가, 사후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둘째, 목적 달성도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평가결과는 공표되어 정책의 재검토나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넷째, 총무성(総務省)이 정책평가의 적절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책정하고 각 행정기관의 평가를 총괄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에 따라 각 부처는 '정책평가기본계획((政策評価基本計画)'을 책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2) 정책평가플랫폼: 정책평가포털사이트

일본 정부는 중앙부처의 정책평가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무성(総務省)이 관할하는 플랫폼인 「정책평가포털사이트(政策評価ポータルサイト)」<sup>20)</sup>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운영지침으로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政策評価法, 2001년 법률 제86호)」로 이 법률은 정부의 각 행정기관이 적절한 정책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며, 각 부처가 실시한 정책평가의 결과를 공표하고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정책평가방법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정책 개선을 위한 활용지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지침(行政機関が行う政策評価に関する基本指針)」을 따르고 있다.

이 사이트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정책평가 정보의 일원적 제공(각 부처가 실시한 정책평가 결과와 보고서를 공개, 정책별 평가내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19) 総務省(2025d).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ka/houritu.htm](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ka/houritu.htm) 에서 2025년 3월 8일 인출.

20) 総務省(2025b). 政策評価ポータルサイト.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ka/seisaku\\_n/portal/index.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ka/seisaku_n/portal/index.html) 에서 2025년 3월 10일 인출.

제공), 검색, 열람 기능(정책 분야별, 연도별, 부처별 등의 분류로 검색 가능, 과거 정책평가 결과 아카이브 제공), 정책평가 절차 공개(각 정책의 목표설정, 평가방법, 평가결과, 정책 개선에 대한 반영상황을 설명,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정책평가 지침 및 매뉴얼 제공(정책 평가의 방법과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게재, 행정기관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평가 방법의 사례와 통계 데이터를 제공), 국민 및 전문가 의견 수집(정책평가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 모집 및 공개, 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 등이다.



\* 출처: 総務省(2025b). 政策評価ポータルサイト.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ka/seisaku\\_n/portal/index.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ka/seisaku_n/portal/index.html)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그림 III-1. 정책평가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의 향상이다. 국민이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촉진하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가시화하여 행정의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둘째, 정책의 개선과 정책의 질적 향상이다. 과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평가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하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정책 평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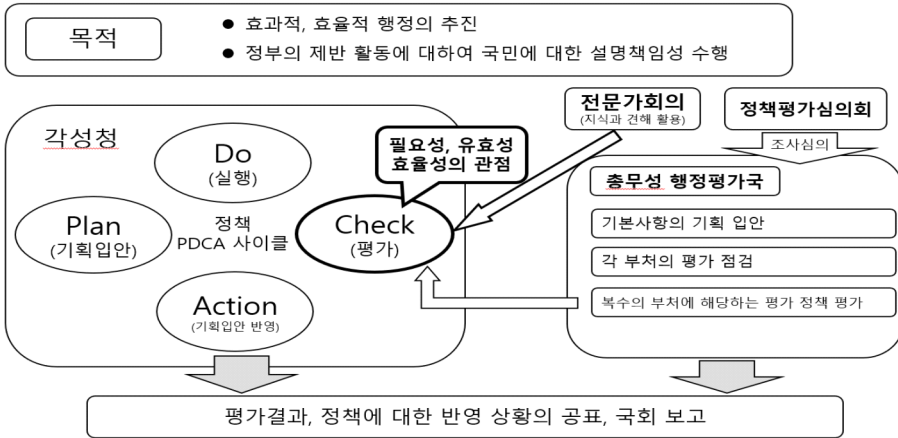
### (3)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의 절차 및 방법<sup>21)</sup>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는 정책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촉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며 정책평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국민에게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철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평가법에서는 각 부처가 소관하는 정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총무성도 정책평가를 추진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책평가법은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가 소관하는 정책에 대해 적시에 그 효과를 파악하여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등의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하는 것, 정부 전체의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함과 동시에 각 부처가 중기적인 기본계획과 1년마다의 실시계획을 책정하기로 하고, 정책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 공표하는 것, 정책평가의 통일성, 종합성 및 한층 더 엄격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총무성이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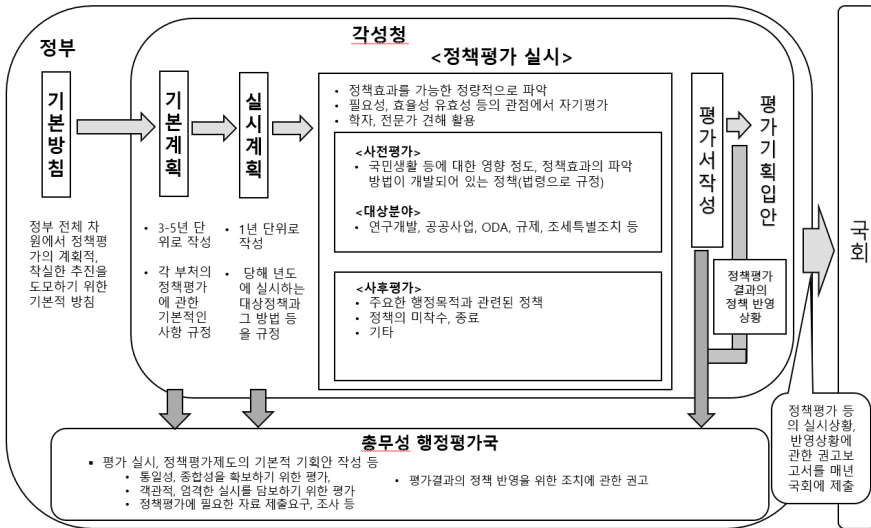
---

21) 総務省(2025a). 政策評価に関する法令、基本方針、ガイドライン等.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hourei.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hourei.html#/) 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 출처: 総務省(2025c). 政策評価制度について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000065209.html#label2](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000065209.html#label2) 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그림 III-2.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개요



\* 출처: 総務省(2025c). 政策評価制度について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000065209.html#label2](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000065209.html#label2) 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그림 III-3. 일본 정책평가방법

2022년 **こども家庭庁設置法**(아동가정청설치법) (令和4年法律第75号) 제정으로 인해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청년정책을 총괄하던 내각부(内閣府)와 일본 정부가 청년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취업지원 및 고용 정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정책평가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4) 내각부(内閣府)의 정책평가제도<sup>22)</sup>

내각부의 정책평가제도를 정책평가 내용, 정책평가의 절차, 평가방법 그리고 정책평가의 활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평가의 내용으로 내각부 정책평가는 정부의 시책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여 정책의 개선과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내각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평가의 주요 목적은 정책의 유효성 확인(정책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 효율성 향상(예산과 자원의 최적 배분을 지향), 책임성 확보(정부의 정책 결정이 투명하도록 보장), 정책 개선 및 재검토(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형성을 지원) 등이다.

다음으로, 정책평가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각부의 정책평가는 ‘사전평가’, ‘사후평가’ 그리고 ‘수시평가’로 구성된다. 먼저, 사전평가에서는 새로운 시책이나 법률,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목적, 기대되는 효과, 대안 검토 등을 통해 정책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후평가에서는 이미 실시된 시책에 대해 실제 성과를 측정하고 기대했던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한다. 사후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① 목표설정: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결정
- ② 데이터수집: 실적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수집
- ③ 분석 및 평가: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
- ④ 결과 공표: 내각부 웹사이트 등에서 공표하여 국민과 관계기관에 정보 제공
- ⑤ 정책 개선 제안: 필요에 따라 재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제시

마지막으로 수시평가는 정책의 실시 과정에서 상황이 변화한 경우 임시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긴급 상황 대응이나 새로운 과제 발생 시에 적용된다.

내각부가 실시하는 정책평가방법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리고 혼합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량평가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비용편익비

22) 内閣府(2025a). 内閣府本府政策評価基本計画. [https://www8.cao.go.jp/hyouka/r2-r6\\_kihonkeikaku.pdf](https://www8.cao.go.jp/hyouka/r2-r6_kihonkeikaku.pdf) 에서 2025년 3월 8일 인출.

(Benefit-Cost Ratio, BCR), 회귀분석, 지표비교(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를 이용한 효과 측정법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정성평가에는 사례분석(타국의 유사정책과의 비교나 성공사례 분석), 전문가평가(해당분야 전문가, 학자에 의한 리뷰), 이해관계자 인터뷰(이해관계자 인터뷰: 정책의 영향을 받는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이 포함된다. 혼합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용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교육정책의 평가에서는 학력 데이터 분석(정량평가)과 교사와 학생의 의견조사(정성평가)를 병용한다.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서 평가결과는 내각부 웹사이트(각 부처의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공개), 연차보고서(책평가의 개요와 개선제안을 정리), 국회 보고(필요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공표된다. 정책평가의 결과는 다음 해 예산 편성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 (5)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정책평가제도<sup>23)</sup>

후생노동성은 사회보장 정책, 노동 정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후생노동성 추진하는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에서는 아래에 열거된 사항을 목적으로 후생노동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하는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행정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철저히 하는 것.

둘째, 행정활동의 범위에 대해 행정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행정서비스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을 실현하는 것.

셋째, 경제사회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등 국민적 관점에서 성과(아웃컴) 증시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

넷째, 후생노동행정의 사명에 비추어 성내 각 부국 등이 한층 더 연계하여 종합적·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후생노동성이 적용하고 있는 정책평가 방법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3) 厚生労働省(2025). 政策評価. <https://www.mhlw.go.jp/wpp/seisaku/hyouka/#wakugumi> 에서 2025년 3월 10일 인출.



후생노동성에서는 정책의 실시단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사전평가(정책 도입 전)로, 신규로 도입되는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제도 개정 전에 재정영향과 대상자 수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둘째, 사후평가(정책 시행 후)로, 이미 시행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증하여 추후 시책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시행 후 노동환경 개선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종합평가(장기적 평가)로, 정책의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제도변경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의 영향을 20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후생노동성의 정책평가 대상 분야는 의료정책(의료보험제도, 진료보수 개정), 노동정책(고용대책, 일하는 방식 개혁), 복지정책(개호보험, 장애인 지원), 연금정책(공적연금제도 재검토)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 3) 일본의 청년정책평가제도: 청년정책 성과관리체계-아동·청년 인덱스보드(子供・若者インデックスボード)<sup>24)</sup>

일본의 청년정책 관련 평가는 해당 부서(중앙관청)에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지표'를 통한 평가로 이루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청년정책은 교육, 고용, 복지, 사회참여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 이러한 정책의 평가는 주로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정책의 효과 측정 및 개선 등에 활용된다. 청년정책의 평가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평가법'(2001년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며, 특히 최근 들어 증거기반정책평가(EBPM, Evidence Based Policy Making)가 요구되고 있다.<sup>25)</sup>

여기에서는 성과관리지표를 통한 정책평가 및 관리제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일본의 청년정책 성과관리는 기본적으로 아동·청년 인덱스보드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청년 인덱스보드란 아동 및 청년의 성장환경 등에 관한 지표로서, 아동

24) 内閣府(2025b). 子供・若者インデックスボードとは.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index\\_board/index.html](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index_board/index.html) 에서 2025년 3월 8일 인출.

25) 総務省(2025e). 総務省行政評価局が取り組むEBPM.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ebpm.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ebpm.html#/) 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및 청년정책의 성과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년 인덱스보드는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근거는 2021년 책정된 「아동·청년육성추진대강(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sup>26)</sup>에 있다. 아동청년육성추진대강은 크게 ‘서론’, ‘아동청년육성지원의 기본적인 방침과 시책’, ‘시책의 추진체계 등’의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인덱스보드에 관한 사항은 ‘시책의 추진체계 등’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청년 인덱스보드는 크게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아동 및 청년의식과 관련된 항목으로, 자기긍정감, 주변과의 관계, 지원에 대한 의식 등 주로 주관적인 의식에 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아동청년 및 아동청년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관련된 항목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청년을 둘러싼 환경,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만족도·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군’으로, 가계와 자산, 고용과 임금, 직업과 생활, 주변의 안전 등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나타내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최근의 자료와 5년전 자료를 비교하여, 각 지표별 변화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표 Ⅲ-6. 아동·청년 인덱스보드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동·청년의 의식	자기이해	
	주변상황	휴식공간(이바쇼, 居場所)
		상담해줄 사람
		도와줄 사람
		공간별 인식
		대인관계
		휴식공간의 수와 자기인식의 관계
		상담해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자기인식이 관계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 장소의 수와 자기인식의 관계
	지원	휴식공간의 수와 관계

26) こども家庭庁(2025b).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9b95185-2d55-4783-a955-983b5283ccd2/3c0b681e/20231228\\_polices\\_kodomo-taikou-junbishitsu\\_06.pdf](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9b95185-2d55-4783-a955-983b5283ccd2/3c0b681e/20231228_polices_kodomo-taikou-junbishitsu_06.pdf) 에서 2025년 3월 10일 인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동·청년 및 아동·청년의 주변상황	장(場)별 상황	가정(학대, 빈곤, 히키코모리 등)
		학교(자살, 등교거부, 이지메 등)
		지역(지역사회 인간관계 등)
		인터넷(이용상황, SNS피해 등)
	복수(複數)의 장애 공통되는 상황	직장(실업률, 평균임금 등)
		생명, 안전(자살, 범죄 등)
만족도·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군	-	건강(비만, 수신(瘦身), 범죄 등)
		가계와 자산
		고용과 임금
		주택
		직업과 생활
		건강상태
		교육환경, 교육수준
		사회와의 관계
		자연환경
		주변의 안전
		양육환경
		개호(介護) 관련 환경

\* 출처: こども家庭庁(2025a). 子供・若者インデックスボー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ba9285a8-96bc-4210-9e15-32d0a4f630fe/5f89e0dd/20230810\\_councils\\_shingikai\\_kihon\\_seisaku\\_0sqZmhOz\\_14.pdf](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ba9285a8-96bc-4210-9e15-32d0a4f630fe/5f89e0dd/20230810_councils_shingikai_kihon_seisaku_0sqZmhOz_14.pdf) 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아동·청년 인덱스보드는 아동과 청년에 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시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크게 관리시스템과 피드백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관리시스템은 아동·청년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이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 등이다. 먼저 데이터 수집 기능으로 대상 데이터로는 교육, 복지, 건강, 취업, 사회참여 등의 지표가 있고, 이 지표는 학교, 지자체, 의료기관,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된다. 데이터의 수집방법으로는 설문조사, 행정 데이터 연계, IoT·센서 데이터 활용 등이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 관리이다. 데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관리)을 통해 관리되며,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익명의 형태로 처리된다.

데이터 분석은 통계 분석, 시계열 분석, AI를 통한 예측 모델링 등으로 통한 정량분석과 인터뷰 조사, SNS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성적 분석 그리고 시각화된 지표 제공(그래프, 지도)하는 대시보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은 정책 결정 지원(정책 담당자가 증거에 기반한 시책을 입안 가능), 연구 및 보고서 작성(학술 연구나 공공 보고서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 이상 감지 알림(중대한 변화(자살 위험 증가, 빈곤율 상승 등)를 실시간으로 통지) 등으로 형태로 활용된다.

다음으로 피드백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피드백시스템은 관리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계자(행정, 학교, 복지단체, 청년 자신)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과 시책에 반영하는 구조이다. 피드백의 프로세스는 데이터 가시화 및 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집 그리고 정책 개선 절차,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데이터의 가시화와 보고 단계에서는 각 지표(예: 교육 성취도, 생활 만족도, 빈곤율)를 정기적으로 갱신, 연차 보고서 작성 및 공개(국가, 지방 자치단체, 학교용), 대시보드를 통한 실시간 피드백 등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음 단계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집 단계에서는 행정기관(정책 담당자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책의 효과를 평가), 교육기관(학교가 학습 환경 및 정신 건강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 복지기관 및 NPO(현장 문제와 데이터를 비교하여 지원 내용을 최적화), 청년 및 보호자(피드백 설문조사 및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집약)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 단계인 정책 개선 절차 단계에서는 정책 담당자가 데이터와 의견을 바탕으로 시책 조정하고, 시험적인 프로그램 실시, 효과 측정(파일럿 프로젝트) 등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효과가 높은 사업을 확충하고 효과가 낮은 정책은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 단계인 지속적인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정의 성과를 데이터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 도입, 정기적인 보고서 갱신 및 공유(연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장기 추세(trend) 분석 등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다.

#### 4) 일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이상으로 일본의 청년정책, 정책평가제도 그리고 청년정책평가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일본의 청년정책제도의 특징과 한국의 청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청년정책평가제도와 관련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청년정책 평가제도는 정책의 유효성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청년정책 평가제도의 특징으로는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체계(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에 따라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 아동·청년 인덱스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실시, 청년정책추진회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이루어짐)를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증거(evidence)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각종 통계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인덱스보드를 활용하여 정책의 진척도와 과제를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피드백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청년정책의 통합적인 운영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한국의 청년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정책 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처럼 '청년정책추진회의'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과 같은 제도적 틀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일본의 청년정책평가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량적 데이터 활용이 충분하지 않다. 일본의 '아동·청소년 인덱스보드'와 같은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면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진다. 특히 고용,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하면 보다 정밀한 정책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청년정책평가에 있어 당사자인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처럼 정책평가 시 청년의

피드백을 직접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하면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이 정책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회의'를 설치하거나 SNS를 활용한 의견 수렴 체계를 도입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이다. 한국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추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지방 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 청년 지원 스테이션'과 같은 지원 모델을 도입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전개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별 청년정책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 ○ ————— 제4장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의 개발

- 1.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  
구안
- 2. 델파이 조사 및 분석결과
- 3. AHP 조사 및 분석결과





## 1.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 구안

### 1) 평가체제 구안

#### (1) 평가대상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평가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정책의 중장기계획에 해당하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평가대상으로 한 이유는 청년정책의 체계는 5개년 계획인 기본계획과 이에 토대로 한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금년도가 지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지난 5년동안을 점검해 보고 제2차 기본계획의 개선점과 방향을 살펴본다는 측면이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종합평가의 형식으로 실제 평가되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실무적인 측면이 있다.

평가대상로 삼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에 수립된 최초 추진안과 2023년의 수정안으로 추진되었다. 최초안은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청년의 삶, 청년정책 진단 및 추진방향,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구성되었고, 수정안은 수정배경, 정책여건, 제1차 기본계획 중간점검 및 평가(주요성과,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수정안 주요 변경사항),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분야별 주요내용(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향후계획,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주요 배경과 필요성, 추진 정책의 기본 틀이나 중점 과제 등은 최초안과 수정안이 유사하기는 하나, 수정안에서는 최초 추진안에서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등이 간략히 요약되거나 일부 삭제된 부분도 있고, 수정 배경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이 추가되어 있어서, 두 가지 버전의 기본계획의 내용을 가급적 모두 포괄하도록 재구화하여 본 평가연구에 활용하였다.

27)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 (2) 평가의 기본 틀

수요자 중심 평가의 1차적인 기본 틀은 평가부문을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의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 차원은 전문가 그룹이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 체계성 평가이고,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차원은 청년들이 직접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은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등 3가지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평가영역은 각 2개의 평가항목으로 세분하였다.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은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등 4가지 평가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차 설계는 1차 구안된 평가모형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는데, 기본 틀의 경우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등 3가지의 공통적인 평가영역으로 통일되게 구성하여 이에 대한 수요자 평가와 이를 보완하는 전문가 평가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수정하여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 2) 평가지표 구안

평가의 기본 틀을 설계하고 각 평가영역에 따른 평가지표를 수립하였다. 1차 평가모형 구안에서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 차원은 첫 번째 평가영역인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의 경우 정책 수립의 체계성, 정책 방향의 적절성으로, 두 번째 평가영역인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의 경우 정책 기획의 정당성, 세부 과제의 적합성으로, 세 번째 평가영역인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의 경우 정책 의도의 달성도, 정책 성과의 효과성이란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평가항목별 3개의 평가지표로서 총 18개의 평가지표로 구안하였다.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차원에서는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등 4가지 평가영역에서 각 5개씩 총 20개의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 2. 델파이 조사 및 분석결과

###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은 청년 정책 및 평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최종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Web Survey)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회의 델파이 조사가 시행되었다.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가 이루어졌고,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 수정안’에 대해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표 IV-1. 델파이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청년정책 및 평가 전문가
유효 표본	12명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Web Survey)
조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내용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간	- 1차: 2025년 3월 27일 ~ 2025년 4월 8일 - 2차: 2025년 4월 18일 ~ 2025년 4월 29일

구체적으로 본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2. 델파이 참여 전문가

연번	이름	소속/직위
1	변○○	연구원 박사
2	배○○	대학 교수
3	양○○	대학 교수
4	윤○○	대학 교수
5	윤○○	대학 교수
6	한○○	대학 교수
7	신○○	유관기관 센터장
8	김○○	연구원 박사
9	박○○	연구원 박사
10	임○○	유관기관 센터장
11	김○○	대학 교수
12	기○○	유관기관 본부장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구안(안)은 다음과 같이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과 친화성으로 구분된다.

표 IV-3.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1차 구안(안) :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정책 수립의 체계성	1) 청년정책으로서 수립배경은 합리적인가 2) 청년정책으로서 환경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인가 3) 청년정책의 현황에 대한 진단은 적절한가
	정책 방향의 적절성	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체계도는 적절한가 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구성은 적절한가 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정책 기획의 적정성	7)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8) 청년정책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의 구성은 적절한가 9)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의 양은 충분한가
	세부 과제의 적합성	10)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진내용은 해당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11)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진일정은 해당 내용 추진에 적절한가 12)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담당부처는 적절한가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정책 의도의 달성도	13) 청년정책으로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세부과제는 달성되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 성과는 전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
	정책 성과의 효과성	1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한 효과가 있었는가 17)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요구를 충족시켰는가 18)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표 IV-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1차 구안(안) :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평가영역	평가지표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1) 정책의 수립배경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2) 환경분석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3) 정책 현황에 대한 진단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4)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설정은 청년정책으로 충분한가 5)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6) 해당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7)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8) 해당 정책의 대상(수요자)을 알고 있는가 9) 해당 정책을 해당 부처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0) 해당 정책의 추진 과정을 매체(미디어) 등을 통해 들은 적이 있는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11)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필요한가 12)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중요한가 13) 해당 정책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14) 해당 정책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15) 해당 정책의 담당 부처는 적절한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6) 해당 정책은 의도한 실적을 달성했는가 17) 해당 정책은 청년이 만족했는가 18) 해당 정책은 청년의 요구를 충족하는가 19) 해당 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20) 해당 정책은 청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2) 1차 델파이 조사결과

(1)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

가. 평가영역 구성 적절성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 지표 중 평가영역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함 평가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 항목 모두 CVR이 기준값 (0.56)을 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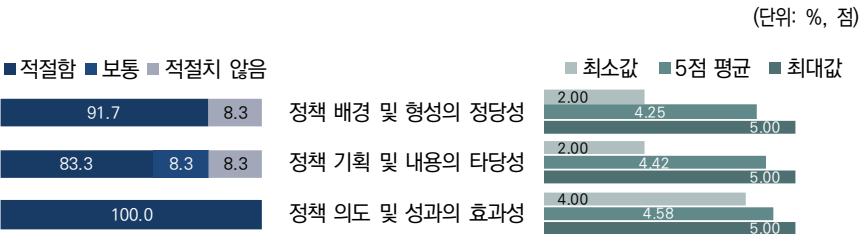


그림 IV-1. 평가 영역 적절성 평가

표 IV-5. 평가 영역 적절성 평가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28)	수렴도 29)	CVR 30)
	①+②	③	④+⑤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91.7	0.0	8.3	2.00	5.00	0.87	4.25	0.75	0.50	0.83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83.3	8.3	8.3	2.00	5.00	1.00	4.42	0.80	0.50	0.67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100.0	0.0	0.0	4.00	5.00	0.51	4.58	0.80	0.50	1.00

28) 합의도 (Agreement): 0.75 이상 유의미  
29) 수렴도 (Convergence): 0.5 이하 유의미  
30) 내용 타당도 비율 (CVR: Content Validity Ratio): 12명 기준 최소값 0.56 이상 유의미

## 나. 평가영역별 평가 항목 구성 적절성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 지표 중 평가 항목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을 초과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만, '정책 수립의 체계성'과 '세부 과제의 적합성' 항목은 CVR이 각각 0.50, 0.33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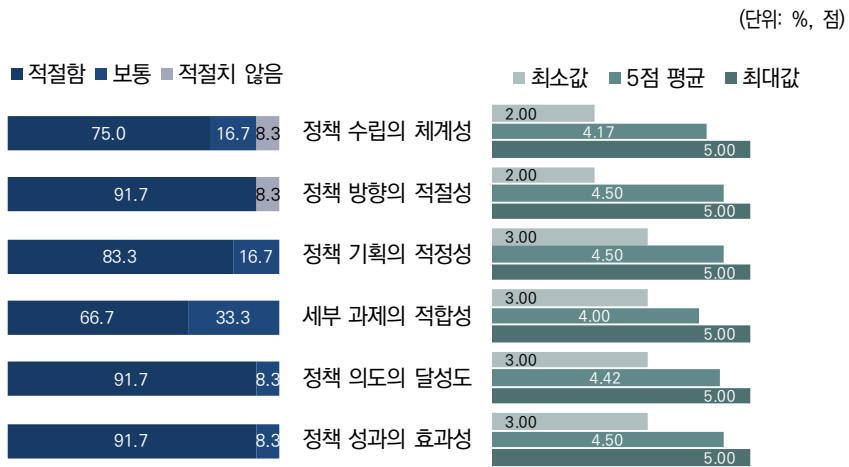


그림 IV-2. 평가 항목 적절성 평가

표 IV-6. 평가 항목 적절성 평가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정책 수립의 체계성	75.0	16.7	8.3	2.00	5.00	1.03	4.17	0.72	0.63	0.50
정책 방향의 적절성	91.7	0.0	8.3	2.00	5.00	0.90	4.50	0.80	0.50	0.83
정책 기획의 적정성	83.3	16.7	0.0	3.00	5.00	0.80	4.50	0.80	0.50	0.67
세부 과제의 적합성	66.7	33.3	0.0	3.00	5.00	0.85	4.00	0.50	1.00	0.33
정책 의도의 달성도	91.7	8.3	0.0	3.00	5.00	0.67	4.42	0.78	0.50	0.83
정책 성과의 효과성	91.7	8.3	0.0	3.00	5.00	0.67	4.50	0.80	0.50	0.83

## 다. 평가지표 구성 적절성: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첫 번째 평가 영역인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의 평가 지표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을 초과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만, ‘청년정책으로서 수립배경은 합리적인가’ 항목의 CVR이 0.50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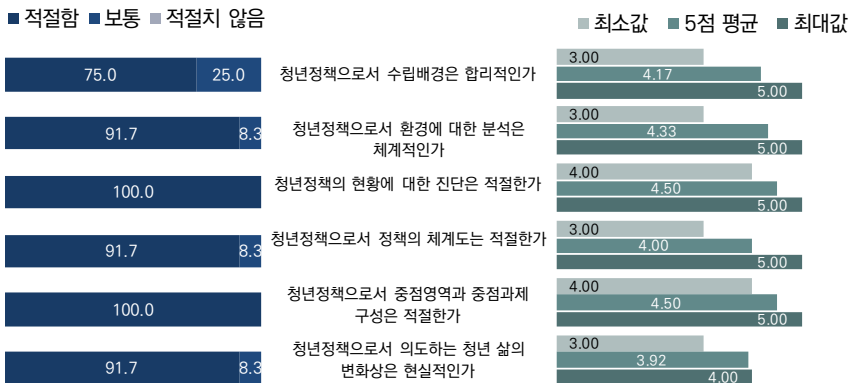


그림 IV-3.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표 IV-7.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청년정책으로서 수립배경은 합리적인가	75.0	25.0	0.0	3.00	5.00	0.83	4.17	0.69	0.63	0.50
청년정책으로서 환경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인가	91.7	8.3	0.0	3.00	5.00	0.65	4.33	0.75	0.50	0.83
청년정책의 현황에 대한 진단은 적절한가	100.0	0.0	0.0	4.00	5.00	0.52	4.50	0.78	0.50	1.00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체계도는 적절한가	91.7	8.3	0.0	3.00	5.00	0.43	4.00	1.00	0.00	0.8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구성은 적절한가	100.0	0.0	0.0	4.00	5.00	0.52	4.50	0.78	0.50	1.00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91.7	8.3	0.0	3.00	4.00	0.29	3.92	1.00	0.00	0.83



## 라. 평가지표 구성 적절성: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두 번째 평가 영역인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의 평가 지표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을 초과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만, '청년정책으로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의 양은 충분한가'와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담당부처는 적정한가' 항목은 CVR이 각각 0.33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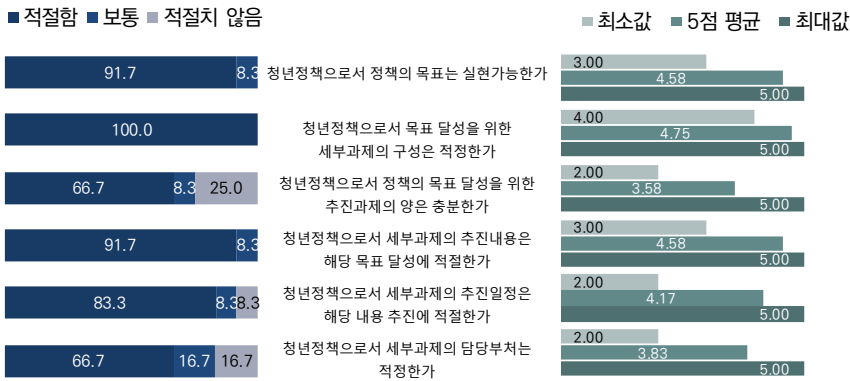


그림 IV-4.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표 IV-8.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91.7	8.3	0.0	3.00	5.00	0.67	4.58	0.80	0.50	0.83
청년정책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의 구성은 적절한가	100.0	0.0	0.0	4.00	5.00	0.45	4.75	0.95	0.13	1.00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의 양은 충분한가	66.7	8.3	25.0	2.00	5.00	1.08	3.58	0.69	0.63	0.33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진내용은 해당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91.7	8.3	0.0	3.00	5.00	0.67	4.58	0.80	0.50	0.83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진일정은 해당 내용 추진에 적절한가	83.3	8.3	8.3	2.00	5.00	0.94	4.17	0.75	0.50	0.67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담당부처는 적절한가	66.7	16.7	16.7	2.00	5.00	1.11	3.83	0.50	1.00	0.33

## 마. 평가지표 구성 적절성: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세 번째 평가 영역인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의 평가 지표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함 평가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0.56)을 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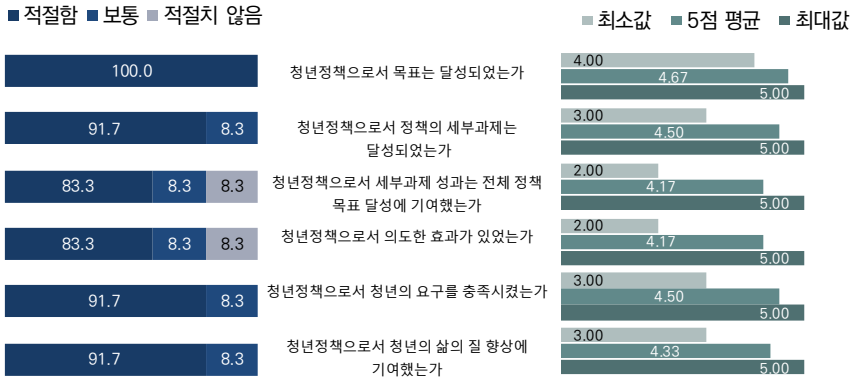


그림 IV-5.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표 IV-9.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청년정책으로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00.0	0.0	0.0	4.00	5.00	0.49	4.67	0.80	0.50	1.00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세부과제는 달성되었는가	91.7	8.3	0.0	3.00	5.00	0.67	4.50	0.80	0.50	0.83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 성과는 전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	83.3	8.3	8.3	2.00	5.00	0.94	4.17	0.75	0.50	0.67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한 효과가 있었는가	83.3	8.3	8.3	2.00	5.00	0.94	4.17	0.75	0.50	0.67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요구를 충족시켰는가	91.7	8.3	0.0	3.00	5.00	0.67	4.50	0.80	0.50	0.83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91.7	8.3	0.0	3.00	5.00	0.65	4.33	0.75	0.50	0.83

## (2)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 가. 평가영역 구성 적절성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 중 평가영역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함 평가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 (0.56)을 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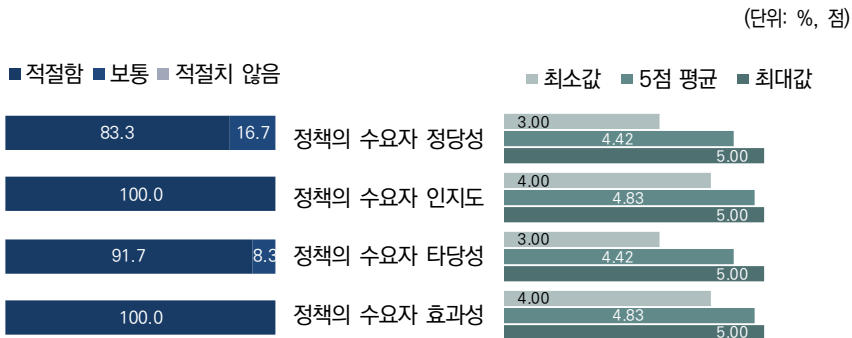


그림 IV-6. 평가 영역 적절성 평가

표 IV-10. 평가 영역 적절성 평가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83.3	16.7	0.0	3.00	5.00	0.79	4.42	0.80	0.50	0.67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100.0	0.0	0.0	4.00	5.00	0.39	4.83	1.00	0.00	1.00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91.7	8.3	0.0	3.00	5.00	0.67	4.42	0.78	0.50	0.8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00.0	0.0	0.0	4.00	5.00	0.39	4.83	1.00	0.00	1.00

## 나. 평가지표 구성 적절성: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첫 번째 평가 영역인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의 평가 지표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함 평가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0.56)을 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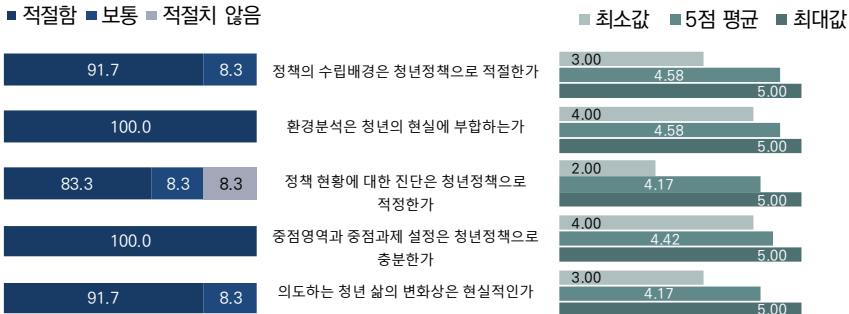


그림 IV-7.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표 IV-11.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정책의 수립배경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91.7	8.3	0.0	3.00	5.00	0.67	4.58	0.80	0.50	0.83
환경분석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100.0	0.0	0.0	4.00	5.00	0.51	4.58	0.80	0.50	1.00
정책 현황에 대한 진단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83.3	8.3	8.3	2.00	5.00	0.94	4.17	0.75	0.50	0.67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설정은 청년정책으로 충분한가	100.0	0.0	0.0	4.00	5.00	0.51	4.42	0.75	0.50	1.00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91.7	8.3	0.0	3.00	5.00	0.58	4.17	0.94	0.13	0.83

## 다. 평가지표 구성 적절성: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두 번째 평가 영역인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의 평가 지표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해당 정책을 해당 부처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해당 정책의 추진 과정을 매체(미디어) 등을 통해 들은 적이 있는가’의 CVR이 각 0.50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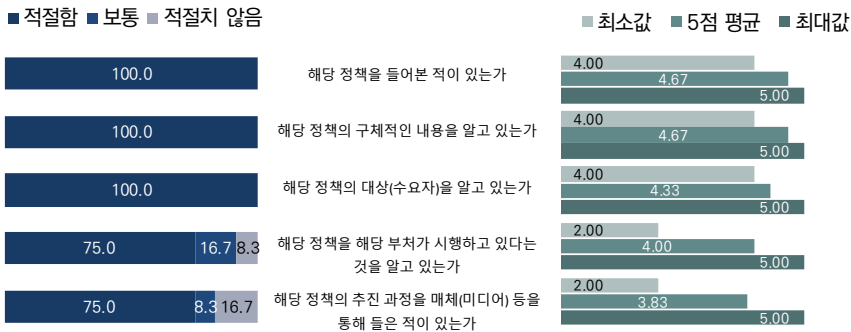


그림 IV-8.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표 IV-12.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해당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100.0	0.0	0.0	4.00	5.00	0.49	4.67	0.80	0.50	1.00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100.0	0.0	0.0	4.00	5.00	0.49	4.67	0.80	0.50	1.00
해당 정책의 대상(수요자)을 알고 있는가	100.0	0.0	0.0	4.00	5.00	0.49	4.33	0.75	0.50	1.00
해당 정책을 해당 부처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75.0	16.7	8.3	2.00	5.00	0.95	4.00	0.69	0.63	0.50
해당 정책의 추진 과정을 매체(미디어) 등을 통해 들은 적이 있는가	75.0	8.3	16.7	2.00	5.00	1.03	3.83	0.88	0.25	0.50

## 라. 평가지표 구성 적절성: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세 번째 평가 영역인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의 평가 지표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을 초과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만, ‘해당 정책의 담당 부처는 적정한가’ 항목은 CVR이 0.33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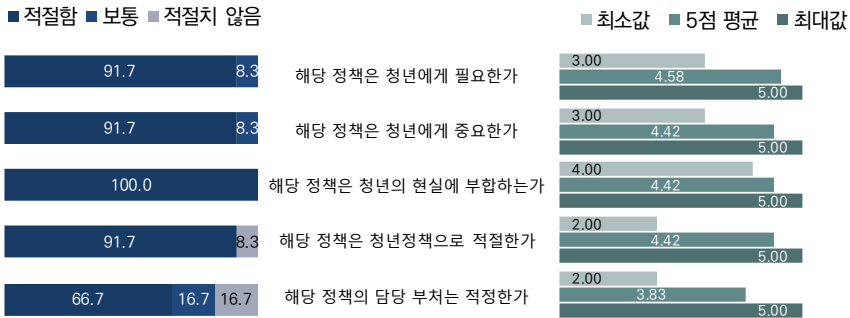


그림 IV-9.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표 IV-13.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필요한가	91.7	8.3	0.0	3.00	5.00	0.67	4.58	0.80	0.50	0.83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중요한가	91.7	8.3	0.0	3.00	5.00	0.67	4.42	0.78	0.50	0.83
해당 정책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100.0	0.0	0.0	4.00	5.00	0.51	4.42	0.75	0.50	1.00
해당 정책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91.7	0.0	8.3	2.00	5.00	0.90	4.42	0.80	0.50	0.83
해당 정책의 담당 부처는 적정한가	66.7	16.7	16.7	2.00	5.00	1.11	3.83	0.50	1.00	0.33

마. 평가지표 구성 적절성: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네 번째 평가 영역인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의 평가 지표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함 평가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0.56)을 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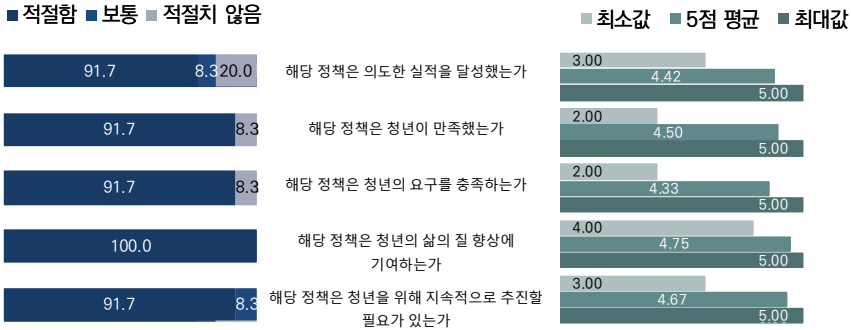


그림 IV-10.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표 IV-14.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해당 정책은 의도한 실적을 달성했는가	91.7	8.3	0.0	3.00	5.00	0.67	4.42	0.78	0.50	0.83
해당 정책은 청년이 만족했는가	91.7	0.0	8.3	2.00	5.00	0.90	4.50	0.80	0.50	0.83
해당 정책은 청년의 요구를 충족하는가	91.7	0.0	8.3	2.00	5.00	0.89	4.33	0.78	0.50	0.83
해당 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100.0	0.0	0.0	4.00	5.00	0.45	4.75	0.95	0.13	1.00
해당 정책은 청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91.7	8.3	0.0	3.00	5.00	0.65	4.67	0.95	0.13	0.83

#### 바. 1차 델파이 조사에 대한 종합의견

전문가들은 대체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이 청년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적합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정책 수립과정에 수요자 관점을 반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평가영역을 정책의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지표 수가 많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와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표 간 중복과 표현의 모호성도 개선 과제로 언급되었다. 또한 수요자 친화성 지표와 기존 체계의 관계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체계도나 시각적 설명 자료가 추가로 제시되면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완을 거치면 정책 평가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가들의 평정결과와 더불어 주관적 의견 제시가 많았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평가의 기본 틀에서 평가 차원을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과 친화성으로 구분하는 것 보다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관점에 맞춰서 통일된 평가 틀로 가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둘째, 평가영역의 구성에서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의 경우 평가모형의 일반적인 체제적 접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오히려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의 평가영역처럼 수요자에 포커스를 맞춰 평가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셋째, 수요자인 청년의 평가가 주된 평가가 되는 경우, 평가의 기본 틀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라는 다단계의 위계적 구조 보다는 청년들이 수월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 평가지표라는 단순화한 위계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넷째, 평가대상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설정되었으므로 기본계획의 구성 틀과 구성 요소들을 평가 틀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평가대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다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수요자인 청년들이 평가대상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즉시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평가체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2차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구안(안)을 설계하여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사.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수정(안)

이상의 1차 델파이 조사의 평정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의 구안안을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사항은 첫째, 평가의 기본 틀을 수요자 중심의 시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둘째, 수요자인 청년들의 평가 수월성을 위해 공통 평가지표로 개편하였으며, 셋째, 평가대상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구성 틀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였다.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2차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 구안(안)이다.

표 IV-15. 2차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구안(안)

평가영역 (수정안)	평가지표(수정안)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을 고려하는가 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8)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배경(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는가 9)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1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1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3) 2차 델파이 조사결과

(1) 평가영역 구성 적절성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대해 2차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함 평가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 항목 모두 CVR이 기준값(0.56)을 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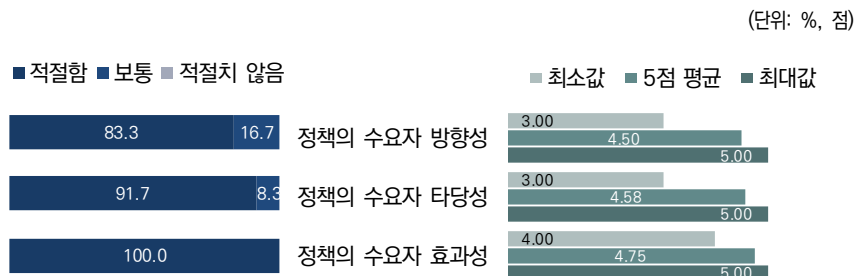


그림 IV-11. 평가영역 적절성 평가

표 IV-16. 평가영역 적절성 평가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31)	수렴도 32)	CVR 33)
	①+②	③	④+⑤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83.3	16.7	0.0	3.00	5.00	0.80	4.50	0.80	0.50	0.67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91.7	8.3	0.0	3.00	5.00	0.67	4.58	0.80	0.50	0.8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00.0	0.0	0.0	4.00	5.00	0.45	4.75	0.95	0.13	1.00

31) 합의도 (Agreement): 0.75 이상 유의미  
32) 수렴도 (Convergence): 0.5 이하 유의미  
33) 내용 타당도 비율 (CVR: Content Validity Ratio): 12명 기준 최소값 0.56 이상 유의미

## (2) 평가지표 구성 적절성: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첫 번째 평가 영역인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의 평가 지표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을 초과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만,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을 고려하는가’ 항목은 CVR이 0.50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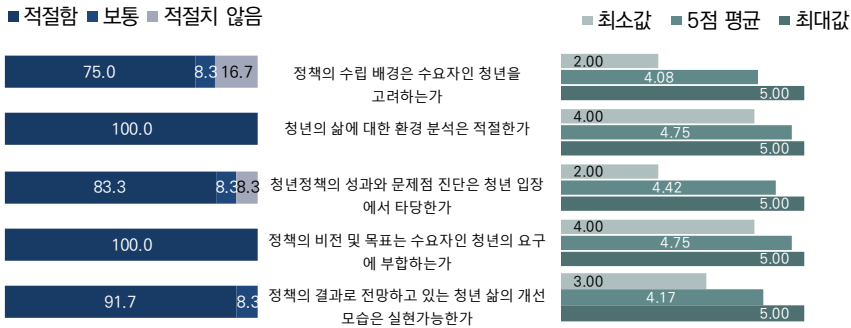


그림 IV-12.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표 IV-17.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을 고려하는가	75.0	8.3	16.7	2.00	5.00	1.16	4.08	0.72	0.63	0.50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100.0	0.0	0.0	4.00	5.00	0.45	4.75	0.95	0.13	1.00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83.3	8.3	8.3	2.00	5.00	1.00	4.42	0.80	0.50	0.67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100.0	0.0	0.0	4.00	5.00	0.45	4.75	0.95	0.13	1.00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91.7	8.3	0.0	3.00	5.00	0.58	4.17	0.94	0.13	0.83

### (3) 평가지표 구성 적절성: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두 번째 평가 영역인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의 평가 지표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함 평가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0.56)을 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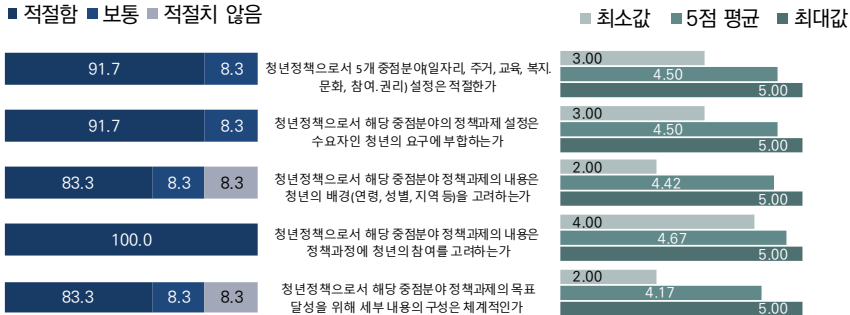


그림 IV-13.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표 IV-18.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91.7	8.3	0.0	3.00	5.00	0.67	4.50	0.80	0.50	0.8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91.7	8.3	0.0	3.00	5.00	0.67	4.50	0.80	0.50	0.8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배경(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는가	83.3	8.3	8.3	2.00	5.00	1.00	4.42	0.80	0.50	0.6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100.0	0.0	0.0	4.00	5.00	0.49	4.67	0.80	0.50	1.0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83.3	8.3	8.3	2.00	5.00	0.94	4.17	0.75	0.50	0.67

#### (4) 평가지표 구성 적절성: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세 번째 평가 영역인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의 평가 지표 구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함 평가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CVR이 기준값(0.56)을 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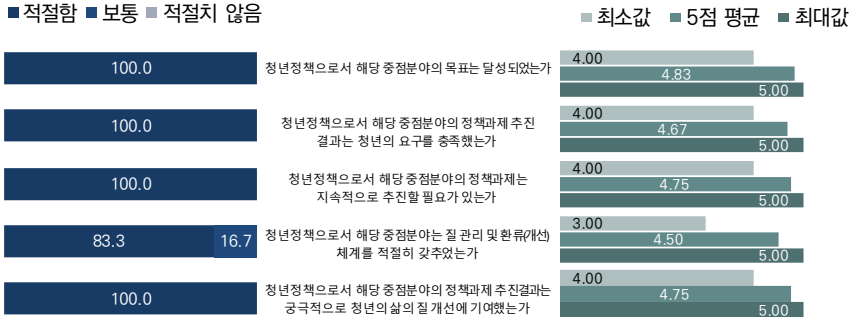


그림 IV-14.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표 IV-19. 평가 지표 적절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n=12, 단위: %, 점)

구분	적절함	보통	적절치 않음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①+②	③	④+⑤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00.0	0.0	0.0	4.00	5.00	0.39	4.83	1.00	0.00	1.0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100.0	0.0	0.0	4.00	5.00	0.49	4.67	0.80	0.50	1.0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00.0	0.0	0.0	4.00	5.00	0.45	4.75	0.95	0.13	1.0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83.3	16.7	0.0	3.00	5.00	0.80	4.50	0.80	0.50	0.6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100.0	0.0	0.0	4.00	5.00	0.45	4.75	0.95	0.13	1.00

#### (5) 2차 델파이 조사에 대한 종합의견

전문가들은 1차에 비해 지표체계가 더욱 구체화되고 간결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 잘 반영되었으며, 실제 적용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청년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참여자로 작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설계된 점이 의미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평가 지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예시나 용어 설명, 보조자료 등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효과성 측정 영역과 같은 부분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 확보가 필요하며, 지표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사례를 적용한 실증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나 청소년재단 등 실제 정책 전달 주체에 대한 분석, 다양한 평가 방식(설문 외 면접, 통계자료 등)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양한 보완점과 실행 전략이 더해질 때,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계가 실질적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기본 틀이 1차에서 2차로 수정되면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수요자인 청년들이 직접 평가하게 복잡하지 않은 체제로 설계되었다.

둘째, 평가영역의 구성을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었으며, 각 영역의 평가결과가 수요자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조망을 적절히 반영하여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평가지표의 경우 일부 표현이 평가자인 청년들이 즉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을 쉽게 변경하거나 풀어서 기술한다면 평가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1차 기본계획이 5가지 주요 정책부문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평가지표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서 평가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공통된 평가지표로 설계되어 수요자인 청년 평가와 더불어 보완적으로 시행되는 전문가 평가가 비교가능하게 되어서 그 차이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델파이 조사의 CVR값을 획일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청년정책 및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의견도 일부 반영하는 것이 타당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최종(안)

이상의 2차 델파이 조사의 평정결과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의 1차 구안(안)을 최종 수정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은 1차 델파이조사의 주요 개선 내용인 평가의 기본 틀을 수요자 중심의 시각에 부합하도록 수정, 수요자인 청년들의 평가 수월성을 위해 공통 평가지표로 개편, 평가대상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구성 틀의 평가지표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수요자 청년이 평가하기에 수월하도록 표현이나 설명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다음은 2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 최종 개발(안)이다.

표 IV-20.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최종 개발(안)

평가영역 (수정안)	평가지표(수정안)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을 고려하는가 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설정은 적절한가 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8)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한 배경(연령대, 성별, 지역 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는가 9)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1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1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3. AHP 조사 및 분석결과

#### 1) 조사 개요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는 청년 정책 및 평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델파이 1·2차 조사와 동일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Web Survey)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정된 평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설정하였다.

표 IV-21. AHP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청년정책 및 평가 전문가
유효 표본	12명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Web Survey)
조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내용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성
조사 기간	- 2025년 5월 15일 ~ 2025년 5월 27일

구체적으로 본 AHP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22. AHP 참여 전문가

연번	이름	소속/직위
1	변○○	연구원 박사
2	배○○	대학 교수
3	양○○	대학 교수
4	윤○○	대학 교수
5	윤○○	대학 교수
6	한○○	대학 교수
7	신○○	유관기관 센터장
8	김○○	연구원 박사
9	박○○	연구원 박사
10	임○○	유관기관 센터장
11	김○○	대학 교수
12	기○○	유관기관 본부장



2) 가중치 분석방법 : AHP

(1) AHP의 개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1970년대 초 T. Saaty가 제안한 기법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여러 층위로 나눠서 각 요소를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론이다. 이 절차를 통해 요인별 가중치를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이 포함된 다기준 의사결정 방식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AHP는 인간의 사고체계와 유사한 접근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과 상대적 중요도를 비율척도(ratio scale)화 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Saaty, 1980).

(2) AHP 분석방법

AHP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작업을 통하여 의사결정 사항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도출한다. 첫 단계에서는 서로 연결된 의사결정 요소들을 계층화하여 배열한다. 맨 위 수준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놓이며, 그 아래 층위에는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속성들이 배치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요소의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항목 간 상대적 비교를 담은 행렬을 마련한다. 이때 비교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활용하며, 하위 계층에 포함된 요소가  $n$ 개라면 총  $n(n-1)/2$ 번의 쌍대 비교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단계는 쌍대비교를 통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부호화된 설문응답 내용을 각 항목별로 기하평균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값을 이용하여 상호비교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각 요인을 정규화(Nomalizig)하여 가중치를 산출한다(Saaty, 1977).

표 IV-23. 쌍대비교의 척도

척도의 의미	계량적 수치
두 개의 요소가 동등(equally important)	1
한 요소가 다른 요소 보다 중요(more important)	3
한 요소가 다른 요소 보다 매우 중요(very strongly more important)	5

주: 2,4는 척도의 의미에 표현된 중요 정도의 중간 개념으로 사용

표 IV-24. 쌍대비교의 예(이원비교행렬)

항목(요인)	a1	a2	a3	a4
a1	1	1.1584	1.1671	1.3305
a2	1/1.1584	1	1.1004	1.2196
a3	1/1.1671	1/1.1004	1	1.1573
a4	1/1.3305	1/1.2196	1/1.1573	1

표 IV-25. 정규화의 예(이원비교행렬)

항목(요인)	a1	a2	a3	a4	가중치
a1	0.2880	0.2980	0.2824	0.2826	0.2830
a2	0.2484	0.2573	0.2664	0.2591	0.2548
a3	0.2471	0.2338	0.2421	0.2459	0.2469
a4	0.2165	0.2109	0.2092	0.2124	0.215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3) 일관성 검증

응답자가 제시한 쌍대비교 결과가 공리적 조건을 충족하며 얼마나 논리적으로 일관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쌍대비교 행렬의 최대 고유치( $\lambda_{\max}$ )를 산출한 뒤, 이 값을 바탕으로 일관성지수(CI)를 계산하여 응답의 일관성 정도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검증 결과 일관성 비율(CR)이 0.1 이하이면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Saaty, 1980).

$$\text{일관성 지수(CI)} = (\lambda_{\max} - n)/(n-1)$$

$$\text{일관성 비율(CR)} = \text{CI/RI(Random Index: 무작위 지수)}$$

3) AHP 분석 결과

(1) 평가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이 중요도 0.373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0.347),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0.280)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6. 평가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영역	AHP 분석 결과	
	중요도	순위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0.373	1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0.280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0.347	2

주: C.R(Consistency Ratio) = 0.002 < 0.1

(2)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가 중요도 0.2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0.245)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 모습은 실현가능한가’가 중요도 0.1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7.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평가지표	AHP 분석 결과	
	중요도	순위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0.216	3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0.156	4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0.245	2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0.257	1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0.126	5

주: C.R(Consistency Ratio) = 0.004 < 0.1

### (3)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가 중요도 0.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지표 대비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0.159)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가 중요도 0.1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8.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평가지표	AHP 분석 결과	
	중요도	순위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0.135	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0.407	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0.159	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0.159	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0.140	4

주: C.R(Consistency Ratio) = 0.002 < 0.1

### (4)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가 중요도 0.2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0.277)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가 중요도 0.0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9.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평가지표	AHP 분석 결과	
	중요도	순위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0.230	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0.285	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0.114	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0.095	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0.277	2

주: C.R(Consistency Ratio) = 0.009 < 0.1

#### (5) 종합 중요도

평가영역 중요도와 평가지표 중요도의 곱으로 산출한 종합 중요도 산출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영역의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의 중요도가 0.1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0.099)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가 중요도 0.0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30. 종합 중요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중요도	순위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0.081	6
	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0.058	8
	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0.091	5
	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0.096	4
	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0.047	9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0.038	14

평가 영역	평가지표	중요도	순위
	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0.114	1
	8)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0.045	11
	9)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0.045	10
	1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0.039	13
	1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0.080	7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0.099	2
	1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0.039	12
	1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0.033	15
	1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0.096	3

주: 종합 중요도 = 평가영역 중요도 \* 평가지표 중요도



# ○ — 제5장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의한 청년정책 양적 진단

- 1. 진단 및 조사 개요
- 2. 정책수요자 청년의 청년정책  
양적 진단 결과
- 3.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청년정책  
진단 결과
- 4.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및 전문가  
진단 총괄비교 : 가중치 반영
- 5. 양적 진단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진단 및 조사 개요

### 1) 모집단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2) 조사 설계

- 표본수 : 총 1,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구축 후 설문 URL 이메일 발송
- 표본추출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등할당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oint
- 조사기간 : 2025년 6월 25일 ~ 7월 11일
- 주요 조사내용
  -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기본 배경에 대한 인식
  - 청년정책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인식
  -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
- IRB 심의 승인
  - 승인번호 : 202503-HR-고유-001
  - 승인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5년 11월 30일

34)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 (3)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대상자인 만 19~34세 청년 대상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V-1.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연령대	만19~24세	330	33.0%
	만25~29세	334	33.4%
	만30~34세	336	33.6%
성별	남성	498	49.8%
	여성	502	50.2%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11.0%
	대학교(재/졸)	833	83.3%
	대학원(졸)	57	5.7%
거주 지역	수도권	568	56.8%
	충청권	99	9.9%
	전라권	82	8.2%
	경상권	213	21.3%
	강원/제주권	38	3.8%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28	62.8%
	중소도시	306	30.6%
	읍면	66	6.6%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1.9%
	중층	898	89.8%
	하층	83	8.3%
1인가구 중위 소득 <sup>35)</sup>	중위소득 이상	483	48.3%
	중위소득 미만	517	51.7%

35)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e-나라지표(2025).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에서 2025년 3월 20일 인출.

## 2. 정책수요자 청년의 청년정책 양적 진단 결과

###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1-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3.0%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9.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7.0%, 만25~29세: 36.5%, 만30~34세: 25.6%).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4점, 전문가가 4.07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93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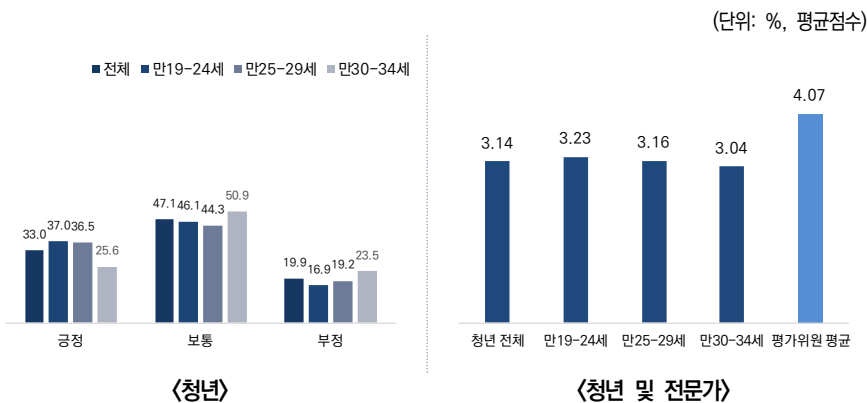


그림 V-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표 V-2.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4.0	29.0	47.1	17.0	2.9	28.505***	3.14	4.07
만19~24세	330	6.1	30.9	46.1	13.6	3.3		3.23	
만25~29세	334	3.0	33.5	44.3	15.0	4.2		3.16	
만30~34세	336	3.0	22.6	50.9	22.3	1.2		3.04	

\*  $p < .05$ , \*\*  $p < .01$ , \*\*\*  $p < .001$ .

### 1-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6.8%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9.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49.7%)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35점, 전문가가 3.73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38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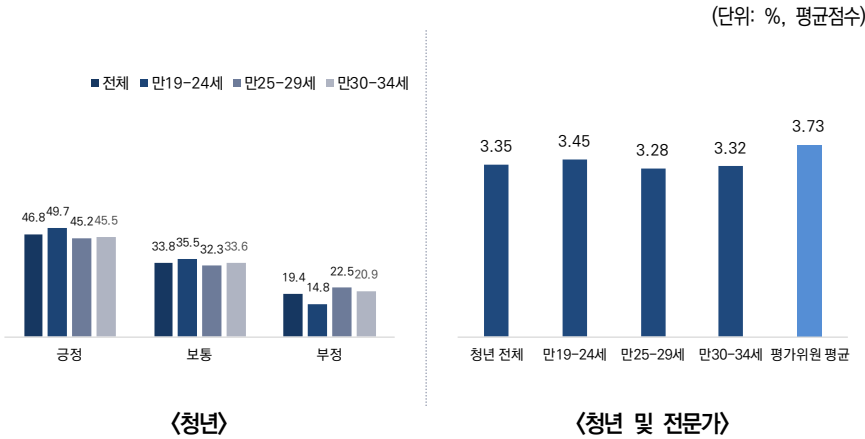


그림 V-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표 V-3.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6	37.2	33.8	17.4	2.0	9.059	3.35	3.73
만19~24세	330	11.5	38.2	35.5	13.6	1.2		3.45	
만25~29세	334	7.8	37.4	32.3	19.8	2.7		3.28	
만30~34세	336	9.5	36.0	33.6	18.8	2.1		3.32	

\*  $p < .05$ , \*\*  $p < .01$ , \*\*\*  $p < .001$ .

### 1-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2.0%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9.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6.1%, 만25~29세: 40.4%, 만30~34세: 39.6%).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6점, 전문가가 4.0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74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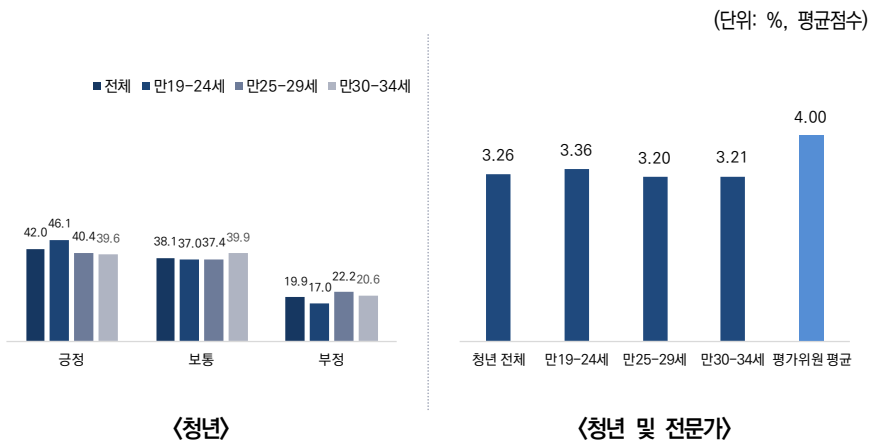


그림 V-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표 V-4.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6.7	35.3	38.1	16.8	3.1	10.300	3.26	4.00
만19~24세	330	8.2	37.9	37.0	15.8	1.2		3.36	
만25~29세	334	6.3	34.1	37.4	17.4	4.8		3.20	
만30~34세	336	5.7	33.9	39.9	17.3	3.3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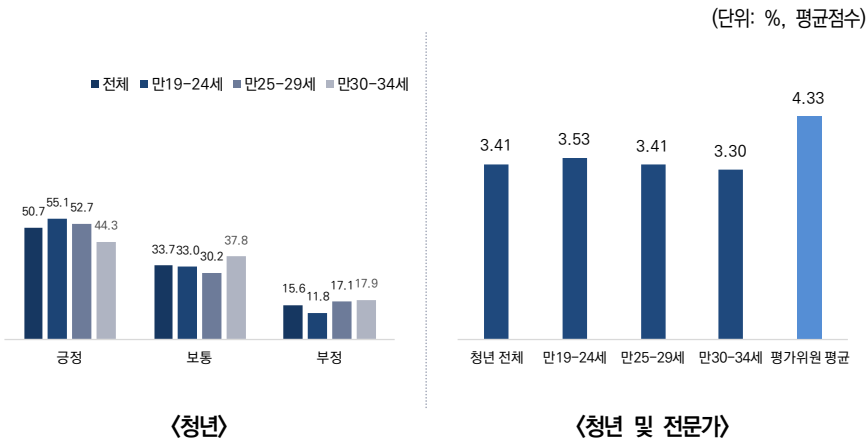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1-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50.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5.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5.1%, 만25~29세: 52.7%, 만30~34세: 44.3%).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41점, 전문가가 4.33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92점 낮게 나타났다.



〈청년〉  
그림 V-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표 V-5.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4	41.3	33.7	12.4	3.2	17.510*	3.41	4.33
만19~24세	330	13.0	42.1	33.0	8.8	3.0		3.53	
만25~29세	334	8.4	44.3	30.2	13.8	3.3		3.41	
만30~34세	336	6.8	37.5	37.8	14.6	3.3		3.30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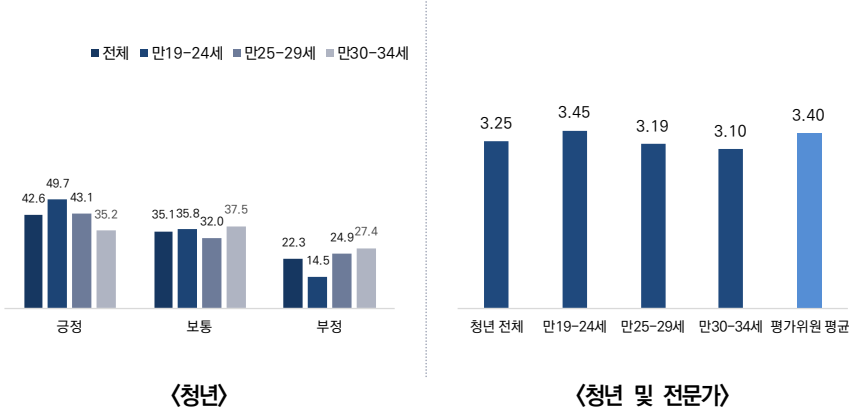
1-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 모습은 실현가능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2.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2.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9.7%, 만25~29세: 43.1%, 만30~34세: 35.2%).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5점, 전문가가 3.4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15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표 V-6.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8	33.8	35.1	17.8	4.5	31.697***	3.25	3.40
만19~24세	330	13.0	36.7	35.8	11.8	2.7		3.45	
만25~29세	334	7.2	35.9	32.0	18.6	6.3		3.19	
만30~34세	336	6.3	28.9	37.5	22.9	4.5		3.10	

\*  $p < .05$ , \*\*  $p < .01$ , \*\*\*  $p < .001$ .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2-1.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 설정은 적절한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 설정은 적절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54.5%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3.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9.4%, 만25~29세: 53.9%, 만30~34세: 50.3%).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52점, 전문가가 4.13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61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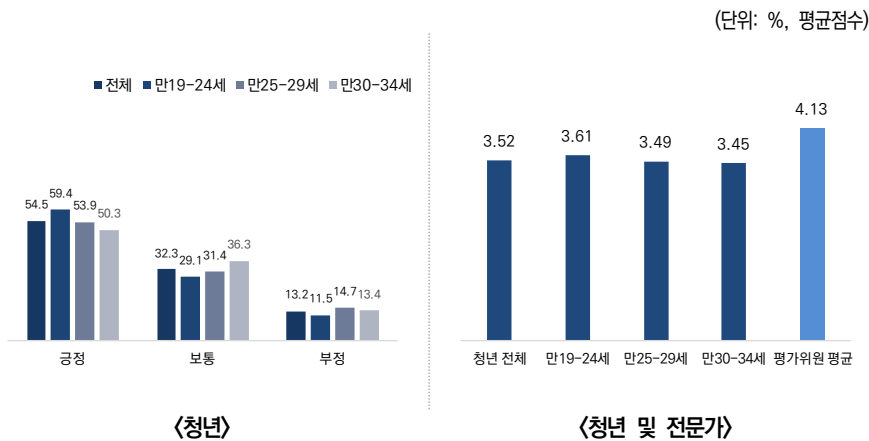


그림 V-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 설정은 적절한가

표 V-7.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 설정은 적절한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12.9	41.6	32.3	10.7	2.5	8.537	3.52	4.13
만19~24세	330	15.2	44.2	29.1	9.7	1.8		3.61	
만25~29세	334	13.2	40.7	31.4	11.4	3.3		3.49	
만30~34세	336	10.4	39.9	36.3	11.0	2.4		3.45	

\*  $p < .05$ , \*\*  $p < .01$ , \*\*\*  $p < .001$ .

## (1) 일자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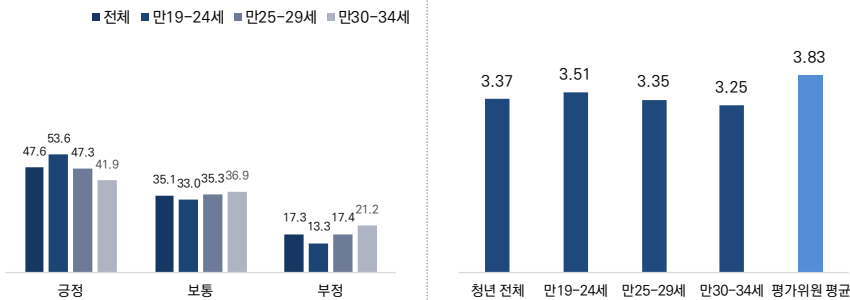
### 2-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7.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3.6%, 만25~29세: 47.3%, 만30~34세: 41.9%).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37점, 전문가가 3.83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46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 〈청년〉

그림 V-7.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청년 및 전문가〉

표 V-8.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2	38.4	35.1	14.5	2.8	13.769	3.37	3.83
만19~24세	330	11.8	41.8	33.0	11.8	1.5		3.51	
만25~29세	334	8.1	39.2	35.3	14.4	3.0		3.35	
만30~34세	336	7.7	34.2	36.9	17.3	3.9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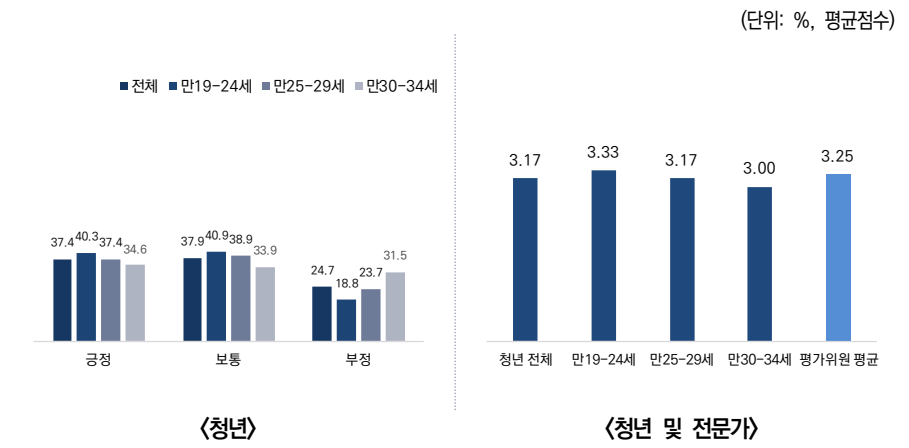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2-3.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7.4%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4.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0.3%, 만25~29세: 37.4%, 만30~34세: 34.6%).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7점, 전문가가 3.25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08점 낮게 나타났다.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8.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표 V-9.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9	28.5	37.9	19.7	5.0	31.556***	3.17	3.25
만19~24세	330	13.6	26.7	40.9	16.4	2.4		3.33	
만25~29세	334	8.4	29.0	38.9	18.6	5.1		3.17	
만30~34세	336	4.8	29.8	33.9	24.1	7.4		3.00	

\*  $p < .05$ , \*\*  $p < .01$ , \*\*\*  $p < .001$ .

#### 2-4.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7.1%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4.5%, 만25~29세: 38.6%, 만30~34세: 28.3%).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4점, 전문가가 3.42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28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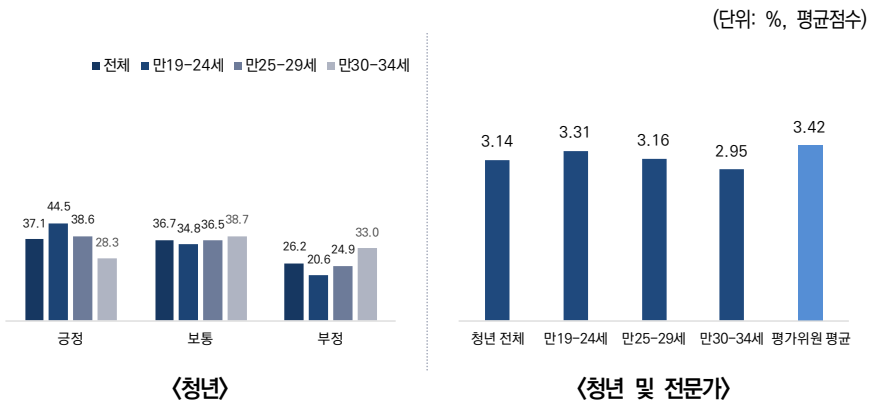


그림 V-9.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표 V-10.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4	28.7	36.7	20.7	5.5	24.237**	3.14	3.42
만19~24세	330	10.9	33.6	34.8	16.7	3.9		3.31	
만25~29세	334	8.4	30.2	36.5	18.9	6.0		3.16	
만30~34세	336	6.0	22.3	38.7	26.5	6.5		2.95	

\*  $p < .05$ , \*\*  $p < .01$ , \*\*\*  $p < .001$ .

## 2-5.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7.5%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4.8%, 만25~29세: 38.6%, 만30~34세: 29.2%).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8점, 전문가가 3.67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49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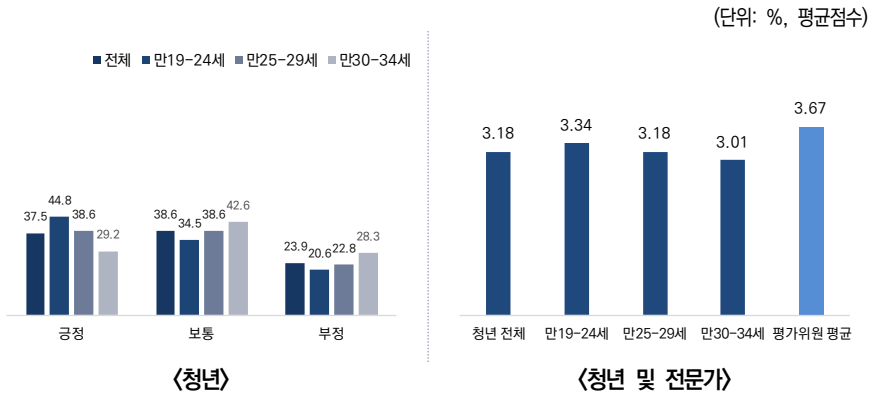


그림 V-10.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표 V-1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7.5	30.0	38.6	20.5	3.4	27.617***	3.18	3.67
만19~24세	330	11.5	33.3	34.5	19.1	1.5		3.34	
만25~29세	334	5.7	32.9	38.6	18.9	3.9		3.18	
만30~34세	336	5.4	23.8	42.6	23.5	4.8		3.01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주거 분야

### 2-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8.4%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9.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3.6%, 만25~29세: 49.1%, 만30~34세: 42.5%).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36점, 전문가가 4.0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64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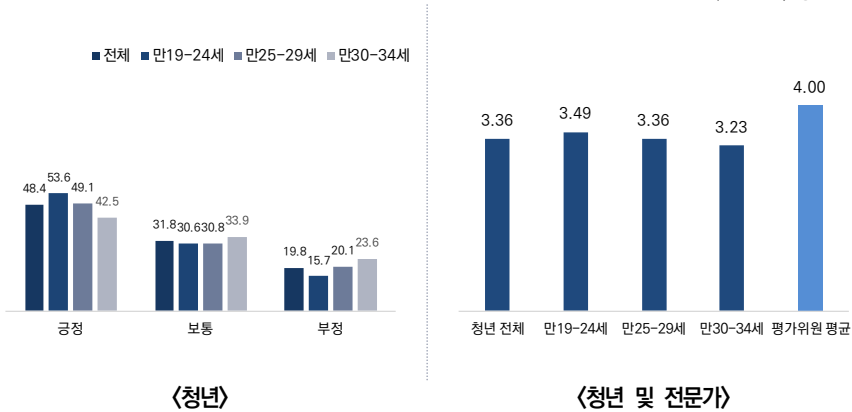


그림 V-11.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표 V-1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10.8	37.6	31.8	16.1	3.7	12.522	3.36	4.00
만19~24세	330	13.6	40.0	30.6	13.3	2.4		3.49	
만25~29세	334	10.2	38.9	30.8	16.5	3.6		3.36	
만30~34세	336	8.6	33.9	33.9	18.5	5.1		3.23	

\* $p < .05$ , \*\* $p < .01$ , \*\*\* $p < .001$ .

2-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9.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3.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9.1%, 만25~29세: 35.3%, 만30~34세: 34.8%).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1점, 전문가가 3.75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54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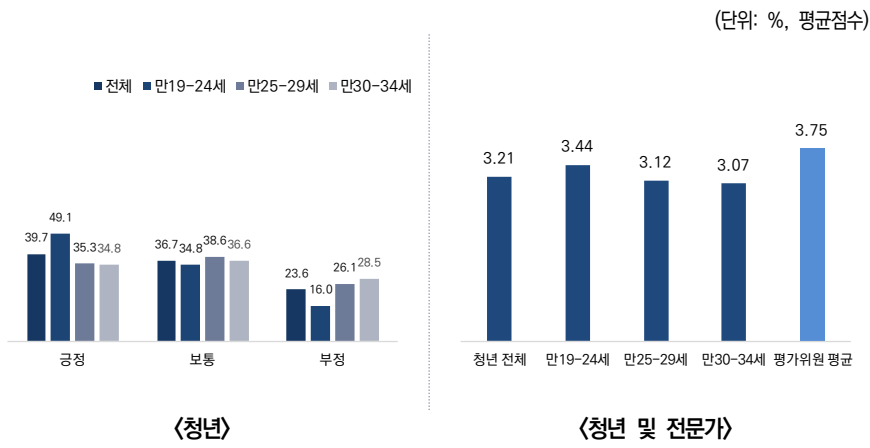


그림 V-1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표 V-1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10.1	29.6	36.7	18.3	5.3	25.963**	3.21	3.75
만19~24세	330	13.9	35.2	34.8	12.7	3.3		3.44	
만25~29세	334	8.4	26.9	38.6	20.7	5.4		3.12	
만30~34세	336	8.0	26.8	36.6	21.4	7.1		3.07	

\*  $p < .05$ , \*\*  $p < .01$ , \*\*\*  $p < .001$ .

## 2-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7.2%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4.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5.1%, 만25~29세: 38.9%, 만30~34세: 27.7%).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4점, 전문가가 3.0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14점 높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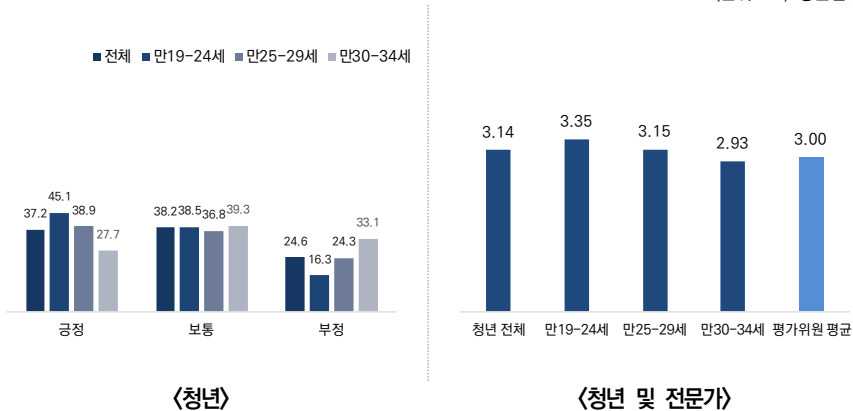


그림 V-1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표 V-1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7.5	29.7	38.2	18.6	6.0	40.448***	3.14	3.00
만19~24세	330	10.9	34.2	38.5	12.1	4.2		3.35	
만25~29세	334	7.5	31.4	36.8	16.8	7.5		3.15	
만30~34세	336	4.2	23.5	39.3	26.8	6.3		2.93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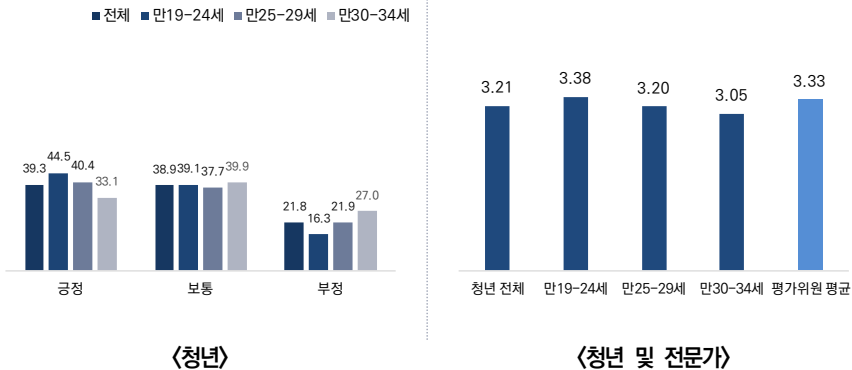
## 2-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9.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1.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4.5%, 만25~29세: 40.4%, 만30~34세: 33.1%).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1점, 전문가가 3.33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12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1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표 V-1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1	31.2	38.9	16.9	4.9	23.244**	3.21	3.33
만19~24세	330	11.8	32.7	39.1	14.2	2.1		3.38	
만25~29세	334	6.9	33.5	37.7	16.2	5.7		3.20	
만30~34세	336	5.7	27.4	39.9	20.2	6.8		3.05	

\*  $p < .05$ , \*\*  $p < .01$ , \*\*\*  $p < .001$ .

### (3) 교육 분야

#### 2-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9.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1.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5.4%, 만25~29세: 40.1%, 만30~34세: 33.3%).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3점, 전문가가 4.0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77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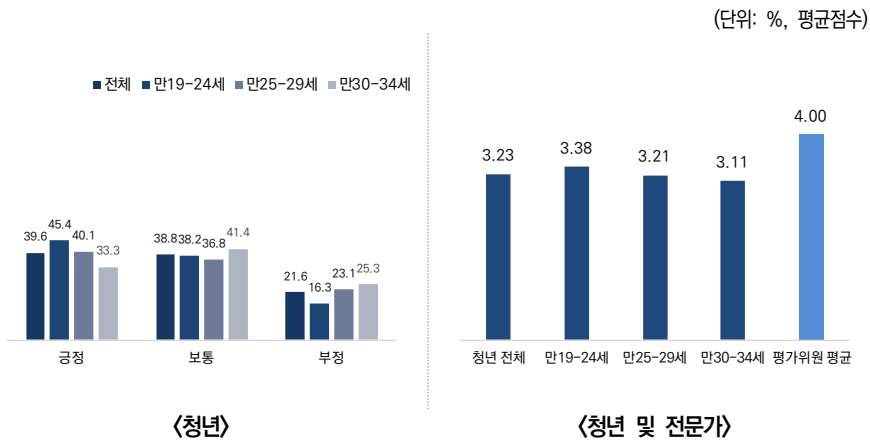


그림 V-15.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표 V-16.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8	30.8	38.8	18.0	3.6	16.168*	3.23	4.00
만19~24세	330	11.8	33.6	38.2	13.3	3.0		3.38	
만25~29세	334	7.8	32.3	36.8	19.5	3.6		3.21	
만30~34세	336	6.8	26.5	41.4	21.1	4.2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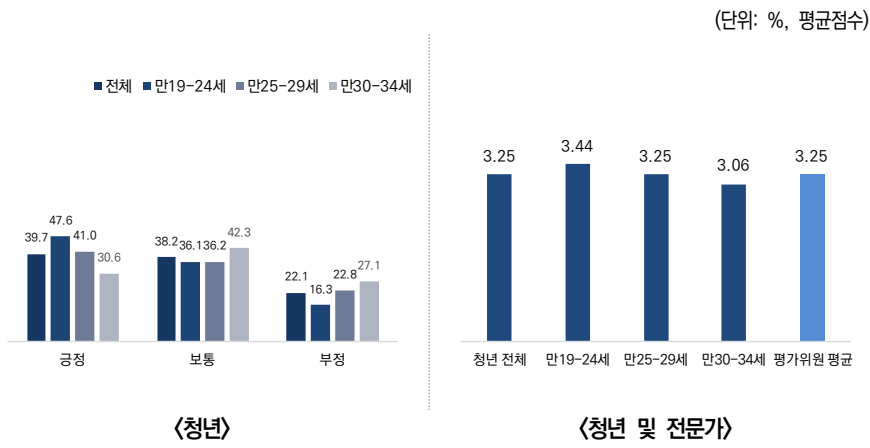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2-3.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9.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2.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7.6%, 만25~29세: 41.0%, 만30~34세: 30.6%).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과 전문가 모두 3.25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16.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표 V-17.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11.3	28.4	38.2	18.1	4.0	28.240***	3.25	3.25
만19~24세	330	16.4	31.2	36.1	13.0	3.3		3.44	
만25~29세	334	10.2	30.8	36.2	18.9	3.9		3.25	
만30~34세	336	7.4	23.2	42.3	22.3	4.8		3.06	

\*  $p < .05$ , \*\*  $p < .01$ , \*\*\*  $p < .001$ .

## 2-4.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5.0%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4.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1.2%, 만25~29세: 34.7%, 만30~34세: 29.1%).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4점, 전문가가 3.58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44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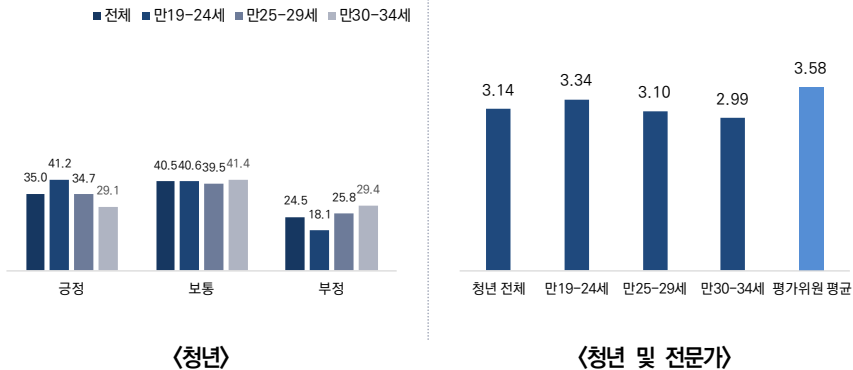


그림 V-17.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표 V-18.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2	25.8	40.5	19.0	5.5	27.596***	3.14	3.58
만19~24세	330	14.2	27.0	40.6	14.8	3.3		3.34	
만25~29세	334	6.6	28.1	39.5	20.7	5.1		3.10	
만30~34세	336	6.8	22.3	41.4	21.4	8.0		2.99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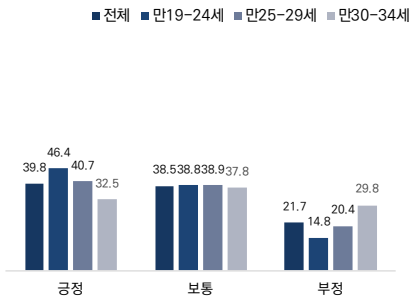
## 2-5.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9.8%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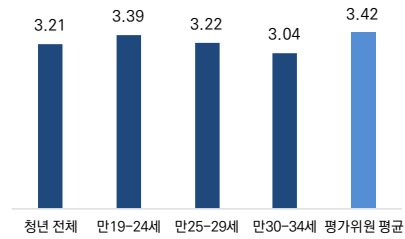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6.4%, 만25~29세: 40.7%, 만30~34세: 32.5%).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1점, 전문가가 3.42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21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18.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표 V-19.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7.6	32.2	38.5	17.4	4.3	29.820***	3.21	3.42
만19~24세	330	10.3	36.1	38.8	11.8	3.0		3.39	
만25~29세	334	6.9	33.8	38.9	15.3	5.1		3.22	
만30~34세	336	5.7	26.8	37.8	25.0	4.8		3.04	

\*  $p < .05$ , \*\*  $p < .01$ , \*\*\*  $p < .001$ .

#### (4) 복지·문화 분야

##### 2-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4.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0.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2.1%, 만25~29세: 43.4%, 만30~34세: 38.4%).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31점, 전문가가 4.17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86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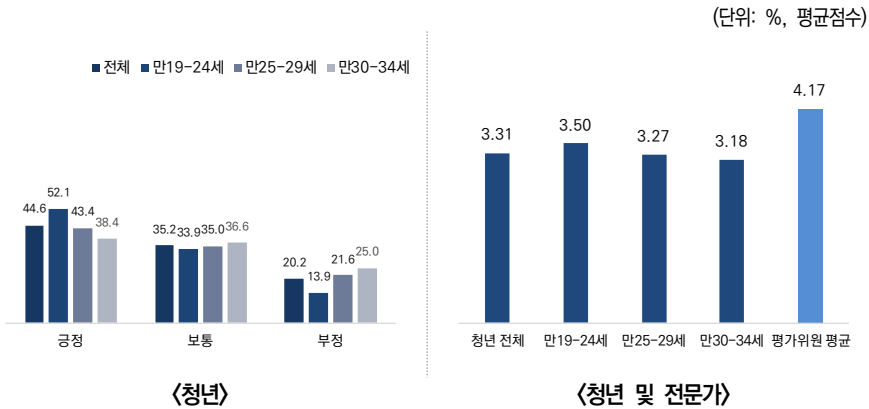


그림 V-19.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표 V-20.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11.2	33.4	35.2	15.9	4.3	19.766*	3.31	4.17
만19~24세	330	14.5	37.6	33.9	11.2	2.7		3.50	
만25~29세	334	9.9	33.5	35.0	16.5	5.1		3.27	
만30~34세	336	9.2	29.2	36.6	19.9	5.1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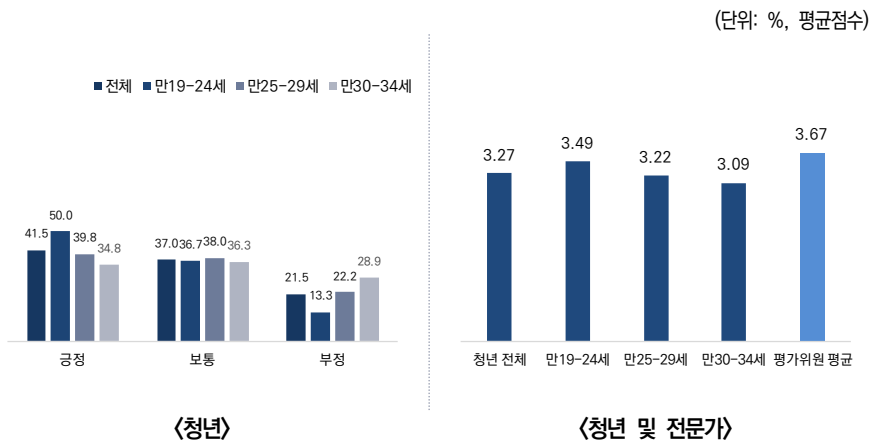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2-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1.5%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0.0%, 만25~29세: 39.8%, 만30~34세: 34.8%).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7점, 전문가가 3.67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40점 낮게 나타났다.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20.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표 V-21.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11.7	29.8	37.0	16.4	5.1	30.928***	3.27	3.67
만19~24세	330	15.8	34.2	36.7	10.3	3.0		3.49	
만25~29세	334	10.5	29.3	38.0	16.2	6.0		3.22	
만30~34세	336	8.9	25.9	36.3	22.6	6.3		3.09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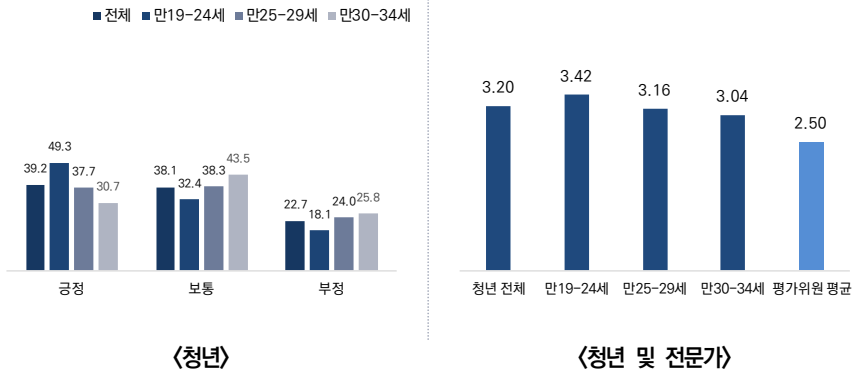
## 2-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9.2%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2.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9.3%, 만25~29세: 37.7%, 만30~34세: 30.7%).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0점, 전문가가 2.5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70점 높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21.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표 V-2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6	29.6	38.1	16.9	5.8	30.275***	3.20	2.50
만19~24세	330	14.5	34.8	32.4	14.2	3.9		3.42	
만25~29세	334	8.7	29.0	38.3	17.4	6.6		3.16	
만30~34세	336	5.7	25.0	43.5	19.0	6.8		3.04	

\*  $p < .05$ , \*\*  $p < .01$ , \*\*\*  $p < .001$ .



## 2-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1.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0.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7.5%, 만25~29세: 41.0%, 만30~34세: 35.4%).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과 전문가 모두 3.25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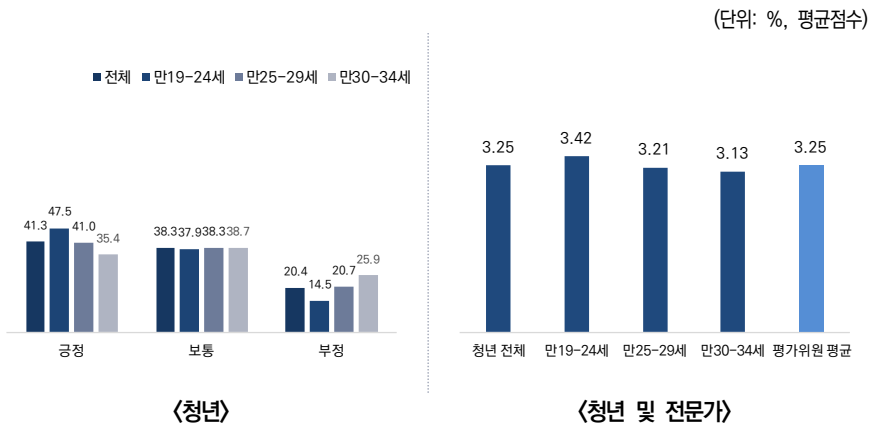


그림 V-2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표 V-2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5	31.8	38.3	15.0	5.4	33.523***	3.25	3.25
만19~24세	330	12.7	34.8	37.9	10.6	3.9		3.42	
만25~29세	334	9.0	32.0	38.3	12.3	8.4		3.21	
만30~34세	336	6.8	28.6	38.7	22.0	3.9		3.13	

\* $p < .05$ , \*\* $p < .01$ , \*\*\* $p < .001$ .

## (5) 참여·권리 분야

### 2-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0.0%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1.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4.5%, 만25~29세: 41.6%, 만30~34세: 33.9%).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2점, 전문가가 4.08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86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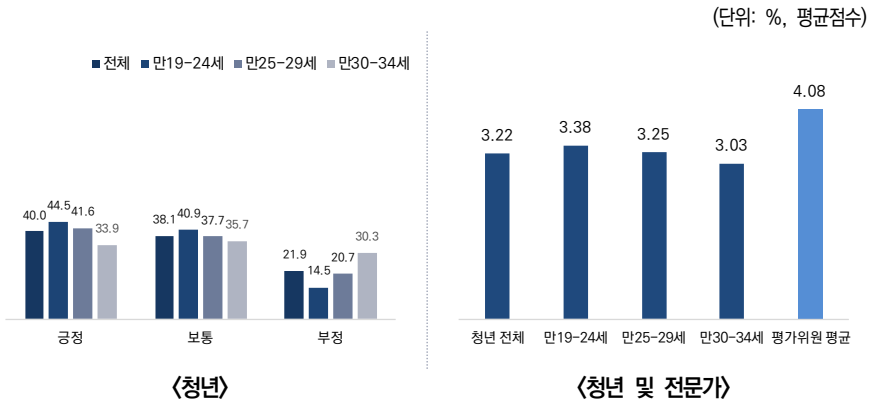


그림 V-2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표 V-2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4	30.6	38.1	16.3	5.6	28.020***	3.22	4.08
만19~24세	330	12.1	32.4	40.9	10.6	3.9		3.38	
만25~29세	334	9.3	32.3	37.7	15.0	5.7		3.25	
만30~34세	336	6.8	27.1	35.7	23.2	7.1		3.03	

\* $p < .05$ , \*\* $p < .01$ , \*\*\* $p < .001$ .

2-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5.4%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4.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2.7%, 만25~29세: 33.2%, 만30~34세: 30.3%).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5점, 전문가가 3.08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07점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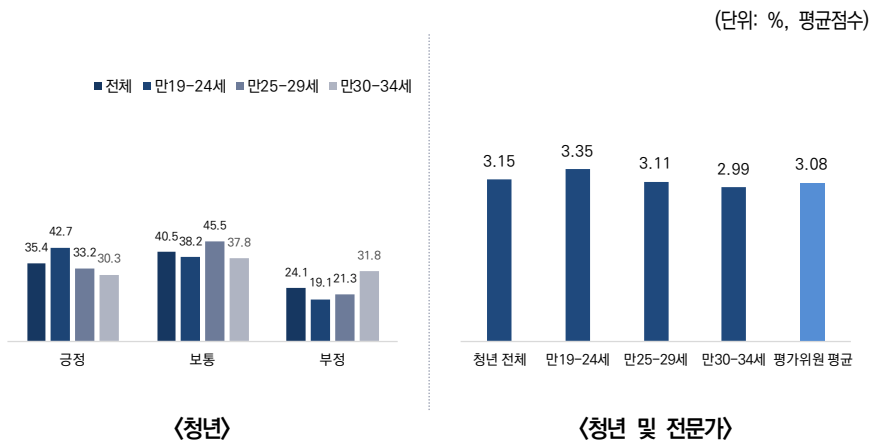


그림 V-2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표 V-2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8	25.6	40.5	17.7	6.4	37.636***	3.15	3.08
만19~24세	330	14.5	28.2	38.2	15.8	3.3		3.35	
만25~29세	334	7.2	26.0	45.5	12.9	8.4		3.11	
만30~34세	336	7.7	22.6	37.8	24.4	7.4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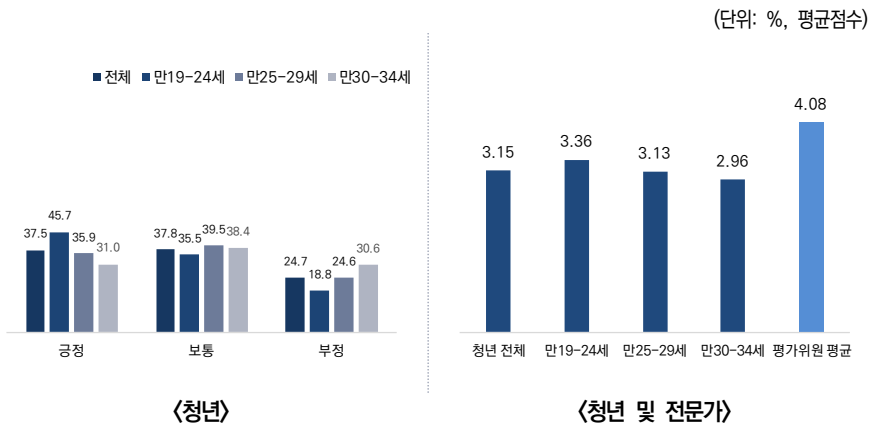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 2-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7.5%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4.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5.7%, 만25~29세: 35.9%, 만30~34세: 31.0%).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5점, 전문가가 4.08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93점 낮게 나타났다.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2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표 V-26.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9	28.6	37.8	17.9	6.8	26.981***	3.15	4.08
만19~24세	330	12.4	33.3	35.5	15.5	3.3		3.36	
만25~29세	334	9.0	26.9	39.5	16.8	7.8		3.13	
만30~34세	336	5.4	25.6	38.4	21.4	9.2		2.96	

\*  $p < .05$ , \*\*  $p < .01$ , \*\*\*  $p < .001$ .

2-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8.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1.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5.1%, 만25~29세: 38.3%, 만30~34세: 32.7%).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1점, 전문가가 3.5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29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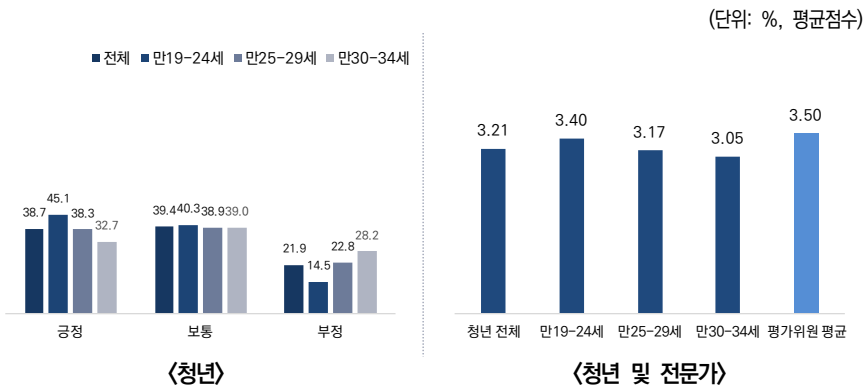


그림 V-26.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표 V-27.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5	29.2	39.4	16.3	5.6	24.839**	3.21	3.50
만19~24세	330	12.7	32.4	40.3	11.5	3.0		3.40	
만25~29세	334	7.5	30.8	38.9	16.5	6.3		3.17	
만30~34세	336	8.3	24.4	39.0	20.8	7.4		3.05	

\* $p < .05$ , \*\* $p < .01$ , \*\*\* $p < .001$ .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 일자리 분야

3-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1.0%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30.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4.9%, 만25~29세: 32.3%, 만30~34세: 25.9%).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00점, 전문가가 3.5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50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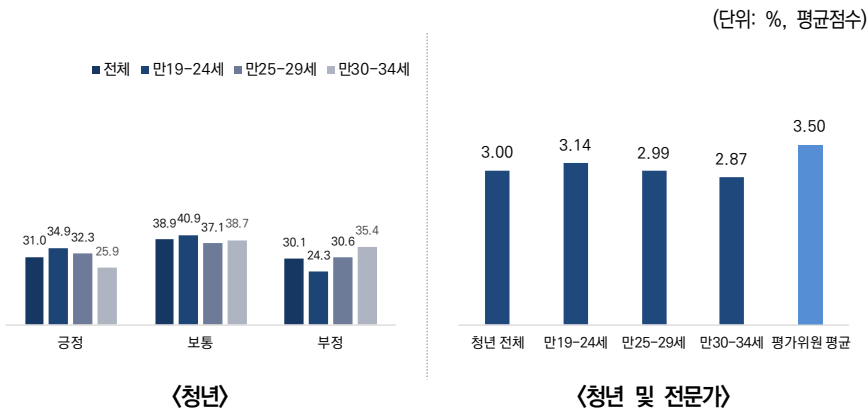


그림 V-27.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표 V-28.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6.5	24.5	38.9	22.6	7.5	15.984*	3.00	3.50
만19~24세	330	8.5	26.4	40.9	19.1	5.2		3.14	
만25~29세	334	6.3	26.0	37.1	21.3	9.3		2.99	
만30~34세	336	4.8	21.1	38.7	27.4	8.0		2.87	

\*  $p < .05$ , \*\*  $p < .01$ , \*\*\*  $p < .001$ .

3-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4.4%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6.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2.4%, 만25~29세: 33.8%, 만30~34세: 27.1%).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0점, 전문가가 3.5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40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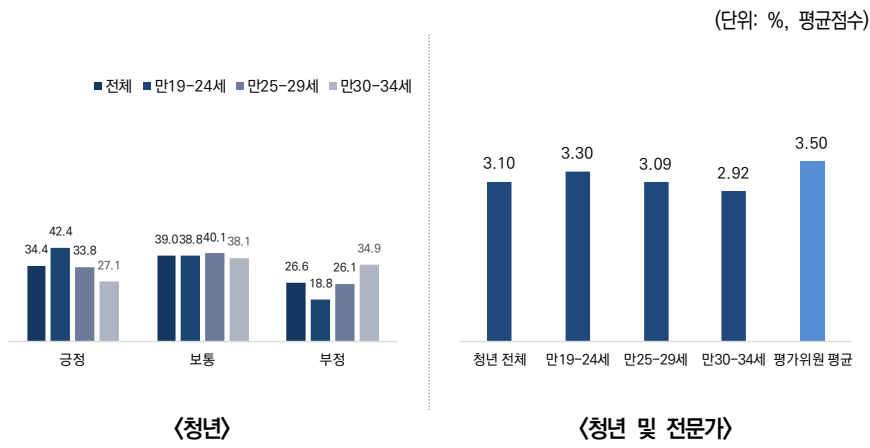


그림 V-28.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표 V-29.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7.4	27.0	39.0	21.8	4.8	30.073***	3.10	3.50
만19~24세	330	9.4	33.0	38.8	16.1	2.7		3.30	
만25~29세	334	7.5	26.3	40.1	20.1	6.0		3.09	
만30~34세	336	5.4	21.7	38.1	29.2	5.7		2.92	

\*  $p < .05$ , \*\*  $p < .01$ , \*\*\*  $p < .001$ .

3-3.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55.5%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4.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7.0%, 만25~29세: 55.7%, 만30~34세: 53.9%).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58점, 전문가가 4.42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84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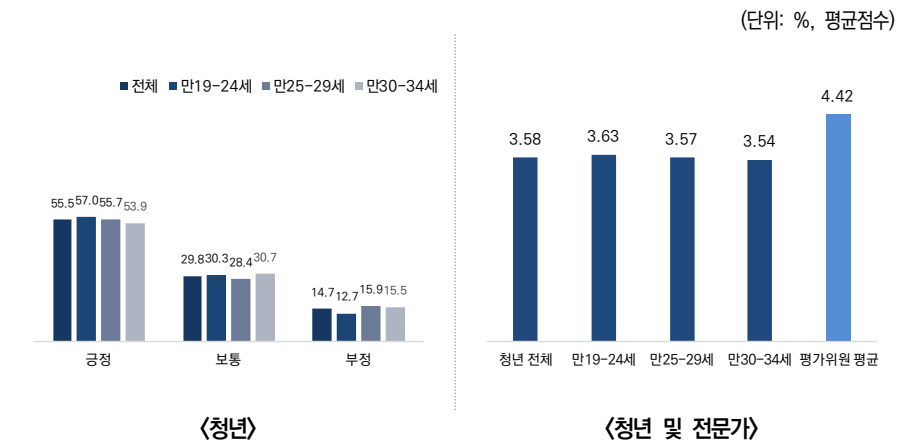


그림 V-29.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표 V-30.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20.0	35.5	29.8	12.1	2.6	7.535	3.58	4.42
만19~24세	330	21.8	35.2	30.3	9.7	3.0		3.63	
만25~29세	334	21.0	34.7	28.4	12.6	3.3		3.57	
만30~34세	336	17.3	36.6	30.7	14.0	1.5		3.54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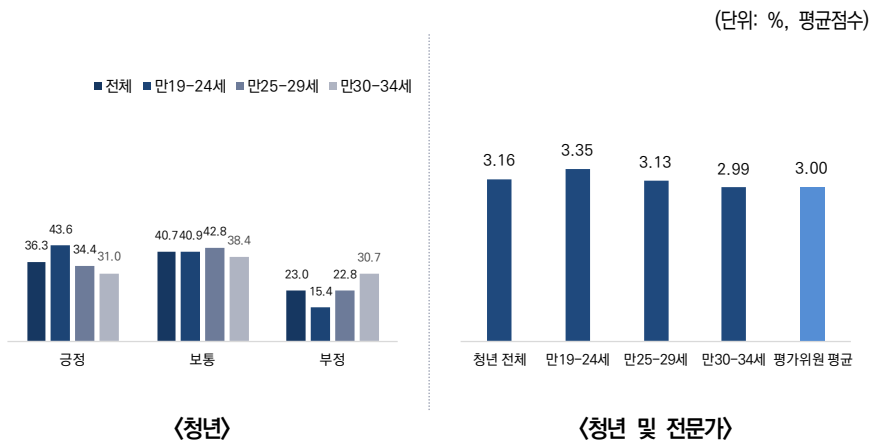


3-4.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6.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3.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3.6%, 만25~29세: 34.4%, 만30~34세: 31.0%).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6점, 전문가가 3.0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16점 높게 나타났다.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30.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표 V-3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6.7	29.6	40.7	18.6	4.4	29.151***	3.16	3.00
만19~24세	330	10.0	33.6	40.9	12.7	2.7		3.35	
만25~29세	334	5.1	29.3	42.8	18.6	4.2		3.13	
만30~34세	336	5.1	25.9	38.4	24.4	6.3		2.99	

\*  $p < .05$ , \*\*  $p < .01$ , \*\*\*  $p < .001$ .

### 3-5.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0.0%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8.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2.7%, 만25~29세: 41.0%, 만30~34세: 36.3%).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6점, 전문가가 3.58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32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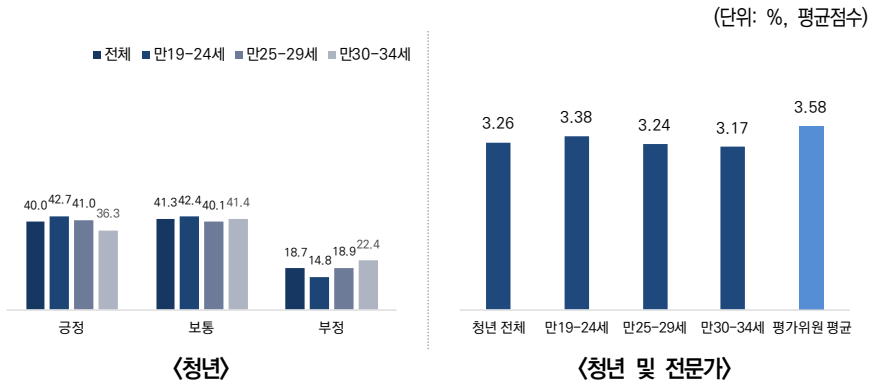


그림 V-3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표 V-3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4	30.6	41.3	14.4	4.3	15.278	3.26	3.58
만19~24세	330	12.4	30.3	42.4	12.7	2.1		3.38	
만25~29세	334	7.2	33.8	40.1	13.5	5.4		3.24	
만30~34세	336	8.6	27.7	41.4	17.0	5.4		3.17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주거 분야

### 3-1.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2.9%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8.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1.2%, 만25~29세: 31.2%, 만30~34세: 26.5%).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05점, 전문가가 3.25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20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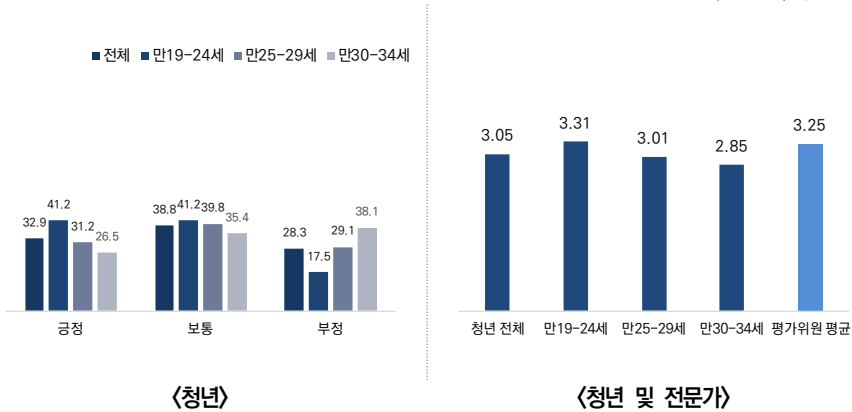


그림 V-3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표 V-3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7.8	25.1	38.8	21.3	7.0	41.122***	3.05	3.25
만19~24세	330	11.5	29.7	41.2	13.0	4.5		3.31	
만25~29세	334	6.3	24.9	39.8	21.3	7.8		3.01	
만30~34세	336	5.7	20.8	35.4	29.5	8.6		2.85	

\*  $p < .05$ , \*\*  $p < .01$ , \*\*\*  $p < .001$ .

3-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7.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5.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3.6%, 만25~29세: 36.8%, 만30~34세: 32.7%).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4점, 전문가가 3.5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36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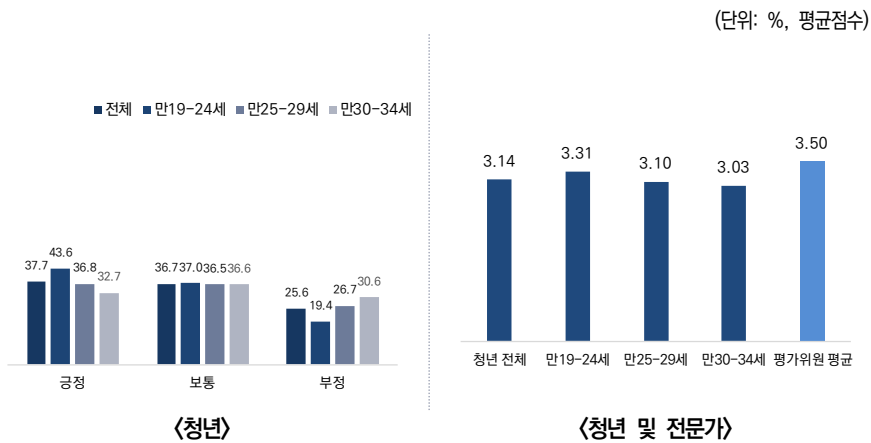


그림 V-3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표 V-3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6	29.1	36.7	19.3	6.3	18.350*	3.14	3.50
만19~24세	330	11.8	31.8	37.0	14.2	5.2		3.31	
만25~29세	334	6.3	30.5	36.5	19.8	6.9		3.10	
만30~34세	336	7.7	25.0	36.6	23.8	6.8		3.03	

\*  $p < .05$ , \*\*  $p < .01$ , \*\*\*  $p < .001$ .

3-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55.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4.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7.3%, 만25~29세: 56.6%, 만30~34세: 52.0%).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60점, 전문가가 4.5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90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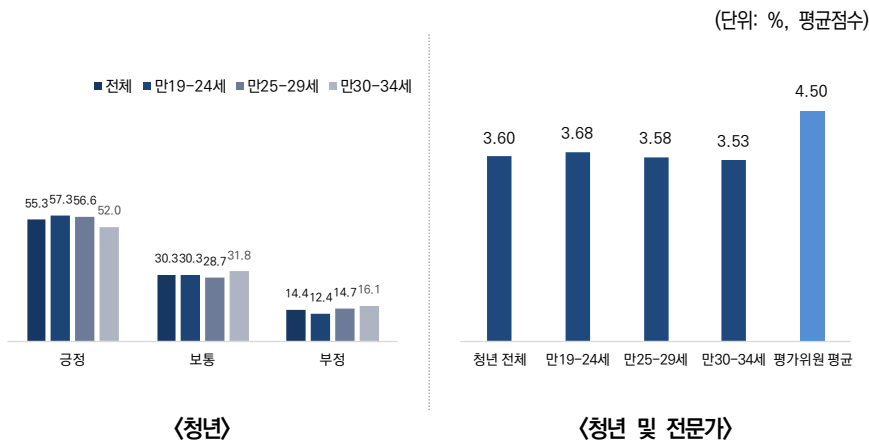


그림 V-3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표 V-3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21.7	33.6	30.3	11.8	2.6	7.856	3.60	4.50
만19~24세	330	25.2	32.1	30.3	10.9	1.5		3.68	
만25~29세	334	19.8	36.8	28.7	11.4	3.3		3.58	
만30~34세	336	20.2	31.8	31.8	13.1	3.0		3.53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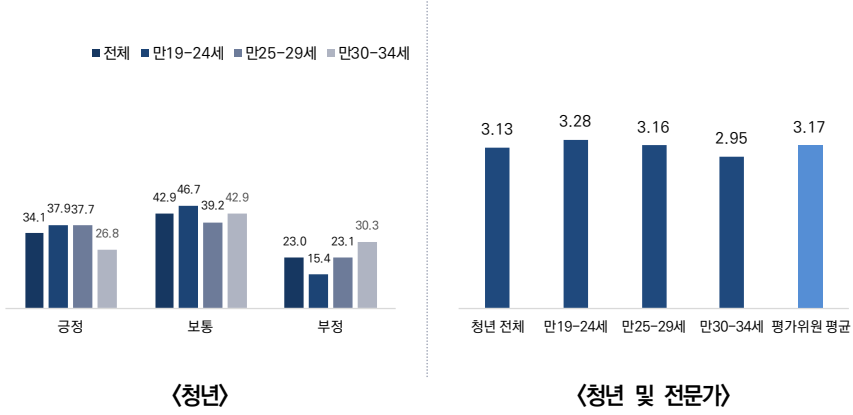
3-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4.1%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3.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7.9%, 만25~29세: 37.7%, 만30~34세: 26.8%).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3점, 전문가가 3.17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04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3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표 V-36.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7.3	26.8	42.9	17.4	5.6	28.569***	3.13	3.17
만19~24세	330	9.4	28.5	46.7	11.2	4.2		3.28	
만25~29세	334	7.8	29.9	39.2	17.1	6.0		3.16	
만30~34세	336	4.8	22.0	42.9	23.8	6.5		2.95	

\*  $p < .05$ , \*\*  $p < .01$ , \*\*\*  $p < .001$ .

### 3-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0.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9.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8.1%, 만25~29세: 38.6%, 만30~34세: 35.5%).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6점, 전문가가 3.75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49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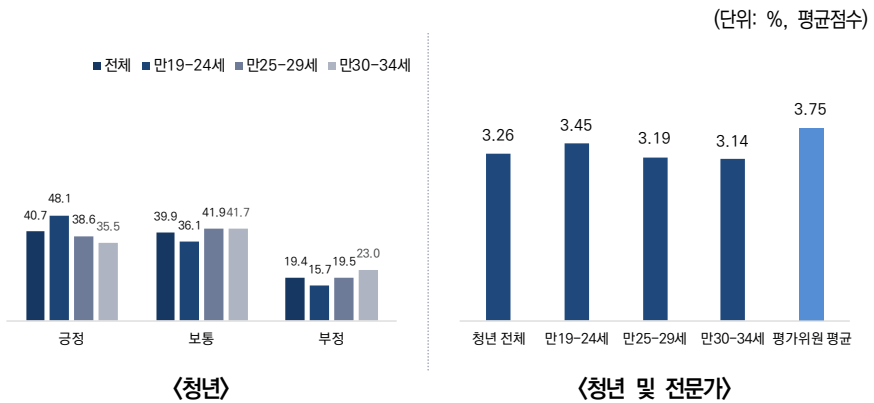


그림 V-36.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표 V-37.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7	32.0	39.9	15.0	4.4	31.931***	3.26	3.75
만19~24세	330	14.2	33.9	36.1	13.6	2.1		3.45	
만25~29세	334	6.0	32.6	41.9	12.9	6.6		3.19	
만30~34세	336	6.0	29.5	41.7	18.5	4.5		3.14	

\* $p < .05$ , \*\* $p < .01$ , \*\*\* $p < .001$ .

### (3) 교육 분야

#### 3-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4.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5.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7.9%, 만25~29세: 36.5%, 만30~34세: 28.6%).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1점, 전문가가 3.5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39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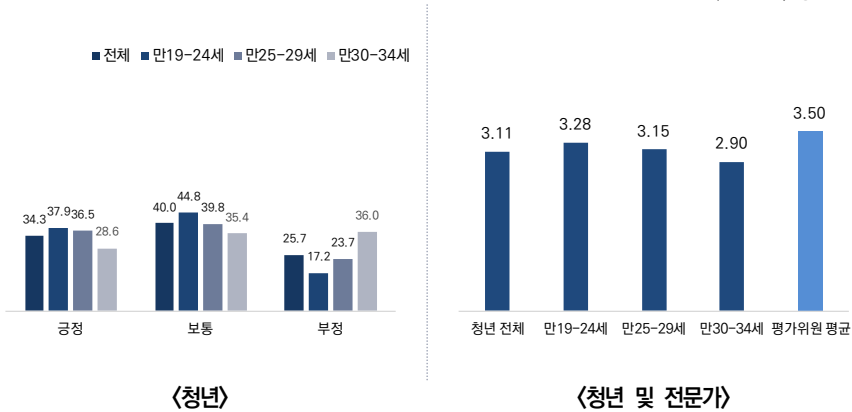


그림 V-37.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표 V-38.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3	25.0	40.0	18.7	7.0	38.570***	3.11	3.50
만19~24세	330	12.7	25.2	44.8	12.4	4.8		3.28	
만25~29세	334	9.3	27.2	39.8	16.2	7.5		3.15	
만30~34세	336	6.0	22.6	35.4	27.4	8.6		2.90	

\*  $p < .05$ , \*\*  $p < .01$ , \*\*\*  $p < .001$ .



3-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7.1%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2.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3.6%, 만25~29세: 39.2%, 만30~34세: 28.6%).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7점, 전문가가 3.58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41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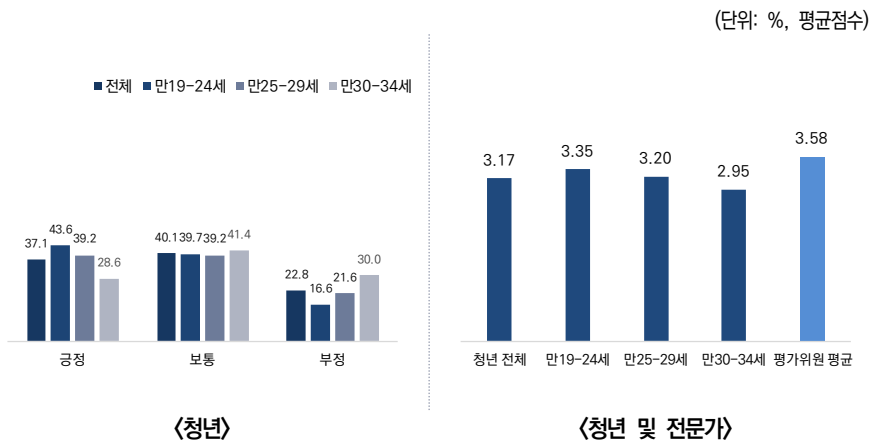


그림 V-38.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표 V-39.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0	29.1	40.1	17.1	5.7	30.571***	3.17	3.58
만19~24세	330	11.5	32.1	39.7	13.0	3.6		3.35	
만25~29세	334	8.7	30.5	39.2	15.3	6.3		3.20	
만30~34세	336	3.9	24.7	41.4	22.9	7.1		2.95	

\*  $p < .05$ , \*\*  $p < .01$ , \*\*\*  $p < .001$ .

3-3.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8.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7.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49.1%)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44점, 전문가가 3.92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48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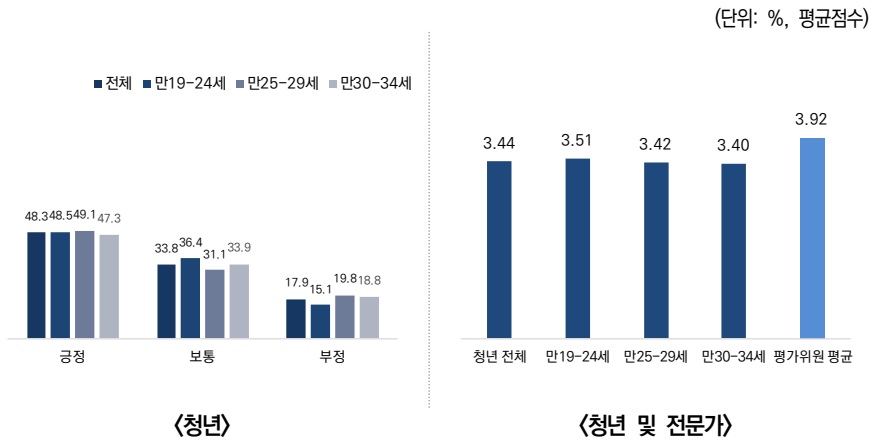


그림 V-39.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표 V-40.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16.9	31.4	33.8	15.0	2.9	7.630	3.44	3.92
만19~24세	330	19.4	29.1	36.4	13.3	1.8		3.51	
만25~29세	334	16.5	32.6	31.1	15.9	3.9		3.42	
만30~34세	336	14.9	32.4	33.9	15.8	3.0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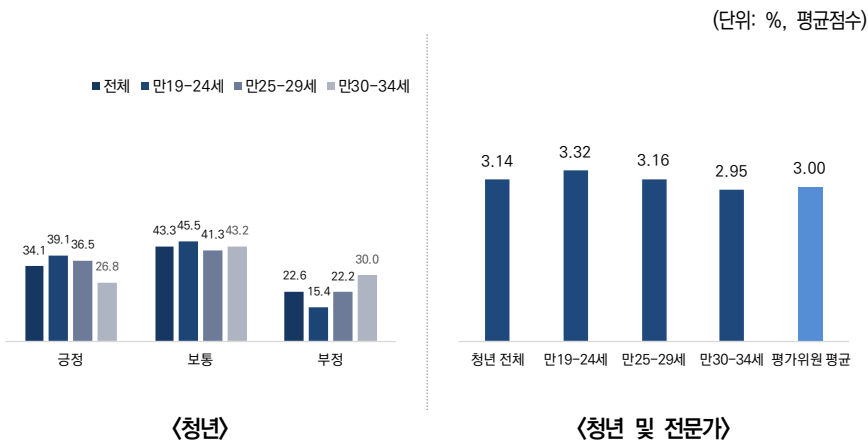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3-4.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4.1%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2.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9.1%, 만25~29세: 36.5%, 만30~34세: 26.8%).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4점, 전문가가 3.00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14점 높게 나타났다.



〈청년〉

〈청년 및 전문가〉

그림 V-40.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표 V-4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7.4	26.7	43.3	17.9	4.7	32.695***	3.14	3.00
만19~24세	330	11.2	27.9	45.5	13.0	2.4		3.32	
만25~29세	334	6.0	30.5	41.3	17.7	4.5		3.16	
만30~34세	336	5.1	21.7	43.2	22.9	7.1		2.95	

\*  $p < .05$ , \*\*  $p < .01$ , \*\*\*  $p < .001$ .

### 3-5.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0.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0.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8.1%, 만25~29세: 40.7%, 만30~34세: 33.4%).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과 전문가 모두 3.25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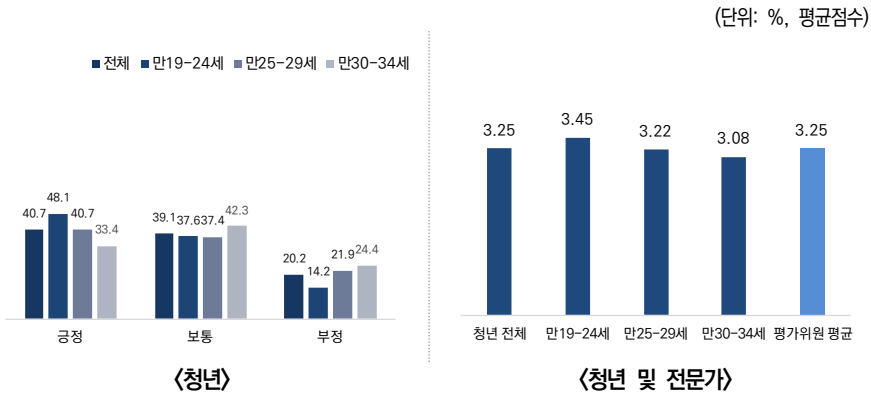


그림 V-4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표 V-4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9	30.8	39.1	14.7	5.5	25.373**	3.25	3.25
만19~24세	330	13.9	34.2	37.6	11.2	3.0		3.45	
만25~29세	334	10.2	30.5	37.4	15.3	6.6		3.22	
만30~34세	336	5.7	27.7	42.3	17.6	6.8		3.08	

\*  $p < .05$ , \*\*  $p < .01$ , \*\*\*  $p < .001$ .

#### (4) 복지·문화 분야

##### 3-1.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5.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3.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2.4%, 만25~29세: 32.7%, 만30~34세: 32.1%).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7점, 전문가가 3.08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09점 높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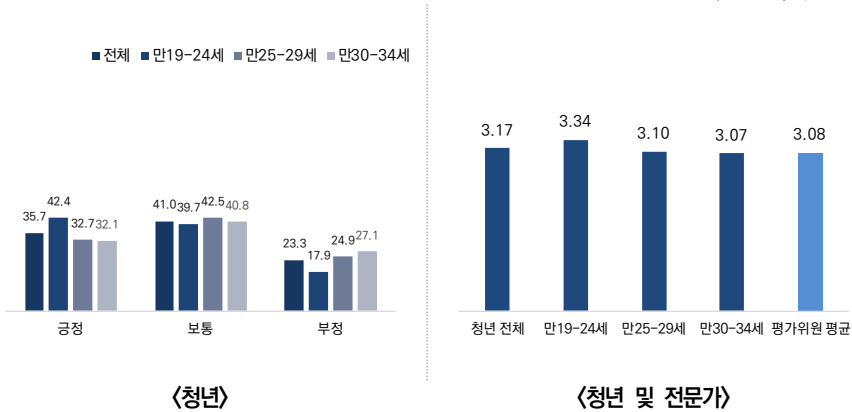


그림 V-4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표 V-4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3	26.4	41.0	18.4	4.9	20.146**	3.17	3.08
만19~24세	330	11.5	30.9	39.7	15.5	2.4		3.34	
만25~29세	334	9.6	23.1	42.5	17.7	7.2		3.10	
만30~34세	336	6.8	25.3	40.8	22.0	5.1		3.07	

\* $p < .05$ , \*\* $p < .01$ , \*\*\* $p < .001$ .

### 3-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0.8%로 나타났다, ‘부정’ 응답은 22.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7.9%, 만25~29세: 40.1%, 만30~34세: 34.6%).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4점, 전문가가 3.33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09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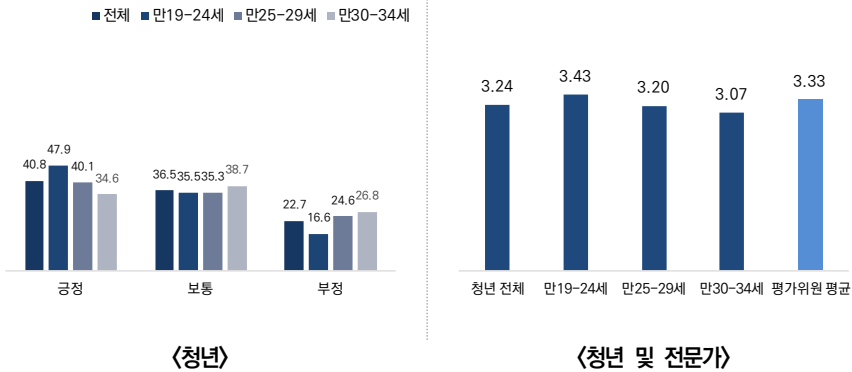


그림 V-4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표 V-4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9	30.9	36.5	18.2	4.5	26.823***	3.24	3.33
만19~24세	330	15.2	32.7	35.5	13.6	3.0		3.43	
만25~29세	334	9.6	30.5	35.3	19.5	5.1		3.20	
만30~34세	336	5.1	29.5	38.7	21.4	5.4		3.07	

\*  $p < .05$ , \*\*  $p < .01$ , \*\*\*  $p < .001$ .

3-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51.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5.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5.5%, 만25~29세: 51.5%, 만30~34세: 47.9%).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50점, 전문가가 4.33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83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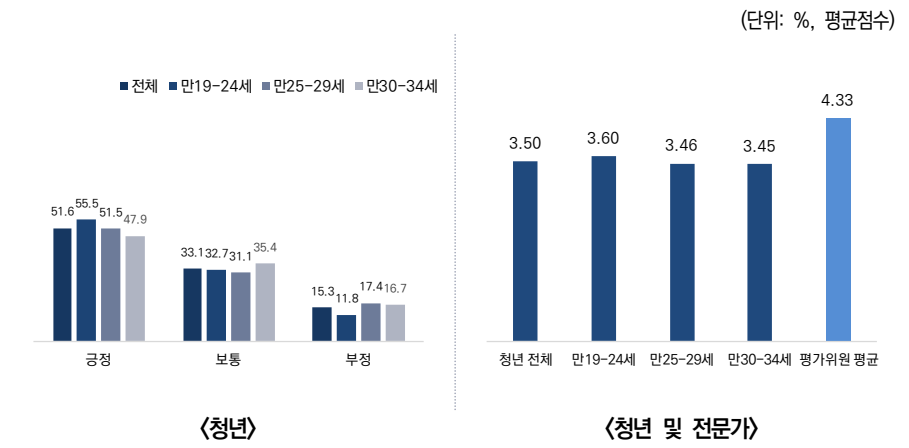


그림 V-4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표 V-4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17.7	33.9	33.1	11.3	4.0	10.699	3.50	4.33
만19~24세	330	19.7	35.8	32.7	8.5	3.3		3.60	
만25~29세	334	17.1	34.4	31.1	11.7	5.7		3.46	
만30~34세	336	16.4	31.5	35.4	13.7	3.0		3.45	

\*  $p < .05$ , \*\*  $p < .01$ , \*\*\*  $p < .001$ .

3-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8.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2.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4.2%, 만25~29세: 39.2%, 만30~34세: 31.6%).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9점, 전문가가 2.83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36점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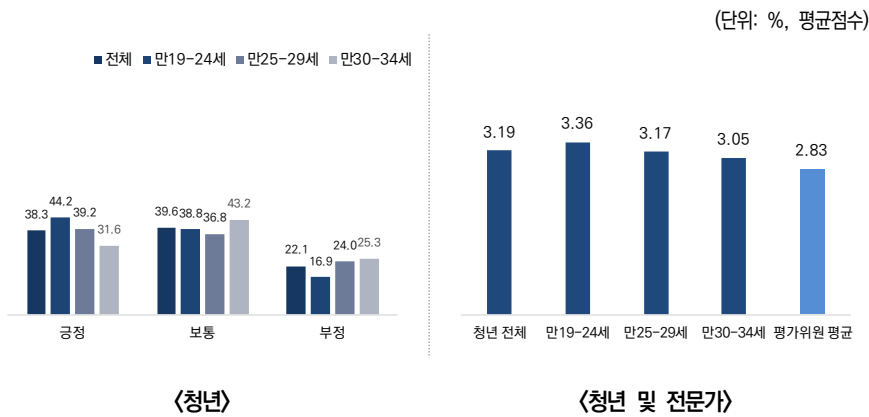


그림 V-4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표 V-46.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2	30.1	39.6	17.0	5.1	20.569**	3.19	2.83
만19~24세	330	11.8	32.4	38.8	13.9	3.0		3.36	
만25~29세	334	7.8	31.4	36.8	17.7	6.3		3.17	
만30~34세	336	5.1	26.5	43.2	19.3	6.0		3.05	

\*  $p < .05$ , \*\*  $p < .01$ , \*\*\*  $p < .001$ .



### 3-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3.4%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0.0%, 만25~29세: 43.7%, 만30~34세: 36.6%).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32점, 전문가가 3.25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07점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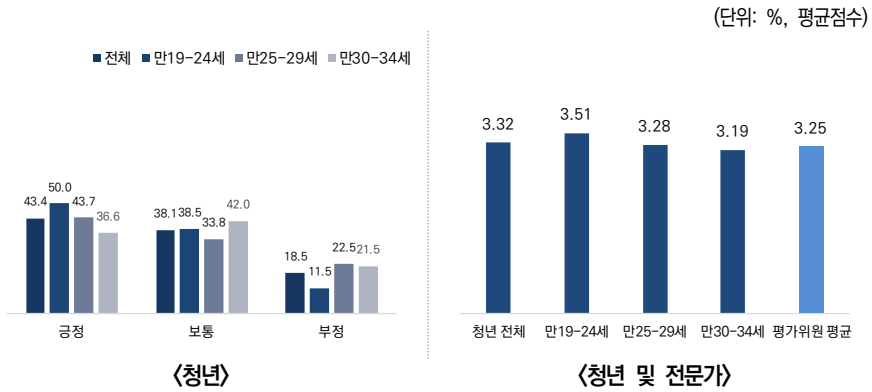


그림 V-46.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표 V-47.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12.4	31.0	38.1	13.6	4.9	24.771**	3.32	3.25
만19~24세	330	15.8	34.2	38.5	8.2	3.3		3.51	
만25~29세	334	12.6	31.1	33.8	16.5	6.0		3.28	
만30~34세	336	8.9	27.7	42.0	16.1	5.4		3.19	

\* $p < .05$ , \*\* $p < .01$ , \*\*\* $p < .001$ .

## (5) 참여·권리 분야

### 3-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3.4%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4.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1.8%, 만25~29세: 32.0%, 만30~34세: 26.5%).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0점, 전문가가 3.17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07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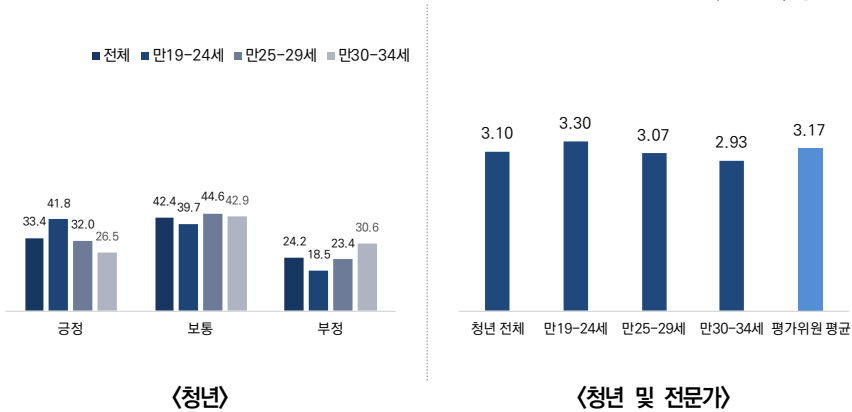


그림 V-47.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표 V-48.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7.9	25.5	42.4	17.2	7.0	28.731***	3.10	3.17
만19~24세	330	12.1	29.7	39.7	13.0	5.5		3.30	
만25~29세	334	5.4	26.6	44.6	16.5	6.9		3.07	
만30~34세	336	6.3	20.2	42.9	22.0	8.6		2.93	

\*  $p < .05$ , \*\*  $p < .01$ , \*\*\*  $p < .001$ .

### 3-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6.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3.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2.1%, 만25~29세: 41.3%, 만30~34세: 26.8%).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5점, 전문가가 3.25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10점 낮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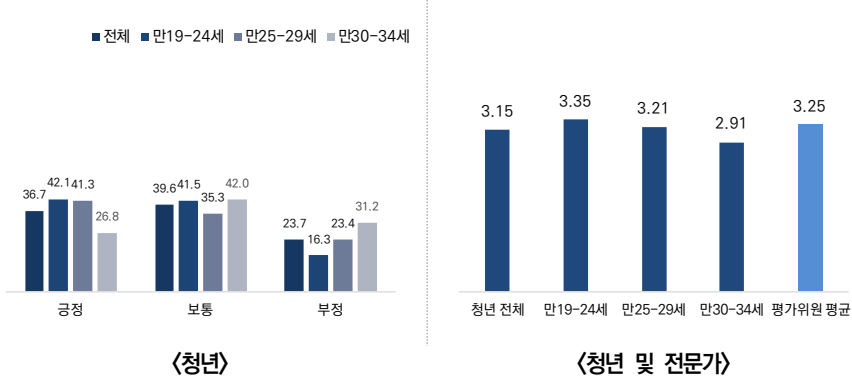


그림 V-48.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표 V-49.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 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8.3	28.4	39.6	17.6	6.1	38.195***	3.15	3.25
만19~24세	330	12.1	30.0	41.5	13.0	3.3		3.35	
만25~29세	334	8.7	32.6	35.3	17.4	6.0		3.21	
만30~34세	336	4.2	22.6	42.0	22.3	8.9		2.91	

\* $p < .05$ , \*\* $p < .01$ , \*\*\* $p < .001$ .

3-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8.1%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0.6%, 만25~29세: 49.4%, 만30~34세: 44.4%).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45점, 전문가가 4.58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1.13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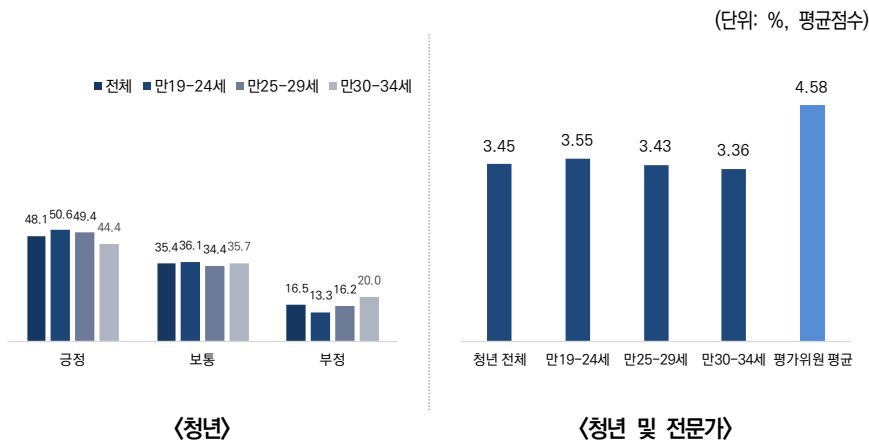


그림 V-49.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표 V-50.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16.5	31.6	35.4	13.0	3.5	19.901*	3.45	4.58
만19~24세	330	19.4	31.2	36.1	11.8	1.5		3.55	
만25~29세	334	15.9	33.5	34.4	10.2	6.0		3.43	
만30~34세	336	14.3	30.1	35.7	17.0	3.0		3.36	

\*  $p < .05$ , \*\*  $p < .01$ , \*\*\*  $p < .001$ .

3-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4.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2.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0.3%, 만25~29세: 31.4%, 만30~34세: 31.3%).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15점, 전문가가 2.75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40점 높게 나타났다.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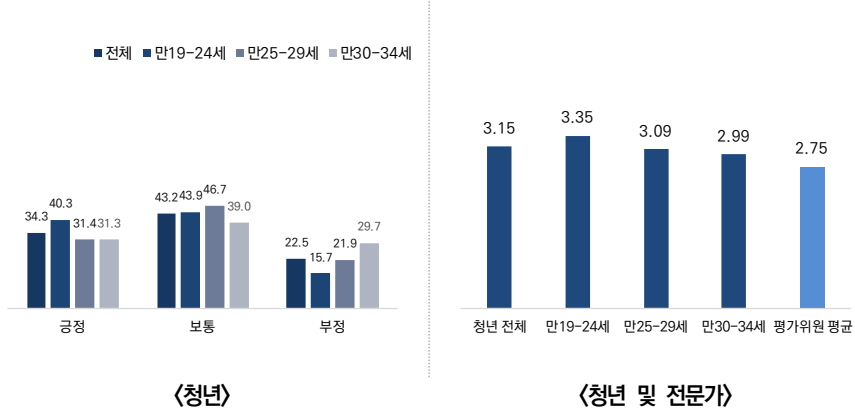


그림 V-50.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표 V-5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7.7	26.6	43.2	17.6	4.9	37.678***	3.15	2.75
만19~24세	330	13.0	27.3	43.9	13.6	2.1		3.35	
만25~29세	334	5.4	26.0	46.7	16.2	5.7		3.09	
만30~34세	336	4.8	26.5	39.0	22.9	6.8		2.99	

\*  $p < .05$ , \*\*  $p < .01$ , \*\*\*  $p < .001$ .

3-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8.1%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0.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7.2%, 만25~29세: 37.7%, 만30~34세: 29.4%).

청년과 전문가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청년이 3.22점, 전문가가 2.67점으로, 청년이 전문가보다 0.55점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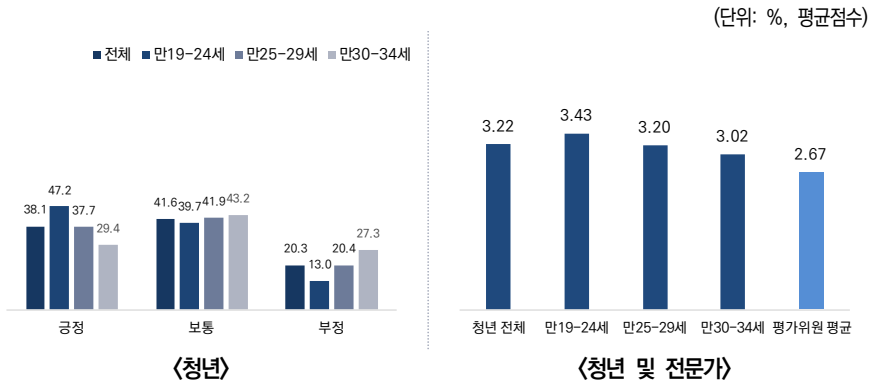


그림 V-5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표 V-5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단위: 명, %, 평균점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청년 평균 (5점 만점)	전문가 3인 평가위원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9.8	28.3	41.6	14.2	6.1	31.986***	3.22	2.67
만19~24세	330	12.4	34.8	39.7	9.1	3.9		3.43	
만25~29세	334	9.0	28.7	41.9	13.8	6.6		3.20	
만30~34세	336	8.0	21.4	43.2	19.6	7.7		3.02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청년정책 진단 결과

####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전체 전문가(N=15)를 대상으로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응답이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4.07점),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4.00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53.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균점수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1-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4.07
	1-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3.73
	1-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4.00
	1-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4.33
	1-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3.40

####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

전체 전문가(N=15)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4.13점으로 나타났다.

##### (1) 일자리 분야

일자리 분야 전문가(N=3)를 대상으로 일자리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 평가지표 중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응답이 3.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성 평가지표 중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응답이 4.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3.00점)의 경우 전체 평가지표 중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4. 일자리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균점수				
		전체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3.83	4.00	3.33	4.00	4.00
	2-3.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3.25	3.33	2.67	3.67	3.33
	2-4.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3.42	4.00	3.33	3.00	3.33
	2-5.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67	4.33	3.33	3.67	3.33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50	3.67	3.33	3.33	3.67
	3-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50	3.33	3.67	3.33	3.67
	3-3.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4.42	3.67	4.67	4.67	4.67
	3-4.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00	3.00	2.67	3.00	3.33
	3-5.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3.58	3.67	3.33	3.67	3.67

※ 일자리 : 분야1(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분야2(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분야3(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분야4(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2) 주거 분야

주거 분야 전문가(N=3)를 대상으로 주거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 평가지표 중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응답이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성 평가지표 중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응답이 4.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3.00점)의 경우 전체 평가지표 중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5. 주거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균점수				
		전체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4.00	4.33	4.33	4.33	3.00
	2-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3.75	3.67	4.33	4.33	2.67
	2-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3.00	3.67	2.67	3.00	2.67
	2-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33	3.00	3.67	3.67	3.00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25	3.00	4.00	3.00	3.00
	3-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50	3.00	4.00	4.00	3.00
	3-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4.50	5.00	4.67	5.00	3.33
	3-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17	3.00	3.00	3.67	3.00
	3-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3.75	4.00	4.00	3.67	3.33

※ 주거 : 분야1(청년 주택 공급 확대), 분야2(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분야3(주거 취약청년 집중 지원), 분야4(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3) 교육 분야

교육 분야 전문가(N=3)를 대상으로 교육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 평가지표 중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응답이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성 평가지표 중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응답이 3.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3.00점)의 경우 전체 평가지표 중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6. 교육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균점수				
		전체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2-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4.00	4.00	4.67	4.00	3.33
	2-3.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3.25	3.33	3.00	3.33	3.33
	2-4.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3.58	4.00	4.00	3.33	3.00
	2-5.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42	3.33	4.00	3.33	3.00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3-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50	3.33	4.00	3.67	3.00
	3-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58	3.67	4.33	3.33	3.00
	3-3.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92	4.00	4.67	3.67	3.33
	3-4.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00	3.00	3.33	3.00	2.67
	3-5.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3.25	3.00	3.67	3.67	2.67

※ 교육 : 분야1(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분야2(고른 교육기회 보장), 분야3(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분야4(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4) 복지·문화 분야

복지·문화 분야 전문가(N=3)를 대상으로 복지·문화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 평가지표 중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응답이 4.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성 평가지표 중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응답이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2.50점)의 경우 전체 평가지표 중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7. 복지·문화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균점수				
		전체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2-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4.17	5.00	3.67	4.33	3.67
	2-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3.67	4.00	4.00	3.00	3.67
	2-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2.50	2.00	2.67	2.33	3.00
	2-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25	3.33	4.00	2.67	3.00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3-1.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08	2.67	3.67	2.67	3.33
	3-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33	3.00	3.33	3.33	3.67
	3-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4.33	4.33	4.33	4.33	4.33
	3-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2.83	2.67	3.00	2.67	3.00
	3-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3.25	3.33	3.33	3.00	3.33

※ 복지·문화 : 분야1(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분야2(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분야3(청년건강 증진), 분야4(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5) 참여·권리 분야

참여·권리 분야 전문가(N=3)를 대상으로 참여·권리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 평가지표 중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및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응답이 각 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성 평가지표 중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응답이 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2.67점)의 경우 전체 평가지표 중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8. 참여·권리 분야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균점수				
		전체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4.08	3.67	4.33	4.33	4.00
	2-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3.08	2.33	3.00	3.33	3.67
	2-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4.08	4.00	4.00	4.00	4.33
	2-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50	3.33	4.00	3.67	3.00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17	3.67	3.00	3.00	3.00
	3-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25	2.67	3.33	3.67	3.33
	3-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4.58	4.67	4.33	4.67	4.67
	3-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2.75	2.67	2.33	3.00	3.00
	3-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2.67	2.00	2.67	3.33	2.67

※ 참여·권리 : 분야1(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분야2(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분야3(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분야4(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4.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및 전문가 진단 총괄비교 : 가중치 반영

#####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청년 및 전문가 대상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대한 가중치 반영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청년의 점수가 전문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평가지표 1-5(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청년과 전문가의 점수 차이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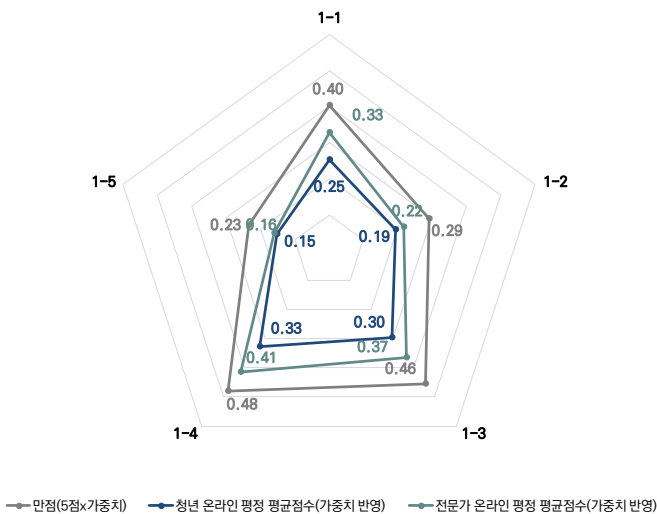


그림 V-52.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표 V-59.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1-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1-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1-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1-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1-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청년 및 전문가 대상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대한 가중치 반영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청년의 점수가 전문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평가지표 2-2(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를 제외한 평가지표들의 경우 청년과 전문가의 점수차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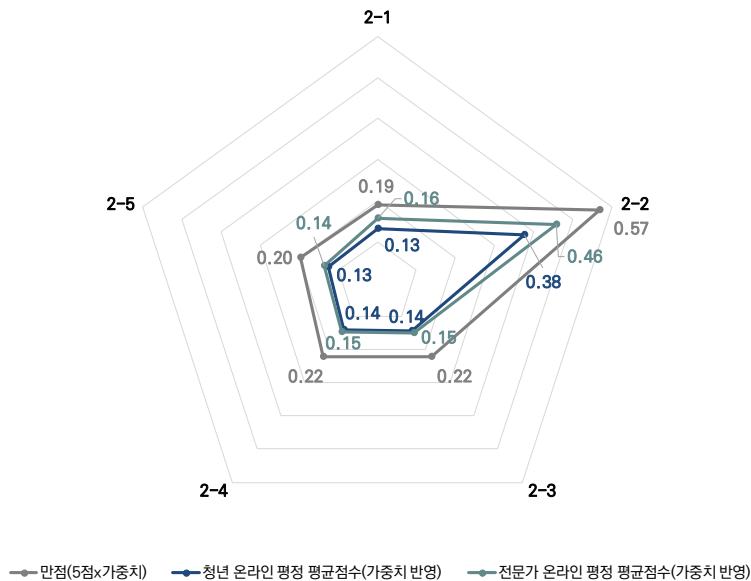


그림 V-53.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표 V-60.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2-1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2-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2-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2-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2-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청년 및 전문가 대상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대한 가중치 반영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청년의 점수가 전문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모든 평가지표에서 청년과 전문가의 점수 차이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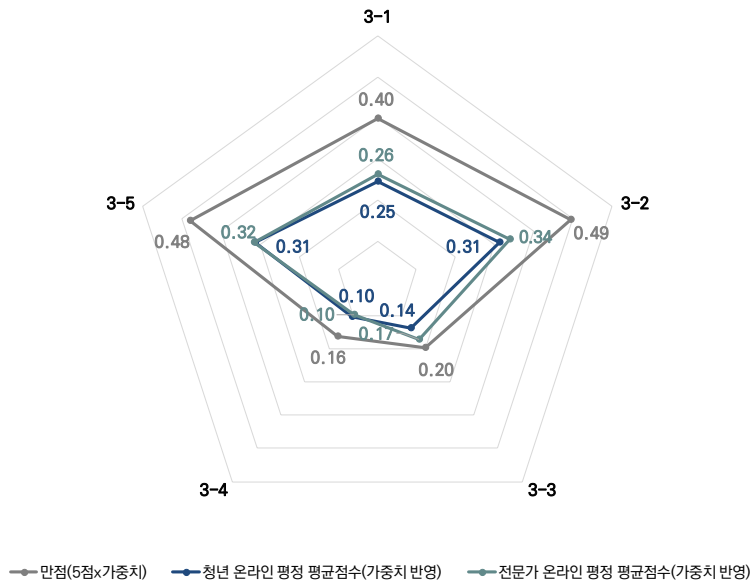


그림 V-54.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표 V-61.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3-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5. 양적 진단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양적 진단결과 요약

####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청년과 전문가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였다.

청년의 경우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1점을 기록했다. 이어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에 대해 3.35점의 평균을 기록했으며,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는 3.26점의 평균을 보였다. 반면,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한편,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를 4.3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이는 청년의 평균 점수(3.41점)보다 0.92점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가 4.07점,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가 4.00점으로 평가되어, 각각 청년 점수보다 0.93점, 0.74점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와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항목은 각각 3.73점과 3.40점으로, 청년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그 격차는 각각 0.38점과 0.15점으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청년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5개 중점 분야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청년 응답자의 54.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청년 전체 평균은 3.52점, 전문가 평균은 4.13점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책 과제 설정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가 고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주거 및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정책 참여에 대해 전문가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다양성 고려의 경우 일자리, 교육, 참여·권리 분야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지만 주거,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정에 청년 참여가 고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전체 타당성 평가 중 가장 낮은 2.50점으로 평가되었다.

###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실제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 또한 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한 평가는 주거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보다 더 낮게 평가했다.

청년들은 주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해 전문가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와 ‘삶의 질 개선 기여 여부’를 전문가보다 높게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분야별 정책의 지속 필요성은 대체로 약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참여·권리 분야에서 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청년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특히 참여·권리 분야의 해당 점수가 2.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권리 분야에서 해당 정책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67점의 평가가 나타나 전문가의 전체 효과성 평가 중 가장 낮았다.

## 2) 양적 진단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에서 정책 영역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나 가치가 전문가들에 비해 낮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나 목표, 거시적 통계로 나타난 실적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반면, 청년들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감한 정책 효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격차는 여전히 청년정책이 실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체감되지 않거나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나 기대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청년들의 정책평가 점수는 일자리·주거·교육 등 정책 목표가 눈에 보이고 체감하기 쉬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며, 청년들은 자신들의 정책 참여 경로나 의견 반영 수준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내렸다. 또한 정책 비전이나 목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평균 3.41점을 부여해(전문가 평균 4.33점)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정책의 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보다 낮았다. 또한 청년의 정책 절차 참여와 환류·질 관리 체계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2.5점에서 3점 사이로 청년(3점 초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는 청년 참여기회와 정책 환류 절차 및 정책 개선 반영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의 설계와 실행 과정 뿐만 아니라 청년참여위원회 운영에 의존하던 기존의 정책 환류(feedback)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류 시스템의 구축이다. 정책 평가 및 개선 작업에 청년대상 심층 인터뷰, 청년 참여 포럼, 청년 의견수렴 패널 구성 등 청년들이 직접 정책 효과와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적 환류 채널을 마련한다.

둘째, 환류 의견 접수와 반영 결과의 실시간 공개이다. 청와대 신문고와 같은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실시간 모바일 설문, 지역 청년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건의사항·제도 개선 요구 등을 신속히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화하고, 같은 플랫폼에서 청년들의 어떤 의견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효과 체감과 함께 참여의 효능감을 증진한다.

셋째, 정책 시범사업과 파일럿 모델 등의 확대이다. 분야별 정책의 도입 이전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를 다양한 경로로 공개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한 뒤, 정책의 본격 도입과 운영을 하는 사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청년정책의 5대 중점 분야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청년들은 대부분 3.5점 이상, 전문가들 대부분은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분야별 청년 요구 반영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일자리·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 보장에

관련된 영역의 정책에 있어서는 높은 기대와 동시에 정책 효과성의 체감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병존했다. 복지·문화·참여 권리 분야에서는 청년 참여 고려 항목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과 권리 보호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청년집단 내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19~24세)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가가 낮아졌다. 이는 현재 청년정책이 주로 19세에서 24세 청년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고연령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에 있어서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청년 내의 세대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종합해 보면,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 뿐만 아니라 실행과 환류 체계에 청년들의 현실과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고 이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환류 시스템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에 대한 피드백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 피드백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실질적으로 점검하며, 청년들이 직접 평가·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 영역별로는 일자리·주거·교육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복지·문화·참여 분야의 정책은 다양성과 포용성 사회적 연결망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 — 제6장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의한 청년정책 질적 진단

- 1. 면담조사 개요
- 2. 정책수요자 청년의 청년정책  
질적 진단 결과
- 3. 청년정책의 일반적 이해
- 4. 질적 진단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면담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그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 다양한 배경요인을 지니는 11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본 면담조사 역시 IRB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 202503-HR-고유-001, 승인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5년 11월 30일)

### 1) 면담조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수요자인 만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는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배경요인별 면담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명, 여성이 6명이며,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3명, 대재 이상 5명, 대학원 이상 3명으로 선별하였다. 거주 지역의 경우 대도시 5명, 그 외 지역 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참여자 특성으로는 연령대의 경우 20대 초반이 2명, 20대 후반이 4명, 30대가 5명 참여하였으며, 모두 미혼이다. 경제활동별로는 경제활동 인원인 9명, 비경제활동 인원이 2명이며 비경제활동 2명은 모두 현재 대학 재학 중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위치 인식별로는 중층이 7명, 중하층이 4명 포함되었다. 심층면담 참여자의 세부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36)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표 VI-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연번	성별	연령대	학력	거주 지역	혼인 여부	경제활동 유형	사회경제적 위치 인식
1	여성	20대 초반	대재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비경제활동	중층
2	남성	30대	대학원 이상	대도시	미혼	경제활동	중층
3	남성	20대 후반	대재 이상	대도시	미혼	경제활동	중층
4	여성	20대 초반	대재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비경제활동	중층
5	남성	30대	고졸	대도시	미혼	경제활동	중하층
6	여성	20대 후반	대재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경제활동	중층
7	남성	20대 후반	대학원 이상	대도시	미혼	경제활동	중층
8	여성	30대	고졸	그 외 지역	미혼	경제활동	중하층
9	여성	30대	대학원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경제활동	중층
10	여성	20대 후반	대재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경제활동	중하층
11	남성	30대	고졸	대도시	미혼	경제활동	중하층

## 2) 면담조사 주요 내용

면담 내용은 크게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4) 청년정책의 일반적 이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I-2. 면담조사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①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②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③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④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⑤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구분	세부 내용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p>①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p> <p>②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p> <p>③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p> <p>④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p> <p>⑤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p> <p>※ ② ~ ⑤ 항목의 경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별로 응답</p>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p>①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p> <p>②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p> <p>③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p> <p>④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p> <p>⑤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p> <p>※ ① ~ ⑤ 항목의 경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별로 응답</p>
4) 청년정책의 일반적 이해	<p>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p> <p>②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p> <p>③ 청년기본법에 대한 이해</p> <p>④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p>



## 2. 정책수요자 청년의 청년정책 질적 진단 결과

###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산, 대학, 소득, 계층, 서울, 주택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정책이 주로 주택 안정 및 자산 형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 문제와 소득 및 부모 배경에 따른 계층 간 격차 해소가 중요한 정책 수요임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 등록금 등 교육 관련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I-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1-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청년정책의 수립 배경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정책 배경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보였다. 청년들이 사회 첫 발을 내딛고 삶을 기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정책의 수립 배경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와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 부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시되기도 했다. 일부 응답자는 코로나19가 청년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 않거나, 모든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청년에게만 한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캥거루족'이나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청년 실태에 대한 원초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긍정)

"저는 변화 대응 부분에 경기 상황 악화, 일자리 주거, 삶의 질 부분에서 청년들이 지금 제일 마음 외닿는 부분이어서 부분과 그다음에 배경에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청년은 사회 첫발을 좀 편안해야 앞으로 삶을 기대하고 꿈을 꾸듯이 부분의 부분에서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전체적으로 변화 대응 맞는 말 같아요. 코로나19에 이은 경기 상황 악화로 혼자 독립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힘드니까 질이 열악하니까 이런 데 사회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부정)

"살짝 일반적인 제 나이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짝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해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코로나 이후로 경기 상황이 악화한 거는 알긴 하겠는데 일자리랑 주거의 질적인 면에서 열악해지고 진출이나 자립 자체가 어려움이 이렇게까지 심한가 싶은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코로나19가 오건 안 오건 어차피 어려운 건 똑같은 거라 크게 관계는 없는 거죠."

###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부정)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반영이 됐다고는 하겠지만 모호한 것 같아요. 이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는 청년이 아니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너무 당연한 말을 적어놓은 것 같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가 다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청년들의 실태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TV 프로그램에서도 쟁거루족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혼자 은둔형 아싸, 자발적 아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원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 1-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분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격차·기회 불평등 심화'라는 분석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분석 내용의 구체성 부족이나 특정 내용에 대한 공감 부족을 지적했다. 청년 삶의 여건 분석이 모든 연령대의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나, 특정 사례(위험자산 투자 급증)가 대다수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존재했다. 또한, 지역별 또는 직업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화된 분석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적절)

"자산 형성의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급랭 이후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되게 고급스럽게 잘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잘 담은 것 같아요."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격차 느낌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한때 유행했던 게 막 금수저 흠수저 이런 것도 그렇고 대학 수능 성적도 그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것 같고 그 대학 내에서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약간 삶의 질이 확 다른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격차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적절)

"기본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기회도 많이 있고 또 못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데 격차 확대가 그걸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자산 부분에서도 부모의 배경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특히 격차 확대 부분에서 부모나 지역 등에 따른 청년 내 격차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서울권에 살면 그것만으로도 혜택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잘 캐치를 해놓은 것 같아서."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제한적 동의 또는 비판적 의견)

"제 나이 또래는 정도까지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지역마다 직업마다 또 다르니까."

(응답자5,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싶은. 솔직히 부모님이 투자하면서 그 자산이 형성된 그러한 집안이면 자식들도 배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일단 뭐가 있어야지 투자하는데 청년들이 그만한 자산이 있나 싶은."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 1-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다수의 청년들은 청년 정책이 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 정책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주요 한계점으로 공감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위소득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정책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고용 정책 위주로 청년 정책이 추진되어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에 대해 많은 응답자가 공감했다.

####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부분이 확 와닿는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고용 정책 위주로만 한정돼 있다는 것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코로나 시대 때 고용 많이 잘리기도 하고 정리도 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고용 위주로 해서 정책들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이 쓰여 있어서."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한계의 기준 중위 소득 기준 취약계층 한시적 지원 정책 부분이 너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지원이 됐다는 부분이 이해 가고 공감 가고."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성과는 잘 모르겠지만 한계라든지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해당하다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취약계층에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여기 만약에 벗어나다고 해도 중위소득에 벗어나다 해도 살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예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은 없지만 원래 집이 잘살아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고 자기가 더 그것 될 수 있는데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정책에서 배제돼 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 1-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는 대체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한다고 인식되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은 청년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이 '좋은 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긍정)

"주거 같은 경우가 일단 제일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많이 받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직접 어디서 보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거를 알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긍정)**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주거 지원 같은 것 그리고 생각을 안 했는데 복지나 문화 쪽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수립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 큰 꼭지를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우선은 일하는 거랑 주거 쪽에서 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좋고 일자리랑 주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거기에 플러스 운동이라든가 문화까지 신경을 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아무래도 청년들이라고 하면 다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취업하려면 일자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주거 문제가 제일 크겠지요."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부정)**

"다 보기 좋은 말들만 적혀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꿈같이 보기 좋은 말들만 적어놨는데 사실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젊은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미래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국가 비전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1-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청년들은 전망된 청년 삶의 개선 모습이 부분적으로만 실현 가능하거나, 실현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보았다. 많은 청년들은 정책의 혜택이 일부 청년에 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청년 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여 모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청년 주택, 희망 청년 적금 도약 계좌, 마음 건강 바우처 등 특정 정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주변에서 혜택을 본 사례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자리 분야의 고용보험은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였고, 일자리 지원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부정)**

"청년 주택을 사는 사람들도 청년 주택이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럴 수 없고 약간 운 좋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응답자1, 20대 초반, 대재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비경제활동, 중층, 여성)

"대학 등록금 같은 것도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있는 느낌이고 미래 신산업도 다들 약간 의대만 가려 그러고 특히 의료 계열 쪽으로 빠지는데 어떻게 10만 명을 양성할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응답자4, 20대 초반, 대재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비경제활동, 중층, 여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수가 많이 적다? 적은데 이걸 통틀어서 청년 정책이다?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응답자7, 20대 후반, 대학원 이상, 대도시, 미혼, 경제활동, 중층, 남성)

"청년의 주거 부담 공급이 되어도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너무 한정적이고 교육 부분도 대학교를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는 청년들도 많은데 이것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없애준다고 해서 상황적으로 보면 대학 그걸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응답자9, 30대, 대학원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경제활동, 중층, 여성)

"솔직히 말하면 일자리가 질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젊은 사람들인데도 정리하고 당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또 회사 측에서는 정리해고라고 안 하고 그냥 퇴사 처리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거의 혜택을 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건강 바꾸치가 되게 제약적인 게 많더라고요."

(응답자8, 30대, 고졸, 그 외 지역, 미혼, 경제활동, 중하층, 여성)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긍정)**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저는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 대재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비경제활동, 중층, 여성)

"지금 제가 봤을 때 잘되고 있는 고용보험. 이것은 잘하고 고용보험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응답자5, 30대, 고졸, 대도시, 미혼, 경제활동, 중하층, 남성)

"저는 일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양한 경험 쌓아서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응답자7, 20대 후반, 대학원 이상, 대도시, 미혼, 경제활동, 중층, 남성)

"청소년 삶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통해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긍정)**

자산과 관련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응답자10, 20대 후반, 대재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경제활동, 중하층, 여성)

##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 2-1.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중점 분야 구분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자리 분야와 주거 분야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분야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는 데 필수적인 기반으로 여겨졌다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이게 가장 저희 나이대 세대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자리나 주거나 교육이나 복지 문화가 어찌 보면 갖춰졌을 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적절한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일자리와 집인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의 교육 분야가 필요한 것 같고 복지와 문화는 전반적인 생활 느낌이고 참여 권리는 그래도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겠다면 그래도 뉘앙스는 느껴지니까 그래도 잘 나눈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들이 지금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들을 잘 정리해 중점으로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1) 일자리 분야

일자리 분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창업, 기업, 확대, 강화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특히 기업 내 일터 안전망 강화와 직장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I-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일자리)

2-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많은 응답자가 정책 과제들이 청년이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원' 및 '도움'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창업 지원 자금이나 아이디어, 교육 지원 등이 초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책의 '큰 틀'에서는 부합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긍정)**

"청년은 기초 자원이라 해야 하나 그런 게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부합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를 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적절히 반영이 되었다고 봐요."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 재직 유도 부분이 생각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이직했는데 가장 이직에서 도움이 됐던 게 장기적으로 근속을 했던 사람이라서 신뢰성이 간다. 이런 게 많아서 이런 것이 청년들한테 많이 지원되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부정)**

"큰 틀에서 보면 부합하는데 그냥 밑에 작게 작게 보면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솔직히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요즘에는 일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도 많고 아니면 프리랜서들도 많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빠져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 2-3.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주로 남성들이 일자리 분야 다양성이 고려된다고 느꼈으며 여성들은 고려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남성 참여자들은 직업 종류의 다양성(예: 배달 종사자, 농업 분야 등), 공정 채용 및 보장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기술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성별, 지역, 소득 수준 등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여성 참여자들은 정책이 특정 대상(예: 예비 창업자 또는 사회 초년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차이, 특정 전공(예: 문과 계열)의 취업 어려움, 또는 지방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 등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 채용이나 안전망 강화 정책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반영과 실효성에 한계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긍정)

"배달 종사자분들도 들어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직업 차이는 충분히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도 성차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는데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것을 실현하는 것까지 어려움 같은 게 있는데 지원도 해 주시고."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부정)

"회사를 딱 들어가서 초반이거나 아니면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일단 수도권과 지방 일자리 차이 나는 것도 좀 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물론 다 취업이 어렵지만 특히 문과 계열은 더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부정)**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거부감이 있는 인식이 있어서."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만약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비싼 주거비를 내면서 근무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2-4.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청년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이들은 정책 내용이 청년들에게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거나, 다양한 직종 및 중소기업 취업 유도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정책, 또는 과거에 겪었던 부당한 경험들이 반영되어 나왔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필수적인 부분이 개선되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청년의 참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들은 정책이 너무 정교하여 행정가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하거나, 단어들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이슈만 고려된 느낌이라고 지적 되기도 했다.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긍정)**

"다양한 직종이 고려돼 있고 사실 중소기업 취업의 장기 재직 유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것 같아서 의견을 수렴한 것 같긴 해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아마 이전에 계속 부당한 것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응답자5,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긍정)**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를 보니까요. 그분들의 얘기가 들어가서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을 시킨다든가. 최근에는 무조건 입사 첫날부터 그런 계약서 같은 걸 쓰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부정)**

"청년들이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정교하게 만든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청년들이 자기의 상황에 간혀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이것을 행정가들의 눈으로 봐서 잘 만든 정책도 우리나라에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그런데 청년들이 얘기를 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의 얘기를 듣는다고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짚 내려주는 느낌이어서 그런 건 별로 안 느껴져요. 단어들이 민간 기업과 고용 서비스를 연계하겠다 아니면 뭐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서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느낌이 더 컸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고 너무 사회적인 이슈들만 고려한 느낌이라서."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2-5.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긍정적 평가로는 정책의 네 가지 범주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를 포괄하고 있으며 법적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언급되었다. 특히, 일자리 확대와 같은 정책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고용 외에 직장 문화 개선까지 포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정책이 단순히 필요한 내용만 나열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한, 청년들의 실제 현실과 정책 내용 간의 괴리가 있으며 모호하고

이상적인 표현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부적인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해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체계적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것 같아요. 역량 강화부터 문화 개선까지 보통은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체계적인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일단 카테고리 4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법 같은 건 그래도 체계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확대, 창업 활성화, 그리고 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하는 부분. 연결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책 과제 네 가지로 분야를 나눠서 한 점이나 그다음에 고용, 창업, 안전망, 문화 개선, 네 가지로 그러니까 문화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넣었다는 점이 단순히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만 한 게 아니고 생각까지 바꾸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체계적이지 않다)**

“체계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적어놓은 것 같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유지 관리 부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는지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너무 이상적인 문구들인 것 같고 이런 문구들이 너무 좋은 소리만 담은 문구들이지 실제로 현실에서 직접 그것을 체험하고 반영이 되었을 때는 맞지 않는 표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사람마다 주거 환경마다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격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2) 주거 분야

주거 분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공급, 전월세, 비용, 부합, 기준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비용 경감 등 핵심 정책들이 필요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소득 기준의 모호성과 부모 배경에 따른 혜택 제약, 그리고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I-3.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주거)

### 2-6.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비용 경감 등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허위 매물 단속이나 전세 사기 예방 등 청년들이 취약한 부분을 고려한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정책 기준의 모호성, 특히 '주거 취약 청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긍정)

“허위 매물 단속 전세 사기 예방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이런 거에 제일 취약하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거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정말 좋아요.”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긍정)**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주택 공급 늘리는 거나 아니면 전월세 비용 깎아주는 것 이런 건 특히 주거에서 드러나는 약간 느껴지는 것들이라 잘 선정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부합합니다. 행복주택이나 그런 걸 지어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필요와 요구를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주거 분야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을 나눠서 한점, 그다음에 공급 그러니까 수량 공급과 비용적인 측면을 지원해 줘서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필요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아무래도 다 주거가 필요하니까 청년들 청년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면 거기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또 주로 전세 월세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경감되면.”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부정)**

“주거 취약 청년의 경우 정말 차상위나 기초생활 수급 아니면 자립 청년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일반 청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것 같고.”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저한테는 해당이 없어서 정확히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2-7.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청년들은 주거 분야 정책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대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취약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긍정)**

"취약 청년,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다양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 대재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비경제활동, 중층, 여성)

"지역 관계없이 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면을 잘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 대재 이상, 대도시, 미혼, 경제활동, 중층, 남성)

"이것도 취약 청년들 위주로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고려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응답자4, 20대 초반, 대재 이상, 그 외 지역, 미혼, 비경제활동, 중층, 여성)

**2-8.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청년들은 주거 분야 정책 과제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일부는 소득, 연령 등 청년들의 다양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제공되는 주택의 평수가 너무 작아 넓은 공간을 원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긍정)**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 같아요. 주택 공급 확대 내용이나 월세 지원 이런 제도로 봤을 때 주거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부모랑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나 아니면 고시원 반 지하 같은 것이 그래도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 듣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기본 요구 주거지 안정성을 고려한 점을 생각하면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부정)**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더 줘서 정책도 차별적으로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평수가 너무 작은 거를 공급을 하는 것 같아서 혼자 살더라도 솔직히 조금 넓은 곳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쾌적하니까 그런 게 너무 작지 않나.."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2-9.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청년 주거 정책의 세부 내용은 대체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많은 청년이 정책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 월세 지원, 전세 사기 방지 등 다양한 주거 현안을 폭넓게 다루고,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 자산 수준을 고려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이 청년들의 실제 수요에 맞게 구성되었다고 인식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긍정)**

"왜냐하면 언제까지 하고 누구한테 하고 정확히 몇 호수 정도 만들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노후 주택을 매입해서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하고 육하원칙 같은 거를 되게 잘 써놓아서 누가 읽어도 아 이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공급 늘리는 것도 그렇고 대학 기숙사 같은 것도 주택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사회 초년생들한테 맞춰진 정책들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체계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도 그렇고 청약 통장 우대하는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요. 기숙사나 행복주택 이런 걸 해서 주거비 지원해 주시는 전세 사기도 한참 유행인데 그런 부분도 강화해서 권익 보호도 해 주시고."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체계적으로 되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소득 수준이라든지 자산 수준 그런 것도 있고 원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그랬을 때는 그게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이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긍정)

집을 자립한다고 했었을 때 나와서 살았어야 지원이 됐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내가 자립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원이 된다든가."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3) 교육 분야

교육 분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교, 대학, 취업, 등록금, 소득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대학교 및 대학 교육과 관련된 등록금 부담에 민감하며, 교육 정책이 궁극적으로 취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I-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교육)

2-10.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청년들은 교육 분야 정책 과제들이 청년의 필요와 요구에 부분적으로 부합한다고 보았다. 특히,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와 같은 과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책 내용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두드러졌다.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긍정)**

"사실 교육이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이 돼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수능치고 대학교 가서 교육을 꼭 받고 그리고 나서 취업하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고졸 청년 취업 촉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돈이 없어서 실제로 대학 진학을 못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비용적인 분야 부분이나 기회 부분에서는 모두 다 고려한 것 같아요."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부정)**

"모호하게 쓰여 있는 것 같긴 하지요. 핵심 인재 양성 허브 역할 강화 이런 거 되게 모호하잖아요."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온택트 교육이라는 게 코로나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질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는 건 좋은데 대면 교육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2-1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주로 대도시 거주 남성 참여자에게서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등록금 감면 등 소득 수준을 반영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정책이 지나치게 대학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정책 내용이 특정 계층(저소득층)에만 치우쳐 있거나, 사회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를 깨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대도시 외 지역의 여성 참여자들의 지적도 있었다.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긍정)**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소득 계층이 그러니까 사실 지역이나 연령을 가리지 않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대학생한테 등록금 경감이라든지."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부정)**

"저소득층 위주인 것도 같고 교육 분야는 특히 대학 안 가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좋은 대학 안 가면 큰일 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깨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차라리 대학 파트 고졸 파트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이후에 새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파트를 나눠야 하지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대학."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2-1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면담 참가자들은 교육 정책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지 않았다. 이들은 정책이 '윗분들'이나 '공무원들이 위에서 만든' 느낌이 강하며, 청년들의 실제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 내용이 '좋은 말만 쓰여 있고' 모호하여 청년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부정)**

"막상 대학생이나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국가에서 뭔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막 와닿는 정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전반적으로 큰 폭지를 보면 도움은 될 것 같긴 한데 실제 청년들에게 따오는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윗분들이 생각하고 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원격 교육하고 신산업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해서 협업 확대하고 허브 역할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2-13.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 중 대도시 외 지역 거주 여성 참여자들은 교육 분야 정책 과제의 세부 내용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책 내용이 분야별로 나뉘어 있거나, 등록금 경감,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온라인 교육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군 복무 청년, 고졸 청년, 대학생, 직업 학교 학생, 저소득층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의 청년들을 타깃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체계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했다.

반면, 일부 대도시 거주 남성 청년들은 정책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고 느껴지거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나 취업 연계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며, 정책의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보였다.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긍정)**

"구체적으로 등록금 경감이라든가 후 학습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지식 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정책이 잘 수립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우선은 군 복무 청년이라든지 해서 다르잖아요. 타겟층이. 신경을 쓴 게 보여서."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다양한 연령층과 그다음에 기회 제공 그다음에 비용 지원 등 물질적이나 비물질적으로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부정)**

"내용은 조금 모호하긴 하지요.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체계적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민간 협력이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힘들 것 같아서."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미흡한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이해를 봐도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청년들한테 교육해서 어디 대학이랑 지원한다고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4) 복지·문화 분야**

복지·문화 분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계층, 건강, 취약, 자산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 출발 자산 형성 및 건강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에게 정책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I-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복지·문화)

2-1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은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이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회 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즉 금전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청년들은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등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였다.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긍정)

“청년 적금도 잘했고 월급 인상도 잘했고 다 잘한 것 같은데 채무 조정도 제 주변에는 욕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사실은 29살까지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자산 형성이나 재기 지원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1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은둔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도약 계좌나 내일 저축 계좌 이런 거를 통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2-1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복지·문화 분야 정책 과제는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를 전반적으로 잘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복무 남성을 비롯해 청년 예술인,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고립 청년과 장애인 부모를 부양하는 비장애인 가장 등 특정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은 자산 형성 정책이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고려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복 수혜나 지원 대상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특히, 은둔 청년이나 한부모 가구 등은 기존 복지 제도로 이미 지원받고 있어 청년 정책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빈곤 청년'의 기준점이나 '자립'에 대한 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나타났으며, 정책이 연령대나 다른 구체적인 차별점을 두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바쁜 직장인 청년들이 복지·문화 정책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공정)**

“남자들은 군대를 가니까 마이너스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서 났다고 생각하고.”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문화 관련 부분이나 청년 예술인 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건강 관련이라든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정책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 내일 저축 계좌 같은 경우도 다양한 넓은 계층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취약계층을 더 위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술 쪽도 챙기고 이러면서 약간 다양하게 반영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장애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비장애인 가장을 위한 그러한 정책 그러한 뭐 그런 거 서비스 뭐 그런 거 정책 같은 것도 뭐 하더라도요. 그 시기에 있는 여러 가지 차이를 고려해서 반영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장병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자립 준비 청년이라든지 세밀한 대상을 설정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부정)**

“은둔 청년 한 부모 1인 가구는 여차피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자식이니까 만약에 거기서 지원을 받고 여기서 또 받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애매한 게 빈곤 청년 이것 빈곤한지 아닌지 어떻게 기준점이 뭐지요? 그런 거나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청년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청년이 계속 자기 발전을 해서 더 크게 될 사람인데 사업을 망했거나 월 했거나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일어설 수는 있다고 봐요. 자립까지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응답자5,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을 둔다는 내용도 없고 사회 출발 자산도 군대 갔다 온 친구들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다른 구체적인 차별점은 없는 것 같아서 연령대나 다른 차별점을 두어서 만든 것 같진 않습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구인·구직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쪽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2-16.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복지·문화 분야 정책 과제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과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정신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정책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보았다. 적금이나 취약 계층 지원 정책들이 기존의 것과 유사하다고 느꼈고, 일부는 예술가와 창작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했다.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긍정)**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이나 인턴십이 지금 나이대에 하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요. 적절히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가구를 위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신 건강 부분도 정신적으로 많이 약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관리 같은 것도 해주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시설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반영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요새 진짜 정신이 아픈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제 질적인 면에서 약간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해주고 진짜 개인이 힘든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든 거니까.”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부정)**

“적금 같은 건 원래 있었던 것이고 취약 지원도 원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청년들이 건강을 위해서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도 예술가와 창작자에게도 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도움이 되는 것도 예술가와 창작자에게나 도움이 되지 기본적인 일반 청년들에게는.”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현실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청년이 봤을 때는.”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2-17.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복지·문화 정책의 세부 내용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인식을 주었다. 자산 형성, 취약 계층 지원, 정신 건강 관리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잘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정책이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을 지원하고 물질적, 정신적 사각지대까지 고려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문화’ 분야 정책의 체계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과 같은 정책이 일반 청년의 문화 소비나 여가 생활 지원보다는 예술인이나 문화 창작자 등 특정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화 정책이 사실상 ‘일자리 정책’처럼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건강 증진’ 분야가 신체 건강보다는 정신 건강 상담에만 집중되어 있어, 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긍정)**

“건강 증진이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아마 조금 지치지 말라고 하는 정책 같은데 이것도 필요하지는 않나.”

(응답자5,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사회적 자산이라든지 취약계층 건강 문화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잘 나눠서 할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나눠서 지원해 주는 점과 물질적인 취약 계층뿐만 아니고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부정)**

“상담 이런 거에만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 상담에 중점이 맞춰져서.”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문화라는 게 결론은 돈인데 그것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고 일반적인 많은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쪽으로 지원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일반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예비 예술인이나 청년 예술인같이 예술 쪽을 직업으로 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이면 청년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들은 예술인들에 한한 지원들이 아닌가? 이것은 문화 분야가 아니라 일자리 파트 부분의 예술인 종사자에 대한 내용이지 않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 (5) 참여·권리 분야

참여·권리 분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 교류, 결정, 제도, 구성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 참여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는 제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제도 구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소수에게만 유리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정책이 청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타났다.



그림 VI-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참여·권리)

### 2-18.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참여·권리 분야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인식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도성을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효과나 인지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청년 참여위원회' 같은 제도의 홍보가 부족하고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는 정책이 너무 멀게 느껴져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으며, 청년 참여가 특정 정치적 편향을 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긍정)**

“일단 국제 교류 이런 게 청년이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정책 결정을 할 때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소속감도 들고 그리고 필요한 걸 진짜로 여기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하나. 진짜 필요한 걸 여기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요구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직 활동에 제한되는 법령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참여위원회 이런 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특히 청년 주도성 확대하는 거나 아니면 기반 마련하면서 분석하겠다 이런 건 그래도 청년들이 원하던 방향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경우가 힘든데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부정)**

“실제로 도움이 많이 안 됐을 것 같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진짜로 하고 있으면 그래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예 모르고 있었다 보니.”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정치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 보기도 하고 해서 그 정당에 맞는 사람, 아니면 당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청년들을 대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편향된 것들이 있는 걸 제가 봐서 별로라고 생각해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그런데 필요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런 게 어렵고 정책이라는 말이 멀게 느껴져서 저랑 가까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긴 한데 이걸 실제로 내가 했을 때 진짜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2-19.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일부 청년들은 정책이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고 직접 참여를 유도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상당수의 청년들은 정책이 형식적이거나 특정 계층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긍정)**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청년이면 참여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교류 활성화 이런 내용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평등하게 고로 고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부정)**

“중앙 시도위원회를 청년 참여위원회로 지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아무래도 청년들이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는 비중이 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조금 대표해서 이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건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 고르게 이런 구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 들고.”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2-20.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일부 청년들은 정책 내용 자체가 청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며, 청년들이 흔히 겪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청년들은 정책이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실질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긍정)**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봤을 때는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고민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이런 기관들이 잘해서 나온 거 아닐까.”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금융이나 주거 이쪽에 대해서 요즘 사기도 많고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상담과 교육을 받고 또 국제와의 교류 같은 거를 조금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보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부정)**

“근본적으로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다들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느낌의 참여보다는 더 가벼운 느낌의 참여 위주로 일단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연구해서 나온 것이고 사회적으로 드러난 문제들만 보고 정책을 수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여주기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그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 중 하나를 담은 느낌인 것 같아서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2-2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일부 청년들은 정책 내용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구체적이며 단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어 체계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청년들은 정책의 체계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는 정책 내용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이나 '각오'처럼 느껴지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정책이 보편적인 청년들의 현실적인 배경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거나 정치 관련 업종에 관심 있는 '소수의 청년들'에게만 참여가 편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표성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긍정)
<p>“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추진 마련하고 내실화를 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한다는 점에서 내용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p> <p>(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p> <p>“내용을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p> <p>(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p>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부정)
<p>“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서요. 체계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할 테니까 너네 참여해줘 약간 이런 느낌.”</p> <p>(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p> <p>“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정치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꿈나무들.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편향돼서 몰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p> <p>(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p> <p>“보편적인 청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만 참여하고 참여를 원하는 그런 과제들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청년들을 대표하긴 하겠지만. 대표성이 떨어질 거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p> <p>(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p>

(1) 일자리 분야

그림 VI-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일자리)

### 3-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대다수의 청년은 일자리 정책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공정 채용 및 직장 문화 개선의 미흡, 그리고 일터 안전망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정책이 기업이나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일부 청년들은 청년 창업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전반적인 일자리 확대나 질 개선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한, 거시적 통계 지표(실업률)만을 볼 때는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정책의 효과를 아직 체감하지 못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긍정)

“제가 시장에 가면 청년 창업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판다거나 그런 걸 보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어쨌거나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실업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거시적인 지표만 봐서는 달성을 완벽하게는 안 해도 하고는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요?”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부정)

“직장 문화 개선은 정책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한 10% 정도 달성됐을 것 같네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가 확대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 같고요. 창업도 다들 안 하고 농담 삼아 치킨집이나 해야지! 이런 소리 할 정도로, 일터 안전망도 자꾸 산업재해들도 늘어나니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일자리 지원을 더 늘리든지 티옴을 늘리던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채용 비리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 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부정)**

“직원들한테 더 못 해주는 것도 있기도 하고 열악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아직도 중소기업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취업하고 재직하는 것보다 아직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직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도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통계에서도 나오듯이 유리 천장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 이런 것들 최저시급도 못 받는 것도 많다든지. 또 공정 채용 기반도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회 관례상.”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3-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정책의 방향성이나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미흡하다고 보였다. 많은 응답자들이 정책 자체의 필요성이나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이나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확대나 근로 여건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열악한 근로 여건이나 최저 시급 미달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부정)**

“정책적인 방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구를 충족하려면 실감을 해야 하잖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일단 일자리 확대가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많아서.”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요구는 맞는 것 같은데 충족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일단 청년 일자리 확대도 딱히 딱 느껴지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근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전하고.”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 3-3.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근로 여건 개선 등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긍정)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일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고 포기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제조업 일자리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잘 조합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좋게 느끼게끔 포장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청년 실업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10%라도 효과를 발휘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가장 청년들한테 기본이 되는 게 일자리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차라리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차라리 이런 청년 일자리 확대나 역량 이쪽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든지.”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더 확대되고 더 세밀하게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신했다 그러면 승진 누락이라든지 불이익이 가더라고요.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3-4.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주기적 환류 체계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4대 보험, 수당, 연차 등 기본적인 근로 기준이 준수되는지 정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직장 문화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아가 채용 비리나 복지 혜택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취업 후에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후 관리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 임금 상승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조사를 해서 힘든 사람은 없는지 현재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이 맞춰서 오르고 있는가. 뭐 이것이겠지요. 그게 안 되면 계속 편의점 도시락만 먹는 삶이 되는 거지요.”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사실 이미 대기업 관련 환경은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처지나 아니면 직장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안전망 강화 같은 건 통계로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하면서 분석도 하고 혹시 채용 비리 같은 것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 작은 부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회사가 똑바로 안 해서 노무사를 찾아가는 그것보다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정부 구청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싹 검사.”

(응답자5,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일자리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하되 주기적으로 현황 파악을 자주 해서 문제점을 즉각 개발해서 해결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까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사후 관리식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걸 파악해야지 연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실업급여나 낭비되는 부분이. 부정 수급은 아닌데 그런 기준들에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예. 차라리.”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채용 비리 신고 체계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다발성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3-5.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자산 형성, 구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성 참여자들의 평가가 있었다. 특히,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과거에 비해 일자리 고민이 줄어든 것 같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남성 참여자들의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었다. 일부 청년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특정 정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퇴사를 유발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긍정)**

“예전보다는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긴 많지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그다음에 다양한 구직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부정)**

“월급이 3000이 안 되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관두고 쉬다가 다시 비슷한 업종 취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사실 청년 지원 정책 중에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저는 주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 지원. 그런 부분은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재정적 소상공인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부정)

관련 지원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어쩔 수 없이 90%는 폐업을 하게 되니까 그 지원을 받아서 자기 빚을 같이 얹어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나라에도 빚이 되고 본인한테도 빚이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 (2) 주거 분야

주거 분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택 문제 및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의 기여가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혜택이 전체 청년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고 특정 소득 분위에 한정된다는 인식이 강하며, 대출 지원 등 금전적 도움은 있으나 결혼 등 장기적인 주거 계획까지 포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이 일부 수혜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더 넓은 범위의 청년 주거 불안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I-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주거)



### 3-6.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기숙사 확충의 어려움이 나 최근 전세 사기 문제 같은 현실적 난관이 언급되었고, 저렴한 주택이라도 관리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안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부정)

"기숙사도 여전히 주민들 반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전세 사기 요즘에 난리 났는데 그동안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열악한 주거에 대한 개선들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져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사실 수요는 많은데 모두에게 줄 수 없잖아요. 사실 상당히 일차적인 지원이잖아요. 돈을 주고 주택을 공급하고 기본적으로는 집값이나 그런 문제를 잡아야 하는 건데."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우대 조건이 청년이 이루기가 너무 힘들고 기숙사를 확충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사례를 언론에서 많이 들었고요."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언론에서 청년 주택이 저렴해서 들어갔더니 나중에 관리비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이 더 많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3-7.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청년 주거 정책은 청년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켰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랐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책의 혜택을 직접 경험한 청년들은 주거 정책이 일상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청년 특화 주택이나 지역 학사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정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책이 단기적인 금전 지원에 그치고, 서울 등 수도권의 높은 주택 가격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긍정)**

"애초에 집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일단 기반을 다져준다고 해야 하나."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경상남도 학사를 살고 있는데 서울 대학을 진학한 경상남도에서 온 학생들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밥도 지원해 주고 시설도 헬스장이나 공부하는 데가 특히 잘 돼 있고 세탁이나 이런 것도 부족함 없이 다 잘 돼 있고 위치도 괜찮아서."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 특화 주택이 은근히 괜찮던데 깨끗하고, 제 고시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부정)**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이고 평생 일해도 집 못 산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거적인 면에서 낙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낙담을 안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사실 청년주택에서 산다고 해도 서울에서 거기서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해도 집을 사는 거는 많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장기적인 개선보다는 단기성으로 돈으로 해결하고 끝내는 느낌이라 크게 개선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면 될 것 같은."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사람들도 될까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고 했었으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3-8.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청년들은 주거 안정이야말로 삶의 기본적인 토대이며, 사회 진출, 자립, 결혼 및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므로 주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의식주 중 '주(住)'가 해결되어야 삶이 안정되고 다른 정책들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주거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긍정)**

"그래도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인데 들어가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상당히 잘했다."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주거가 안정돼야지 삶이 안정됐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현재 부동산이 너무 좀 과밀화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안 좋은 주거로 몰리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독립을 못하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정책들이 늘어나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지원을 해주면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서 자리 잡는 데 많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저는 일자리 분야랑 주거 분야가 제일 뒷받침이 돼야 나머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먹는 데 문제가 없어야 나머지 정책들이 가능할 거예요."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계속 회사에 다녀야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있어서. 지금 솔직히 쉬고 싶은데 쉬지는 못하거든요."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취업 문제에 대한 문제도 같이 더 시너지 효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3-9.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청년들은 주거 정책이 부정행위와 오남용을 막고 공정한 혜택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및 허위 매물 단속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정말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도를 악용하여 지원받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거 환경의 질 확보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열악한 거주지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고시원이나 반지하처럼 너무 좁은 공간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저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 용도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주거적으로 허위 매물 단속 같은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나이에 겪었을 때 제일 큰 그런 제일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세 사기."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 전월세 비용 이런 거를 지원을 할 때 부모님 재산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열악한 거주지나 불법 건축물 아니면 전세 사기 허위 매물 이런 게 단속이 안 되는 느낌이라 이런 것에 대한 법도 강화하면 좋겠고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한 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다음번에 차별점을 둔다거나 해서 공정하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된 사람 또 해주고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저소득 청년들 위주로 많이 지원해주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특히 고시원이나 반지하 같은 경우 중에 진짜 좁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은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저금리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 전월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지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아무래도 혜택이 한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도가 있으면 또 악용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 3-10.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청년 주거 정책은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정책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이 주로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다. 전세자금 대출의 저렴한 금리, 월세 지원, 청년 주택 제공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청년 특화 주택은 일반 고시원이나 반지하보다 질적으로 우수하여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책이 청년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도 제기되었다. 월세 지원과 같은 일시적인 경제적 도움은 있었지만, 고시원이나 반지하와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 자체는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긍정)

"기숙사로 주거만 받은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학업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월세와 고시원 반지하의 질보다 청년 특화 주택의 질이 거의 한 2배 높다."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요즘 집 걱정하는 청년들이 많이 준 것 같아서 정책이 궁극적으로 현재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살 수 있는 집도 주고 전세 월세 부담하기 위해서 싸게 나오긴 하잖아요. 청년 주택도 있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이면 본인이 독립해 나가는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본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저렴하니까 부담이 없어서 도움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부정)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은 줄어들었는데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열악한 주거 환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시원, 반지하가 많고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아예 집을 살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나 집주인들이 너무 많은 월세 같은 걸 요구하면 어려워지니까 해결이 궁극적으로 되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사람이 너무 한정적인 점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3) 교육 분야

교육 분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 대학, 인재, 등록금, 학생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대학 교육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들은 정책이 실질적인 인재 양성과 다양한 전공 분야의 취업 연계에 충분히 효과적이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VI-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교육)

### 3-1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청년정책의 교육 분야는 부분적으로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제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했다. 일부 청년들은 정책을 통해 고른 교육 기회가 보장되고, 등록금 문제 해결이나 전문대학 활성화 등 특정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책 지원을 직접 경험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더 많았다. 청년들은 미래 역량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 부족을 지적했으며, 높은 등록금과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여전하다고 보았다. 특히, 상위 계층의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긍정)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은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미래 역량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다."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와 그런 것이 또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대학 활성화, 직업 교육 혁신지구 전문대학 활성화 경우는 4년제 대학보다 선호가 높아지는 걸 통계에서 많이 봐서 실제로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부정)

"고졸 청년 취업 촉진 이런 내용도 사실 너무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정책적 부분에서는 크게 써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된 것 같진 않거든요. 고용 기반이 강화됐을 것 같진 않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고른 교육 기회라고 하면 저소득층과 일반 학생들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상위 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유학도 많이 가는데 일반 학생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유학을 굳이 안 가도 되는 환경을 만들거나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3-1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의 실질적인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이러한 정책이 오래된 문제의 반복으로 느껴져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부정)**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다 취업을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서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라는 점이 실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옛날부터 하던 얘기들이 계속 이어진 것 같은데 그게 한 번도 좋아졌다고 체감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내일 배움 카드로 배울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커서 더 지원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3-13.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청년들은 교육 정책이 사회 진출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돕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공학 및 연구·개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긍정)**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방법을 바꿔야 하고 재미 흥미를 유도할 수 있게.”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많이 뺏기기는 했지만, 공학 인재 연구·개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외대만 가겠다고 해서는 그런 인재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깐.”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긍정)**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집에서 혼자 언택트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홍보가 충분히 되고 실현만 된다면 공부할 의지가 있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가이드가 많이 됩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느낌이에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 나가야 한다고 하면 일자리나 주거가 급선무인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역량이 있거나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나서 본인이 준비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시간적 제약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3-14.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청년들은 교육 정책이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가 공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학과 기업 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육 내용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이수 후 실제 취업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아울러, 교육 정책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책 지원이 형식적인 투자가 아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추적해

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교육기관이 출석 체크에만 집중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해도나 성취도를 평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산업 수요 반영)**

"진로 프로그램들을 청강하는 게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들이 필요한 인재들이 잘 수급되고 있는지를 HR 디파트먼트나 아니면 기획팀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랑 호흡을 잘 맞춰서 해야 하는 거지요."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대학들이 기업과 연계하거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대학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지속적인 관리 감독)**

"대학교 학생들 보면 본인이 원해서 전공을 온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너무 대학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평생교육이 연장되려면 제대로 투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민간 기관 중에서 출석 체크만 하고 진짜 학생이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취도 평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3-15.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청년들은 교육 정책이 주로 등록금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학자금 대출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청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도왔으며,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대학 미진학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다.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연계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등록금 경감을 제외하고는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과도한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청년들은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긍정)**

"등록금이라든지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충족이 된 것 같았다."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학자금 대출 이 건 저도 받았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았고."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등록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포기하고 바로 현장에 뛰어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더 해보실 수도 있고."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경제적인 지원이나 일자리 연계나. 마음 놓고 배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삶의 질이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되었다."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부정)**

"등록금 경감이나 이런 걸 당연히 받은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삶의 질에 개선이 됐을 것 같지 않았다."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있었던 정책인데 진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았다. 궁극적인 문제는 경쟁이 과열돼 있다는 것 같은데 교육 분야에서조차 고민을 안 하는 느낌이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았다."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부정)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은."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교육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네. 정도만 생각되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4) 복지·문화 분야

복지·문화 분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 적금, 취약계층, 과제, 증진, 사회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금을 통한 사회 출발 자산 형성 및 건강 증진과 같은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한다고 인식되는 반면, 취약계층을 위한 과제들은 혜택의 범위가 한정적이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전체 청년 계층에 대한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즉, 일부 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광범위한 청년층에게 보편적인 혜택과 체감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I-10.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복지·문화)

### 3-16.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청년들은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가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 적금, 군 적금, 청년 도약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과 청년 건강 증진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모든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특정 계층에 한정된 정책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내용이 달라지는 등 지속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긍정)

“사회 출발 자산 형성 군 적금이란 청년 적금 잘 만들었고 청년 건강 증진도 상담 같은 거 많이 만든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청년 취약계층 지원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제 주변에 요리 만들기 1인 가구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시행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 도약 계좌랑 저금리 대출이나 생활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지원받은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병사 봉급 인상,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도약 이런 거는 다들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약 계좌 같은 경우도 부모님의 소득이나 가구 소득 같은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주거보다는 기준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에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 건강 증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상담을 받아본다든가 이런 게 인식이 관철아졌다고 받아들여지고.”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병사 봉급 인상,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런 거는 군인이면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부정)

“정부 바뀔 때마다 적금 내용도 달라져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저금리 대출도 기본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금리를 깎아줘 봤자 잘 안 느껴지고.”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부정)**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이라는 것이 아직도 지원을 많이 못 받고 그다음에 너무 한정적이라는 게 좀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3-17.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청년들은 복지·문화 분야 정책이 청년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켰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은 자산 형성 정책은 큰 도움이 되었고, 건강 증진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와 체육시설 공급과 같은 정책은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돕는다고 언급되었다.

하지만 건강 정책은 젊은 청년들에게 외당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산 형성 정책은 기존 정책의 명칭만 바뀐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부 문화 정책은 예술 분야 종사자 등 특정인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공감대가 부족했고, 이는 정책 효과를 제한했다고 분석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긍정)**

“건강 증진도 청년들이 맞춤형 신체 건강 서비스 체육시설 공급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내용이고 자산 형성을 제일 필요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하는 것 같다.”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도약 계좌라든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목을 끌었던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내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계속 인지를 받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인센티브 같은 걸 주려고 한다는 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건강과 자산 형성 그다음에 물질적인 지원과 비물질적인 지원이 같이 연관되어서 청년들의 요구 사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부정)**

"일반적인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그나마 적금이나 건강 정도인데 그 나이에 건강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진 않으니까 안 와닿고 적금이야 이름만 바꿨지 항상 있어왔던 거니까."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도 예술 쪽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것 같아서 특정인을 노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3-18.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청년들은 복지·문화 정책은 사회 출발점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특히, 청년들이 사회 초년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산 형성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긍정)**

"사회 초년생들이 기본적인 시작이 달라질 것 같아서. 신체 건강, 건강 증진 이야기라든지 뭐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런 내용은 지속적으로 돼야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취약계층 지원도 좀 더 있어야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회 출발 자산 이런 건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 마련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3-19.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여성 청년들은 복지·문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청년이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남성 청년들로부터 실질적인 수혜 여부와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취약계층이나 예술가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청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원금의 경우,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용 내역 확인이나 증빙 자료 제출과 같은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p><b>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홍보 강화 필요)</b></p> <p>“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한데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홍보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p> <p>(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p> <p>“정책을 추진하되 홍보도 해서 일반 청년들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p> <p>(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p>
<p><b>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관리)</b></p> <p>“예술가 창작자 지원이 올바르게 잘 지원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p> <p>(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p> <p>“예술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면 성과 같은 게 있고 뭘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나요?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사용이 될 수도 있고.”</p> <p>(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p> <p>“명목에 맞게 쓰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p> <p>(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p>

### 3-20.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복지·문화 분야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금전적 지원 및 자산 형성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주로 30대 청년들은 병사 봉급, 청년 계좌, 내일 저축 계좌와 같은 정책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지원은 월세나 전세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보았다.



또한, 20대 후반의 청년들로부터 건강 및 정신 건강 증진과 관련된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의료비 지원이나 정신 건강 상담, 중독 예방 프로그램 등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금전적 지원 및 자산 형성)
<p>"병사 봉급만 해도 2천만 원 들고 시작하니까."</p> <p>(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p> <p>"내일 저축 계좌라든지 경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p> <p>(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p> <p>"경기 청년 계좌 같은 거를 예전에 했었는데 목돈을 만들었던 거를 바탕으로 전세 자금도 하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p> <p>(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p>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건강 및 정신 건강 증진)
<p>"건강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p> <p>(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p> <p>"자산 형성을 할 수 여러 가지 적금을 운영해 주시기도 하고 의료비 지원이나 정신 건강 관련해서 상담이나 중독 예방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p> <p>(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p>

### (5) 참여·권리 분야

참여·권리 분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달성, 대표, 필요, 공유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 대표성(특히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정책 내용과 성과가 청년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체감 효과가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VI-1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참여·권리)

### 3-2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청년정책 중 참여·권리 분야는 목표 달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인지도 부족, 형식적인 참여,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 부재를 지적했다.

정책 자체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부족해 참여 인원이 적고, 정책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실제 시행 여부가 의문시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청년 정책 담당자들이 여전히 기득권층이어서 정책이 행정적인 요소들만 다루고 실제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있었다. 중요한 정책 참여가 청년이 아닌 다른 연령층에 의해 주도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질적인 영향력 또한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정책 인지도 및 관심 부족)

"청년 정책을 알고 있는 청년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실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형식적인 참여 및 목소리 미반영)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형식적인 참여 및 목소리 미반영)**

"실제로 달성이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달성이 된다는 것은 청년들한테 와 달아야 하는 건데 사실 뭐 구직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지도 않고 위원회 구성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됐다. 이라고 끝났을 것 같고 거버넌스도 해봤으니까 됐다 이라고 형식적으로만 채웠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 참여 권리 분야는 목표가 원래 다양한 처지, 다양한 성별 다양한 처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자기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자리인데, 여전히 중요한 참여는 청년이 아닌 다른 연령층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사실 청년 친화 도시라는 게 진짜 뭔지 모르겠고 지역 청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미가 약간 너무 불명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이런 거에서 어떤 거를 지원을 해주고 월 생각을 해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3-2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청년정책의 참여·권리 분야는 청년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책이 '위에서 연구해서 나오는' 느낌이 강하고, 실제 시행 여부나 실적을 알기 어려워 요구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정책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말할 기회는 주어 지지만 실제 정책 반영은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소수의 긍정적 의견도 존재했다. 일부 청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주거 정책 등 현실성 있는 일부 정책들은 잘 마련되었다고 보았으며, 노동·금융·주거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교육은 특정 청년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요구를 충족시켰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부정)**

"요구를 드렸던 적도 없는 것 같고 위에서 연구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냥 들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아닌 것 같아요."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애초에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충족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만 제공하지 실질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건 적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진짜 정치 쪽으로 뜻이 있는 청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긍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하는 거니까. 요구를 제일 많이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주거 정책 같은 게 되게 현실성 있게 잘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제한적으로는 충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의 노동 금융 주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충족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제한적으로는 충족했을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3-2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청년정책 중 참여·권리 분야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단순히 지속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과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공통 의견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긍정적인 청년들은 현재 낮은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청년 대표를 통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책의 세부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위원회 구성 시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쿼터 적용과 같이 현실에 와닿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과 특정 지역 청년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정책의 세밀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정책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뻔한 말'처럼 보인다는 비판도 있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감과 함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실적 공유를 통해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긍정)

“그래야 무슨 목소리를 내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관찰해야 하니까.”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참여 권리는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양한 연령대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대표해서 정책 과정 참여 단계에서 청년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내세우면 제도가 개선되고 많은 청년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개선 필요)

“도움이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특히 위원회 같은 것도 청년들 나이나 성별로 쿼터를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게 좀 보였으면 좋겠고 청년 친화 도시 이런 건 솔직히 굳이 싶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더 현실에 와닿는 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추진은 하되 주기적으로 실적을 공유해서 청년들에게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적들을 공유하고 참여도도 높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개선 필요)**

“과연 어느 정도나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줄지를 모르니까 그냥 소구에 경 읽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3-2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청년들은 참여·권리 분야 정책이 잘 운영되려면 참여 주체와 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대표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자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단'이나 '참관인'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회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특정 계층의 청년이 정책을 주도하지 않도록 무작위 방식을 활용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되었다.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정책 참여 주체 및 과정의 평가와 모니터링)**

"평가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 기준표 같은 걸로."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무슨 얘기들을 하고 이것을 모니터링단 같이 청년 몇 명이 지원해서 볼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표성을 잘 지녔는지 정도. 그걸 점검하고 거버넌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현실성 대표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특정 계층 청년이 너무 주도하지 않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적절히 무작위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3-2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일부 응답자들은 정책 추진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나, 다른 응답자들은 정책의 체감 부족, 삶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부재, 또는 정책 자체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회의적이거나 그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긍정)

“청년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청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이 참여 의견을 많이 내서 다양한 복지 제도나 정책이 언급되고,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 정책 같은 게 입법된다면,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기성세대들이 못 느끼는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응답자11,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부정)

“어느 정도 불합리한 법령이 개정되고, 이를 통해 조금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삶의 질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애초에 이런 정책이 잘 실행됐다는 게 별로 체감이 안 돼서, 궁극적으로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지금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책 전체가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청년 참여에 관한 내용은 많은데, 정작 권익 보호 같은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의 삶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 졸업하고 취업 사이 단계가 특히 위축되고 외로워지는 시기라서, 이때 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이때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하고 방에만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틈을 타서 사이비 같은 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정책의 일반적 이해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 적금, 결혼, 나이, 사회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정책을 통해 취업 성공 및 적금과 같은 자산 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핵심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는 정책 수혜의 한계와 결혼 등 삶의 주요 전환점에서 겪는 주거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Chapter 6.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의한 청년정책 질적 진단 | 243



### 1)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낮은 편이었다. 많은 응답자가 청년정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아는 정책과 실제 혜택을 받은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 (적금, 대출, 월세 지원) 또는 취업 지원 (면접 수당, 구직 활동 프로그램) 분야에 집중되었다.

청년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홍보가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다. 정부의 홍보보다는, 유튜브나 SNS 등 사적인 경로를 통해 정책을 알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일반 청년들의 청년 정책 인지도는 낮을 것이라고 대다수가 생각했다.

청년정책이 자신의 삶에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있었으나 정책이 비슷비슷하고 한정적이며,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저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홍보 효과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재테크나 다른 데 관심 있다 보면 유튜브나 SNS에서 들은 내용들이지, 정책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접할 기회가 없어요.”  
(응답자5,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저는 복지 쪽에서 일하다 보니 청년 대상 정책이 필요할 때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어디서 보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고인지)

“관참은 제도가 되게 많은데 제가 직접 누리는 건 별로 없어요. 주변에 받는 사람들 보면 정말 좋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서 ‘여기가 진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경제 관련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돈 자체니까요.”  
(응답자2, 30대/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 월세 지원이나 청년 희망 저축 계좌, 취업 수당, 교육비 바우처 같은 것도 많이 있는

###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고인지)

걸로 알고 있어요. 월세 지원은 수도권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지방이나 광역시에서는 원래 월세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도약 계좌나 도약 적금, 행복주택, 중소기업 관련 지원 같은 건 알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해주고, 취업 상태에서 자기 계발을 하거나 더 좋은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응답자 대부분이 5개년 계획 자체의 존재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동의했다. 이러한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으며, 특히 경제적 지원, 취업 및 구직 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필요성 공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변하니까 그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 주변에 아마 거의 다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5개년 정책으로 청년 정책을 한다는 걸 추진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신경을 써준다는 이야기니까.”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장기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마주한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계기나 동기, 원동력이 되어 줘서 이런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청년들이 취업도 잘 안되고 경제도 안 좋고 이러니까 살기가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정책이 좀 나와야지 좀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필요성 공감)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경제적으로도 지원되고 훈련이나 도움 같은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처음에 사회생활 하는 시기에 자리를 잘 못 잡는 사람들도 있고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정책들로 시작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 3) 청년기본법에 대한 이해

청년들은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였다.

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 청년기본법에 대한 이해(필요성 공감)

"청년들에게 가이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응답자6,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청년기본법이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지 뭔가 기준 같은 것도 있고."

(응답자7, 20대 후반/대학원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이 사회에 진출해서 미래세대로 일을 계속할 세대들인데 고용 쪽이나 주거나 그쪽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법으로 제도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모든 정책은 법을 중심으로 나오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4)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

일부 응답자들은 주거 지원금, 기숙사 지원금, 청년 도약 계좌 등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응답자들은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긍정)

"주변 친구들 보면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원금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 같은 경우도 엄청 싸고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응답자1,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정책적으로 월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응답자3, 20대 후반/대재 이상/대도시/경제활동/중층/남성)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결혼하려면 이런 정책마저라도 있어야지 하지 않을까."

(응답자5, 30대/고졸/대도시/경제활동/중하층/남성)

#####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부정)

"연금 개혁 문제도 기성세대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기도 하고 선거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이런 것 해줄게! 하고 그렇게 잘 지켜지는 사례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응답자4, 20대 초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비경제활동/중층/여성)

"최근에서야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사람이 죽고 청년들 각박하게 살다가 죽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증가는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느껴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9, 30대/대학원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층/여성)

"중소기업 청년들한테 5년 동안 근무를 하면 목돈 모아서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산업 군을 제한하고 아마 그런 게 계속 없어지고 되게 제한적으로 되는 게 그런 게 많이 노력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응답자8, 30대/고졸/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다양한 정책들이 SNS 방송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회성이 더 많아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부정)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정책 이름은 모르겠는데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4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정적이고 짧은 기간에 딱 네 번 주는 걸로 해서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응답자10, 20대 후반/대재 이상/그 외 지역/경제활동/중하층/여성)

## 4. 질적 진단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질적 진단결과 요약

####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청년들은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립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격차 및 기회 불평등 심화'에 대한 환경 분석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정책 수립 배경이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거나, 코로나 19와 같은 특정 원인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청년들은 5대 중점 분야 설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일자리와 주거 분야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정책 과제들이 청년들의 '기초 자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세부 내용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다양한 직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성 응답자들은 다양성이 고려된다고 느낀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나 특정 전공의 취업 어려움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비용 경감 등의 정책 과제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허위 매물 단속이나 전세 사기 예방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거 취약 청년'의 모호한 기준이나 부모 배경에 따른 혜택 제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와 같은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었으나, 정책 내용이 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정책이 지나치게 대학 중심적이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깨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 도약 계좌, 내일 저축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정책이 군 복무 남성, 청년 예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특정 정책의 경우 중복 지원이나 지원 대상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청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도성을 확대하는 것에 중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청년 참여위원회' 같은 제도의 홍보 부족과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으며, 정책 참여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수에게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공정 채용 및 직장 문화 개선의 미흡을 주요 문제로 언급했다.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미흡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현황 파악과 채용 비리 감시 등 질 관리 및 개선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거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 정책 만으로는 집값 안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책의 혜택이 특정 소득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이나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등록금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았으나, 과도한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과 일자리의 실질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청년 적금, 군 적금, 청년 도약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화' 분야 정책이 일반 청년보다는 예술가 등 특정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년들은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정책의 인지도가 낮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대표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4) 청년정책에 대한 일반적 이해

청년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정책 정보를 주로 유튜브나 SNS를 통해 알게 되며, 자신이 아는 정책은 주로 적금, 대출, 월세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기본법'의 존재를 모른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자체에는 필요성을 공감했다.

일부 청년들은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 2) 질적 진단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청년정책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청년정책이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핵심 분야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나 정책에 대한 접근성, 정책 대상의 대표성, 그리고 청년들의 다양성에 대한 대응 혹은 반영, 무엇보다 청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정책 참여 통로 홍보 측면의 한계 역시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 체감도 및 실효성 강화이다.

이른바 있으나 체감 못하는 정책 구조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일자리·주거·교육 등 실질적이고 '생활에서 당장 도움이 되는' 정책의 성과를 수혜자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밝히고, 정책 체감률 조사·공개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 지원에서 기회의 질적 개선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 시급한 정책 대상을 위한 단기적·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직장문화·주거 환경(평수, 위치, 관리비 등) 등 ‘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프리랜서·문과 등 다양한 계층의 현실을 정책별 세부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노동 분야 전반의 체질과 환경의 개선, 주거 환경을 포함한 생활 환경의 개선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적 비전과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책 참여와 목표의 대표성 및 다양성 확대이다.

정책 참여 청년층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청년 집단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청년층 내부의 구성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청년 정책이 상정한 ‘청년’은 갈수록 청년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연령대별, 거주지역별, 생애주기 혹은 직업이나 진로 경로에 따라 청년들의 현황과 정책 수요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참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청년들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운영 과정에 다양한 성별, 지역, 학력, 소득계층의 청년 목소리를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 참여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성·연령·사회경제적 쿼터를 도입하고, 구성원의 무작위 선정 및 주기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정 계층 중심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교육 분야가 대표적이다.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된 한정적 지원을 넘어, 부모 소득·지역·신분 등 이중 기준의 사각지대를 실시간 점검하여 정책 대상 기준을 유연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 분야의 보편적 혜택 확대 역시 요구된다. 예술·창작자 등 특정 소수 중심의 지원을 ‘일반 청년’ 생활 문화·여가 접근성, 심신 건강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폭넓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효 중심의 정책 환류·감시 제도화이다.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채용비리, 정책 부정 수급, 실거주 실태 등 환류·관리가 절실한 분야에 부당·불공정 사례 신고 및 정부/민간 조사 체계를 정례화하고, 정책별 환류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지원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산업·현장 맞춤형 정책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 정책은 산업계 수요 반영, 취업 현장 연계, 실무 중심 프로그램 평가 등 산업 변화에 맞는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책 환류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 정책 참여의 실질성 개선을 위해서 청년 참여 정책은 형식적 논의가 아니라 실제 청년의 말이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결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참여 청년 대표성의 확대와 모니터링단·청년 참관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정책 홍보와 정보접근 경로의 혁신이다.

유튜브·SNS 등 ‘청년 동선’에 맞는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정책에 관한 정보가 ‘정부 공공기관 사이트’에 머무른 상태로 청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청년들의 일상적 정보 채널(유튜브, SNS, 대학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를 통해 실질적 홍보와 빠른 안내를 하는 찾아가는 적극적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 이용 채널의 통합 제공이 필요하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관심 있거나 필요한 정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어·상황별 맞춤 정책 간편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현행 원스톱지원 채널을 인공지능 검색과 연계한 일괄 신청, 챗봇·상담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책을 이용하기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기 보다는 매뉴얼이 필요없이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발전 방향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편적·장기적 정책 신뢰성 확립이다.

정책은 이루어질 때 만큼이나 중단될 때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청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주로 지원 탈락 혹은 정책의 돌발적 중단의 경험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제도화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느끼기에 ‘한시적, 선거용’ 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믿을 수 있는 청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 5개년 계획·청년기본법 등 지속적 정책의 법적 근거들을 알리고, 불가피한 정책 변경이나 중단 시에는 사전 안내나 합리적 이행에 주의해야 한다.

주기적 정책 진단 및 청년 의견수렴도 중요하다. 온라인 설문조사, 면담 등을 정례화하여 정책의 효과 및 불만에 대한 의견 수렴 뿐만 아니라 정책제안, 정책 전환·보완 시 청년 의견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그간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알고 있는 청년정책도 자신이 수혜 대상자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정책과 세부 지원사업들의 정책수요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제7장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청년의 요구 조사

- 1.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요구
- 2. 요구조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요구<sup>38)</sup>

### 1) 기본 배경

(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배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배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구 구조 변화(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 반영’ 응답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수도권 지역 격차 및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청년 육성 정책 필요성’(59.9%),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청년 역량 강화 필요성’(58.1%), ‘청년의 정신건강, 고립, 고독 등 사회적 위험 요인 대응 필요성’(56.4%), ‘기후 위기,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청년의 역할 및 대응 기반 마련’(33.9%), ‘청년 세대 내 다양성(장애, 성별, 가족 형태 등)에 대한 포용적 접근 강조’(31.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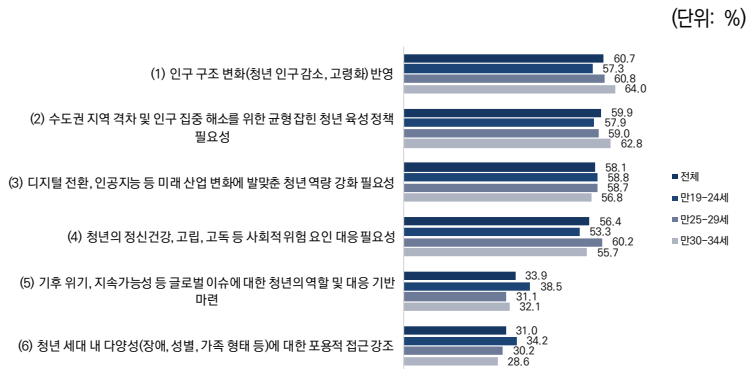


그림 VII-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배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37)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38) 본 요구 조사의 모집단 및 조사 설계는 본 보고서 5장의 조사개요 참조(p. 109)

표 Ⅶ-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배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전체	1,000	60.7	59.9	58.1	56.4	33.9	31.0
만19~24세	330	57.3	57.9	58.8	53.3	38.5	34.2
만25~29세	334	60.8	59.0	58.7	60.2	31.1	30.2
만30~34세	336	64.0	62.8	56.8	55.7	32.1	28.6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61.8%),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졸)(62.1%),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제주권(73.7%),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69.9%),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하층(62.7%),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66.5%) 집단에서 '인구 구조 변화(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 반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Ⅶ-2.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배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전체		1,000	60.7	59.9	58.1	56.4	33.9	31.0
성별	남성	498	59.6	56.4	65.7	53.6	38.6	26.1
	여성	502	61.8	63.3	50.6	59.2	29.3	35.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52.7	60.0	52.7	59.1	40.0	35.5
	대학교(재/졸)	833	62.1	59.5	59.3	55.9	32.8	30.4
	대학원(졸)	57	56.1	64.9	50.9	57.9	38.6	31.6
거주 지역	수도권	568	58.6	58.5	61.4	57.6	35.0	28.9
	충청권	99	70.7	64.6	54.5	48.5	36.4	25.3
	전라권	82	63.4	62.2	50.0	59.8	30.5	34.1
	경상권	213	58.2	59.2	57.3	57.3	30.5	37.6
	강원/제주권	38	73.7	68.4	39.5	47.4	36.8	34.2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56.2	58.6	60.7	58.8	35.2	30.6
	중소도시	306	69.9	61.8	52.3	52.3	31.4	32.4
	읍면	66	60.6	63.6	60.6	53.0	33.3	28.8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57.9	36.8	73.7	68.4	31.6	31.6
	중층	898	60.6	61.1	59.0	55.5	34.2	29.6
	하층	83	62.7	51.8	44.6	63.9	31.3	45.8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66.5	63.1	58.8	52.6	33.3	25.7
	중위소득 미만	517	55.3	56.9	57.4	60.0	34.4	36.0

(2)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 응답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66.1%),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5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 응답이(72.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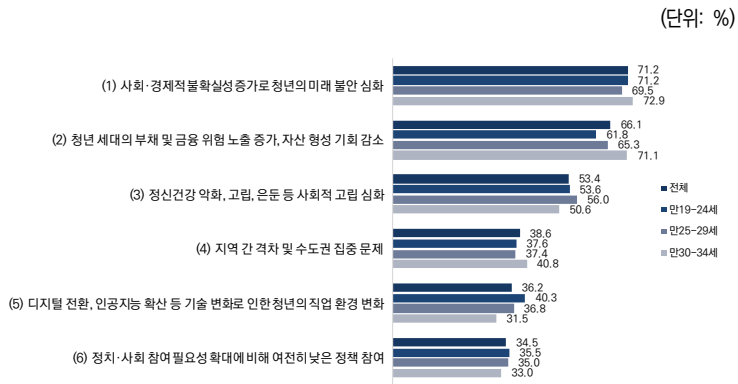


그림 Ⅶ-2.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표 Ⅶ-3.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전체	1,000	71.2	66.1	53.4	38.6	36.2	34.5
만19~24세	330	71.2	61.8	53.6	37.6	40.3	35.5
만25~29세	334	69.5	65.3	56.0	37.4	36.8	35.0
만30~34세	336	72.9	71.1	50.6	40.8	31.5	33.0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72.3%),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졸)(72.0%), 거주 지역별로는 전라권(76.8%),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77.3%),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상층(78.9%),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71.8%)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4.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전체		1,000	71.2	66.1	53.4	38.6	36.2	34.5
성별	남성	498	70.1	70.7	50.2	31.7	39.8	37.6
	여성	502	72.3	61.6	56.6	45.4	32.7	31.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65.5	65.5	65.5	38.2	34.5	30.9
	대학교(재/졸)	833	72.0	66.3	51.9	38.5	36.1	35.2
	대학원(졸)	57	70.2	64.9	52.6	40.4	40.4	31.6
거주 지역	수도권	568	71.8	68.1	56.5	33.3	35.0	35.2
	충청권	99	67.7	69.7	51.5	35.4	42.4	33.3
	전라권	82	76.8	53.7	51.2	43.9	37.8	36.6
	경상권	213	69.0	62.9	48.8	49.8	37.6	31.9
	강원/제주권	38	71.1	71.1	42.1	52.6	26.3	36.8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71.8	66.9	53.5	35.4	36.6	35.8
	중소도시	306	68.6	64.7	53.3	45.4	35.6	32.4
	읍면	66	77.3	65.2	53.0	37.9	34.8	31.8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78.9	63.2	63.2	26.3	42.1	26.3
	중층	898	70.6	66.1	53.6	38.3	36.2	35.2
	하층	83	75.9	66.3	49.4	44.6	34.9	28.9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71.8	71.0	48.7	39.5	35.0	34.0
	중위소득 미만	517	70.6	61.5	57.8	37.7	37.3	35.0

(3)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 성과 및 문제점 진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 성과 및 문제점 진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양한 청년 집단(연령, 지역, 계층 등)의 요구 반영 정도’ 응답이 6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단기적인 실적 중심 평가의 한계 및 장기적 영향 진단’(51.6%), ‘청년의 의견 수렴, 정책참여 및 정책 반영 정도 평가’(5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다양한 청년 집단(연령, 지역, 계층 등)의 요구 반영 정도’ 응답이(70.8%)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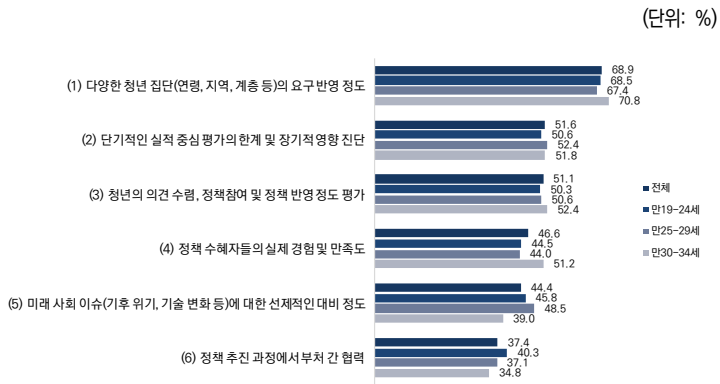


그림 Ⅶ-3.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 성과 및 문제점 진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표 Ⅶ-5.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 성과 및 문제점 진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전체	1,000	68.9	51.6	51.1	46.6	44.4	37.4
만19~24세	330	68.5	50.6	50.3	44.5	45.8	40.3
만25~29세	334	67.4	52.4	50.6	44.0	48.5	37.1
만30~34세	336	70.8	51.8	52.4	51.2	39.0	34.8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72.9%),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74.5%),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권(71.7%),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74.2%),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상층(78.9%),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70.6%) 집단에서 ‘다양한 청년 집단(연령, 지역, 계층 등)의 요구 반영 정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6.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 성과 및 문제점 진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전체		1,000	68.9	51.6	51.1	46.6	44.4	37.4
성별	남성	498	64.9	52.4	46.0	44.8	49.4	42.6
	여성	502	72.9	50.8	56.2	48.4	39.4	32.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74.5	50.0	53.6	41.8	45.5	34.5
	대학교(재/졸)	833	68.3	51.7	51.0	47.1	44.2	37.7
	대학원(졸)	57	66.7	52.6	47.4	49.1	45.6	38.6
거주 지역	수도권	568	67.8	52.5	49.5	47.9	43.3	39.1
	충청권	99	71.7	50.5	54.5	42.4	47.5	33.3
	전라권	82	67.1	59.8	51.2	45.1	36.6	40.2
	경상권	213	71.4	46.5	51.6	44.6	51.2	34.7
	강원/제주권	38	68.4	52.6	63.2	52.6	31.6	31.6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68.3	52.9	48.6	44.3	46.7	39.3
	중소도시	306	69.0	50.7	55.2	50.7	42.2	32.4
	읍면	66	74.2	43.9	56.1	50.0	33.3	42.4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78.9	36.8	26.3	42.1	52.6	63.2
	중층	898	67.9	53.1	50.8	46.1	45.0	37.1
	하층	83	77.1	38.6	60.2	53.0	36.1	34.9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70.6	51.3	50.9	47.0	43.1	37.1
	중위소득 미만	517	67.3	51.8	51.3	46.2	45.6	37.7

(4)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정책의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 응답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육-고용-주거-복지의 생애주기별 연계 강화’(53.8%), ‘청년의 특성과 배경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53.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청년정책의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 응답이(59.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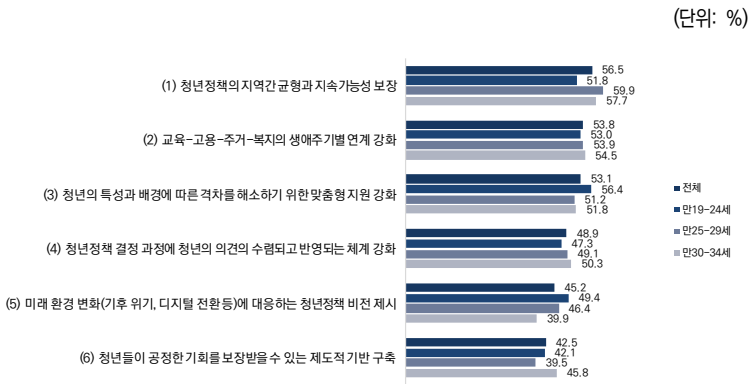


그림 Ⅶ-4.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표 Ⅶ-7.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전체	1,000	56.5	53.8	53.1	48.9	45.2	42.5
만19~24세	330	51.8	53.0	56.4	47.3	49.4	42.1
만25~29세	334	59.9	53.9	51.2	49.1	46.4	39.5
만30~34세	336	57.7	54.5	51.8	50.3	39.9	45.8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58.2%),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65.5%),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권(61.6%),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60.6%),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상층(78.9%),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58.4%) 집단에서 ‘청년정책의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8.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전체		1,000	56.5	53.8	53.1	48.9	45.2	42.5
성별	남성	498	54.8	50.2	51.6	53.8	51.2	38.4
	여성	502	58.2	57.4	54.6	44.0	39.2	46.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65.5	53.6	53.6	41.8	40.9	44.5
	대학교(재/졸)	833	55.3	53.4	52.7	49.5	46.2	42.9
	대학원(졸)	57	56.1	59.6	57.9	54.4	38.6	33.3
거주 지역	수도권	568	55.8	55.8	51.6	49.6	46.7	40.5
	충청권	99	61.6	46.5	52.5	55.6	46.5	37.4
	전라권	82	58.5	53.7	50.0	48.8	37.8	51.2
	경상권	213	54.5	52.1	57.3	45.1	45.1	46.0
	강원/제주권	38	60.5	52.6	60.5	42.1	36.8	47.4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56.5	52.5	51.9	48.2	49.5	41.2
	중소도시	306	55.6	56.9	54.9	50.7	37.6	44.4
	읍면	66	60.6	51.5	56.1	47.0	39.4	45.5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78.9	36.8	73.7	42.1	57.9	10.5
	중층	898	57.0	52.8	52.2	49.7	45.5	42.8
	하층	83	45.8	68.7	57.8	42.2	38.6	47.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58.4	54.9	52.2	51.8	43.1	39.8
	중위소득 미만	517	54.7	52.8	54.0	46.2	47.2	45.1

(5)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58.2%),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육 기회 보장’(5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71.0%)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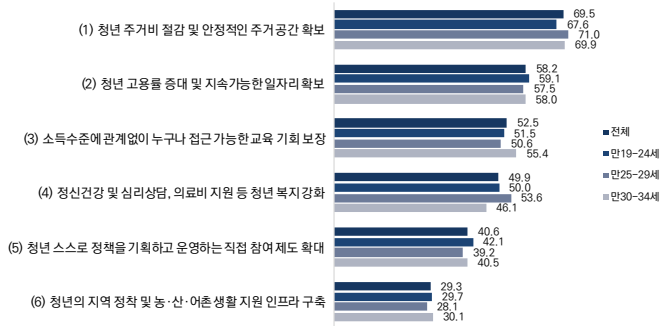


그림 VII-5.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표 VII-9.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전체	1,000	69.5	58.2	52.5	49.9	40.6	29.3
만19~24세	330	67.6	59.1	51.5	50.0	42.1	29.7
만25~29세	334	71.0	57.5	50.6	53.6	39.2	28.1
만30~34세	336	69.9	58.0	55.4	46.1	40.5	30.1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73.7%),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75.5%),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70.8%),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및 읍면(각 71.2%),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중층(69.7%),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71.0%) 집단에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1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전체		1,000	69.5	58.2	52.5	49.9	40.6	29.3
성별	남성	498	65.3	55.2	54.6	47.6	47.8	29.5
	여성	502	73.7	61.2	50.4	52.2	33.5	29.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75.5	49.1	51.8	56.4	39.1	28.2
	대학교(재/졸)	833	68.7	59.8	52.5	49.0	40.7	29.4
	대학원(졸)	57	70.2	52.6	54.4	50.9	42.1	29.8
거주 지역	수도권	568	70.8	57.2	52.5	51.4	41.7	26.4
	충청권	99	68.7	57.6	61.6	49.5	39.4	23.2
	전라권	82	68.3	53.7	47.6	52.4	36.6	41.5
	경상권	213	67.6	62.0	53.5	44.1	39.4	33.3
	강원/제주권	38	65.8	63.2	34.2	55.3	42.1	39.5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68.5	56.8	53.5	51.0	42.2	28.0
	중소도시	306	71.2	60.8	51.0	46.4	38.9	31.7
	읍면	66	71.2	59.1	50.0	56.1	33.3	30.3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63.2	57.9	57.9	57.9	31.6	31.6
	중층	898	69.7	58.5	52.0	49.3	41.9	28.6
	하층	83	68.7	55.4	56.6	54.2	28.9	36.1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71.0	57.8	52.8	47.0	43.7	27.7
	중위소득 미만	517	68.1	58.6	52.2	52.6	37.7	30.8

2) 일자리 분야

(1)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응답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실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25.3%),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및 민간 기업 연계 강화’(1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응답이(37.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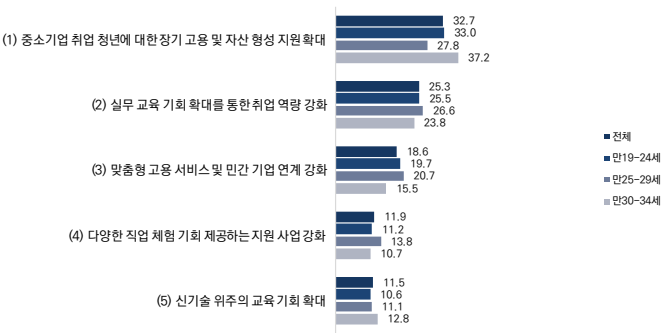


그림 Ⅶ-6.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표 Ⅶ-11.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2.7	25.3	18.6	11.9	11.5	10.062
만19~24세	330	33.0	25.5	19.7	11.2	10.6	
만25~29세	334	27.8	26.6	20.7	13.8	11.1	
만30~34세	336	37.2	23.8	15.5	10.7	12.8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최종학력, 사회경제적 층위, 1인 가구 중위소득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33.9%),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35.5%),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중층(33.2%),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37.3%) 집단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12.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2.7	25.3	18.6	11.9	11.5	22.738***
성별	남성	498	31.5	23.9	20.1	9.0	15.5	
	여성	502	33.9	26.7	17.1	14.7	7.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35.5	21.8	18.2	11.8	12.7	17.697*
	대학교(재/졸)	833	32.9	25.2	19.7	11.5	10.7	
	대학원(졸)	57	24.6	33.3	3.5	17.5	21.1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4.7	25.4	15.8	11.1	13.0	21.736
	충청권	99	26.3	25.3	21.2	15.2	12.1	
	전라권	82	24.4	31.7	28.0	11.0	4.9	
	경상권	213	33.3	24.4	19.2	12.7	10.3	
	강원/제주권	38	34.2	15.8	28.9	13.2	7.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3.3	22.9	17.7	12.7	13.4	13.940
	중소도시	306	31.4	31.0	19.3	10.1	8.2	
	읍면	66	33.3	21.2	24.2	12.1	9.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31.6	31.6	26.3	0.0	10.5	17.792*
	중층	898	33.2	26.3	17.9	11.2	11.4	
	하층	83	27.7	13.3	24.1	21.7	13.3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37.3	20.9	19.3	10.4	12.2	15.585**
	중위소득 미만	517	28.4	29.4	18.0	13.3	10.8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 지원' 응답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다양한 분야(농·산·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등)의 스타트업 지원'(23.8%), '청년창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17.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 지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8.5%, 만25~29세: 26.9%, 만30~34세: 26.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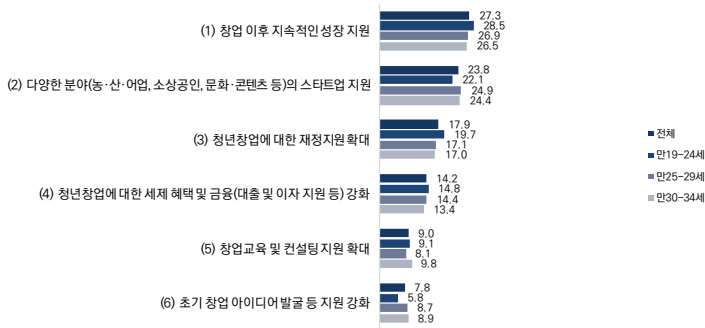


그림 VII-7.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표 VII-13.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7.3	23.8	17.9	14.2	9.0	7.8	5.225
만19~24세	330	28.5	22.1	19.7	14.8	9.1	5.8	
만25~29세	334	26.9	24.9	17.1	14.4	8.1	8.7	
만30~34세	336	26.5	24.4	17.0	13.4	9.8	8.9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31.7%) 집단에서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 지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Ⅶ-14.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7.3	23.8	17.9	14.2	9.0	7.8	16.292**
성별	남성	498	31.7	22.9	15.9	11.6	8.8	9.0	
	여성	502	22.9	24.7	19.9	16.7	9.2	6.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7.3	27.3	12.7	14.5	12.7	5.5	10.678
	대학교(재/졸)	833	26.7	23.9	19.0	14.0	8.5	7.9	
	대학원(졸)	57	36.8	15.8	12.3	15.8	8.8	10.5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6.9	27.1	16.9	12.1	8.8	8.1	20.171
	충청권	99	32.3	15.2	20.2	14.1	11.1	7.1	
	전라권	82	26.8	26.8	15.9	13.4	9.8	7.3	
	경상권	213	26.3	17.8	21.1	19.2	8.5	7.0	
	강원/제주권	38	26.3	23.7	13.2	18.4	7.9	10.5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6.8	24.4	18.2	13.1	8.4	9.2	16.867
	중소도시	306	28.1	21.2	16.0	17.3	11.1	6.2	
	읍면	66	28.8	30.3	24.2	10.6	4.5	1.5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42.1	15.8	0.0	10.5	26.3	5.3	15.813
	중층	898	27.2	23.9	18.4	14.6	8.5	7.5	
	하층	83	25.3	24.1	16.9	10.8	10.8	12.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7.3	25.5	16.1	14.5	8.7	7.9	2.848
	중위소득 미만	517	27.3	22.2	19.5	13.9	9.3	7.7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 응답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제도 활성화’(22.6%), ‘표준계약서 활용 및 보급 확대’(21.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 응답이 (27.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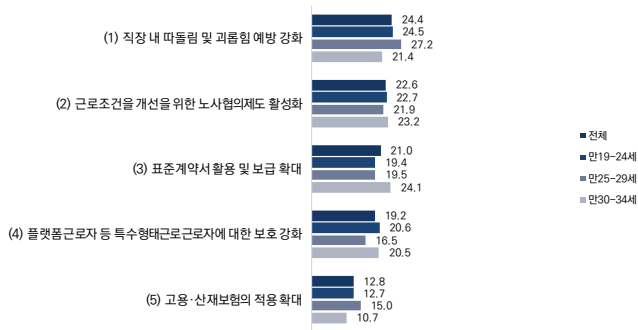


그림 VII-8.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

표 VII-15.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4.4	22.6	21.0	19.2	12.8	9.117
만19~24세	330	24.5	22.7	19.4	20.6	12.7	
만25~29세	334	27.2	21.9	19.5	16.5	15.0	
만30~34세	336	21.4	23.2	24.1	20.5	10.7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거주 지역, 거주 지역 규모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26.1%),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27.5%),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30.3%) 집단에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16.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4.4	22.6	21.0	19.2	12.8	16.700**
성별	남성	498	22.7	20.5	22.5	23.5	10.8	
	여성	502	26.1	24.7	19.5	14.9	14.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8.2	21.8	16.4	16.4	17.3	9.012
	대학교(재/졸)	833	24.2	22.8	21.6	18.8	12.5	
	대학원(졸)	57	19.3	21.1	21.1	29.8	8.8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7.5	20.6	22.0	18.7	11.3	30.794*
	충청권	99	23.2	25.3	18.2	21.2	12.1	
	전라권	82	15.9	23.2	22.0	17.1	22.0	
	경상권	213	23.0	23.5	17.4	20.7	15.5	
	강원/제주권	38	7.9	39.5	31.6	18.4	2.6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6.8	22.5	19.4	20.4	11.0	16.985*
	중소도시	306	18.3	24.5	24.2	17.3	15.7	
	읍면	66	30.3	15.2	21.2	16.7	16.7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36.8	15.8	10.5	15.8	21.1	8.039
	중층	898	24.4	21.9	21.5	19.6	12.6	
	하층	83	21.7	31.3	18.1	15.7	13.3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4.2	22.6	22.8	18.6	11.8	2.297
	중위소득 미만	517	24.6	22.6	19.3	19.7	13.7	

\* $p < .05$ , \*\* $p < .01$ , \*\*\* $p < .001$ .

#### (4)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 응답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능력과 역량 중심의 채용방식의 개발 및 확산’(22.6%), ‘공정한 채용을 위한 법률 제정’(2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 응답이(32.4%)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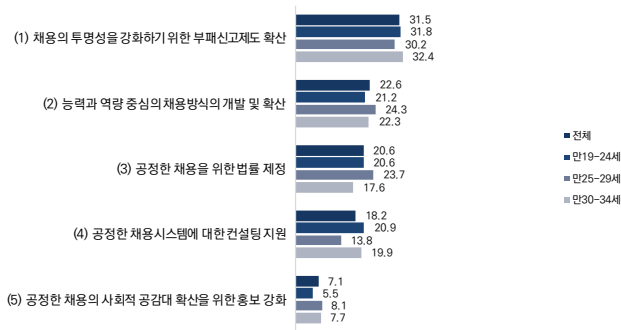


그림 Ⅶ-9.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

표 Ⅶ-17.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1.5	22.6	20.6	18.2	7.1	11.382
만19~24세	330	31.8	21.2	20.6	20.9	5.5	
만25~29세	334	30.2	24.3	23.7	13.8	8.1	
만30~34세	336	32.4	22.3	17.6	19.9	7.7	

\*  $p < .05$ , \*\*  $p < .01$ , \*\*\*  $p < .001$ .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거주 지역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32.7%), 거주 지역별로는 경상권(34.7%) 집단에서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18.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1.5	22.6	20.6	18.2	7.1	10.996*
성별	남성	498	32.7	25.5	16.9	18.1	6.8	
	여성	502	30.3	19.7	24.3	18.3	7.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30.0	20.9	20.9	20.9	7.3	10.415
	대학교(재/졸)	833	31.9	22.6	21.4	17.5	6.6	
	대학원(졸)	57	28.1	26.3	8.8	22.8	14.0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2.0	26.6	19.5	16.0	5.8	27.791*
	충청권	99	28.3	22.2	21.2	22.2	6.1	
	전라권	82	26.8	19.5	17.1	24.4	12.2	
	경상권	213	34.7	15.5	22.5	18.8	8.5	
	강원/제주권	38	23.7	10.5	31.6	23.7	10.5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4.2	23.7	19.3	16.2	6.5	13.431
	중소도시	306	25.5	21.9	22.5	21.6	8.5	
	읍면	66	33.3	15.2	24.2	21.2	6.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26.3	21.1	26.3	15.8	10.5	10.464
	중층	898	31.7	23.3	19.7	18.7	6.6	
	하층	83	30.1	15.7	28.9	13.3	12.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32.3	23.4	18.0	19.7	6.6	4.891
	중위소득 미만	517	30.8	21.9	23.0	16.8	7.5	

\*  $p < .05$ , \*\*  $p < .01$ , \*\*\*  $p < .001$ .

(5)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응답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근로여건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23.5%),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 배경별 맞춤형 정책 강화’(2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응답이(38.7%)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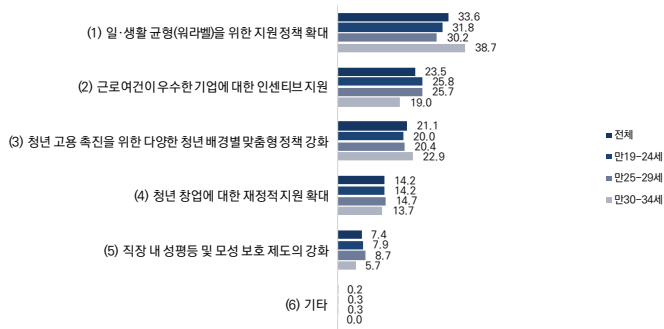


그림 Ⅶ-10.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표 Ⅶ-19.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33.6	23.5	21.1	14.2	7.4	0.2	12.450
만19~24세	330	31.8	25.8	20.0	14.2	7.9	0.3	
만25~29세	334	30.2	25.7	20.4	14.7	8.7	0.3	
만30~34세	336	38.7	19.0	22.9	13.7	5.7	0.0	

\*  $p < .05$ , \*\*  $p < .01$ , \*\*\*  $p < .001$ .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사회경제적 층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37.5%),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하층(39.8%) 집단에서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20.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33.6	23.5	21.1	14.2	7.4	0.2	21.784***
성별	남성	498	29.7	28.1	22.1	14.9	5.0	0.2	
	여성	502	37.5	18.9	20.1	13.5	9.8	0.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33.6	22.7	23.6	14.5	5.5	0.0	4.794
	대학교(재/졸)	833	33.1	23.3	21.1	14.5	7.7	0.2	
	대학원(졸)	57	40.4	28.1	15.8	8.8	7.0	0.0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3.6	23.4	20.8	14.3	7.7	0.2	9.838
	충청권	99	38.4	22.2	19.2	14.1	6.1	0.0	
	전라권	82	30.5	26.8	22.0	13.4	7.3	0.0	
	경상권	213	35.2	22.1	22.1	12.7	7.5	0.5	
	강원/제주권	38	18.4	28.9	23.7	23.7	5.3	0.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2.6	25.0	20.9	13.9	7.5	0.2	3.225
	중소도시	306	35.0	20.9	21.9	14.4	7.5	0.3	
	읍면	66	36.4	21.2	19.7	16.7	6.1	0.0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5.3	36.8	42.1	5.3	10.5	0.0	22.473*
	중층	898	33.6	24.4	20.3	14.6	6.9	0.2	
	하층	83	39.8	10.8	25.3	12.0	12.0	0.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34.0	24.4	22.6	12.8	6.0	0.2	5.018
	중위소득 미만	517	33.3	22.6	19.7	15.5	8.7	0.2	

\* $p < .05$ , \*\* $p < .01$ , \*\*\* $p < .001$ .

3) 주거 분야

(1)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응답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청년 주택 건설 강화’(22.0%), ‘청년에 특화된 주거 공급을 위한 법제도 개선’(2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응답이 (26.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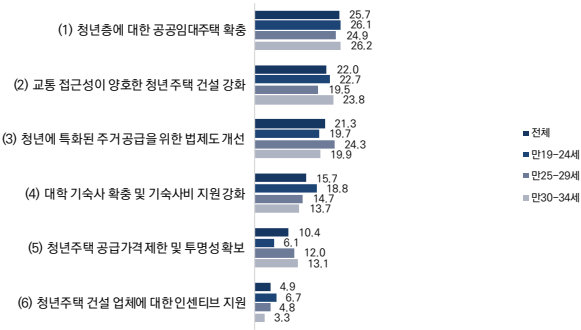


그림 VII-11.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표 VII-21.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5.7	22.0	21.3	15.7	10.4	4.9	19.893*
만19~24세	330	26.1	22.7	19.7	18.8	6.1	6.7	
만25~29세	334	24.9	19.5	24.3	14.7	12.0	4.8	
만30~34세	336	26.2	23.8	19.9	13.7	13.1	3.3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거주 지역 규모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30.9%),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31.4%) 집단에서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22.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5.7	22.0	21.3	15.7	10.4	4.9	31.312***
성별	남성	498	20.5	22.9	25.1	18.9	7.6	5.0	
	여성	502	30.9	21.1	17.5	12.5	13.1	4.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2.7	22.7	21.8	21.8	8.2	2.7	12.350
	대학교(재/졸)	833	26.5	21.8	21.5	14.5	10.2	5.4	
	대학원(졸)	57	19.3	22.8	17.5	21.1	17.5	1.8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4.1	23.2	19.2	17.4	10.2	5.8	20.256
	충청권	99	24.2	21.2	23.2	18.2	9.1	4.0	
	전라권	82	31.7	20.7	29.3	9.8	4.9	3.7	
	경상권	213	27.7	21.1	22.5	12.2	12.7	3.8	
	강원/제주권	38	28.9	13.2	23.7	15.8	15.8	2.6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3.1	22.1	21.5	18.3	10.0	4.9	22.334*
	중소도시	306	31.4	19.3	21.6	10.5	12.4	4.9	
	읍면	66	24.2	33.3	18.2	15.2	4.5	4.5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21.1	0.0	36.8	21.1	15.8	5.3	11.102
	중층	898	25.3	22.4	20.9	16.0	10.2	5.1	
	하층	83	31.3	22.9	21.7	10.8	10.8	2.4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3.6	21.7	23.4	14.3	11.8	5.2	6.653
	중위소득 미만	517	27.7	22.2	19.3	17.0	9.1	4.6	

\*  $p < .05$ , \*\*  $p < .01$ , \*\*\*  $p < .001$ .

(2)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 응답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대상의 주거급여 제도 신설’(24.2%),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2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 응답이(33.0%)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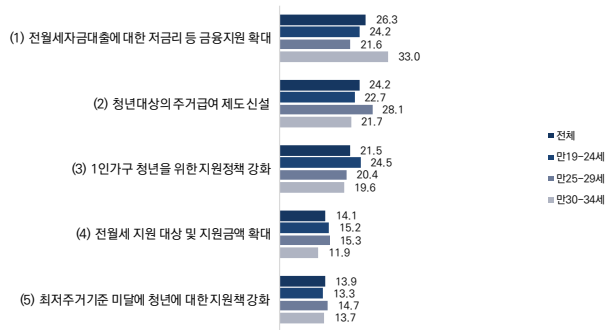


그림 Ⅶ-12.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표 Ⅶ-23.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6.3	24.2	21.5	14.1	13.9	16.602*
만19~24세	330	24.2	22.7	24.5	15.2	13.3	
만25~29세	334	21.6	28.1	20.4	15.3	14.7	
만30~34세	336	33.0	21.7	19.6	11.9	13.7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4.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6.3	24.2	21.5	14.1	13.9	5.718
성별	남성	498	25.9	26.1	19.1	13.7	15.3	
	여성	502	26.7	22.3	23.9	14.5	12.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3.6	24.5	14.5	20.9	16.4	11.418
	대학교(재/졸)	833	26.8	23.6	22.7	13.6	13.3	
	대학원(졸)	57	24.6	31.6	17.5	8.8	17.5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8.3	24.3	20.2	14.4	12.7	14.378
	충청권	99	22.2	27.3	21.2	14.1	15.2	
	전라권	82	18.3	22.0	29.3	14.6	15.9	
	경상권	213	27.2	25.4	20.7	12.2	14.6	
	강원/제주권	38	18.4	13.2	28.9	18.4	21.1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6.8	25.2	21.2	12.9	14.0	4.909
	중소도시	306	25.8	22.9	20.6	16.7	14.1	
	읍면	66	24.2	21.2	28.8	13.6	12.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26.3	26.3	10.5	31.6	5.3	11.386
	중층	898	27.2	23.6	21.7	13.5	14.0	
	하층	83	16.9	30.1	21.7	16.9	14.5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9.4	25.1	20.7	12.4	12.4	7.301
	중위소득 미만	517	23.4	23.4	22.2	15.7	15.3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및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0.4%), ‘대학가, 고시촌 등 청년 밀집 지역의 지역 환경 개선 추진’(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세사기 및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3.3%, 만25~29세: 39.2%, 만30~34세: 4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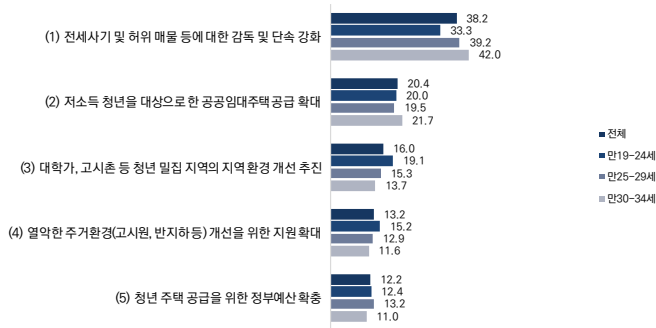


그림 VII-13.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표 VII-25.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8.2	20.4	16.0	13.2	12.2	9.332
만19~24세	330	33.3	20.0	19.1	15.2	12.4	
만25~29세	334	39.2	19.5	15.3	12.9	13.2	
만30~34세	336	42.0	21.7	13.7	11.6	11.0	

\*  $p < .05$ , \*\*  $p < .01$ , \*\*\*  $p < .001$ .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1인 가구 중위소득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39.2%),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43.5%) 집단에서 '전세사기 및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26.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8.2	20.4	16.0	13.2	12.2	9.503*
성별	남성	498	37.1	19.3	19.5	13.1	11.0	
	여성	502	39.2	21.5	12.5	13.3	1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7.3	28.2	14.5	20.0	10.0	14.716
	대학교(재/졸)	833	39.1	19.4	16.3	12.7	12.4	
	대학원(졸)	57	45.6	19.3	14.0	7.0	14.0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8.6	20.6	16.4	12.1	12.3	19.702
	충청권	99	44.4	14.1	17.2	15.2	9.1	
	전라권	82	43.9	19.5	11.0	9.8	15.9	
	경상권	213	32.4	21.6	16.4	18.3	11.3	
	강원/제주권	38	36.8	28.9	15.8	2.6	15.8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9.0	18.6	16.9	13.5	11.9	5.235
	중소도시	306	36.6	23.2	14.7	12.1	13.4	
	읍면	66	37.9	24.2	13.6	15.2	9.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26.3	15.8	15.8	26.3	15.8	11.206
	중층	898	38.6	19.8	16.6	12.5	12.5	
	하층	83	36.1	27.7	9.6	18.1	8.4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43.5	18.0	14.5	12.0	12.0	11.784*
	중위소득 미만	517	33.3	22.6	17.4	14.3	12.4	

\* $p < .05$ , \*\* $p < .01$ , \*\*\* $p < .001$ .

#### (4)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도권 이외 지방 정착 및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친화적 주택 보급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23.8%), ‘청년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확대’(1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 이외 지방 정착 및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3.0%, 만25~29세: 37.1%, 만30~34세: 40.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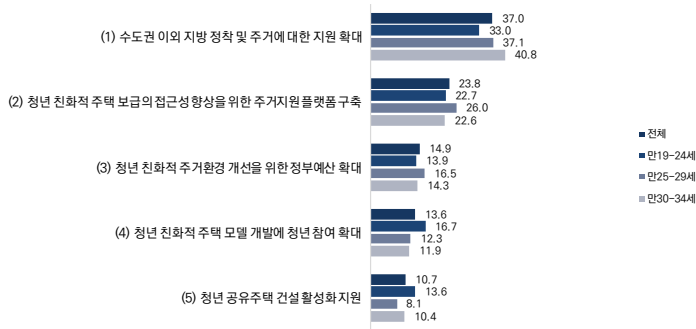


그림 Ⅶ-14.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표 Ⅶ-27.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7.0	23.8	14.9	13.6	10.7	12.849
만19~24세	330	33.0	22.7	13.9	16.7	13.6	
만25~29세	334	37.1	26.0	16.5	12.3	8.1	
만30~34세	336	40.8	22.6	14.3	11.9	10.4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37.8%) 집단에서 ‘수도권 이외 지방 정착 및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28.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7.0	23.8	14.9	13.6	10.7	16.412**
성별	남성	498	37.8	24.3	11.2	16.7	10.0	
	여성	502	36.3	23.3	18.5	10.6	1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38.2	20.0	13.6	17.3	10.9	4.519
	대학교(재/졸)	833	37.2	24.0	14.8	13.1	10.9	
	대학원(졸)	57	31.6	28.1	19.3	14.0	7.0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2.4	26.4	16.5	13.4	11.3	23.865
	충청권	99	41.4	17.2	15.2	18.2	8.1	
	전라권	82	39.0	18.3	14.6	13.4	14.6	
	경상권	213	44.6	23.5	9.9	12.2	9.9	
	강원/제주권	38	47.4	15.8	18.4	13.2	5.3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5.8	24.8	14.2	14.3	10.8	7.083
	중소도시	306	37.3	23.9	16.7	12.1	10.1	
	읍면	66	47.0	13.6	13.6	13.6	12.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31.6	15.8	15.8	15.8	21.1	11.450
	중층	898	37.8	23.9	14.0	14.0	10.2	
	하층	83	30.1	24.1	24.1	8.4	13.3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39.8	24.2	13.7	13.0	9.3	4.822
	중위소득 미만	517	34.4	23.4	16.1	14.1	12.0	

\*  $p < .05$ , \*\*  $p < .01$ , \*\*\*  $p < .001$ .

(5)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응답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의 최저주거기준 이행 점검’(18.6%), ‘청년 주거비 직접 지원’(18.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응답이 (27.1%)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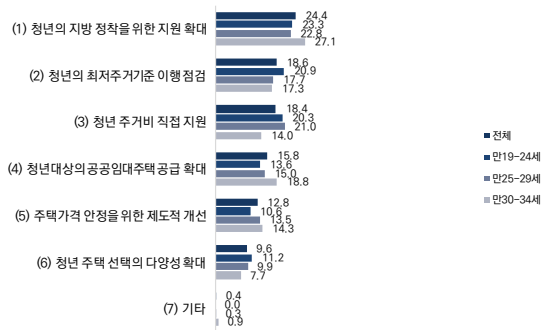


그림 Ⅶ-15.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표 Ⅶ-29.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7)	$\chi^2$
전체	1,000	24.4	18.6	18.4	15.8	12.8	9.6	0.4	18.826
만19~24세	330	23.3	20.9	20.3	13.6	10.6	11.2	0.0	
만25~29세	334	22.8	17.7	21.0	15.0	13.5	9.9	0.3	
만30~34세	336	27.1	17.3	14.0	18.8	14.3	7.7	0.9	

\*  $p < .05$ , \*\*  $p < .01$ , \*\*\*  $p < .001$ .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거주 지역 규모, 사회경제적 층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27.9%),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28.4%),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중층(25.5%) 집단에서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30.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7)	$\chi^2$
전체		1,000	24.4	18.6	18.4	15.8	12.8	9.6	0.4	20.369 **
성별	남성	498	27.9	20.9	17.1	13.9	10.2	10.0	0.0	
	여성	502	20.9	16.3	19.7	17.7	15.3	9.2	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17.3	18.2	27.3	16.4	10.9	10.0	0.0	15.900
	대학교(재/졸)	833	25.6	17.9	17.6	16.1	12.8	9.5	0.5	
	대학원(졸)	57	21.1	29.8	12.3	10.5	15.8	10.5	0.0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0.4	20.6	18.0	15.8	14.3	10.2	0.7	29.412
	충청권	99	35.4	15.2	20.2	12.1	10.1	7.1	0.0	
	전라권	82	29.3	9.8	25.6	19.5	7.3	8.5	0.0	
	경상권	213	28.6	18.3	16.4	15.0	12.2	9.4	0.0	
	강원/제주권	38	21.1	18.4	15.8	21.1	13.2	10.5	0.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2.1	21.7	17.4	13.9	13.9	10.7	0.5	29.724 **
	중소도시	306	28.4	13.7	18.0	19.3	12.7	7.5	0.3	
	읍면	66	27.3	12.1	30.3	18.2	3.0	9.1	0.0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15.8	21.1	42.1	5.3	5.3	10.5	0.0	22.356 *
	중층	898	25.5	19.2	17.6	15.1	12.7	9.6	0.3	
	하층	83	14.5	12.0	21.7	25.3	15.7	9.6	1.2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4.2	19.5	16.1	17.0	13.3	9.3	0.6	5.145
	중위소득 미만	517	24.6	17.8	20.5	14.7	12.4	9.9	0.2	

\* $p < .05$ , \*\* $p < .01$ , \*\*\* $p < .001$ .

4) 교육 분야

(1)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과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 촉진’ 응답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24.1%), ‘첨단 기술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2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대학과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 촉진’ 응답이(29.4%)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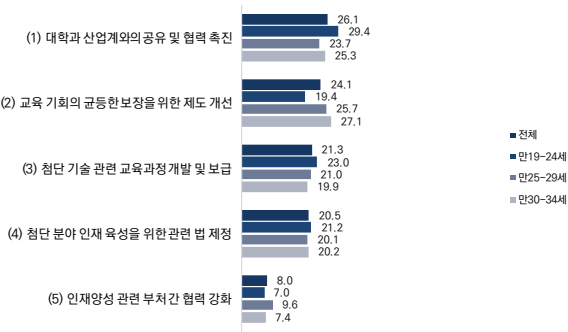


그림 VII-16.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표 VII-31.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6.1	24.1	21.3	20.5	8.0	9.382
만19~24세	330	29.4	19.4	23.0	21.2	7.0	
만25~29세	334	23.7	25.7	21.0	20.1	9.6	
만30~34세	336	25.3	27.1	19.9	20.2	7.4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거주 지역, 사회경제적 층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26.7%), 거주 지역별로는 전라권(29.3%),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상층(31.6%) 집단에서 ‘대학과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 촉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32.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6.1	24.1	21.3	20.5	8.0	31.934***
성별	남성	498	26.7	17.7	26.1	22.7	6.8	
	여성	502	25.5	30.5	16.5	18.3	9.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2.7	30.0	14.5	20.9	11.8	7.761
	대학교(재/졸)	833	26.4	23.3	22.2	20.4	7.7	
	대학원(졸)	57	28.1	24.6	21.1	21.1	5.3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7.3	24.8	17.8	22.2	7.9	28.543*
	충청권	99	24.2	24.2	20.2	21.2	10.1	
	전라권	82	29.3	22.0	23.2	22.0	3.7	
	경상권	213	24.9	19.7	30.5	16.0	8.9	
	강원/제주권	38	13.2	42.1	21.1	15.8	7.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6.1	22.3	20.9	22.8	8.0	10.758
	중소도시	306	28.1	26.8	21.2	16.3	7.5	
	읍면	66	16.7	28.8	25.8	18.2	10.6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31.6	0.0	21.1	36.8	10.5	17.288*
	중층	898	26.8	23.6	21.7	20.3	7.6	
	하층	83	16.9	34.9	16.9	19.3	12.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6.9	23.8	20.9	21.9	6.4	4.212
	중위소득 미만	517	25.3	24.4	21.7	19.1	9.5	

\* $p < .05$ , \*\* $p < .01$ , \*\*\* $p < .001$ .

(2)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학금 및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응답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21.2%), ‘수도권 이외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1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장학금 및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5.8%, 만25~29세: 25.1%, 만30~34세: 20.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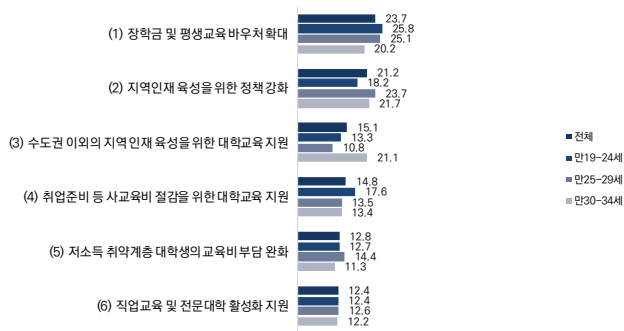


그림 VII-17.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표 VII-33.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3.7	21.2	15.1	14.8	12.8	12.4	21.713*
만19~24세	330	25.8	18.2	13.3	17.6	12.7	12.4	
만25~29세	334	25.1	23.7	10.8	13.5	14.4	12.6	
만30~34세	336	20.2	21.7	21.1	13.4	11.3	12.2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27.3%) 집단에서 ‘장학금 및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34.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3.7	21.2	15.1	14.8	12.8	12.4	22.352***
성별	남성	498	27.3	23.5	15.9	13.3	9.0	11.0	
	여성	502	20.1	18.9	14.3	16.3	16.5	13.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1.8	20.0	17.3	15.5	14.5	10.9	4.506
	대학교(재/졸)	833	23.9	20.8	15.0	14.9	12.6	12.8	
	대학원(졸)	57	24.6	29.8	12.3	12.3	12.3	8.8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3.9	22.0	13.7	14.4	13.9	12.0	14.414
	충청권	99	23.2	19.2	18.2	15.2	9.1	15.2	
	전라권	82	18.3	18.3	18.3	14.6	17.1	13.4	
	경상권	213	26.3	20.2	14.1	16.0	10.8	12.7	
	강원/제주권	38	18.4	26.3	26.3	13.2	7.9	7.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4.5	22.8	12.7	14.8	12.4	12.7	12.686
	중소도시	306	21.2	18.0	19.0	15.4	13.4	13.1	
	읍면	66	27.3	21.2	19.7	12.1	13.6	6.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26.3	15.8	5.3	21.1	26.3	5.3	7.812
	중층	898	23.9	21.4	15.4	14.8	12.1	12.4	
	하층	83	20.5	20.5	14.5	13.3	16.9	14.5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1.9	23.6	15.1	13.7	12.6	13.0	4.903
	중위소득 미만	517	25.3	19.0	15.1	15.9	13.0	11.8	

\*  $p < .05$ , \*\*  $p < .01$ , \*\*\*  $p < .001$ .

### (3)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 응답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학생 및 청년층의 진로탐색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제 확대'(27.0%), '고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지원 강화'(1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7.0%, 만25~29세: 29.6%, 만30~34세: 33.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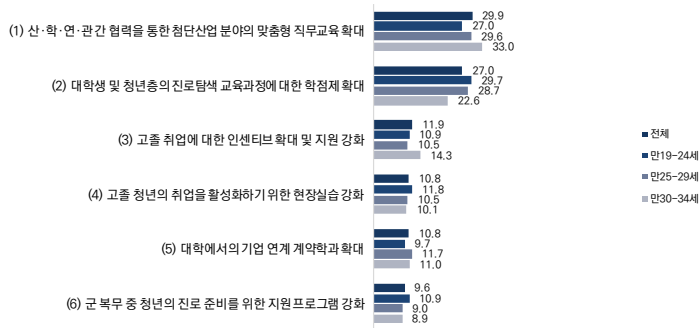


그림 Ⅶ-18.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표 Ⅶ-35.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9.9	27.0	11.9	10.8	10.8	9.6	10.155
만19~24세	330	27.0	29.7	10.9	11.8	9.7	10.9	
만25~29세	334	29.6	28.7	10.5	10.5	11.7	9.0	
만30~34세	336	33.0	22.6	14.3	10.1	11.0	8.9	

\*  $p < .05$ , \*\*  $p < .01$ , \*\*\*  $p < .001$ .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최종학력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30.3%),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졸)(43.9%) 집단에서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36.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9.9	27.0	11.9	10.8	10.8	9.6	31.029***
성별	남성	498	30.3	28.7	12.4	7.8	7.6	13.1	
	여성	502	29.5	25.3	11.4	13.7	13.9	6.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2.7	20.0	19.1	24.5	1.8	11.8	46.933***
	대학교(재/졸)	833	29.9	28.1	11.3	9.1	12.0	9.6	
	대학원(졸)	57	43.9	24.6	7.0	8.8	10.5	5.3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9.9	25.9	13.4	10.0	11.3	9.5	12.316
	충청권	99	36.4	29.3	6.1	11.1	10.1	7.1	
	전라권	82	25.6	24.4	13.4	15.9	8.5	12.2	
	경상권	213	28.6	29.6	10.3	10.3	10.8	10.3	
	강원/제주권	38	28.9	28.9	10.5	13.2	10.5	7.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1.8	26.3	11.9	11.0	9.7	9.2	7.653
	중소도시	306	24.8	28.8	11.8	11.1	13.1	10.5	
	읍면	66	34.8	25.8	12.1	7.6	10.6	9.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36.8	26.3	21.1	5.3	5.3	5.3	15.379
	중층	898	31.0	27.1	11.5	10.2	11.0	9.2	
	하층	83	16.9	26.5	14.5	18.1	9.6	14.5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32.9	23.8	12.0	10.6	11.6	9.1	7.209
	중위소득 미만	517	27.1	30.0	11.8	11.0	10.1	10.1	

\* $p < .05$ , \*\* $p < .01$ , \*\*\* $p < .001$ .

(4)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 원격교육 지원 강화 및 질적 향상’ 응답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취업-학점 연계 교육과정 확대’(22.1%), ‘원격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 원격교육 지원 강화 및 질적 향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9.4%, 만25~29세: 22.2%, 만30~34세: 2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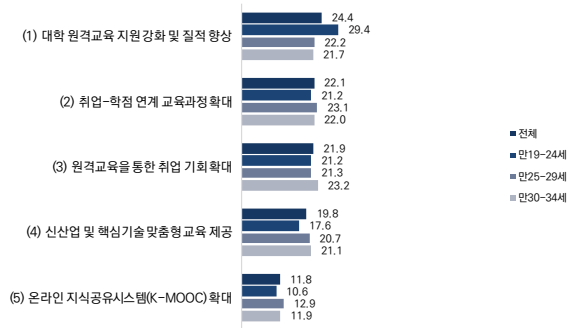


그림 Ⅶ-19.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

표 Ⅶ-37.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4.4	22.1	21.9	19.8	11.8	7.680
만19~24세	330	29.4	21.2	21.2	17.6	10.6	
만25~29세	334	22.2	23.1	21.3	20.7	12.9	
만30~34세	336	21.7	22.0	23.2	21.1	11.9	

\*  $p < .05$ , \*\*  $p < .01$ , \*\*\*  $p < .001$ .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사회경제적 층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졸)(28.1%),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상층(26.3%) 집단에서 ‘대학 원격교육 지원 강화 및 질적 향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38.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4.4	22.1	21.9	19.8	11.8	0.247
성별	남성	498	24.5	21.5	22.3	19.9	11.8	
	여성	502	24.3	22.7	21.5	19.7	1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1.8	19.1	20.9	14.5	23.6	23.598**
	대학교(재/졸)	833	24.5	22.0	22.3	20.3	10.9	
	대학원(졸)	57	28.1	29.8	17.5	22.8	1.8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4.6	23.1	21.7	20.4	10.2	15.406
	충청권	99	26.3	19.2	25.3	21.2	8.1	
	전라권	82	18.3	18.3	25.6	18.3	19.5	
	경상권	213	23.9	22.1	21.6	17.8	14.6	
	강원/제주권	38	31.6	23.7	10.5	21.1	13.2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4.5	21.8	22.8	18.9	11.9	10.964
	중소도시	306	25.8	20.6	19.3	23.2	11.1	
	읍면	66	16.7	31.8	25.8	12.1	13.6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26.3	15.8	21.1	10.5	26.3	27.695***
	중층	898	25.6	21.0	20.9	20.9	11.5	
	하층	83	10.8	34.9	32.5	9.6	12.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3.6	21.5	21.3	21.5	12.0	1.971
	중위소득 미만	517	25.1	22.6	22.4	18.2	11.6	

\* $p < .05$ , \*\* $p < .01$ , \*\*\* $p < .001$ .

(5)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확충’ 응답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학교-일자리 연계 맞춤형 교육 확대’(23.1%), ‘고졸 취업 및 직업계 고교교육 지원 강화’(2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확충’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4.8%, 만25~29세: 24.0%, 만30~34세: 2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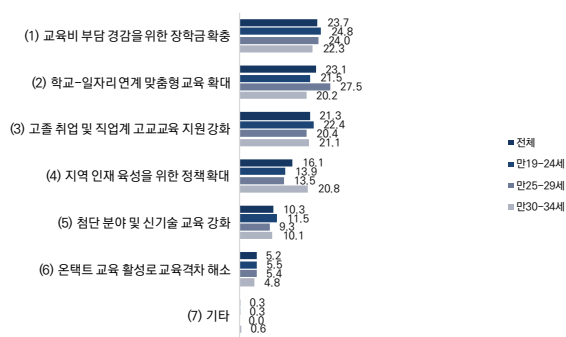


그림 VII-20.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표 VII-39.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7)	$\chi^2$
전체	1,000	23.7	23.1	21.3	16.1	10.3	5.2	0.3	15.259
만19~24세	330	24.8	21.5	22.4	13.9	11.5	5.5	0.3	
만25~29세	334	24.0	27.5	20.4	13.5	9.3	5.4	0.0	
만30~34세	336	22.3	20.2	21.1	20.8	10.1	4.8	0.6	

\*  $p < .05$ , \*\*  $p < .01$ , \*\*\*  $p < .001$ .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최종학력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24.3%),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26.4%) 집단에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확충’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40.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7)	$\chi^2$
전체		1,000	23.7	23.1	21.3	16.1	10.3	5.2	0.3	20.652 **
성별	남성	498	24.3	19.7	25.1	14.5	12.0	4.4	0.0	
	여성	502	23.1	26.5	17.5	17.7	8.6	6.0	0.6	23.923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6.4	13.6	35.5	10.9	8.2	5.5	0.0	
	대학교(재/졸)	833	23.9	24.4	19.4	16.2	10.6	5.2	0.4	
	대학원(졸)	57	15.8	22.8	21.1	24.6	10.5	5.3	0.0	26.033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4.6	24.1	23.2	13.4	10.4	3.9	0.4	
	충청권	99	20.2	21.2	21.2	17.2	12.1	8.1	0.0	
	전라권	82	18.3	22.0	18.3	24.4	12.2	4.9	0.0	
	경상권	213	25.8	22.5	16.0	18.3	9.9	7.0	0.5	
	강원/제주권	38	18.4	18.4	28.9	23.7	2.6	7.9	0.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4.0	23.4	22.9	15.6	8.9	4.9	0.2	15.595
	중소도시	306	20.9	22.9	19.0	17.3	14.1	5.2	0.7	
	읍면	66	33.3	21.2	16.7	15.2	6.1	7.6	0.0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15.8	15.8	26.3	15.8	26.3	0.0	0.0	11.663
	중층	898	23.8	22.6	21.6	15.9	10.4	5.3	0.3	
	하층	83	24.1	30.1	16.9	18.1	6.0	4.8	0.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5.1	22.2	22.4	15.5	10.1	4.3	0.4	3.498
	중위소득 미만	517	22.4	24.0	20.3	16.6	10.4	6.0	0.2	

\*  $p < .05$ , \*\*  $p < .01$ , \*\*\*  $p < .001$ .

5) 복지·문화 분야

(1)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저축계좌 확대’ 응답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25.0%), ‘군복무 중 임금 인상 및 장병적금제도 강화’(1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저축계좌 확대’ 응답이 (35.3%)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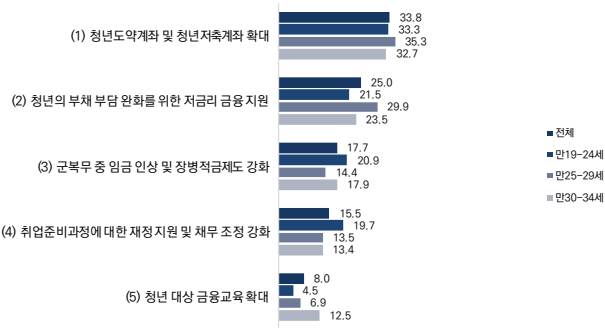


그림 Ⅶ-21.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

표 Ⅶ-41.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3.8	25.0	17.7	15.5	8.0	29.085***
만19~24세	330	33.3	21.5	20.9	19.7	4.5	
만25~29세	334	35.3	29.9	14.4	13.5	6.9	
만30~34세	336	32.7	23.5	17.9	13.4	12.5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1인 가구 중위소득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33.9%),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35.0%) 집단에서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저축계좌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42.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3.8	25.0	17.7	15.5	8.0	67.772***
성별	남성	498	33.9	21.3	26.9	12.7	5.2	
	여성	502	33.7	28.7	8.6	18.3	1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37.3	19.1	19.1	17.3	7.3	6.718
	대학교(재/졸)	833	33.7	25.1	17.6	15.6	7.9	
	대학원(졸)	57	28.1	35.1	15.8	10.5	10.5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5.2	25.7	17.6	14.4	7.0	16.962
	충청권	99	38.4	26.3	16.2	14.1	5.1	
	전라권	82	34.1	15.9	24.4	15.9	9.8	
	경상권	213	27.2	26.3	17.4	18.8	10.3	
	강원/제주권	38	36.8	23.7	10.5	15.8	13.2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2.6	26.8	18.5	14.3	7.8	6.141
	중소도시	306	34.6	22.9	16.7	17.3	8.5	
	읍면	66	40.9	18.2	15.2	18.2	7.6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42.1	5.3	26.3	15.8	10.5	13.482
	중층	898	33.0	26.2	18.2	15.1	7.6	
	하층	83	41.0	16.9	10.8	19.3	12.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35.0	28.6	16.8	11.0	8.7	18.531***
	중위소득 미만	517	32.7	21.7	18.6	19.7	7.4	

\*  $p < .05$ , \*\*  $p < .01$ , \*\*\*  $p < .001$ .

(2)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강화’ 응답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청년을 위한 심리 및 진로 상담,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18.6%), ‘빈곤 청년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확대’(1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강화’ 응답이(23.9%)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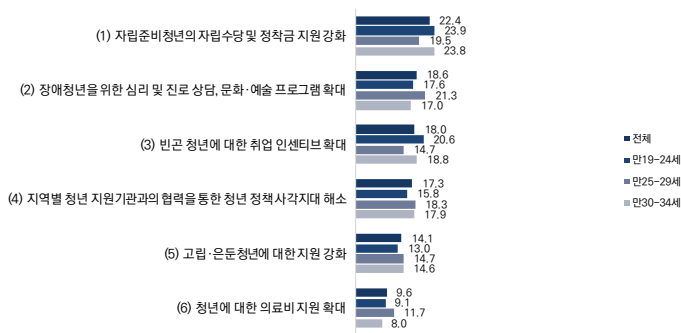


그림 VII-22.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표 VII-43.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2.4	18.6	18.0	17.3	14.1	9.6	10.819
만19~24세	330	23.9	17.6	20.6	15.8	13.0	9.1	
만25~29세	334	19.5	21.3	14.7	18.3	14.7	11.7	
만30~34세	336	23.8	17.0	18.8	17.9	14.6	8.0	

\*  $p < .05$ , \*\*  $p < .01$ , \*\*\*  $p < .001$ .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최종학력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27.3%),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재/졸)(22.9%) 집단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강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44.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2.4	18.6	18.0	17.3	14.1	9.6	30.683***
성별	남성	498	17.5	23.9	19.3	15.9	15.3	8.2	
	여성	502	27.3	13.3	16.7	18.7	12.9	11.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19.1	20.9	28.2	9.1	19.1	3.6	23.796**
	대학교(재/졸)	833	22.9	18.1	16.4	18.1	14.0	10.3	
	대학원(졸)	57	21.1	21.1	21.1	21.1	5.3	10.5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0.8	19.5	17.1	16.5	14.8	11.3	16.191
	충청권	99	20.2	17.2	24.2	18.2	14.1	6.1	
	전라권	82	28.0	14.6	20.7	14.6	11.0	11.0	
	경상권	213	24.4	17.8	16.4	20.2	14.6	6.6	
	강원/제주권	38	28.9	21.1	18.4	15.8	7.9	7.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1.3	19.3	17.8	17.0	15.1	9.4	5.616
	중소도시	306	24.2	16.3	19.6	17.6	12.4	9.8	
	읍면	66	24.2	22.7	12.1	18.2	12.1	10.6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21.1	36.8	26.3	5.3	10.5	0.0	11.192
	중층	898	22.8	18.5	17.6	17.5	13.7	9.9	
	하층	83	18.1	15.7	20.5	18.1	19.3	8.4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	483	24.2	19.9	17.2	17.6	12.0	9.1	5.731
중위소득	중위소득 미만	517	20.7	17.4	18.8	17.0	16.1	10.1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응답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신체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21.3%),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19.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6.4%, 만25~29세: 33.8%, 만30~34세: 3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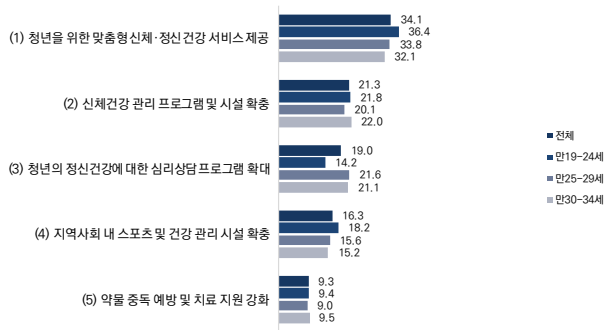


그림 VII-23.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표 VII-45.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4.1	21.3	19.0	16.3	9.3	8.273
만19~24세	330	36.4	21.8	14.2	18.2	9.4	
만25~29세	334	33.8	20.1	21.6	15.6	9.0	
만30~34세	336	32.1	22.0	21.1	15.2	9.5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36.7%) 집단에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46.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34.1	21.3	19.0	16.3	9.3	17.003**
성별	남성	498	36.7	24.3	14.7	15.1	9.2	
	여성	502	31.5	18.3	23.3	17.5	9.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30.9	20.9	20.9	16.4	10.9	2.117
	대학교(재/졸)	833	34.9	21.2	18.6	16.2	9.0	
	대학원(졸)	57	28.1	22.8	21.1	17.5	10.5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1.0	22.4	21.3	15.1	10.2	20.818
	충청권	99	41.4	21.2	15.2	16.2	6.1	
	전라권	82	29.3	24.4	20.7	19.5	6.1	
	경상권	213	41.3	18.8	14.1	17.4	8.5	
	강원/제주권	38	31.6	13.2	18.4	21.1	15.8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2.2	22.6	18.8	17.2	9.2	4.405
	중소도시	306	37.3	18.6	19.6	15.0	9.5	
	읍면	66	37.9	21.2	18.2	13.6	9.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36.8	26.3	26.3	10.5	0.0	7.031
	중층	898	33.7	21.9	18.5	16.3	9.6	
	하층	83	37.3	13.3	22.9	18.1	8.4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33.7	21.7	18.4	16.4	9.7	0.469
	중위소득 미만	517	34.4	20.9	19.5	16.2	8.9	

\*  $p < .05$ , \*\*  $p < .01$ , \*\*\*  $p < .001$ .

#### (4)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문화 및 예술 콘텐츠 제작 펀드(자금) 조성’(22.9%), ‘청년예술가와 청년창작자 지원 확대’(1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31.1%)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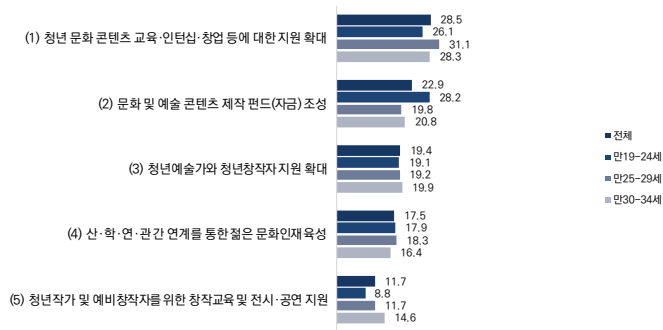


그림 VII-24.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

표 VII-47.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8.5	22.9	19.4	17.5	11.7	12.835
만19~24세	330	26.1	28.2	19.1	17.9	8.8	
만25~29세	334	31.1	19.8	19.2	18.3	11.7	
만30~34세	336	28.3	20.8	19.9	16.4	14.6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사회경제적 층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32.1%),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하층(44.6%) 집단에서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48.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8.5	22.9	19.4	17.5	11.7	25.054***
성별	남성	498	24.9	25.5	21.3	20.3	8.0	
	여성	502	32.1	20.3	17.5	14.7	15.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30.0	25.5	17.3	19.1	8.2	11.331
	대학교(재/졸)	833	29.2	22.1	19.8	17.4	11.5	
	대학원(졸)	57	15.8	29.8	17.5	15.8	21.1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8.2	23.8	18.7	16.9	12.5	22.758
	충청권	99	23.2	29.3	12.1	25.3	10.1	
	전라권	82	29.3	13.4	29.3	18.3	9.8	
	경상권	213	31.5	21.6	22.1	15.0	9.9	
	강원/제주권	38	28.9	21.1	13.2	18.4	18.4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7.1	22.9	19.9	17.0	13.1	9.284
	중소도시	306	29.4	23.2	19.6	17.3	10.5	
	읍면	66	37.9	21.2	13.6	22.7	4.5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26.3	31.6	26.3	10.5	5.3	16.504*
	중층	898	27.1	23.6	19.3	18.3	11.8	
	하층	83	44.6	13.3	19.3	10.8	12.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6.1	23.4	19.9	17.8	12.8	3.199
	중위소득 미만	517	30.8	22.4	19.0	17.2	10.6	

\* $p < .05$ , \*\* $p < .01$ , \*\*\* $p < .001$ .

(5)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 건강증진 정책 개선 및 확대’ 응답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자산운용 및 재정안정 지원’(22.0%),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1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 건강증진 정책 개선 및 확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4.8%, 만25~29세: 24.6%, 만30~34세: 20.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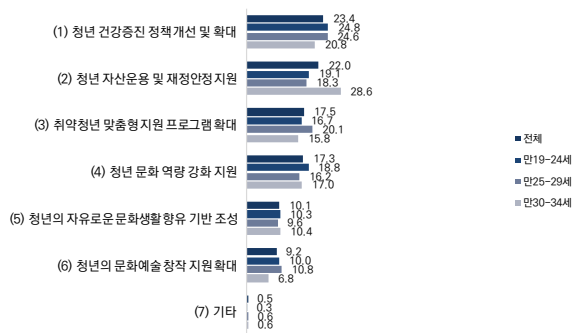


그림 Ⅶ-25.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표 Ⅶ-49.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7)	$\chi^2$
전체	1,000	23.4	22.0	17.5	17.3	10.1	9.2	0.5	17.738
만19~24세	330	24.8	19.1	16.7	18.8	10.3	10.0	0.3	
만25~29세	334	24.6	18.3	20.1	16.2	9.6	10.8	0.6	
만30~34세	336	20.8	28.6	15.8	17.0	10.4	6.8	0.6	

\*  $p < .05$ , \*\*  $p < .01$ , \*\*\*  $p < .001$ .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25.7%) 집단에서 ‘청년 건강증진 정책 개선 및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50.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7)	$\chi^2$
전체		1,000	23.4	22.0	17.5	17.3	10.1	9.2	0.5	31.859 ***
성별	남성	498	25.7	17.5	17.1	22.3	8.0	9.2	0.2	
	여성	502	21.1	26.5	17.9	12.4	12.2	9.2	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4.5	24.5	18.2	14.5	6.4	10.9	0.9	6.589
	대학교(재/졸)	833	23.0	22.0	17.5	17.6	10.4	9.0	0.4	
	대학원(졸)	57	26.3	17.5	15.8	17.5	12.3	8.8	1.8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4.3	22.2	17.4	17.6	8.6	9.5	0.4	26.089
	충청권	99	25.3	19.2	16.2	17.2	13.1	9.1	0.0	
	전라권	82	26.8	19.5	23.2	15.9	12.2	2.4	0.0	
	경상권	213	20.2	21.1	17.4	18.3	12.2	9.9	0.9	
	강원/제주권	38	15.8	36.8	10.5	10.5	7.9	15.8	2.6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3.9	21.7	17.4	17.4	11.0	8.3	0.5	12.095
	중소도시	306	23.5	22.2	15.4	18.6	8.8	10.8	0.7	
	읍면	66	18.2	24.2	28.8	10.6	7.6	10.6	0.0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21.1	21.1	15.8	31.6	5.3	5.3	0.0	9.479
	중층	898	23.5	22.4	17.5	16.9	9.6	9.6	0.6	
	하층	83	22.9	18.1	18.1	18.1	16.9	6.0	0.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3.0	22.4	17.8	18.8	9.1	8.1	0.8	5.662
	중위소득 미만	517	23.8	21.7	17.2	15.9	11.0	10.3	0.2	

\*  $p < .05$ , \*\*  $p < .01$ , \*\*\*  $p < .001$ .

6) 참여·권리 분야

(1)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양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 응답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 풀 확대 및 활용’(26.6%),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단체 예산 지원 확대’(2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중양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 응답이(30.6%)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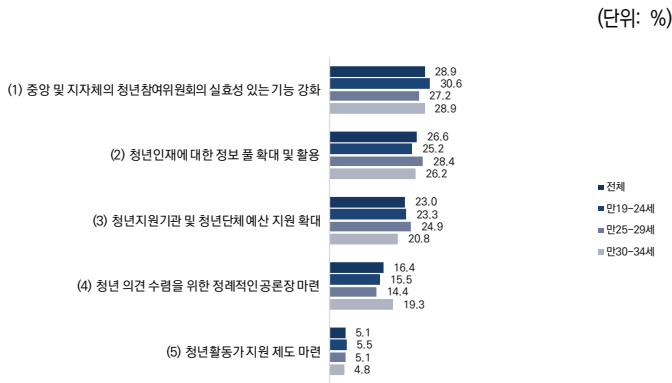


그림 VII-26.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표 VII-51.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전체	1,000	28.9	26.6	23.0	16.4	5.1	5.508
만19~24세	330	30.6	25.2	23.3	15.5	5.5	
만25~29세	334	27.2	28.4	24.9	14.4	5.1	
만30~34세	336	28.9	26.2	20.8	19.3	4.8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29.3%) 집단에서 ‘중양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52.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chi^2$
성별	전체	1,000	28.9	26.6	23.0	16.4	5.1	14.727**
	남성	498	28.5	30.3	21.5	16.7	3.0	
	여성	502	29.3	22.9	24.5	16.1	7.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32.7	26.4	24.5	10.9	5.5	11.372
	대학교(재/졸)	833	28.1	27.0	23.3	16.3	5.3	
	대학원(졸)	57	33.3	21.1	15.8	28.1	1.8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8.0	27.3	23.4	16.2	5.1	17.806
	충청권	99	35.4	22.2	18.2	20.2	4.0	
	전라권	82	29.3	29.3	23.2	8.5	9.8	
	경상권	213	28.6	27.7	22.1	18.3	3.3	
	강원/제주권	38	26.3	15.8	34.2	15.8	7.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7.1	28.0	22.8	16.7	5.4	15.377
	중소도시	306	34.3	21.2	23.5	17.0	3.9	
	읍면	66	21.2	37.9	22.7	10.6	7.6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42.1	21.1	21.1	10.5	5.3	13.843
	중층	898	27.8	27.7	22.3	17.1	5.0	
	하층	83	37.3	15.7	31.3	9.6	6.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8.2	28.0	20.7	18.8	4.3	7.390
	중위소득 미만	517	29.6	25.3	25.1	14.1	5.8	

\* $p < .05$ , \*\* $p < .01$ , \*\*\* $p < .001$ .

(2)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 응답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역청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및 예산 확충’(20.3%), ‘모바일 앱 기반의 청년정책 서비스 강화’(1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 응답이 (25.0%)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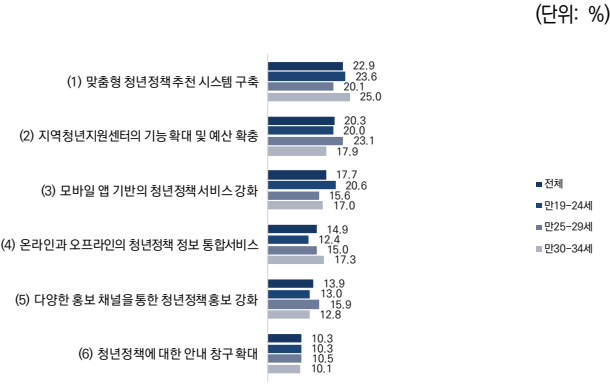


그림 Ⅶ-27.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표 Ⅶ-53.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2.9	20.3	17.7	14.9	13.9	10.3	10.728
만19~24세	330	23.6	20.0	20.6	12.4	13.0	10.3	
만25~29세	334	20.1	23.1	15.6	15.0	15.9	10.5	
만30~34세	336	25.0	17.9	17.0	17.3	12.8	10.1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4.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2.9	20.3	17.7	14.9	13.9	10.3	9.293
성별	남성	498	24.5	22.9	17.7	12.7	12.7	9.6	
	여성	502	21.3	17.7	17.7	17.1	15.1	11.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6.4	16.4	14.5	14.5	14.5	13.6	13.511
	대학교(재/졸)	833	22.3	19.9	18.7	14.8	14.0	10.2	
	대학원(졸)	57	24.6	33.3	8.8	17.5	10.5	5.3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1.1	19.5	19.5	14.6	14.4	10.7	20.441
	충청권	99	23.2	26.3	14.1	13.1	12.1	11.1	
	전라권	82	22.0	19.5	13.4	17.1	11.0	17.1	
	경상권	213	28.6	19.7	14.6	15.5	15.0	6.6	
	강원/제주권	38	18.4	21.1	26.3	15.8	10.5	7.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2.5	21.5	17.5	13.5	14.5	10.5	9.030
	중소도시	306	22.5	18.0	17.0	17.6	14.1	10.8	
	읍면	66	28.8	19.7	22.7	15.2	7.6	6.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31.6	21.1	0.0	21.1	21.1	5.3	12.298
	중층	898	22.5	21.2	18.2	14.3	13.6	10.4	
	하층	83	25.3	10.8	16.9	20.5	15.7	10.8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5.3	19.3	18.2	13.9	13.0	10.4	4.074
	중위소득 미만	517	20.7	21.3	17.2	15.9	14.7	10.3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 응답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적 지원서비스 강화’(27.6%), ‘청년 대상 금융교육 강화’(16.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청년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 응답이(34.5%)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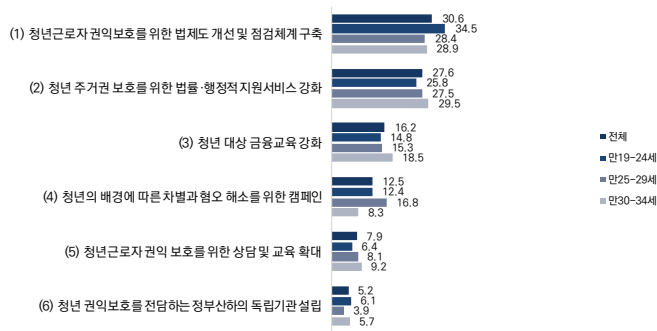


그림 VII-28.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표 VII-55.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30.6	27.6	16.2	12.5	7.9	5.2	17.930
만19~24세	330	34.5	25.8	14.8	12.4	6.4	6.1	
만25~29세	334	28.4	27.5	15.3	16.8	8.1	3.9	
만30~34세	336	28.9	29.5	18.5	8.3	9.2	5.7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6.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30.6	27.6	16.2	12.5	7.9	5.2	3.995
성별	남성	498	32.3	25.3	17.1	12.9	7.2	5.2	
	여성	502	28.9	29.9	15.3	12.2	8.6	5.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30.9	29.1	13.6	11.8	8.2	6.4	2.551
	대학교(재/졸)	833	30.7	27.0	16.7	12.5	7.9	5.2	
	대학원(졸)	57	28.1	33.3	14.0	14.0	7.0	3.5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0.5	26.4	18.0	12.5	7.9	4.8	27.598
	충청권	99	24.2	35.4	16.2	9.1	10.1	5.1	
	전라권	82	29.3	29.3	15.9	8.5	13.4	3.7	
	경상권	213	36.6	23.9	12.2	15.5	4.7	7.0	
	강원/제주권	38	18.4	42.1	13.2	13.2	7.9	5.3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2.0	25.8	15.8	12.9	7.5	6.1	11.162
	중소도시	306	29.7	31.0	15.7	11.1	8.2	4.2	
	읍면	66	21.2	28.8	22.7	15.2	10.6	1.5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15.8	10.5	31.6	15.8	15.8	10.5	15.051
	중층	898	31.5	27.8	16.1	12.1	7.2	5.1	
	하층	83	24.1	28.9	13.3	15.7	13.3	4.8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8.2	28.8	17.8	11.4	9.5	4.3	9.126
	중위소득 미만	517	32.9	26.5	14.7	13.5	6.4	6.0	

\*  $p < .05$ , \*\*  $p < .01$ , \*\*\*  $p < .001$ .

#### (4)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 응답이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의 국제활동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19.7%), ‘글로벌 이슈에 관한 청년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1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0.9%, 만25~29세: 20.7%, 만30~34세: 20.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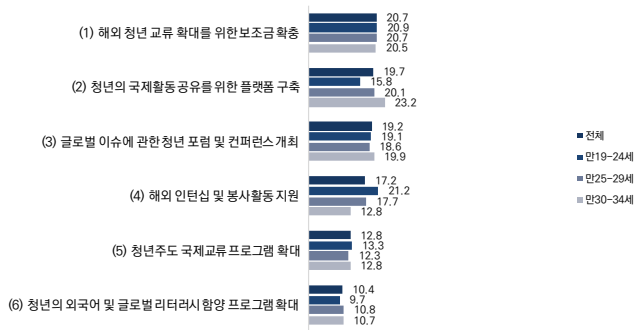


그림 VII-29.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표 VII-57.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0.7	19.7	19.2	17.2	12.8	10.4	12.208
만19~24세	330	20.9	15.8	19.1	21.2	13.3	9.7	
만25~29세	334	20.7	20.1	18.6	17.7	12.3	10.8	
만30~34세	336	20.5	23.2	19.9	12.8	12.8	10.7	

\*  $p < .05$ , \*\*  $p < .01$ , \*\*\*  $p < .001$ .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사회경제적 층위, 1인 가구 중위소득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24.3%),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상층(47.4%),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24.2%) 집단에서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58.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20.7	19.7	19.2	17.2	12.8	10.4	26.805***
성별	남성	498	24.3	19.5	22.9	15.3	10.2	7.8	
	여성	502	17.1	19.9	15.5	19.1	15.3	12.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4.5	24.5	15.5	13.6	15.5	6.4	9.772
	대학교(재/졸)	833	20.0	19.3	19.3	17.9	12.7	10.7	
	대학원(졸)	57	22.8	15.8	24.6	14.0	8.8	14.0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0.8	19.9	18.1	18.5	12.1	10.6	12.244
	충청권	99	21.2	19.2	25.3	14.1	11.1	9.1	
	전라권	82	24.4	18.3	18.3	13.4	15.9	9.8	
	경상권	213	19.2	20.7	20.7	14.6	13.6	11.3	
	강원/제주권	38	18.4	15.8	13.2	28.9	15.8	7.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0.7	19.1	20.2	18.2	11.6	10.2	11.377
	중소도시	306	18.3	20.6	18.0	16.3	15.0	11.8	
	읍면	66	31.8	21.2	15.2	12.1	13.6	6.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47.4	5.3	5.3	15.8	15.8	10.5	30.550***
	중층	898	20.3	19.5	20.5	17.7	11.6	10.5	
	하층	83	19.3	25.3	8.4	12.0	25.3	9.6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4.2	21.3	19.0	15.3	10.8	9.3	12.859*
	중위소득 미만	517	17.4	18.2	19.3	19.0	14.7	11.4	

\* $p < .05$ , \*\* $p < .01$ , \*\*\* $p < .001$ .

(5)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응답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역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28.3%), ‘청년의 삶과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1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1.5%, 만25~29세: 31.1%, 만30~34세: 28.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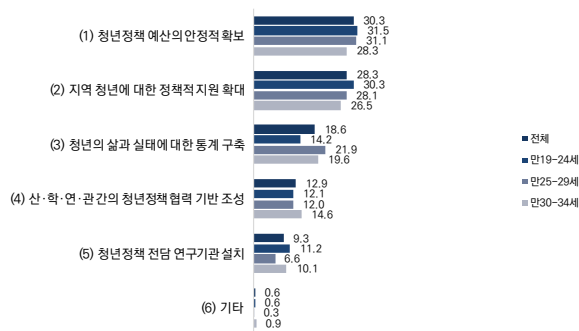


그림 Ⅶ-30.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표 Ⅶ-59.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30.3	28.3	18.6	12.9	9.3	0.6	13.305
만19~24세	330	31.5	30.3	14.2	12.1	11.2	0.6	
만25~29세	334	31.1	28.1	21.9	12.0	6.6	0.3	
만30~34세	336	28.3	26.5	19.6	14.6	10.1	0.9	

\*  $p < .05$ , \*\*  $p < .01$ , \*\*\*  $p < .001$ .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제주권(36.8%) 집단에서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60.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chi^2$
전체		1,000	30.3	28.3	18.6	12.9	9.3	0.6	3.231
성별	남성	498	29.9	29.1	17.1	14.1	9.4	0.4	
	여성	502	30.7	27.5	20.1	11.8	9.2	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5.5	36.4	17.3	9.1	11.8	0.0	8.097
	대학교(재/졸)	833	31.0	27.4	18.6	13.2	9.1	0.7	
	대학원(졸)	57	29.8	26.3	21.1	15.8	7.0	0.0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1.0	25.5	22.0	13.0	7.9	0.5	32.255*
	충청권	99	30.3	34.3	16.2	12.1	5.1	2.0	
	전라권	82	19.5	36.6	13.4	13.4	17.1	0.0	
	경상권	213	31.5	30.5	13.1	13.1	11.3	0.5	
	강원/제주권	38	36.8	23.7	15.8	10.5	13.2	0.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0.7	26.8	19.3	13.5	9.2	0.5	8.223
	중소도시	306	28.1	32.0	16.7	13.1	9.5	0.7	
	읍면	66	36.4	25.8	21.2	6.1	9.1	1.5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36.8	31.6	5.3	10.5	15.8	0.0	10.370
	중층	898	31.1	28.2	18.3	13.0	8.8	0.7	
	하층	83	20.5	28.9	25.3	12.0	13.3	0.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30.0	28.8	19.0	12.2	9.1	0.8	1.387
	중위소득 미만	517	30.6	27.9	18.2	13.5	9.5	0.4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요구조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요구조사 결과 요약

#### (1) 기본 배경

청년들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현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 반영'이 6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 응답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만30~34세: 64.0%)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지역 격차 및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청년 육성 정책 필요성'(59.9%),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청년 역량 강화 필요성'(58.1%)이 뒤를 이었다.

청년들의 삶의 환경을 분석할 때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 응답은 만 30~34세 집단에서 72.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66.1%),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53.4%)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할 때는 '다양한 청년 집단(연령, 지역, 계층 등)의 요구 반영 정도'가 68.9%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이는 특히 만30~34세 응답자(70.8%)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이 5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가 58.2%로 높게 나타났다.

#### (2) 분야별 청년정책 요구사항

##### 가. 일자리 분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가 32.7%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 지원'이 27.3%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연령이 낮을수록(만19~24세: 28.5%) 이 응답이 높았다.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는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가 3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나. 주거 분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은 69.5%로 나타나 주거 분야는 청년들이 가장 기대하는 변화로 나타났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25.7%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가 2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는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24.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 다. 교육 분야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 촉진'이 26.1%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만19~24세 응답자(29.4%)에게서 특히 높은 응답을 보였다.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학금 및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가 21.2%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가 2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대학 원격교육 지원 강화 및 질적 향상'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확충'이 23.7%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 라. 복지·문화 분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저축계좌 확대'가 33.8%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강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건강증진 정책으로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이 34.1%로 가장 중요하게 꼽혔으며,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28.5%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건강검진 정책개선 및 확대'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년 자산운용 및 재정안정 지원'이 22.0%로 높게 나타났다.

#### 마.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가 28.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만19~24세 집단에서 30.6%로 가장 높았다.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청년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이 30.6%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이 20.7%, '청년의 국제활동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19.7%, '글로벌 이슈에 관한 청년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가 1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30.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 2) 요구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이 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실제 정책 수요, 우선순위, 배경별 요구 특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줌으로써 미래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년들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의 60-70%는 사회 변화에 대한 청년 세대의 위기감과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말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 청년 인구의 감소(저출산·인구소멸 위기), 급속한 고령화(세대 불평등·부양 부담 증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공간·기회 격차 확대), 디지털·AI 등 기술 변화로 실제 일자리·직업 변화 가속 등의 여러 위기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심리적 불안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조건에서도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기감은 미래에 대한 불안(71.2%), 부채와 자산 형성의 불평등(66.1%), 정신건강·고립(53.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구직, 경제활동, 주거, 교육에서 전방위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현행 청년정책은 단순 일자리 제공, 주거 지원 같은 정책에 머물러 있어 실제 청년들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상호 연동된 위기 구조(심리-경제-지역-산업-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 정책은 이러한 청년이 체감하는 위기의 세계관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단순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전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의 중심축으로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고립, 자산 불균형을 제안한다. 미래 청년 정책에 있어서 심리·정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심화(53.4%)는 단일 분야가 아니라 모든 정책설계의 기초적 조건이자 시급한 '사회적 안전망' 영역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지역·배경별 '맞춤형' 정책의 확장과 실재화이다.

수도권 집중의 완화, 지방·중소도시에 특화된 인구/주거/일자리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가 한층 높아졌고, 지방정착지원 정책의 수요 24.4%, 지방 주택지원 수요 37% 등, 청년 지방 정착, 주택 공급 확충, 교통접근성 강화 등 실질적인 공간 중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중소도시·읍면 '생활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중위소득 이상, 중하층, 취약계층 등 세부 계층 특성을 반영하는 자동화된 지원 기준을 수립하고 자립수당·정착금 지원, 심리상담, 고시촌 환경 개선 등 1인 가구, 취약·빈곤 청년, 장애청년 등을 위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정책의 지원 대상 선정은 최대한 간결하고 단순해서 청년들의 이해와 접근이 쉬워야 한다.

셋째, 일자리 정책 시스템의 질적 재구성이다.

청년은 단순 취업률보다 중소기업 장기고용, 장기 자산형성(32.7%)과 실질적 워라밸

(33.6%), 직장 내 괴롭힘 예방(24.4%), 채용 투명성(31.5%) 등 ‘일자리 구조와 문화’ 개선에 더 절실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단기적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자산 형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청년 창업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창업 후 지속적 성장 지원(27.3%), 민간·공공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전국 창업 네트워크 등 생태계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금융 지원의 연계와 복합화이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단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교통·지역·주택 유형별로 다양화하고, 플랫폼 기반 접근(주거지원 플랫폼 23.8%), 금융지원·저금리 대출 등 변화하는 청년 주거 실태를 반영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각된 전세사기나 허위매물 감독·기술 예방체계 도입도 시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제도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주거 안정 정책이 단순히 주거 지원 정책이 아니라 금융·법적, ICT 기반 감독·예방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산·학·연·관 첨단직무교육 통합 인프라 구축이다.

교육-일자리 연계에서 산학협력·직무교육·학점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맞춤형 직무교육 29.9%).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첨단기술, 지역인재, 온택트 기반까지 포함하는 ‘교육-직업-지역-산업’ 복합 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청년 대상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를 부채·취업 위험계층에 ‘자동 커버리지’로 적용하여 중도탈락·직업계고·고졸 청년 모두를 포괄하는 등, 청년 대상 장학금·평생교육 바우처의 자동화와 범사회적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취업 지원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 지원 정책 전달체계의 전산화와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복지·문화 영역의 사회심리 지원 확대이다.

자산 형성과 금융·부채 복합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도약계좌’, 저금리 금융지원, 부채 완화 등 복지 금융교육과 자산 형성 시스템을 결합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34.1%), 문화콘텐츠·창작자 지원, 청년예술가 통합지원 등 ‘사회참여·소통’ 모델 구축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나타났다.

일곱째, 참여·권리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

청년 참여위원회 기능의 실효화와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의 정책 참여, 권익 보호, 예산 안정화(30.3%), 정보 접근 추천 시스템 등 사회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배분하는 ‘참여·권리 실현구조’ 설계에 대한 정책 요구가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정보 접근성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AI 추천 알고리즘과 연계한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구축, 지역별 청년 센터 예산의 확충, 지역별 서비스 분산화 등 청년의 '정보 접근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여덟째, '통계-정책-평가'가 연결된 상시 환류시스템 구축이다.

청년 정책은 단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청년 정책의 비전(vision)은 지금 당장 청년들이 접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청년 집단의 현실에 맞춰 정책 구현, 청년 주거·일자리·복지·문화·참여 등에서 심리·사회·경제적 복합 위기와 지역 편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계층별 청년 삶의 통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책별 효과와 정책 자원의 배분 조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하며, 정책 제안→반영→피드백의 순환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 성과와 수요의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 — 제8장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 2. 정책 제언
- 3. 결론



#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sup>39)</sup>

## 1. 정책 비전 및 분야

본 연구에서는 정책고객인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 평가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계 구축이란 비전을 기반으로 6개 분야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다음 그림은 이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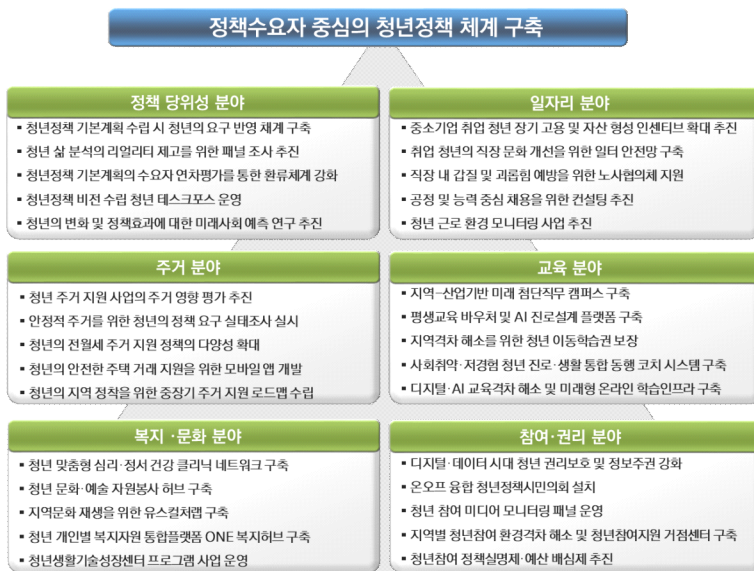


그림 Ⅷ-1. 정책 비전 및 분야

39)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정책 영역	정책 과제	주요 내용
정책당위성분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의 요구 반영 체계 구축	청년의 현재 삶을 정확히 반영하고, 평가의 시각과 요구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 문제의식, 요구 등에 대한 청년정책 수요자 실태조사 실시
	청년 삶 분석의 리얼리티 제고를 위한 패널 조사 추진	청년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고 연속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 청년 패널조사를 매년 시행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요자 연차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강화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평가를 연차별로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수요자 의견을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
	청년정책 비전 수립 청년 테스크포스 운영	정책고객인 청년들로 구성된 비전 수립 청년 테스크포스 사업을 운영하여 비전의 청년시각정합성 제고
	청년의 변화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미래사회 예측 연구 추진	미래 청년 삶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금 시행되는 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예측모형을 통해 전망하여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효과 담보
일자리분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인센티브 확대 추진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고용기간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에 맞춰 자산형성 축진을 위한 정책자금 병행 지원사업 추진
	취업 청년의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일터 안전망 구축	근로 상황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상담과 조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일터 안전망 센터를 구축하여 상담과 노무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체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도 직장 내 갑질이나 따돌림, 괴롭힘 등을 다루는 노사 협의체를 구성 장려 및 정책적 지원
	공정 및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컨설팅 추진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절차와 방법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 문화 개선을 위한 동기 강화
	청년 근로 환경 모니터링 사업 추진	청년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점검과 개선을 통해 정책 효과 극대화
주거분야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주거 영향 평가 추진	차별화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주거 영향 평가를 통해 청년 세대의 삶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유도
	안정적 주거를 위한 청년의 정책요구 실태조사 실시	청년 주거에 대한 연령대별, 지역별, 소득별, 결혼유무별 등의 다양한 배경에 따라 어떤 정책요구가 있는지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 반영
	청년의 전월세 주거 지원 정책의 다양성 확대	지원 정책자금의 확충과 더불어 청년 주거 급여나 1인 가구에 특화된 지원 사업 등 주거 지원 정책사업의 다양성을 모색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상쇄
	청년의 안전한 주택 거래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청년의 주택 거래 과정을 지원하고, 피해를 신고하고 도울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청년 주거 거래의 안정성 제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장기 주거 지원 로드맵 수립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이를 위한 주거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비전과 연차별 추진과제 및 소요예산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

그림 Ⅷ-2. 정책당위성, 일자리, 주거 분야 정책과제

정책 영역	정책 과제	주요 내용
교육 분야	지역-산업기반 미래 첨단직무 캠퍼스 구축	권역별 산단과 지역대학의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교육+직무훈련+취업이 연계된 캠퍼스 기반 실무트랙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및 AI 진로설계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진로설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의 학력·관심분야 경험수준이나 목표를 AI가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 직업 큐레이션 제공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이동학습권 보장	이동(교통, 숙박, 식사)·수강·실습·캠프/인턴십 경비를 포괄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
	사회취약·저경력 청년 진로·생활 통합 동행코치 시스템 구축	상담전문인력이 진로+생활+정서+복지를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 개인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는 (가칭)전담 동행코치 시스템 구축
	디지털·AI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형 온라인 학습인프라 구축	AI·코딩, 데이터분석, 디지털콘텐츠·디자인, 메타버스·클라우드 학습 공간 및 VOD, 문제은행, 온라인 실시간 강의 패키지 제공
복지·문화 분야	청년 맞춤형 심리·정서 건강 클리닉 네트워크 구축	권역별로 오프라인 상담과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는 (가칭)청년 마을 건강클리닉을 구축하여 간이정신진단·가칭성격검사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류(일반군, 임상군, 위기군 등)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허브 구축	문화예술(공연, 전시, 미디어, 디자인, 메이커, 영화 등) 기반 사회공헌프로젝트, 시민교육/돌봄/디지털멘토/생태보전 등 다양한 참여활동의 경로 제공
	지역문화 재생을 위한 유스컬처랩 구축	폐교나 노후 건물, 혹은 공공시설을 리노베이션하여 지역특화형 유스컬처랩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이용하여 메이커·공연·전시·방송·콘텐츠 제작 병행
	청년 개인별 복지자원 통합 플랫폼 ONE 복지허브 구축	청년들에게 맞는 복지/문화/건강 패키지를 자동 추천하고 신청 없이도 지원 가능 여부를 평가해서 결과까지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청년생활기술성장센터 프로그램 사업 운영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예산관리, 소비·저축 습관, 대출·빚관리 전략, 식단 및 생활건강 코칭, 주거관리(청소/방재), 사회초년생 법률기초 등을 통합적으로 교육
참여·권리 분야	디지털·데이터 시대 청년 권리 보호 및 정보주권 강화	365일 채팅/콜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침해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의명·신고 및 구제, 지원금 지급, 식재·복원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지원 시스템 운영
	온오프 융합 청년정책시민의회 설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성 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구체적인 차별사실에 대해서 확인 및 구제
	청년 참여 미디어 모니터링 패널 운영	청년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감시·팩트체크 패널을 구성, 가짜뉴스·혐오·차별콘텐츠·담합·무분별 광고·정치어문조작 등에 대한 집단 모니터링 수행
	지역별 청년참여 환경격차 해소 및 청년참여지원 거점센터 구축	청년 참여관련 정보 및 상담의 제공, 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정책제안 창구, 청년 커뮤니티 네트워크 지원, 지역 특화사업 개발 및 실행
	청년참여 정책실명제·예산 배심제 추진	청년정책 및 사업별 책임자(담당부서·관리자·의사결정 실행), 예산·집행 내역·의견수렴 DB, 집행결과·이행률·지연·불만처리 현황 공개

그림 Ⅷ-3.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

## 2. 정책 제언

### 분야 1 청년정책 수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의 요구 반영 체계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 정책 수립의 배경에 청년들의 시각이나 요구를 보다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추진 근거로서 청년의 요구 반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청년 및 전문가 대상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대한 가중치 반영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청년의 점수가 전문가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의 시각 반영(지표 1-1), 성과 및 문제점 진단의 타당성(지표 1-3), 비전 및 목표의 청년 요구 부합(지표 1-4)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가 전문가들 보다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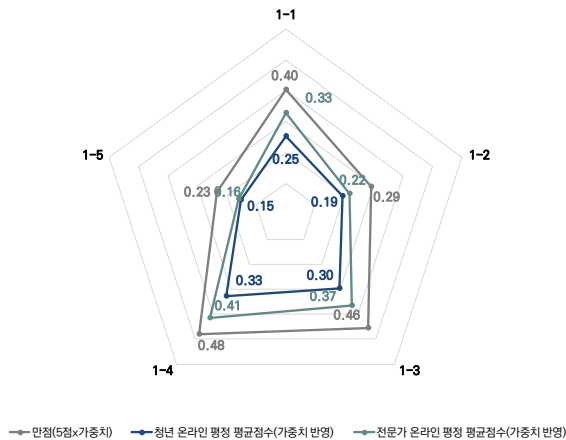


그림 VIII-4.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다. 추진내용

5년 마다 수립하게 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에 청년의 현재 삶을 정확히 반영하고, 평가의 시각과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 문제의식, 요구 등에 대한 청년정책 수요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격년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삶의 실태를 기본계획의 배경과 추진근거로 삼는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선행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 라. 추진체계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요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분석·반영은 청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추진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인 국무조정실과 협업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평가 및 인식 조사, 격년 실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기본계획 반영	2026년	1,195	-
	2027년	1,231	-
	2028년	1,268	-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총용역사업비 11억 6천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② 청년 삶 분석의 리얼리티 제고를 위한 패널 조사 추진

###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여러 조사에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추진근거로 삼는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분석이 보다 생생해야 하며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대상중심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이를 근거로 추진되는 정책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서 이를 위한 기존의 격년제 반복횡단조사로 진행되는 청년 삶 실태조사 이외에 청년의 삶을 연속적이고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 응답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66.1%),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5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 응답이(72.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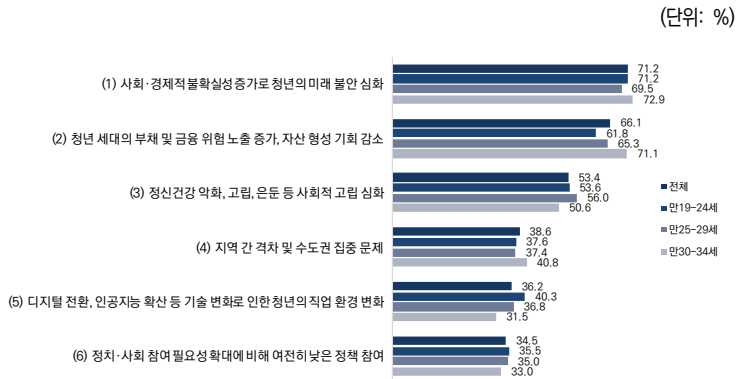


그림 VIII-5.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다. 추진내용

기존에 청년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별 정책연구에서 단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 대상 조사와 면담 등이 있으며, 정규 조사로는 국무조정실에서 격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청년 삶 실태조사가 있다. 청년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고 연속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 청년 패널조사를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현재 삶의 모습을 실태로서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종단적인 삶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부정적 변화와 긍정적 변화를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라. 추진체계

패널조사는 반복횡단조사에 비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 역량이 필요하므로 국책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일반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한국 청년 패널조사(연차별 실시)	2026년	1,301	-
	2027년	1,340	-
	2028년	1,380	-

※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2025년 서울청년패널 구축 및 조사 용역 총사업비 4억 3천만원을 기준으로 전국 청년인구를 고려하고 3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자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③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요자 연차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강화

#### 가. 필요성 및 목적

수요자 청년의 평가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으로서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점 및 성과 진단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이 보기에 주무부처와 전문가들이 한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점 및 성과 진단이 실제 정책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청년들의 시각에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추진근거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산, 대학, 소득, 계층, 서울, 주택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정책이 주로 주택 안정 및 자산 형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 문제와 소득 및 부모 배경에 따른 계층 간 격차 해소가 중요한 정책 수요임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 등록금 등 교육 관련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III-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다. 추진내용

기존에 추진되고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고객이자 정책수요자인 청년 당사자의 인식과 평가는 차기 정책의 개선을 촉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정작 정책의 대상이 되는 특정 국민 그룹의 생각과 괴리된 평가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청년 직접 평가와 같이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평가를 연차별로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수요자의견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 종합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되어 실제 평가사업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협업으로 추진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요자 연차평가 사업	2026년	156	-
	2027년	161	-
	2028년	165	-

※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5 청년정책 종합평가 총용역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연차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④ 청년정책 비전 수립 청년 데스크포스 운영

##### 가. 필요성 및 목적

중장기적인 청년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비전에 대하여 청년들은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교육-고용-주거-복지의 생애주기별 연계, 청년들의 처한 배경에 따른 격차 고려 등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제시하는 등 기존 주무부처와 전문가들이 청년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과 괴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이 주도하는 비전 수립을 위한 조직 운영이 기여할 것이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정책의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 응답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육-고용-주거-복지의 생애주기별 연계 강화’(53.8%), ‘청년의 특성과 배경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53.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청년정책의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 응답이(59.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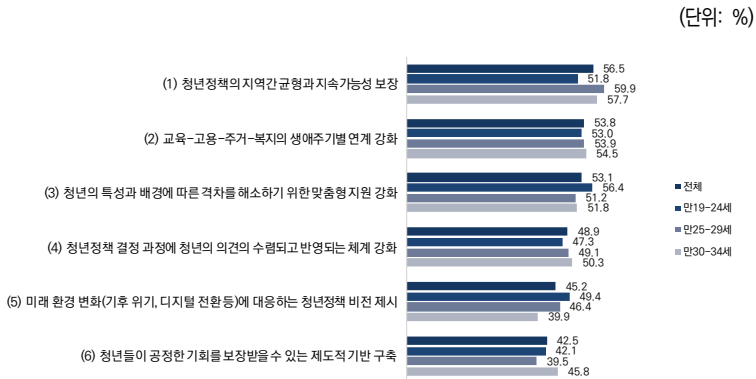


그림 VIII-7.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다. 추진내용

청년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년의 삶 분석, 청년의 요구 분석, 정책자원 분석, 기존 관련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등을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는 이와 같은 일의 역량을 갖춘 주무부처 조직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아나 청소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성숙한 의견 개진이 가능한 청년세대는 정책수립의 비전이 정책수요 당사자인 자신들의 삶에 비춰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숙의와 의견 반영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고객인 청년들로 구성된 비전 수립 청년 테스크포스 사업을 운영하여 비전의 청년시각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라. 추진체계

청년의 정책참여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각 지역 대표로 구성된 중앙 테스크포스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정책 비전 수립 청년 테스크포스 운영	2026년	78	986
	2027년	78	986
	2028년	78	986

※ 테스크포스 참여위원으로서 청년위원 20명, 연간 12회 회의체 운영을 기준으로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자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⑤ 청년의 변화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미래사회 예측 연구 추진

### 가. 필요성 및 목적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이 생각하는 향후 청년들의 미래 전망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은 청년의 주거 문제, 청년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 공평한 교육 기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장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정책이 향후 어떤 범위와 대상에게 작동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58.2%),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육 기회 보장’(5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71.0%)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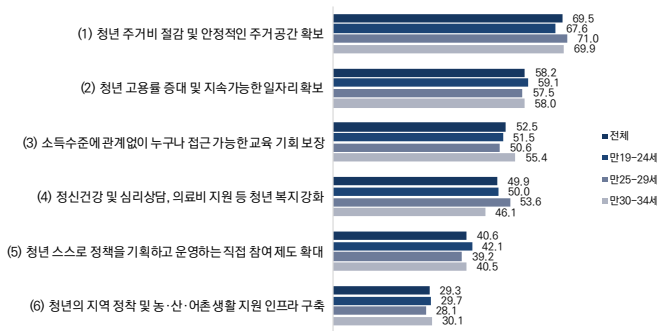


그림 Ⅷ-8.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 다. 추진내용

현재를 기준으로 청년의 미래사회에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전망은 청년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구성하고 우선순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경제 분야의 경우는 미래 변화에 대한 여러 예측모형이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경제 전반에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직 청년정책 분야는 예측모형을 연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래 청년 삶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금 시행되는 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예측모형을 통해 전망한다면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담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추진체계

미래 사회 청년의 삶의 변화와 정책효과에 대한 예측 연구는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여러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협동연구사업을 통해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변화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미래사회 예측을 위한 협동연구 추진	2026년	300	-
	2027년	300	-
	2028년	300	-

※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협동연구 종합기획과제 일반과제예산 3억을 준용하여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1] AI 3대 강국 도약	[국정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분야 2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인센티브 확대 추진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정책 중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 마련과 더불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한 자산 형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욕구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이 삶의 안정과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응답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실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25.3%),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및 민간 기업 연계 강화’(1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응답이(37.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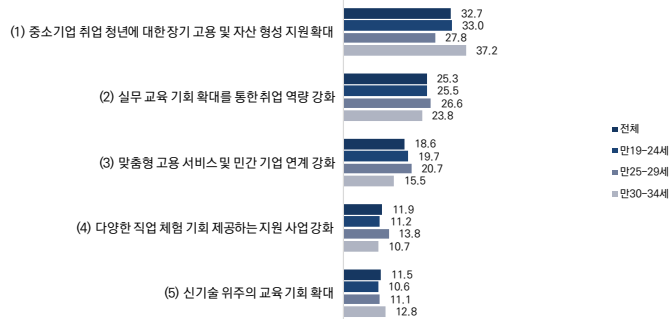


그림 Ⅷ-9.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다. 추진내용

최근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지나 인식이 예전에 비하여 다소 나아지고 있는 데, 이는 중소기업 근로조건이 향상된 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대기업의 고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의 확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이 좀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재유출이라는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고용기간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에 맞춰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병행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안정적 삶에 기여할 것이다.

### 라. 추진체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및 소득 형성을 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인센티브 확대 지원	2026년	588	-
	2027년	605	-
	2028년	623	-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내일채움공제 사업예산 294억을 기준으로 순증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② 취업 청년의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일터 안전망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정책 중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창업, 기업, 기업 내 일터 안전망 강화 및 직장 문화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개선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서 직장 문화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요구가 크므로 청년들이 취업 후 근로환경에 겪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일자리 분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창업, 기업, 확대, 강화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특히 기업 내 일터 안전망 강화와 직장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Ⅷ-10.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일자리)

#### 다. 추진내용

취업한 청년이 바라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고용주인 기업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청년 근로자가 당면하는 여러 직장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근로 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근로자가 겪는 여러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혹은 정부 차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근로 상황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상담과 조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일터 안전망 센터를 구축하여 상담과 노무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한다면 직장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추진체계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총괄하여 시도별 광역청년센터에 청년 취업 일터 안전망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취업 청년 일터 안전망 센터 구축 및 운영	2026년	616	8,400
	2027년	634	8,652
	2028년	653	8,911

※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최근 3년 평균연간예산 1,127억원을 기준으로 2023년도 청년 취업을 41.3%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중앙센터와 지방센터 예산을 구분하여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③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체 지원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노력과 노사협의체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기는 하나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해소와 도움이 필요한 근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입식 형식으로 진행되는 법정교육 이외에 근로자들 스스로 이에 대해 협의하고 고용주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 응답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체도 활성화’(22.6%), ‘표준계약서 활용 및 보급 확대’(21.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 응답이(27.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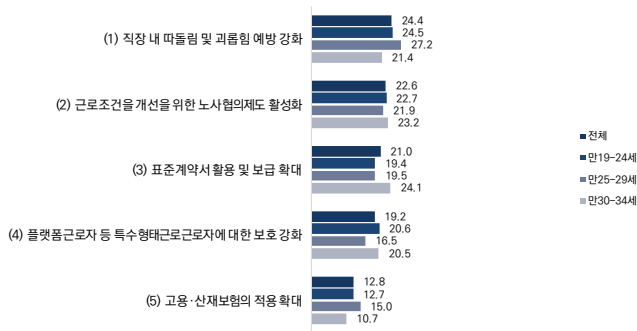


그림 Ⅷ-11.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다. 추진내용

근로기준법 상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에는 법적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협의회가 주로 고용주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주로 하다 보니 직장 내 관계를 통해 겪는 여러 어려움을 다루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이 강제가 아니다 보니 그마저도 이를 협의하고 대응할 조직이 부족하다. 따라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할 수 없지만, 직장 내 갑질이나 따돌림, 괴롭힘 등을 다루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을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추진체계

근로 환경 개선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어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체 지원사업 추진	2026년	20	170
	2027년	20	170
	2028년	20	170

※ 중앙부처의 시범지원사업 예산 20억, 17개 시도별 지원사업 예산 10억으로 연차별 예산을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④ 공정 및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컨설팅 추진

##### 가.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최근 청년들의 공통된 사회적 아젠다는 공정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사와 채용 등 인적 변별을 하는 데에서 불공정 사례가 등장할 때 이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의 첫 번째 단계인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채용을 기업들의 채용 방법 및 체계에 대한 관리 감독 보다는 컨설팅을 통한 공정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 응답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능력과 역량 중심의 채용방식의 개발 및 확산’(22.6%), ‘공정한 채용을 위한 법률 제정’(2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 응답이(32.4%)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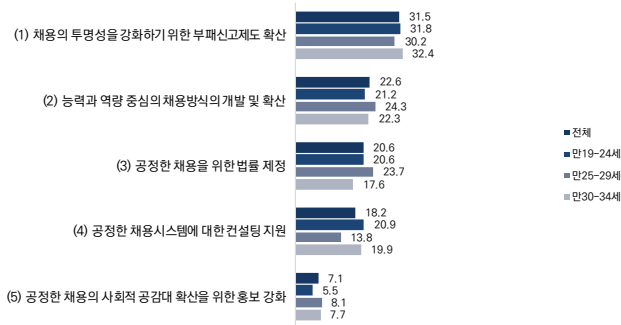


그림 VIII-12.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다. 추진내용

기업이 채용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능력과 역량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들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현재의 채용 체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절차와 방법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다면 채용 문화 개선을 위한 동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라. 추진체계

근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컨설팅 사업을 주관하고, 시행은 민간 경영컨설팅 업체들에게 용역사업으로 진행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공정 및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컨설팅 사업	2026년	3,500	-
	2027년	3,605	-
	2028년	3,713	-

※ 1개 기업 경영컨설팅 중 채용에 대한 중기 프로젝트(채용 시스템 전반 진단 및 개선안 설계) 평균 단가인 3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100개 기업 컨설팅 시행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자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국정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⑤ 청년 근로 환경 모니터링 사업 추진

### 가. 필요성 및 목적

시대와 경제 성장에 따른 근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청년 세대일수록 일명 워라벨이라고 지칭되는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 근로에 투입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생산성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워라벨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이 추구 하는 근로 환경과 기업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생하는 환경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응답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근로여건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23.5%),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 배경별 맞춤형 정책 강화’(2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응답이(38.7%)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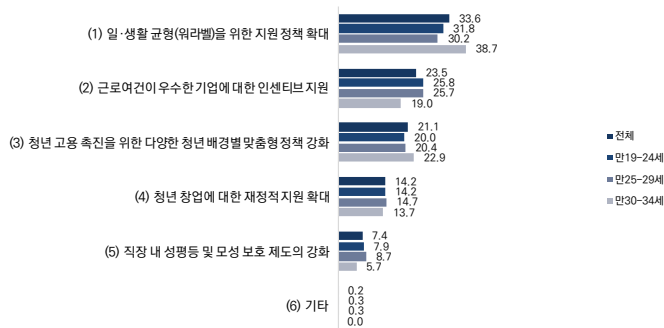


그림 Ⅷ-13.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 다. 추진내용

기업에 고용되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근로 환경과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 환경 간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근로 환경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 근로 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점검과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라. 추진체계

청년 취업 및 근로 환경에 대한 책임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 산하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의 모니터링 용역사업으로 시행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근로 환경 모니터링 사업 추진	2026년	650	-
	2027년	850	-
	2028년	1,000	-

※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관련 경영컨설팅 중 장기 프로젝트형(6개월~1년 이상) 평균 컨설팅비 6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5개 기업 규모 분류 및 모니터링 대상 기업 확대분을 고려하여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①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주거 영향 평가 추진

###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인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주거 분야의 정부정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충, 교통 접근성이 좋은 청년 주택 건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회에 첫 진입하는 연령대인 청년들이 자본을 축적하여 자가 마련을 하기 전에 주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책의 영향 평가는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응답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청년 주택 건설 강화’(22.0%), ‘청년에 특화된 주거 공급을 위한 법제도 개선’(2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응답이(26.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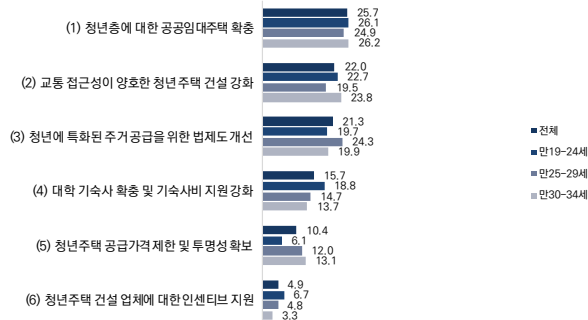


그림 Ⅷ-14.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 다. 추진내용

청년 세대의 주거는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서 성인 세대의 주거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몇 년전 집값 급등시기에 2030세대의 갭투자 열풍이라는 현상이 있었으나 이는 청년 세대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에 첫 진출하는 연령대인 청년의 주거는 편리한 실거주를 기준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범용적인 주택정책과 차별화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주거 영향 평가를 통해 청년 세대의 삶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책을 통한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 라. 추진체계

주택 정책이나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일반연구사업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주거 영향 평가 추진	2026년	600	-
	2027년	600	-
	2028년	600	-

※ 전략환경영향평가(계획 단계에서 실시)의 평균 소요예산인 6억을 기준으로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② 안정적 주거를 위한 청년의 정책요구 실태조사 실시

###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심층면담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나 있듯이 청년들은 주택 공급의 확대와 전월세 비용 경감 등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알려진 정책의 확대를 원할 뿐 아니라 청년 세대 내의 소득 격차,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지역 격차 등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요구가 각자의 배경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 나. 추진근거

주거 분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공급, 전월세, 비용, 부합, 기준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비용 경감 등 핵심 정책들이 필요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소득 기준의 모호성과 부모 배경에 따른 혜택 제약, 그리고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Ⅷ-1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주거)

#### 다. 추진내용

청년정책의 주거 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소득, 가족, 지역 등의 배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처해진 여건은 다른 정책욕구를 갖기 마련이다. 이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이 획일적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정책 시행 지역에 따라 청년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효적인 주거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 주거에 대한 연령대별, 지역별, 소득별, 결혼유무별 등의 다양한 배경에 따라 어떤 정책요구가 있는지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세분화된 실태분석을 시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라. 추진체계

청년 혹은 주택에 관한 정책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안정적 주거를 위한 청년의 정책요구 실태조사 시행	2026년	593	-
	2027년	610	-
	2028년	628	-

※ 2025년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총사업비 29억 6천6백만원을 기준으로 청년 인구비례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연차별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③ 청년의 전월세 주거 지원 정책의 다양성 확대

####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 청년들은 주거 분야 청년정책에서 전월세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혹은 보전, 청년 주거급여 제도 마련, 1인 가구 주거 지원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밝히고 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대부분 세입자로 주거를 유지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월세 지원자금의 확대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 응답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대상의 주거급여 제도 신설’(24.2%),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2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 응답이 (33.0%)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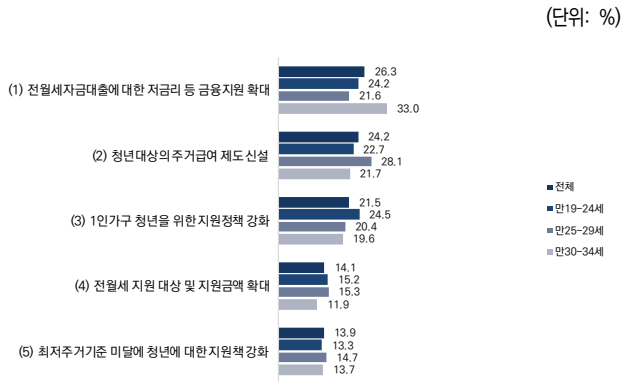


그림 Ⅷ-16.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 다. 추진내용

사회의 첫 출발을 하는 청년 세대가 부모동거유형의 아니라면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고 대개의 경우 전월세를 통해 주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임차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이를 통해 어느정도 청년들을 주거 안정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원 정책자금의 확충과 더불어 청년 주거 급여나 1인 가구에 특화된 지원 사업 등 주거 지원 정책사업의 다양성을 모색한다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상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라. 추진체계

주거 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청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전월세 주거 지원 정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2026년	160	360
	2027년	160	360
	2028년	160	360

※ 정책협의 및 공청회 개최의 1회 평균소요예산을 광역 4천만원, 권역 1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분기별 시행을 고려하여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④ 청년의 안전한 주택 거래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 가.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문제가 주로 다세대나 다가구 등 소형 주택에서 발생하여 이를 주된 주거지로 삼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여파로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도 청년들은 안전한 전월세 거래에 대한 필요성을 높다고 밝히고 있다. 사기 거래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과 구제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스마트폰 세대인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및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0.4%), ‘대학가, 고시촌 등 청년 밀집 지역의 지역 환경 개선 추진’(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세사기 및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3.3%, 만25~29세: 39.2%, 만30~34세: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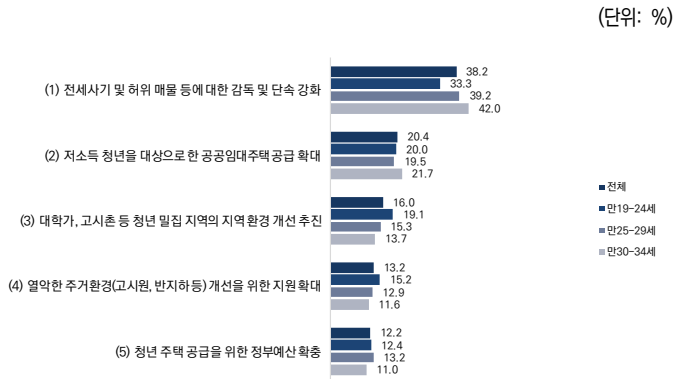


그림 Ⅷ-17.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다. 추진내용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주거 마련을 위한 전월세 계약 과정은 생소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거래 절차나 법적 보호에 대한 지식과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와 함께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상시 기능이 있다면 청년의 안전한 주택 거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의 주택 거래 과정을 지원하고, 피해를 신고하고 도울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청년 주거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라. 추진체계

청년 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앱 개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안전한 주택 거래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2026년	100	-
	2027년	70	-
	2028년	50	-

※ 주택 거래 모바일 앱 개발에서 고급/플랫폼형(전자계약, 금융연계, 추천 알고리즘 등) 외주개발비 10억을 기준으로 개발 이후 유지보수 예산을 고려하여 연차별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국정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장기 주거 지원 로드맵 수립

### 가. 필요성 및 목적

정부정책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아젠다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지역간 격차 즉,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우려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역 거주 혹은 지역 대학졸업 청년들의 상대적 소외감은 대개의 청년정책이 수도권 거주 청년을 기본 모델로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특화된 지역 주거 지원 정책의 비전과 세부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도권 이외 지방 정착 및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친화적 주택 보급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23.8%), ‘청년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확대’(1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 이외 지방 정착 및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3.0%, 만25~29세: 37.1%, 만30~34세: 40.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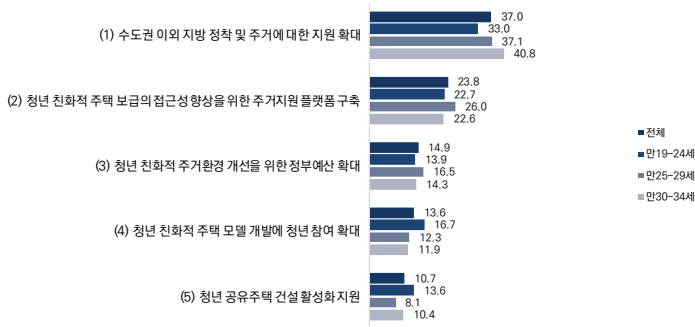


그림 VIII-18.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다. 추진내용

각 지역의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자리 여건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용하  
는 것은 지역의 인구유출과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  
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청년의 지역 정착은 단기적 대책이나 몇가지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국 각 지역의 대학에서  
졸업한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문제를 개인적 사안 혹은 지역의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이를 위한 주거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비전과 연차별 추진과제 및 소요예산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에 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중장  
기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사업을 시행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장기 주거 지원 로드맵 수립	2026년	200	-
	2027년	200	-
	2028년	200	-

※ 2025년에 추진 중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총용역사업비 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자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분야 4 청년정책의 교육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1 지역-산업기반 미래 첨단직무 캠퍼스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교육 기회 격차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서로 연관된 현상이다. 본 정책은 청년 고용정책인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의 연장선에서 현장중심-대학 연계 교육모델을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AI, 반도체, 바이오 등)과 접목시키는 것으로, 산업의 성장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나. 추진근거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 4명 중 1명 이상(29.9%)이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를 선택했다.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19~24세(27.0%), 25~29세(29.6%), 30~34세(33.0%)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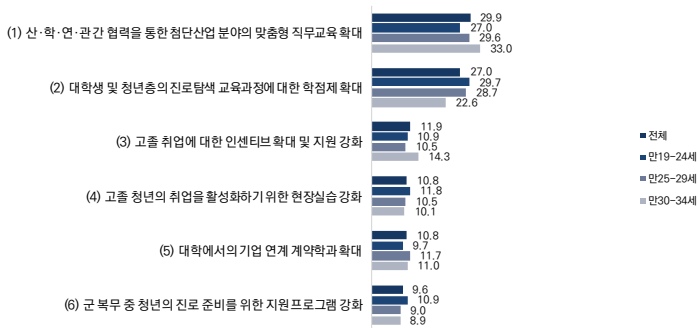


그림 VIII-19.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다. 추진내용

권역별 산단과 지역대학의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교육·직무훈련·취업이 연계된 캠퍼스 기반 실무트랙을 운영한다. 이 컨소시엄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과목의 50% 이상은 실무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4개월 이상 산업현장 인턴십을 의무화 하는 등의 필수 운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학부별로 AI/반도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맞춤 멘토로 초빙, 취업박람회·현장멘토링 정례화, 성과평가 후 취업·정착까지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라. 추진체계

전체 사업은 산업부(산업캠퍼스 선정·산단 협의체 구성, 사업 총괄), 교육부(교육과정·대학 모집 담당), 지자체(현장 매칭·일자리 연계 담당) 3중 거버넌스 구조로 구성한다.

###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캠퍼스 공간조성 및 기술확충 인턴십 멘토 운영비	2026년	160,000	40,000
	2027년	164,816	41,204
	2028년	168,777	42,444

※ 대학 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 및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교당 15억원)의 연간예산을 기준으로 사업 규모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자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② 평생교육 바우처 및 AI 진로설계 플랫폼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저소득·비수도권 청년들의 40% 이상이 “내 경력에 딱 맞는 전생애 학습 지원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는 등, 청년들이 경험하는 학습·직업 경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디지털·AI 전환 가속, 경험 격차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각자의 경로, 잠재력, 욕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유연화된 진로·경력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책요구 조사 중 대학 원격교육 지원강화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는 24세 이하 그룹에서 29.4%로 높았다. 청년 대상 면담 조사에서도 청년 중 10명 중 4~5명은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지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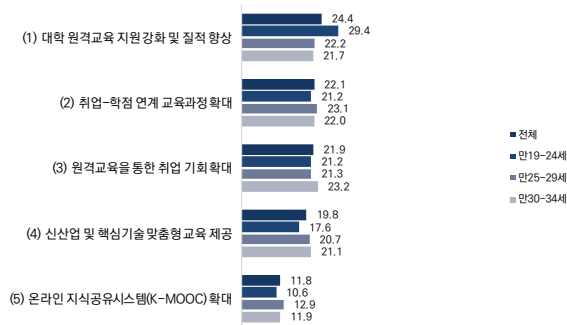


그림 Ⅷ-20.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

다. 추진내용

AI 기반 진로설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의 학력·관심분야·경험수준이나 목표를 AI가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교육과 직업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1인당 100만원, 최대 10만명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를 통해 개별 청년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과 성취도 데이터는 AI 플랫폼을 통해 취합되어 성장이력으로 저장/관리된다.

라. 추진체계

교육부에서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며 교육 바우처와 플랫폼 구축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창업 DB와의 연계, 평생교육진흥원과 지자체는 오프라인의 학습 거점을 제공하며, 청년패널 크루(정책참여단), 온라인 멘토단, 산업계 자문그룹이 플랫폼 내 상시 참여하며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환류 정보를 제공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플랫폼 구축, 시범 운영	2026년	26,200	-
바우처 및 플랫폼 운영	2027년	26,989	-
	2028년	27,801	-

※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연간 예산 262억원을 참고하고 연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③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이동학습권 보장

#### 가. 필요성 및 목적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청년이 본인에게 필요한 지역·기관·산업 현장을 이동하며 온·오프라인 수강, 현장실습, 프로젝트·스타트업 실전경험까지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와 인정시스템을 결합한 이동학습권 제도 및 차세대 평가·인증체계를 도입한다.

#### 나. 추진근거

청년대상 면담조사에서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30~40%가 교육 편중과 교육 정보 및 현장경험 기회 자체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지방·비수도권·직업전환 청년들은 교육 관련 네트워크의 결핍과 직업계고에서 대학으로, 그리고 대학에서 직업교육기관간의 물리적 거리를 포함한 연계성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채용 박람회나 취업 지원 사업만으로는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과 수도권 지역간의 실질적인 도전과 성장기회의 격차 해소에 근본한계가 존재한다.

#### 다. 추진내용

전국 단위의 '이동학습 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 이 바우처는 특히 지방·사회적약자에 게 가점을 부여하여 배정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바우처의 지원 내용은 이동(교통, 숙박, 식사)·수강·실습·캠프·인턴십 경비를 포괄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연계 혼합학습 학점제'를 도입하여 타지역에서 수강 및 실습한 학점과 현장실습을 포괄하는 포트폴리오 DB를 구축하여 개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이 DB는 학점·이수경력·경험·역량 모두 공식적으로 누적되고 호환되며 인정되는 통합 직업교육 플랫폼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이동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청년, 사회적약자, 비정규경로(직업학교-이직-복수취업-취창업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이 제공되도록 한다.

라. 추진체계

교육부가 정책 및 예산을 총괄하고 고용노동부(직업교육/인턴십 연계), 지방자치단체(지역 캠퍼스/기관·교통·숙박 연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정책환류·자문)의 협력을 통해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이동학습바우처, 현장실습 인턴십 지원, 학점인정 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2026년	17,360	-
	2027년	22,353	-
	2028년	27,631	-

※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의 고등학생 1인당 예산 768천원을 참고하여 청년 1인당 868천원 예산으로 첫째 2만명 지원, 매년 5천명 씩 증원을 전제로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④ 사회취약·저경험 청년 진로·생활 통합 동행코치 시스템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고졸, 비진학, 저소득, 1인 가구 등 복합 위험군에서 정책정보에 대한 인지도,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수준, 생활적응수준, 심리상담에 대한 결핍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면담 조사 결과, 단순한 복지나 교육 지원이라는 접근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취업이나 사회적응이 힘들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 나. 추진근거

취약계층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는 특히 비수도권 읍면지역 거주 청년, 저소득·비경제 활동 청년 그룹에서 높았으며, 청년들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단순 학습이나 진로상담을 넘어 생활적응과 정서 코칭 및 현장매칭까지 제공하는 가이드에 대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 다. 추진내용

상담전문인력이 진로+생활+정서+복지를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 개인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는 (가칭)‘전담 동행코치’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기업현장, 복지관, 청년센터, 온라인 상담 등을 연계한 현장-온라인 혼합형 진로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위기 청년의 발견-생활상담-학업 및 직업 상담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정책 대상자로는 우선 취약 그룹 청년들을 선발하고 전담동행코치 풀(pool)을 구성, 지역별 연계기관(복지관, 기업, 시민단체 등)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동행결과 및 성과 피드백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정책을 보완한다.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생활복지), 교육부(진로연계), 지자체(지역 관리/실행)가 코치 인력풀·복합 지원센터를 공동 추진하고, 동행코치(공인상담사), 기업·공공기관 연계 현장형 멘토, 지역사회 복지관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코치 및 운영비	2026년	800,000	-
	2027년	824,080	-
	2028년	848,885	-

※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 사업의 연간 예산 709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⑤ 디지털·AI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형 온라인 학습인프라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교육·AI 전환 시대에 비수도권, 저소득, 소외 계층 청년들은 AI·디지털 기초역량, 창의 융합교육, 메타버스·빅데이터 등의 미래역량교육 기회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 또한 대다수 온라인 교육플랫폼이 수도권·고소득경향 대상 위주로 편향되고, 오프라인(학원·고가교육) 활용이 어려운 계층의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있다.

### 나. 추진근거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나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가 21.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이 15.1%로 3위를 차지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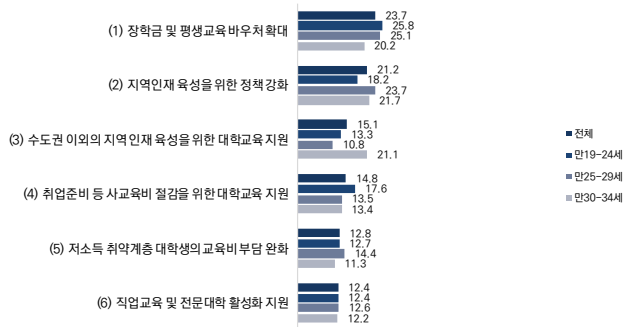


그림 Ⅷ-21.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다. 추진내용

전국 단위 ‘(가칭)공공 디지털러닝 허브’를 신설하여 AI·코딩, 데이터분석, 디지털콘텐츠·디자인, 메타버스·클라우드 실습 공간 및 VOD, 문제은행, 온라인 실시간 강의 패키지를 제공한다. 본 패키지에 대한 읍면·저소득·소수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학습 바우처를 연간 최대 10만 명에게 지급하고 자유롭게 코스를 선택하거나 교육 내용의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위 허브에서는 장기적 실습만이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온라인과 지역 실습을 병행하는 ‘디지털 트레이닝 캠프’를 운영하여 AI·데이터 분석 실습 프로젝트, 창의융합 챌린지 등의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라. 추진체계

교육부가 국가 디지털러닝 허브를 총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프라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며, 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에서는 공공 공부방·온라인 실습실의 설치와 운영을 분담한다. 대학·공공기관·온라인 플랫폼기업 컨소시엄 매칭을 통해 멀티 캠퍼스 운영 조직을 구성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플랫폼,콘텐츠 구축 운영 바우처, 튜터 사업 운영	2026년	99,000	11,000
	2027년	101,980	11,331
	2028년	116,722	11,672

※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디지털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 규모(963억원)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9:1 비율로 설정, 연간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연도별 예산 산정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분야 5 청년정책의 복지·문화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Ⅰ 청년 맞춤형 심리·정서 건강 클리닉 네트워크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우울·무기력 등 정서적 위기와 고립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취약·비수도권 거주 청년그룹에서 우울·불안 지표,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전국 평균의 1.3~2배로, 전문 치료·예방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상담 서비스를 벗어난 보다 포괄적인 정신건강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청년의 34.1%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 청년들은 진로·관계·가족·경제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기를 원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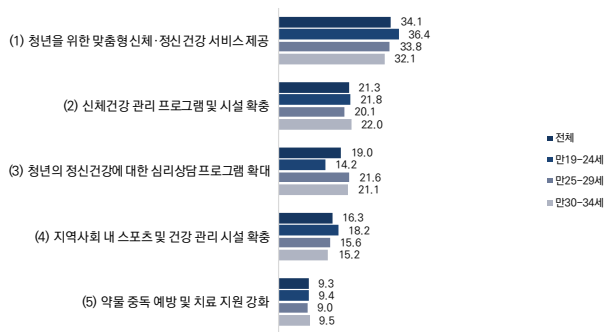


그림 Ⅷ-22.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다. 추진내용

권역별로 오프라인 상담과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는‘(가칭)청년 마음 건강클리닉’을 구축하여 간이정신진단·기질성격검사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류(일반군, 임상군, 위기군 등) 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단결과 위기군, 사회배려 청년(고립·워크아웃군 등)이 발굴되면 실시간 위기개입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진료 대기를 최소화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 표준 매뉴얼을 담당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직을 운영한다. 정신건강진흥센터, 지역대학상담소, 청년민간네트워크 등 다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력과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센터조성, 온라인클리닉, 인력, 바우처, 교육 및 평가	2026년	154,000	66,000
	2027년	158,635	67,987
	2028년	163,410	70,033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의 연간예산인 약 2,255억원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7:3 비율로 연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출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국정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② 청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허브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 세대의 사회참여, 공공기여, 자원봉사 활동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하지만,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접목한 성공적 융합모델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 이후 청년의 문화예술기반 메이커(프로젝트), 돌봄, 생태, 교육, 도시재생 등 공공참여 활동 수요 및 기대 효과가 현저히 증가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참여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문화활동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청년 창업 지원 확대나 청년예술가 및 창작자 지원 확대 등, 청년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참여하는 지역사회 참여 및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들이 높았다. 심층 면담을 통해서는 ‘딱딱한 행정형·지시형 봉사’ 대신, 문화기획, 예술활동, 시민문화교육, 문화의 디지털혁신 등 창의적 지역 참여 활동에 대한 수요가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의 사회봉사와는 다른 문화활동과 지역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를 보여주었다.

### 다. 추진내용

전국·광역·기초단위 ‘청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허브’를 설치, 문화예술(공연, 전시, 미디어, 디자인, 메이커, 영화 등) 기반 사회공헌프로젝트, 시민교육, 돌봄, 디지털멘토, 생태보전 등 다양한 참여활동의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기획단, 예술가, 디자이너, IT멘토, 시민교육가, 생활코치 등 다중전문가 그룹이 주기적으로 청년 참여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지원한다. 참여 청년들에게는 ‘청년사회공헌 크레딧’을 부여하고, 봉사시간 및 성과 포트폴리오를 제공, 이를 바탕으로 청년 예비사회적기업·창작팀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통해 사회진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되, 행정안전부는 사회 봉사와 공헌 활동의 관리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며, 전국 예술문화센터, 지역 NPO/사회적경제 조직, 디지털플랫폼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을 지원한다. 청년문화보드, 봉사활동 모니터링팀, 성과 DB·리더/참가자 커뮤니티 지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허브 인프라, 프로젝트 공모, 전문가, 인증, 시상 등	2026년	6,150	-
	2027년	6,335	-
	2028년	6,526	-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도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예산인 61.5억원을 참고하여 연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③ 지역문화 재생을 위한 유스컬처럼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의 문화참여 욕구는 지역과 상관없이 높은 반면, 실제 참여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뚜렷했다. 또한 기존의 축제나 일회성 행사 위주의 청년 문화사업은 청년 기획자나 참여자의 구조적 성장경로(기획-운영-직업화-창업)를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문화사업 기획, 멘토링, 전시·축제, 창업, 브랜딩까지 연계된 통합 패키지 접근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적인 문화 참여를 통한 문화적 역량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문화 및 예술 콘텐츠 제작 펀드(자금) 조성’(22.9%), ‘청년예술가와 청년창작자 지원 확대’(19.4%)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지역 청년예술기획자 인큐베이팅 사업(지자체의 문화재생 센터) 등이 운영되면서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이 형성되어 정책의 정착 가능성도 높이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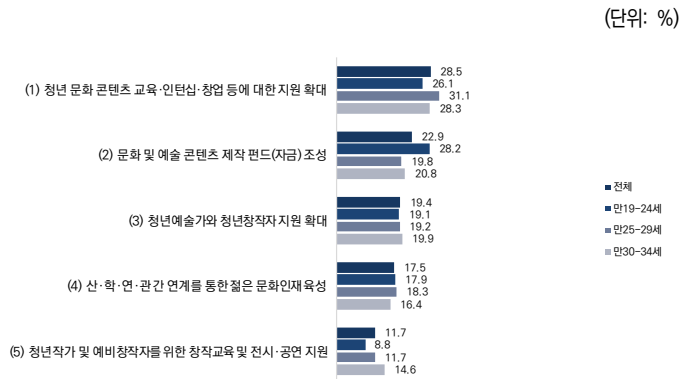


그림 Ⅷ-23.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

다. 추진내용

폐교나 노후 건물, 혹은 공공시설을 리노베이션하여 지역특화형 ‘유스컬처랩’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이용하여 메이커·공연·전시·방송·콘텐츠 제작을 병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청년 문화기획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지원하며, 예술·기술·디자인 창작을 결합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와 청년문화활동을 융합하여 운영한다.

라.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의 문화기획부서에서 사업을 총괄하되, 생활문화협동조합, 청년예술단체, 메이커스페이스 네트워크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직업별 멘토폴, 입주기획단, 청년예술지도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공간조성 및 장비 구입	2026년	11,200	4,800
	인력,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2027년	11,537
	2028년	11,884	5,093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분야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조성 예산 160억원(2022년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산정,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출.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4] 청년 개인별 복지지원 통합플랫폼 ‘ONE 복지허브’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을 위한 복지 지원프로그램들이 주거, 건강, 생활비, 심리, 고용등의 영역에 따라서 부처나 기관별로 나뉘어 운영됨으로써 지원이 단절되거나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복합 취약군(저소득+가족+고립 등)은 여러 서비스 누락, 행정장벽·서류과정·정보검색 어려움에 따른 2차적 소외와 정책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청년들의 복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오히려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청년복지 지원정책에 있어 ‘신청주의’에서 벗어난 접근이 시급하다.

##### 나. 추진근거

복지플랫폼 복지로의 서비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체 22개 부처의 371개 복지서비스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16%에 불과하며, 나머지 106개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이용석, 2023). 청년주거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청자 49만 5천 명 중 33.1%만이 선정되었다(전민정, 2024). 본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서도 복지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지연이나 좌절 경험이 언급되었다. 이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중심의 신청주의적 사업 운영의 결과로, 개별 청년을 중심으로 통합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들이 알아내서 신청해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청년에 대한 DB를 바탕으로 AI 등을 통해 그 청년에 해당하는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단계별로 안내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원스톱으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방식의 추진이 필요하다.

##### 다. 추진내용

본 정책의 핵심은 복지지원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절차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과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가칭) ONE 복지허브’ 포털을 구축,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복지/문화/건강 패키지를 자동 추천하고 신청 없이도 지원 가능 여부를 평가해서 결과까지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즉, 청년들이 원클릭으로 신청→심사→지급→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프라인 복지관/상담센터 데이터와 연계하여 구축된 DB를 통해 실시간 수급/미수급/중복 위험을 관리하고 개인별 이력에 맞추어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에서 ONE 복지허브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총괄하며, 지자체는 복지정책의 전달을 담당한다. 전국 복지관과 청년 패널을 통해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각 복지협회·산하기관과 자동 연동되는, 원클릭 DB를 공유함으로써 개별 청년의 복지지원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플랫폼 구축 및 DB연동	2026년	50,000	-
	플랫폼 추가 구축 및 서비스 운영	2027년	51,505
	서비스 운영	2028년	11,000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예산(5년간 약 1200억원)과 올해 운영예산 108억원을 참고하고, 연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출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자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Ⅴ 청년생활기술성장센터 프로그램 사업 운영

### 가. 필요성 및 목적

취준생·이직자·1인 가구 그룹의 청년들은 재정관리, 식생활, 주거안전, 비상사태 대응 등의 일상생활 기술이 취약해서 사회진입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 그룹에는 단순히 직업교육이나 진로 상담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생활 능력을 실습할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체험을 통한 생활역량의 습득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력과 사회진입에 필수적인 심리적 자산을 제공하기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심층면접 조사 결과, 인생 첫 독립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생활 코칭·멘토링에 대한 수요, 여러 가지 국면에서의 실패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 체험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이나 고졸 청년 등의 그룹에서는 가계부 쓰기부터 비상금·보험 관리, 건강·영양관리, 안전·위기대응 등 실제 일상 견인 자립훈련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추진내용

지역단위의 (가칭)‘청년생활기술성장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예산관리, 소비·저축 습관, 대출·빚관리 전략, 식단 및 생활건강 코칭, 주거관리(청소/방재), 사회초년생 법률기초 등을 통합적으로 교육한다. 청년들의 특성에 맞춰 초기상담을 통해 교육의 내용과 진도를 설계하고, 체험 학습과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교육으로 이어지는 1:1 맞춤 플랜을 구성,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에게는 (가칭)‘청년 독립 인증’수료증을 발급하거나, ‘자립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실습·성과 적립 후 마일리지를 통한 포상이나 실제 일자리·임대 등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라. 추진체계

교육부가 센터의 설립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총괄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사회적기업·생활금융회사 등의 다기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생활코치·금융상담가·사회진입 코치 등 멀티전문가를 영입하고 지역별 자립 지원단을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센터, 실습, 멘토링, 마일리지	2026년	11,000	-
	2027년	11,331	-
	2028년	11,672	-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사업 예산을 참고하되, 기존 청년교육훈련 인프라를 고려하여 예산규모 추정, 연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출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Ⅰ 디지털·데이터 시대 청년 권리보호 및 정보주권 강화

### 가.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플랫폼 사회에서 청년은 데이터 주권과 사적 정보권,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편향, 디지털 폭력(사이버불링·허위정보·사칭) 등 다중위험에 노출된다. 저소득, 여성, 지방 청년 등 취약그룹 청년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피해시 권리 구제의 경로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를 수동적 소비자로 간주하는 단기적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능동적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각 지자체 2030 청년위원회 혹은 자문단의 정책 제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주도의 디지털 권리침해 실태 점검, 청년 우선 디지털 안전망, 알권리(개인정보 처리내역, 삭제 요청)에 대한 교육과 신청을 통합한 서비스’, ‘피해 구제 신속 트랙과 실명제 강화, 사고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정책이 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추진내용

전국에 ‘청년 디지털 권리 헬프데스크(가칭)’를 설치, 365일 채팅/콜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침해 피해 상황에 대한 실명·익명 신고 및 구제, 지원금 지급, 삭제·복원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디지털 권리교육 및 피해구제 분쟁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데이터 유출 시 신고와 구제 절차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한다. ‘잊혀질 권리 및 정보 삭제권’의 법제화 및 서비스를 현행 24세에서 2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플랫폼(포털·SNS·게임·이커머스·금융 등)과의 협약을 통해 피해시 보상규정 표준화하여 권리 구제를 효율화한다.

라.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책주관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법제도의 개정과 심의 및 조정을 담당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법무부는 분쟁과 구제를 담당한다. 민간 플랫폼협회와 청년패널네트워크, 자원봉사 청년사무국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을 실행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 전문인력, 교육·홍보	2026년	9,000	-
	2027년	9,271	-
	2028년	9,55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립준비청년디지털진로지원 사업 예산(10.4억원)과 행안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 예산(103억원)을 참고하여 예산 산출, 연간 물가상승을 반영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② 온·오프 융합 청년정책시민의회 설치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기본법(제7조)과 청년참여 활성화(제6장 정책참조)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대표 기구의 대표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나 청년들의 정책참여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각 지역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청년참여기구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정책수요 조사결과,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가 28.9%로 가장 높은 등, 청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결여에 대한 지적은 반복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조직적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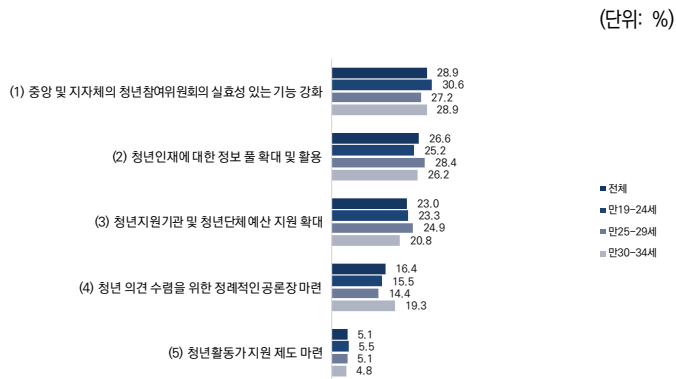


그림 VIII-24.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다. 추진내용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청년의회’, ‘청년정책위원회’ 등 대표적 참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되 모든 정책단계(기획, 집행, 평가)에 청년대표를

최소 30% 이상 할당한다.

청년 참여기구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연 1회 이상 참여기구 활동 실적 DB를 전면 공개하고 주요 정책 권고사항 정기 보고 및 피드백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참여 청년에게 공식 위촉장, 활동인증서, 역량 강화 연계(진로·리더십 캠프)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확산을 유도한다.

라. 추진체계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전국 청년정책의 방향과 세부사업을 심의·조정 하고, 범부처·부처별 정책을 총괄한다. 17개 시도별로 지자체장과 청년대표, 전문가 및 청년단체위원이 참여하는 ‘광역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과 예산, 지역별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230여개 시군구 단위에는 ‘기초 청년의회’를 의무 설치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위원회 및 의회 설치 운영비, 온라인 플랫폼과 DB시스템 구축	2026년	20,000	10,000
	2027년	15,452	10,301
	2028년	15,917	10,611

※ 지자체별 청년참여예산제 및 청년의회 운영 예산을 기준으로 최소 운영예산을 산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예산(50억 원)은 전액 국비 부담, 그 외 운영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6:4 비율로 배정, 연간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③ 청년 참여 미디어 모니터링 패널 운영

#### 가. 필요성 및 목적

AI, 유튜브, SNS, 포털 등 뉴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허위정보, 온라인폭력, 차별, 청년대상 미디어 소비자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일상화되는 반면 청년이 정치·사회·젠더·시장 등에 관한 주제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침해되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능동적 참여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나. 추진근거

청년대상 심층면접 결과, 특히 여성에게서 온라인 허위정보나 왜곡된 정보의 경험, 소수자 차별에 대한 경험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혐오·차별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 성공 경험은 거의 없었다. 이는 미디어와 플랫폼의 영향력에 비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시민으로서 감시하고 비평하고 생산하는 주체로 참여할 기회나 실제 비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 다. 추진내용

청년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감시·팩트체크 패널을 구성, 지역·이슈별 전담 청년모니터팀(뉴스·SNS·유튜브 등 플랫폼별 운영), 가짜뉴스·혐오·차별콘텐츠·담합·무분별 광고·정치여론조작 등에 대한 집단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센터에서는 분기별 ‘공식 팩트체크 뉴스·DB’를 발간하고, 정책권고 리포트를 작성한다. 플랫폼·언론·커뮤니티와 협력한 “공식 신고·삭제·분쟁중재” 핫라인을 운영하고, 권리보호,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 미디어분쟁, 권리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차별, 허위정보 등)에 대한 빠른 구제와 함께 신고 및 가해자 제재를 수행한다.

라. 추진체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고,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교육연계를 담당, 언론재단에서 교육자 인증과 콘텐츠 관리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 그 외 전국 미디어협동조합과 교사 혹은 멘토단을 구성하여 패널의 운영을 지원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감시팀, 교육랩, 권리상담, 플랫폼, 성과평가, 캠페인	2026년	1,000	-
	2027년	1,030	-
	2028년	1,061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SNS 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예산 10억원 및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원을 참고, 연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산출.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4 지역별 청년참여 환경격차 해소 및 청년참여지원 거점센터 구축

##### 가. 필요성 및 목적

지역별 청년참여의 환경과 기회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도서·산간 지역은 정보·교통·소통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 접점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높다. 청년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에 모든 지역 청년이 평등하게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정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정책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추진근거

청년재단의 2024년도 조사결과,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의 정책참여 경험률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청년재단, 2024). 그 이유로는 이동과 정보 접근성, 물리적 인프라 부족이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는 지역·계층·환경에 상관없이 청년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다. 추진내용

광역·기초 단위 권역별로 청년참여지원센터를 신규 설립하여 시군구 및 광역 거점 연계망을 구축한다. 센터는 청년 참여관련 정보 및 상담의 제공, 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정책제안 창구, 청년 커뮤니티 네트워킹 지원, 지역 특화사업 개발 및 실행을 담당한다.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교통·정보접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교통취약지역에서 정책참여 기관에 등록된 청년에 월 실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농산어촌, 도서·산간지역을 위해 온라인 참여를 보장한다.

라. 추진체계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책과 예산을 주관하고 각 시·군·구 청년정책 추진부서 및 청년정책위원회가 센터 추진 및 운영을 주도한다. 청년참여 거점센터는 센터 장과 전담실무자, 상담사 및 ICT 담당자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되, 지역 일자리센터, 청년단체,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별 수요 기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센터건립비 및 운영비, 사업비	2026년	8,000	
	사업비 (교통/통신비 지원 등)	2027년	6,000
	2028년	6,000	

※ 지자체 단위 청년지원센터 예산인 4.6억~19.5억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교육 활용방안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 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 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⑤ 청년참여 정책실명제·예산배심제 추진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이 자신이 낸 정책 의견과 감시·평가가 실제로 반영되며, 그 결과와 함께 정책자 및 담당자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은 청년 정책 참여의 확대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 운영하는 청년배심·시민배심제, 실명공시제 등은 정책 집행의 합리성과 시민참여의 효능, 부정행위, 실패율 감소 등을 입증하며 국내 시범사업에서도 예산집행률, 정책집행 정합도, 민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 나. 추진근거

국내외(서울 실명공시대상사업, 네덜란드/캐나다 지방청년배심제) 사례 분석 결과 정책 실명제 도입 시 정책반영률·집행투명도·불만해소율이 비도입군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추진내용

청년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청년정책 및 사업별 책임자(담당부서-관리자-의사결정 실명), 예산·집행내역·의견수렴 DB, 집행결과·이행률·지연·불만처리 현황을 분기별, 연 2회 이상 공개한다. 단, 정책담당자에 대한 비식별 고지 및 마스킹을 병행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담당자에 대한 개인적인 민원이나 불필요한 압박을 최소화한다. ‘청년참여 예산배심제’의 운영은 연 2회 이상 사업 예산 주제별 배심패널(청년, 시민, 외부 전문가구성)을 구성하여, 실무담당 발표·공개토론, 실명패널의 집행 결정, 평가서 채택을 수행한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온라인 배심플랫폼 및 오프라인 공청회·토론을 병행한다. 배심 패널로 참여한 위원은 평가/심의·정책제안 실적 포인트 이력제를 도입하고 우수참여자 인센티브(학점, 자격증, 지역인재 가점 등)를 통해 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라. 추진체계

행정안전부에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총괄한다.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부서는 본 정책의 집행과 현장 감시를 담당하고, 공공기관에서 구성한 정책실명제 관리단에서 정책 성과 평가와 공시를, 청년패널 및 주민패널은 모니터링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제시를 담당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실명/배심제 시스템, 교육, 포럼, DB, 인력비	2026년	949	407
	2027년	978	419
	2028년	1,007	432

※ 226개 지자체 기준 연간 운영비 400만~800만원을 기준으로 전제 사업예산(135.6억)을 도출, 국고와 지방비를 7:3 비율로 산정, 연간예산에는 물가상승을 고려.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자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 3. 결론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수요자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며, 둘째,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평가모형, 정책평가,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 평가,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정책평가 및 평가모형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고, 청년정책과 청년정책 평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평가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 수요자 관점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논의하고, 평가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 수요자 중심 평가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평가에 관한 주요국 해외사례 고찰이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그동안 진행된 청년정책 진단 혹은 평가 동향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만들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수요자 중심 평가의 분류, 영역, 지표 등 평가체계를 설계하여 평가모형(안)을 구안하였으며, 구안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체제 및 평가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해 AHP를 통한 평가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타당화된 평가모형을 근거로 실제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및 조사도구를 제작하였다.

개발된 평가도구를 활용한 수요자 청년의 양적 진단결과를 전문가 평가와 비교하여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있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청년과 전문가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였다. 청년의 경우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1점을 기록했다. 이어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에 대해 3.35점의 평균을 기록했으며,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는 3.26점의 평균을 보였다. 반면,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한편,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를 4.3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이는 청년의 평균 점수(3.41점)보다 0.92점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가 4.07점,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가 4.00점으로 평가되어, 각각 청년 점수보다 0.93점, 0.74점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와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항목은 각각 3.73점과 3.40점으로, 청년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그 격차는 각각 0.38점과 0.15점으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청년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있어서 5개 중점 분야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청년 응답자의 54.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청년 전체 평균은 3.52점, 전문가 평균은 4.13점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책 과제 설정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가 고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주거 및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정책 참여에 대해 전문가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다양성 고려의 경우 일자리, 교육, 참여·권리 분야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지만 주거,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정에 청년 참여가 고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전체 타당성 평가 중 가장 낮은 2.50점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있어서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실제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 또한 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한 평가는 주거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보다 더 낮게 평가했다. 청년들은 주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해 전문가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와 ‘삶의 질 개선 기여 여부’를 전문가보다 높게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분야별 정책의 지속 필요성은 대체로 약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참여·권리 분야에서 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청년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특히 참여·권리 분야의 해당 점수가 2.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권리 분야에서 해당 정책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67점의 평가가 나타나 전문가의 전체 효과성 평가 중 가장 낮았다.

양적 평가와 더불어 심층면담으로 진행된 수요자 청년의 질적 진단결과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있어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립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격차 및 기회 불평등 심화'에 대한 환경 분석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정책 수립 배경이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거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원인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둘째,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의 경우, 청년들은 5대 중점 분야 설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일자리와 주거 분야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정책 과제들이 청년들의 '기초 자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세부 내용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다양한 직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성 응답자들은 다양성이 고려된다고 느낀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나 특정 전공의 취업 어려움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비용 경감 등의 정책 과제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허위 매물 단속이나 전세 사기 예방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거 취약 청년'의 모호한 기준이나 부모 배경에 따른 혜택 제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와 같은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정책 내용이 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정책이 지나치게 대학 중심적이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깨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 도약 계좌, 내일 저축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정책이 군 복무 남성, 청년 예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특정 정책의 경우 중복 지원이나 지원 대상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청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도성을 확대하는 것에 중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청년 참여위원회' 같은 제도의 홍보 부족과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으며, 정책 참여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수에게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셋째,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공정 채용 및 직장 문화 개선의 미흡을 주요 문제로 언급했다.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미흡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현황 파악과 채용 비리 감시 등 질 관리 및 개선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거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 정책 만으로는 집값 안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책의 혜택이 특정 소득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이나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등록금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았으나, 과도한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과 일자리의 실질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청년 적금, 군 적금, 청년 도약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화' 분야 정책이 일반 청년보다는 예술가 등 특정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년들은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정책의 인지도가 낮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대표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의 직접 평가 이외에 향후 정책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정책 요구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당위성과 배경을 분석하여 파악함에 있어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현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 반영'이 6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 응답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만30~34세: 64.0%)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지역 격차 및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청년 육성 정책 필요성(59.9%),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청년 역량 강화 필요성'(58.1%)이 뒤를 이었다. 청년들의 삶의 환경을 분석할 때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 응답은 만30~34세 집단에서 72.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66.1%),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53.4%)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할 때는 '다양한 청년 집단(연령, 지역, 계층 등)의 요구 반영 정도'가 68.9%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이는 특히 만30~34세 응답자(70.8%)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이 5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가 58.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정책의 5가지 중점영역 각각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가 32.7%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 지원'이 27.3%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연령이 낮을수록(만19~24세: 28.5%) 이 응답이 높았다.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는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가 3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직장 내 파도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거 분야에 있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은 69.5%로 나타나 주거 분야는 청년들이 가장 기대하는 변화로 나타났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25.7%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가 2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는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24.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셋째, 교육 분야에 있어서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 촉진'이 26.1%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만19~24세 응답자(29.4%)에게서 특히 높은 응답을 보였다.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학금 및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가 21.2%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가 2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대학 원격교육 지원 강화 및 질적 향상'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확충'이 23.7%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넷째, 복지·문화 분야에 있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저축계좌 확대'가 33.8%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강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건강증진 정책으로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이 34.1%로 가장 중요하게 꼽혔으며,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28.5%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건강검진 정책개선 및 확대'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년 자산운용 및 재정안정 지원'이 22.0%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참여·권리 분야에 있어서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가 28.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만19~24세 집단에서 30.6%로 가장 높았다.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청년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이 30.6%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이 20.7%, '청년의 국제활동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19.7%, '글로벌 이슈에 관한 청년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가 1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30.3%로 가장 높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고객인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 평가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계 구축이란 비전을 기반으로 6개 분야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정책 수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의 요구 반영 체계 구축, 청년 삶 분석의 리얼리티 제고를 위한 패널 조사 추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요자 연차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강화, 청년정책 비전 수립 청년 데스크포스 운영, 청년의 변화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미래사회 예측 연구 추진 등이다.

둘째,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인센티브 확대 추진, 취업 청년의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일터 안전망 구축,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체 지원, 공정 및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컨설팅 추진, 청년 근로 환경 모니터링 사업 추진 등이다.

셋째, 청년정책의 주거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주거 영향 평가 추진, 안정적 주거를 위한 청년의 정책요구 실태조사 실시, 청년의 전월세 주거 지원 정책의 다양성 확대, 청년의 안전한 주택 거래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장기 주거 지원 로드맵 수립 등이다.

넷째, 청년정책의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산업기반 미래 첨단직무 캠퍼스 구축, 평생교육 바우처 및 AI 진로설계 플랫폼 구축,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이동학습권 보장, 사회취약·저경험 청년 진로·생활 통합 동행코치 시스템 구축, 디지털·AI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형 온라인 학습인프라 구축 등이다.

다섯째, 청년정책의 복지·문화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청년 맞춤형 심리·정서 건강 클리닉 네트워크 구축, 청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허브 구축, 지역문화 재생을 위한 유스컬처랩 구축, 청년 개인별 복지지원 통합플랫폼 ONE 복지허브 구축, 청년생활기술성장센터 프로그램 사업 운영 등이다.

여섯째, 청년정책의 참여·권리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디지털·데이터 시대 청년 권리보호 및 정보주권 강화, 온오프 융합 청년정책시민의회 설치, 청년 참여 미디어 모니터

링 패널 운영, 지역별 청년참여 환경격차 해소 및 청년참여지원 거점센터 구축, 청년참여 정책실명제·예산배심제 추진 등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청년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정책을 이해하고 그 장단점을 진단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가장 먼저 당면하는 상황은 청년들이 정책안의 기술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는 것이고, 면담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연구진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고 이해가 안되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시로 받곤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든 생각 중 하나는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쉽게 전달되고 이해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청년들은 개별 정책사업들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를 알았어도 그 수혜대상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정책고객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책 시행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수요자 청년의 평가와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연구진과 조사원이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설명을 수시로 제공하였지만, 청년정책 담당자나 관련 전문가들 만큼의 이해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고객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는 수요자 중심 평가와 향후 유사 및 관련 연구에서 평가대상 정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년정책에 대해 수요자 청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정책고객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기여할 수 있고, 정책수요자의 의견과 판단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혹은 격년 주기의 수요자 진단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에 수요자인 청년의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정책과제의 편성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을 비롯한 각 청년정책이 청년의 시각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청년의 진단 결과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고객인 청년의 비판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2025).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09.08.
-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계부처합동, 2020.12.
- 관계부처 합동(20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2024.3.29.
- 국립국어원(2025). 정책평가의 정의. 국립국어원 온라인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_top=query&query=%EC%A0%95%EC%B1%85%ED%8F%89%EA%B0%80](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_top=query&query=%EC%A0%95%EC%B1%85%ED%8F%89%EA%B0%80). 2025.01.30. 인출.
- 국무조정실(2023). 2024년 청년정책 평가지침: 2023년도 실적.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김창환, 박미선, 성재민, 이철선, 최한수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국무조정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하형석, 이운주, 이용해, 강영배, 김상훈, 김창환, 박미선, 박성재, 박의환, 박자경, 임성근(2024). **2024년 청년정책 종합평가연구**. 국무조정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명수(199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 박영사.
- 김문길, 김태완, 김성아, 곽윤경, 정세정, 박미선(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청년의 삶과 소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성렬(1999). **교육기관평가의 개선방안 탐색**. 교육발전, 제18권 제1호.
- 김승훈(2003). **교육정책평가의 전제조건에 관한 일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18호.
- 김영수(2023). 정책평가 척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형주, 김기현, 배정희, 신선미, 기현주(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 청년 거버넌스와 참여**. 세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형주, 김영애, 김인규, 김혁진, 임지연, 한도희(2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 연구 II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김영애, 조선하(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화준(2001). **정책평가론.** 서울 : 법문사.
- 대만한국정부(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대통령실 배포자료. 2025.9.
- 민병제(2002). 교육정책 종합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해남, 박미희. (2021). 다중격차 시대 지역 청년의 자본과 아비투스. **경제와사회, 가을호**, 55-87.
- 배정희, 김기현 (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 배호순(1994). **프로그램 평가론.** 서울 : 원미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6%80%EC%97%85%EB%AC%B4%ED%8F%89%EA%B0%80%EA%B8%B0%EB%B3%B8%EB%B2%95>,에서 2025년 1월 30일 인출.
- 봉민근(1995).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서울 : 홍익제.
- 송근원, 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나남출판사.
- 송도훈, 정규형, 김이슬, 이약남. (2025). 청년 1 인가구의 주거 환경만족도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6(1), 434-442.
- 윤수재(2003). 우리나라 중앙 정부의 정책평가시스템 발전 방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이근주(2018). 정책평가에 있어 국민참여 확대에 대한 시론적 논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 213-232.
- e-나라지표(2025).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에서 2025년 3월 20일 인출.
- 이승희, 최금진, 박은실(2005). **교육기관 평가.** 서울 : 학지사.
- 이영만, 권순환, 장해자, 김태연, 김동은, 구교정, 김세령(2004). **학교·교육기관 평가.** 서울 : 한국문화사.
- 이용석 (2023.10.13.). 복지 플랫폼 ‘복지로’, 371개 사업 중 86%가 방문 신청해야.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52276> 에서 2025년 9월 23일 인출.

- 이윤식(2018). **정책평가론**. 서울 : 대영문화사.
- 조성은, 김문길, 강지원, 김기태, 김성아, 신영규, 이아영, 임덕영, 박지혜, 이혜빈, 박경국 (2023).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 연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민경 (2024.10.04.).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많은데 예산 남아도는 이유는?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70381>에서 2025년 9월 23일 인출.
- 청년재단 (2024). 청년정책·이슈 톺아보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https://kyf.or.kr/user/board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450&nttNo=7124](https://kyf.or.kr/user/board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450&nttNo=7124)에서 2025년 9월 23일 인출.
- 통계청(2025a).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25.01.15.
- 통계청(2025b). 2025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25.09.10.
- こども家庭庁(2025a). 子供・若者インデックスボー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ba9285a8-96bc-4210-9e15-32d0a4f630fe/5f89e0dd/20230810\\_councils\\_shingikai\\_kihon\\_seisaku\\_0sqZmhOz\\_14.pdf](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ba9285a8-96bc-4210-9e15-32d0a4f630fe/5f89e0dd/20230810_councils_shingikai_kihon_seisaku_0sqZmhOz_14.pdf) 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 こども家庭庁(2025b).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9b95185-2d55-4783-a955-983b5283ccd2/3c0b681e/20231228\\_policies\\_kodomo-taikou\\_junbishitsu\\_06.pdf](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9b95185-2d55-4783-a955-983b5283ccd2/3c0b681e/20231228_policies_kodomo-taikou_junbishitsu_06.pdf) 에서 2025년 3월 10일 인출.
- 宮本みち子(2023). 若者の権利と若者政策 明石書店.
- 内閣府 (2022). 令和4年版 子供・若者白書.
- 内閣府(2025a). 内閣府本府政策評価基本計画 [https://www8.cao.go.jp/hyouka/r2-r6\\_kihonkeikaku.pdf](https://www8.cao.go.jp/hyouka/r2-r6_kihonkeikaku.pdf) 에서 2025년 3월 8일 인출.
- 内閣府(2025b). 子供・若者インデックスボードとは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index\\_board/index.html](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index_board/index.html) 에서 2025년 3월 8일 인출.
- 子ども家庭庁・(2024) 令和6年版 こども白書.
- 地域おこし協力隊(2025). 「地域おこし協力隊」ってどんな制度?. <https://www.iju-join.jp/chiikiokoshi/about.html> 에서 2025년 3월 8일 인출.

総務省(2025a). 政策評価に関する法令、基本方針、ガイドライン等.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hourei.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hourei.html#/) 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総務省(2025b). 政策評価ポータルサイト.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portal/index.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portal/index.html) 에서 2025년 3월 10일, 2025년 3월 14일 인출.

総務省(2025c). 政策評価制度について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000065209.html#label2](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000065209.html#label2) 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総務省(2025d).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houritu.htm](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houritu.htm) 에서 2025년 3월 8일 인출.

総務省(2025e). 総務省行政評価局が取り組むEBPM. [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ebpm.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ebpm.html#/) 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厚生労働省(2025). 政策評価 <https://www.mhlw.go.jp/wp/seisaku/hyouka/#wakugumi> 에서 2025년 3월 10일 인출.

Aazami, A., Valek, R., Ponce, A. N., & Zare, H. (2023).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interventions for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s*, 12(9), 474.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25). Runaway and homeless youth. <https://acf.gov/fysb/programs/runaway-homeless-youth>에서 2025년 3월9일 인출.

Anderson, E. J.(1979). *Public Policy-Mak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Becky Feldman (2025). The Second Look Movement: A Review of the Nation's Sentence Review Laws. <https://www.sentencingproject.org/reports/the-second-look-movement-a-review-of-the-nations-sentence-review-laws/> 에서 2025년 3월 11일 인출.

Béland, D., Dinan, S., Rocco, P., & Waddan, A. (2021). Social policy responses to COVID-19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Explaining policy variations between two liberal welfare state regime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5(2), 280-294.

- Bowden, A. B., & Belfield, C. (2015). Evaluating the talent search TRIO program: A benefit-cost analysis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6(3), 572-602.
- CDC. (2022). *Suicide prevention resource for action: A compilation of the best available evidence*.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Díaz, Y., Hessel, P., Avendano, M., & Evans-Lacko, S. (2022).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Unpacking the relationship. *Social Science & Medicine*, 311, 115324.
- European Commission (2024).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EU Youth Strategy 2019-2027*.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Fischer, N. R. (2022). School-based harm reduction with adolescents: a pilot study. *Substance Abuse Treatment, Prevention, and Policy*, 17(1), 79.
- Greer, S. L., Dubin, K. A., Falkenbach, M., Jarman, H., & Trump, B. D. (2023). Alignment and authority: Federalism, social policy, and COVID-19 response. *Health Policy*, 127, 12-18.
- Griffin, K. W., & Botvin, G. J. (2010). Evidence-based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substance use disorders in adolescent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19(3), 505-526.
- Hockenberry, S., & Puzzanchera, C. (2024). Juvenile court statistics 2022.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 Irina Lonean(2021). Insights into Youth Policy Evaluation <http://youth-partnership-eu.coe.int>. Council of Europe and European Commission.
- Kaplan, R. S., & Norton, D. P.(1998).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siness Review on Mesuring Corporat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Lerner, R. M., Lerner, J. V., Murry, V. M., Smith, E. P., Bowers, E. P., Geldhof, G. J., & Buckingham, M. H. (2021).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2020: Theory, research, programs, and the promotion of social justi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1(4), 1114-1134.
- Mahathey, A., Brown, S., Sousa, T., Loya, K., Walker, J.T., & Santucci, A. (2021). *Findings from the transitional living program youth outcomes study*. OPRE Report 2021-191, Washington, DC: 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Mendel, R. (2023). Effective alternatives to youth incarceration. The Sentencing Project. <https://www.sentencingproject.org/reports/effective-alternatives-to-youth-incarceration>에서 2025년 3월 7일 인출.
- Miller, C., Cummings, D., Millenky, M., Wiegand, A., & Long, D. (2018). *Laying a Foundation: Four-Year Results from the National YouthBuild Evaluation*. MDRC.
- Nadeem, E., & R. Van Meter, A. (2023).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adolescents: an opportunity to build resilient system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37(2), 274-281.
- Nakamura, R. T. & Smallwood, F.(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Nation, M., Chapman, D. A., Edmonds, T., Cosey-Gay, F. N., Jackson, T., Marshall, K. J., ... & Trudeau, A. R. T. (2021). Social and structur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youth violence: shifting the paradigm of youth violence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1(S1), S28-S31.
- Nickerson, A. B., & Sulkowski, M. L. (2021). The COVID-19 pandemic as a long-term school crisis: Impact, risk, resilience, and crisis management. *School Psychology*, 36(5), 271-276.
- OECD (2024). *OECD Youth Policy Toolki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4b6f8f3-en>에서 2025년 3월 7일 인출.

- OJJDP (2025). Legislation. <https://ojjdp.ojp.gov/about/legislation> 에서 2025년 3월 11일 인출.
- Olve, N. G., Roy, J., & Wetter, M. (2000). BSC 구축과 실행사례. 송경근 역. 서울 : 한연(원저 1999 출판).
- Park, I. Y., Speer, R., Whitfield, D. L., Kattari, L., Walls, E. N., & Christensen, C. (2022). Predictors of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youth: The intersection of race/ethnicity by gender ident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39, 106536.
- Phan, V., & Kloos, B. (2023). Examining civic engagement in ethnic minority youth populations: A literature review and concept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71, 54-78.
- Poister, T. H. (1979) *Public Program analysis Applied Tesearch Methods*. Baltimore: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Quinn, D. E., Cornelius-White, J. H., MacGregor, C., & Uribe-Zarain, X. (2019). The success of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in a TRIO student support services program: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margin. *Critical Questions in Education*, 10(1), 44-64.
- Saaty, T. L. (1977). A scaling method for priorities in hierarchical structures.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15(3), 234-281
- Saa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lanning, priority setting, resource allocation*. McGraw-Hill, New York.
- Saitz, R., Palfai, T. P., Cheng, D. M., Alford, D. P., Bernstein, J. A., Lloyd-Travaglini, C. A., & Samet, J. H. (2014). Screening and brief intervention for drug use in primary care: the ASPIRE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312(5), 502-513.
- SAMHSA (2025a).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https://www.samhsa.gov/about/offices-centers/csap>에서 2025년 3월 7일 인출.
- SAMHSA (2025b). Grants for Expans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Comprehensiv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with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https://www.samhsa.gov/grants/grant-announcements/sm-23->



013 에서 2025년 3월 7일 인출.

Schochet, P. Z. (2021). Longrun labor market effects of the Job Corps program: Evidence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experiment.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40(1), 128-157.

Scriven, M.(1991). *Evaluation thesaurus*, 4th ed. CA: Sage.

Smith, T. (2023). TRIO Programs aren't designed to do it all: Reflective conversations to support first-generation students. *About Campus*, 28(1), 23-27.

Stufflebeam, D. l.(1981). *Metaevaluation: Concept, Standard, and Uses*. Educational Evaluation Methodology. The Johns Hopkins Univ.

Suchman, E. A.(1974). *Evaluative Research*.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25). <https://sprc.org/>에서 2025년 3월 7일 인출.

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2019). *Government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Assessing the evidence on their performanc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0). National evaluation of Upward Bound: Final report.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https://ies.ed.gov> 에서 2025년 3월 20일 인출.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Federal TRIO Program. <https://www.ed.gov/about/ed-offices/ope/trio#home> 에서 2025년 3월 10일 인출.

U.S. Department of Labor (2025). WIOA Workforce Programs. <https://www.dol.gov/agencies/eta/wioa/programs>에서 2025년 3월 20일 인출.

U.S.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Justice Center (2024). 50 States, 1 Goal: Examining state-level recidivism trends in the Second Chance Act Era. <https://csgjusticecenter.org/publications/50-states-1-goal/> 에서 2025년 3월 20일 인출.

Walsh, E., Tapp, Z., Mallonee, E., Hakansson, C., Leigh, A., & Reibel, M. (2024). Implementing LEARN: Comprehensive suicide prevention training for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and school personnel. *Journal of School Health*, 94(11), 1040-1048.

## ○ — 부 록

- 1. 1차 델파이 조사지
- 2. 2차 델파이 조사지
- 3. 전문가 평가지
- 4. 수요자 양적 평가 및 설문지
- 5. 수요자 질적(심층면담) 평가  
및 조사지



## 부록

### 1. 1차 델파이 조사지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안)의 타당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5년도 고유연구과제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이 구안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지표체계(안)'에 대해 그 타당성 확인을 위한 델파이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생각하시는 곳에 표기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란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기본 틀

- 평가대상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평가부문
  -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차원 : 전문가 그룹이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 체계성 평가
  -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차원 : 청년들이 직접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양적·질적)

◎ 다음은 본 연구에서 구안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전문가 그룹이 평가하는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 지표체계(안) 입니다. 이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의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정책 수립의 체계성	1) 청년정책으로서 수립배경은 합리적인가
		2) 청년정책으로서 환경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인가
		3) 청년정책의 현황에 대한 진단은 적절한가
	정책 방향의 적절성	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체계도는 적절한가
		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구성은 적절한가
		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정책 기획의 적정성	7)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8) 청년정책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의 구성은 적절한가
		9)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의 양은 충분한가
	세부 과제의 적합성	10)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진내용은 해당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11)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진일정은 해당 내용 추진에 적절한가
		12)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담당부처는 적절한가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정책 의도의 달성도	13) 청년정책으로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세부과제는 달성되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 성과는 전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
	정책 성과의 효과성	1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한 효과가 있었는가
		17)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요구를 충족시켰는가
		18)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1.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체계성 지표체계(안)의 ‘평가영역’ 설정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 구성	적절성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1.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2.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3.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1-1. 평가영역의 구성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체계성 지표체계(안)의 평가영역을 구성하는 ‘평가항목’ 설정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적절성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정책 수립의 체계성					
	정책 방향의 적절성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정책 기획의 적정성					
	세부 과제의 적합성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정책 의도의 달성도					
	정책 성과의 효과성					

2-1.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의 구성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체계성 지표체계(안) 첫 번째 평가영역(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의 두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 적 합	우 적 합	금 절	보 통	다 적 치 음	소 적 치 음	전 적 치 음	허 적 치 음	매 우 측 정 수 월	우 측 정 수 월	보 통	측 어 움	정 려 움
정책 배경 및 형성 의 정당 성	정책 수립 의 체계 성	1) 청년정책으로서 수립배경 은 합리적인가													
		2) 청년정책으로서 환경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인가													
		3) 청년정책의 현황에 대한 진단은 적절한가													
	정책 방향 의 적절 성	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체계도는 적절한가													
		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영 역과 중점과제 구성은 적 절한가													
		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 적인가													

3-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체계성 지표체계(안) 두 번째 평가영역(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의 두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기획 및 내용 의 타당 성	정책 기획 의 적정 성	7)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8) 청년정책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의 구성은 적정한가										
		9)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의 양은 충분한가										
	세부 과제 의 적합 성	10) 청년정책으로서 세부 과제의 추진내용은 해당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11) 청년정책으로서 세부 과제의 추진일정은 해당 내용 추진에 적절한가										
		12) 청년정책으로서 세부 과제의 담당부처는 적절한가										

4-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체계성 지표체계(안) 세 번째 평가영역(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의 두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움	측정 불가능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정책 의도의 달성도	13) 청년정책으로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세부과제는 달성되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 성과는 전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										
	정책 성과의 효과성	1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한 효과가 있었는가										
		17)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요구를 충족시켰는가										
		18)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5-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본 연구에서 구안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청년들이 직접 평가하는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입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다음의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영역	평가지표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1) 정책의 수립배경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2) 환경분석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3) 정책 현황에 대한 진단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4)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설정은 청년정책으로 충분한가
	5)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6) 해당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7)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8) 해당 정책의 대상(수요자)을 알고 있는가
	9) 해당 정책을 해당 부처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0) 해당 정책의 추진 과정을 매체(미디어) 등을 통해 들은 적이 있는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11)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필요한가
	12)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중요한가
	13) 해당 정책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14) 해당 정책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15) 해당 정책의 담당 부처는 적절한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6) 해당 정책은 의도한 실적을 달성했는가
	17) 해당 정책은 청년이 만족했는가
	18) 해당 정책은 청년의 요구를 충족하는가
	19) 해당 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20) 해당 정책은 청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6.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의 다음 ‘평가영역’ 구성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 구성	적절성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1.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2.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3.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4.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6-1. 평가영역의 구성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의 첫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정당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정당 성	1) 정책의 수립배경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2) 환경분석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3) 정책 현황에 대한 진단은 청년 정책으로 적절한가										
	4)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설정은 청년정책으로 충분한가										
	5)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7-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의 두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인지도)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인지 도	6) 해당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7)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8) 해당 정책의 대상(수요자)을 알고 있는가										
	9) 해당 정책을 해당 부처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0) 해당 정책의 추진 과정을 매체(미디어) 등을 통해 들은 적이 있는가										

8-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9.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의 세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11)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필요한가										
	12)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중요한가										
	13) 해당 정책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14) 해당 정책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15) 해당 정책의 담당 부처는 적절한가										

9-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의 네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 책 의 수 요 자 효 과 성	16) 해당 정책은 의도한 실적을 달성했는가										
	17) 해당 정책은 청년이 만족했는가										
	18) 해당 정책은 청년의 요구를 충족하는가										
	19) 해당 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20) 해당 정책은 청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0-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종합의견] 본 연구에서 구안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지표체계(안)’에 대해 그 밖의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2차 델파이 조사지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안)의 타당성에 대한 2차(최종)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5년도 고유연구과제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 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차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수정안)’에 대해 그 타당성 확인을 위한 2차(최종) 델파이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생각하시는 곳에 표기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란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 (수정안)】입니다. 이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의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기본 틀(수정안)〉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기본 틀(최초안)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기본 틀(수정안)
<p>○ 평가대상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기본계획이다 보니 예산, 인력, 추진과정, 사업결과 등에 관한 구체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한계 고려</p> <p>○ 참조모형 : Scriven의 수혜자 중심 평가모형</p> <p>○ 평가부문 -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차원 : 전문가 그룹이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 체계성 평가 -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차원 : 청년들이 직접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p> <p>○ 지표체계 : 평가지표 이원화(전문가 지표 &amp; 수요자 지표)</p>	<p>○ 평가대상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기본계획이다 보니 예산, 인력, 추진과정, 사업결과 등에 관한 구체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한계 고려</p> <p>○ 참조모형 : Scriven의 수혜자 중심 평가모형</p> <p>○ 평가부문 - 【전문가 평가】 :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지표)’에 따른 평가 - 【수요자 평가】 :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지표)’에 따른 평가 + 정책인지도 등 정책수요 설문 병행</p> <p>○ 지표체계 : 평가지표 체계 통합(전문가·수요자 공통지표)</p>

###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수정안)〉

평가영역 (수정안)	평가지표(수정안)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을 고려하는가 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8)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배경(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는가 9)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1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1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1.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에 있어서 ‘평가영역’ 설정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최초안)		평가영역 (수정안)	적절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정책 수립의 체계성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정책 방향의 적절성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정책 기획의 적정성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세부 과제의 적합성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정책 의도의 달성도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정책 성과의 효과성						

※ 기존 최초안의 평가영역-평가항목 2단계 구분을 수정안에서는 평가항목을 없애고  
평가영역으로만 구분함

1-1. 평가영역 수정안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 수정안에서 첫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안			수정안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정책 배경 및 형성 의 정당 성	정책 수립 의 체계 성	1) 청년정책으로서 수립배경은 합리적인가 2) 청년정책으로서 환경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인가 3) 청년정책의 현황에 대한 진단은 적절한가	정책 의 수요 자 방향 성	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을 고려하는가 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정책 방향 의 적절 성	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체계도는 적절한가 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구성은 적절한가 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평가 영역	평가지표(수정안)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방향 성	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 년을 고려하는가										
	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 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 가										

2-1. 첫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의 평가지표 수정안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 수정안에서 두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안			수정안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정책 기획의 적정성	7)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8) 청년정책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의 구성은 적절한가 9)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의 양은 충분한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8)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배경(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는가 9)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1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세부과제의 적합성	10)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진내용은 해당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11)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진일정은 해당 내용 추진에 적절한가 12)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담당부처는 적절한가		

평가 영역	평가지표(수정안)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 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8)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배경(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는가										
	9)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1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1. 두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의 평가지표 수정안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 수정안에서 세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안			수정안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정책 의도 및 성과 의 효과 성	정책 의도 의 달성 도	13) 청년정책으로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세부과제는 달성되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 성과는 전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1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정책 성과 의 효과 성	1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한 효과가 있었는가 17)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요구를 충족시켰는가 18)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평가 영역	평가지표(수정안)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 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1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 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4-1. 세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의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종합의견]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수정안)’에 대해 그 밖의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전문가 평가지

#분과 기본 배경 및 중점 분야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수정안 통합본)에 대한 전문가 평가

◎ 다음은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근거한 평가지표입니다. 평가자료(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수정안 통합본)의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의 평가지표 각각에 대해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수에 체크(√ 혹은 ○)하고 평가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본 배경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점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1-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1-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1-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1-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1-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2-1.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 평가의견 :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의 5개 평가지표(기본 배경) 및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중 1개 평가지표(5대 중점분야 설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문제점, 개선방향)	-
---------------------	---

■ 중점 분야(1)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점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2-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2-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2-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은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평가의견 :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있어서 기본계획(평가자료)의 중점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문제점, 개선방향)	-
---------------------	---

■ 중점 분야(2)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점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2.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2-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2-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2-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평가의견 :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있어서 기본계획(평가자료)의 중점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문제점, 개선방향)	-
---------------------	---

■ 중점 분야(3)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점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2.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2-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2-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2-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은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평가의견 :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있어서 기본계획(평가자료)의 중점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문제점, 개선방향)	-
---------------------	---

■ 중점 분야(4)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점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2.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2-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2-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2-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평가의견 :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있어서 기본계획(평가자료)의 중점 분야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문제점, 개선방향)	-
---------------------	---

■ 총평 :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총평	
----	--

#### 4. 수요자 양적 평가 및 설문지

###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니다.

저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2025년도 연구과제인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된 청년정책에 대해 수요자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년층(만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의 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맞고 틀리는 답은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황과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PART A. 응답자 선정

###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 2.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 주세요.

- ① 만19~24세              ② 만25~29세              ③ 만30~34세

※ 만19세 미만, 34세 초과 응답자 OUT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중    ③ 대졸    ④ 대학원 석사졸    ⑤ 대학원 박사졸

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6.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층    ④ 중하층    ⑤ 하층

7.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귀하의 평균 월소득(세전)은 얼마입니까?

: 본인 1인이 한달간 번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                      )원

※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e-나라지표(2025).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 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에서 2025. 5. 15 인출)



## PART B.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기본 배경에 대한 인식

◎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의 내용입니다. 각 박스 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의 수립 배경〉

□ (배경)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이념\*(법 제2조)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법 제8조) → 제1차 5개년('21~'25) 계획

\* 제2조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절차·후속조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확정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적용 대상) 만19세~34세\* 대한민국 국민(법 제3조) 및 국가·자치단체

\* 제3조 : 타 법령·조례에 청년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예외적 적용 가능

□ (변화 대응)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상황 악화로 일자리, 주거 등 삶의 질이 열악해지고, 사회진출·자립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 심화

1.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정책의 수립 배경’은 청년들의 시각이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

<p><b>□ [청년 삶 여건] 3高(고금리·고물가·강달러) 현상으로 복합위기 직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채용규모 축소, 디지털·비대면 가속화, 경력·수시 위주 채용 트렌드 등으로 청년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li> <li>-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주거비·생활비 상승 및 채무부담 증가</li> <li>-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빚투·영끌 및 위험자산 투자 급증,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후 경제·심리적 어려움 직면</li> </ul>
<p><b>□ [격차 확대] 부모배경·지역 등에 따른 청년 내 격차·기회불평등 심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격차) 출발점의 차이는 청년들의 박탈감 야기, 향후 개인역량·직업 등 더 큰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 초래</li> <li>- (지역격차) 지방청년은 취업기회를 위해 수도권 이주 불가피, 반면 높은 주거비 등 어려움에 직면</li> </ul>
<p><b>□ [낮은 체감도] 청년정책 인식·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부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은 실질적 권한 부여와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 정부 조직 내부에도 청년 정책 참여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 증가</li> </ul>

2.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청년들의 삶을 적절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p><b>□ 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 차원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실용적 지원으로 전환</li> <li>- 청년이란 특정분야 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li> <li>-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정책의 컨트롤 타워 구축 등 정책적 토대 마련</li> </ul>
<p><b>□ 한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정책 중심</li> <li>-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정부부처 위주로 추진</li> <li>- 코로나19 등 대처를 위한 고용정책 위주로 되어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 미흡</li> </ul>
<p><b>□ 시사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내에서 연령 구간별 정책요구 및 정책수요 차이 반영 필요</li> <li>-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와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등 인식 변화와 고용시장에서 새로운 고용형태(비정형·비임금 노동) 증가 등 종합적 고려 필요</li> <li>- 포스트 코로나19·4차산업혁명·기후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li> </ul>

3.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정책의 비전 및 목표〉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p>4. 그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수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p>
방향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전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3대 원칙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5대 정책 방향 및 중점 과제	<div> <div> <b>일자리</b>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li> <li>②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li> <li>③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li> <li>④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li> </ul> </div> <div> <b>주거</b>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li> <li>② 청년의 전월세 비용 감감</li> <li>③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li> <li>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li> </ul> </div> </div> <div> <div> <b>교육</b>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른 교육기회 보장</li> <li>②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li> <li>③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li> <li>④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li> </ul> </div> <div> <b>복지·문화</b>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li> <li>② 청년건강 증진</li> <li>③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li> <li>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li> </ul> </div> </div> <div> <b>참여·권리</b>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li> <li>②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li> <li>③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li> <li>④ 청년 권리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li> </ul> </div>	

##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

<p><b>5년 후 달라지는 청년의 삶</b></p> <div> <div> <b>일자리</b>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까지 128만명+α 청년구직지원</li> <li>● 코로나19 극복 55.5만명 지원</li> <li>●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li> <li>●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li> </ul> </div> <div> <b>주거</b> 청년의 주거 부담이 줄어듭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주택 27만 3천호 공급</li> <li>●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감축</li> <li>● 43만 5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li> </ul> </div> </div> <div> <div> <b>복지·문화</b>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지속계좌 통합·신설 10만명 자산형성 지원</li> <li>● 매달 한 번은 문화가 함께 하도록 기반 확대</li> <li>● 청년 마음건강 바꾸어 지원</li> </ul> </div> <div> <b>교육</b>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li> <li>● 미래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li> <li>●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교육·일자리·주거)</li> </ul> </div> </div> <div> <b>참여·권리</b>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참여 20~30</li> <li>●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지정</li> <li>● 청년참여 전국 확대 기초자치체 226개</li> <li>● 온라인 청년하나로 구축</li> </ul> </div>	<p>5. 그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서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개선된 모습은 실제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p>
--	---

## PART C. 청년정책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인식

### I.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정책분야 구분의 적절성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은 5대 중점분야 즉,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로 필요한 정책의 영역을 구분하여 수립하였는데, 이와 같은 5대 분야로 정책을 구분하여 추진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II.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5대 정책분야별 적절성

1. (일자리 분야)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중 일자리 분야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세요.

#### □ 정책과제 1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민간기업 연계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보호 강화
- 민관협업을 통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분야 중심의 실무형 훈련 확대를 통해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 지원

#### □ 정책과제 2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 기술창업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교육, 자금 지원, 재창업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분야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 농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 촉진

#### □ 정책과제 3 :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청년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배달종사자 보호 등 청년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 정책과제 4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비리 신고체계 구축,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등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로여건이 우수한 기업 지원, 일·생활 균형 확대, 성평등 및 모성보호제도 개선 추진

영역	문항	매우 그렇 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1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1-1-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4.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2-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2-5.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주거 분야)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중 주거 분야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세요.

□ 정책과제 1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청년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분양, 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 등 약 34만 호를 '27년까지 공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층 접근성 높임
- 대학 내외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정책과제 2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주거 안정 지원
- 월세 지원, 저금리 대출, 청약통장 우대 등으로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 강화

□ 정책과제 3 : 주거 취약청년 집중 지원

-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노후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 불법 건축물과 대학가 인근의 취약 주거지를 집중 단속하여 근본적인 개선 추진
- 허위 매물 단속, 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감독 강화를 통해 청년 임차인의 권익 보호

□ 정책과제 4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청년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공유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기반 마련
- 지방 도시에 혁신공간과 주거플랫폼을 조성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영역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1-1-1.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2-1.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2-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교육 분야)**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중 교육 분야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세요.

□ **정책과제 1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 분야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며 부처 간 협업 확대
- 대학은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통해 핵심 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인재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

□ **정책과제 2 : 고른 교육기회 보장**

- 저소득층 대학생과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등록금 경감, 후학습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
- 지역 발전과 연계된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의 동반성장 추진
- 직업교육 혁신지구와 전문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기반의 실무형 인재 육성 강화

□ **정책과제 3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고졸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및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속 지원하며, 취업지원관을 확대해 고용지원기반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계약학과 확대
- 대학생과 청년의 진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탐색 학점제 확대, P-Tech 참여 학교 확대, 군 복무 청년의 사회 진출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 **정책과제 4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와 온택트 평생배움터를 강화하여 신산업과 핵심 기술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 취득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원격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격차 해소



영역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1-1-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4.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2-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2-5.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복지·문화 분야)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중 복지·문화 분야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세요.

□ 정책과제 1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고, 병사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
-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취업준비생 생활비 지원, 채무조정 강화 및 실용금융 교육을 통해 재정적 안정과 자립 지원

□ 정책과제 2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인상, 디딤씨앗통장 제도 개선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강화
- 고립·은둔청년과 청년한부모, 1인 가구를 위한 자립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우며,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빈곤청년을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와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 지속

□ 정책과제 3 : 청년건강 증진

-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와 중독 예방 및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신체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대하여 건강 증진 지원
- 청년 맞춤형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 관리 인프라 확장

□ 정책과제 4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학 연계 교육, 인턴십, 창업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모험투자펀드를 통해 콘텐츠 제작 자금 공급
-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예술가와 창작자에게도 지원 확대
- 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인에게 창작준비, 기획전시, 발표 등 지원하며, 미디어 활동 촉진

영역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1-1-1.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2-1.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2-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참여·권리 분야)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중 참여·권리 분야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세요.

□ 정책과제 1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전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하고, 청년인재 정보풀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 제도 운영
-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혁과제와 미래의제를 주도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정책과제 2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구직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며, 재원조성 방안 강구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청년 삶 기준선과 통계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강화
- 지역 청년정책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청년사업을 지원하며 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축

□ 정책과제 3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이 모든 청년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체감도 높임
-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정착 지원, 지역 관광 홍보 및 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동 확대

□ 정책과제 4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청년의 노동, 금융, 주거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청년이 주제와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교류 촉진

영역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1-1-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2-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2-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PART D.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

### I. 기본 배경

1.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시 정책 수립 배경에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인구 구조 변화(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 반영
  - ② 청년의 정신건강, 고립, 고독 등 사회적 위험 요인 대응 필요성
  - ③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청년 역량 강화 필요성
  - ④ 기후 위기,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청년의 역할 및 대응 기반 마련
  - ⑤ 수도권 지역 격차 및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청년 육성 정책 필요성
  - ⑥ 청년 세대 내 다양성(장애, 성별, 가족 형태 등)에 대한 포용적 접근 강조
  
2.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시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확산 등 기술 변화로 인한 청년의 직업 환경 변화
  - ②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
  - ③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
  - ④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
  - ⑤ 정치·사회 참여 필요성 확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정책 참여
  - ⑥ 지역 간 격차 및 수도권 집중 문제
  
3.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 성과 및 문제점 진단에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책 수혜자들의 실제 경험 및 만족도
  - ②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
  - ③ 다양한 청년 집단(연령, 지역, 계층 등)의 요구 반영 정도
  - ④ 단기적인 실적 중심 평가의 한계 및 장기적 영향 진단
  - ⑤ 미래 사회 이슈(기후 위기, 기술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 정도
  - ⑥ 청년의 의견 수렴, 정책참여 및 정책 반영 정도 평가

4.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시, 정책 비전 및 방향에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청년의 특성과 배경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② 미래 환경 변화(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는 청년정책 비전 제시
  - ③ 청년정책의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
  - ④ 교육-고용-주거-복지의 생애주기별 연계 강화
  - ⑤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견의 수렴되고 반영되는 체계 강화
  - ⑥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5.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시,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
  - ②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 ③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청년 복지 강화
  - ④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육 기회 보장
  - ⑤ 청년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직접 참여 제도 확대
  - ⑥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농·산·어촌 생활 지원 인프라 구축

## II. 일자리 분야

6.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및 민간 기업 연계 강화
  - ②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 ③ 실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 ④ 신기술 위주의 교육 기회 확대
  - ⑤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하는 지원 사업 강화

7.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② 초기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지원 강화
  - ③ 다양한 분야(농·산·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등)의 스타트업 지원
  - ④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 지원
  - ⑤ 청년창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⑥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대출 및 이자 지원 등) 강화
8.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확대
  - ② 표준계약서 활용 및 보급 확대
  - ③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
  - ④ 플랫폼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⑤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제도 활성화
9.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정한 채용을 위한 법률 제정
  - ② 능력과 역량 중심의 채용방식의 개발 및 확산
  - ③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
  - ④ 공정한 채용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지원
  - ⑤ 공정한 채용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10.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 배경별 맞춤형 정책 강화
  - ② 청년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 ③ 근로여건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④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 ⑤ 직장 내 성평등 및 모성 보호 제도의 강화
  - ⑥ 기타 ( )



### Ⅲ. 주거 분야

11.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에 특화된 주거 공급을 위한 법제도 개선
- ②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지원 강화
- ③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청년 주택 건설 강화
- ④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 ⑤ 청년주택 건설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⑥ 청년주택 공급가격 제한 및 투명성 확보

12.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월세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②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③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
- ⑤ 청년대상의 주거급여 제도 신설
- ⑤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청년에 대한 지원책 강화

13.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열악한 주거환경(고시원, 반지하 등)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②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③ 전세사기 및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 ④ 대학가, 고시촌 등 청년 밀집 지역의 지역 환경 개선 추진
- ⑤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예산 확충

14.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공유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 ② 청년 친화적 주택 모델 개발에 청년 참여 확대
- ③ 수도권 이외 지방 정착 및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 ④ 청년 친화적 주택 보급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
- ⑤ 청년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확대

15.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주거비 직접 지원
- ② 청년 주택 선택의 다양성 확대
- ③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④ 청년의 최저주거기준 이행 점검
- ⑤ 청년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⑥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 ⑦ 기타 (\_\_\_\_\_)

#### IV. 교육 분야

16.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첨단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
- ② 대학과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 촉진
- ③ 첨단 기술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④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⑤ 인재양성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17.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 취약계층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 ② 수도권 이외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
- ③ 직업교육 및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 ④ 장학금 및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 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
- ⑥ 취업준비 증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

18. 교육-일자리 연계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졸 청년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실습 강화
- ② 고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지원 강화
- ③ 대학생 및 청년층의 진로탐색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제 확대
- ④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
- ⑤ 군 복무 중 청년의 진로 준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⑥ 대학에서의 기업 연계 계약학과 확대

19.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온라인 지식공유시스템(K-MOOC) 확대
- ② 신산업 및 핵심기술 맞춤형 교육 제공
- ③ 대학 원격교육 지원 강화 및 질적 향상
- ④ 원격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 ⑤ 취업-학점 연계 교육과정 확대

20.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첨단 분야 및 신기술 교육 강화
- ② 학교-일자리 연계 맞춤형 교육 확대
- ③ 고졸 취업 및 직업계 고교교육 지원 강화
- ④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확충
- 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확대
- ⑥ 온택트 교육 활성로 교육격차 해소
- ⑦ 기타 ( )

## V. 복지·문화 분야

21. 향후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저축계좌 확대
- ② 군복무 중 임금 인상 및 장병적금제도 강화
- ③ 청년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
- ④ 취업준비과정에서 재정 지원 및 채무 조정 강화
- ⑤ 청년 대상 금융교육 확대

22.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강화
- ② 청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 ③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 ④ 장애청년을 위한 심리 및 진로 상담,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 ⑤ 빈곤 청년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확대
- ⑥ 지역별 청년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

23. 향후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 ②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강화
- ③ 신체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 ④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 ⑤ 지역사회 내 스포츠 및 건강 관리 시설 확충

24.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문화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② 산·학·연·관 간 연계성을 통한 젊은 문화인재 육성
- ③ 문화 및 예술 콘텐츠 제작 펀드(자금) 조성
- ④ 청년예술가와 청년창작자 지원 확대
- ⑤ 청년작가 및 예비창작자를 위한 창작교육 및 전시·공연 지원

25.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자산운용 및 재정안정 지원
- ②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 ③ 청년 건강증진 정책 개선 및 확대
- ⑤ 청년 문화 역량 강화 지원
- ⑤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 지원 확대
- ⑥ 청년의 자유로운 문화생활 향유 기반 조성
- ⑦ 기타 ( )

## VI. 참여·권리 분야

26.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
- ②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 풀 확대 및 활용
- ③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단체 예산 지원 확대
- ④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정례적인 공론장 마련
- ⑤ 청년활동가 지원 제도 마련

27.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청년정책 정보 통합서비스
- ② 청년정책에 대한 안내 창구 확대
- ③ 모바일 앱 기반의 청년정책 서비스 강화
- ④ 지역청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및 예산 확충
- ⑤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
- ⑥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한 청년정책 홍보 강화

28.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확대
- ② 청년 대상 금융교육 강화
- ③ 청년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적 지원서비스 강화
- ④ 청년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
- ⑤ 청년의 배경에 따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캠페인
- ⑥ 청년 권익보호를 전담하는 정부산하의 독립기관 설립

29.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주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 ② 해외 인턴십 및 봉사활동 지원
- ③ 글로벌 이슈에 관한 청년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 ④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
- ⑤ 청년의 국제활동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 ⑥ 청년의 외국어 및 글로벌 리터러시 함양 프로그램 확대

30.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치
- ② 청년의 삶과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
- ③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
- ④ 지역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⑤ 산·학·연·관 간의 청년정책 협력 기반 조성
- ⑥ 기타 ( )

감사합니다.

## 5. 수요자 질적(심층면담) 평가 및 조사지

###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면담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정부가 수립해서 추진해 온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그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면담조사에 포함된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속이나 개인적인 배경은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가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청년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면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 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성명		연령(만)		성별	
교육 수준	고졸 (     ) 전문대졸 (     ) 대졸 (     ) 대학원재학 이상(     )				
거주 지역	광역시/특별시(     )    중소도시 (     ) 읍면 지역 (     )				
혼인 상태	미혼(     ) 기혼(     )				
경제 활동	경제 활동	정규직(     ) 비정규직 (     ) 실업(     ) *실업: 경제활동 중, 실업급여 수급 등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비경제 활동	재학 (     ) 비재학(     ) *비재학: 휴학,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계층 인식	상층(     ) 중상층(     ) 중층(     ) 중하층(     ) 하층(     )				
e-mail					

## PART 1. 기초 정보

- (교육수준) 최종 학력
- (거주지역)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
- (혼인상태) 결혼 여부
- (경제활동) 현재 경제활동 참여 유형
- (비경제활동) 재학하고 있는 대학유형(4년제 여부)/대학원 또는 휴학하게 된 이유 등
- (계층인식)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관한 주관적 인식



## PART 2. 도입 질문

1.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고 있다면) 일반 청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정책은 실제 청년들의 삶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른다면) 잘 모르고 있다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실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부가 2021년~2025년까지 5개년 정책으로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다면) 일반 청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정책은 실제 청년들의 삶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른다면) 잘 모르고 있다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실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다면) 일반 청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법률은 실제 청년들의 삶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른다면) 잘 모르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실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정부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심, 노력 있음)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관심, 노력 없음)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PART 3. 수요자 평가(1) :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의 수립 배경' 내용자료 제시

(※ 제시자료 1/설명 병행)

1.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의 수립 배경'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정책의 수립 배경'은 청년들의 시각이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 내용자료 제시

(※ 제시자료 2/설명 병행)

2.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청년들의 삶을 적절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내용자료 제시

(※ 제시자료 3/설명 병행)

3.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의 비전 및 목표' 내용자료 제시

(※ 제시자료 4/설명 병행)

4.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의 비전 및 목표'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수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 내용자료 제시

(※ 제시자료 5/설명 병행)

5.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서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개선된 모습은 실제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PART 4. 수요자 평가(2) : 5대 중점분야별 타당성 및 효과성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대 중점분야 즉,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로 필요한 정책의 영역을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5대 분야로 정책을 구분하여 추진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점분야'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다는 무엇입니까?

### ◎ [2~10문항 '일자리 분야' 내용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한 후에 질의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자료 6/설명 병행)

2.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1~19문항 ‘주거 분야’ 내용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한 후에 질의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자료 7/설명 병행)

11.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8.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28문항 '교육 분야' 내용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한 후에 질의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자료 8/설명 병행)

20.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3.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4.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5.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6.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7.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8.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9~37문항] ‘복지·문화 분야’ 내용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한 후에 질의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자료 9/설명 병행)

29.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0.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2.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3.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4.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5.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6.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7.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8~46문항 ‘참여·권리 분야’ 내용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한 후에 질의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자료 10/설명 병행)

38.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9.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0.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2.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3.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4.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5.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6.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별첨 : 면담 시 제시자료

### ■ 제시자료 1 (PART 3 - 문항 1) : 정책의 수립 배경

- (배경)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이념\*(법 제2조)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  
본계획 수립(법 제8조) → 제1차 5개년('21~'25) 계획
  - \* 제2조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 (절차·후속조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확정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적용 대상) 만19세~34세\* 대한민국 국민(법 제3조) 및 국가·자치단체
  - \* 제3조 : 타 법령·조례에 청년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예외적 적용 가능
- (변화 대응)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상황 악화로 일자리, 주거 등 삶의 질이 열악해지고,  
사회진출·자립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 심화

### ■ 제시자료 2 (PART 3 - 문항 2) :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

- [청년 삶 여건] 3高(고금리·고물가·강달러) 현상으로 복합위기 직면
  -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채용규모 축소, 디지털·비대면 가속화, 경력·수시 위주 채용  
트렌드 등으로 청년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
  -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주거비·생활비 상승 및 채무부담 증가
  -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빚투·영끌 및 위험자산 투자 급증,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후 경제·심리적 어려움 직면
- [격차 확대] 부모배경·지역 등에 따른 청년 내 격차·기회불평등 심화
  - (자산격차) 출발점의 차이는 청년들의 박탈감 야기, 향후 개인역량·직업 등 더 큰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 초래
  - (지역격차) 지방청년은 취업기회를 위해 수도권 이주 불가피, 반면 높은 주거비 등  
어려움에 직면
- [낮은 체감도] 청년정책 인식·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부족
  - 청년들은 실질적 권한 부여와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 정부 조직 내부에도 청년 정책  
참여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 증가

## ■ 제시자료 3 (PART 3 - 문항 3) :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 □ 성과

- 생애주기 차원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실용적 지원으로 전환
- 청년이란 특정분야 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
-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정책의 컨트롤 타워 구축 등 정책적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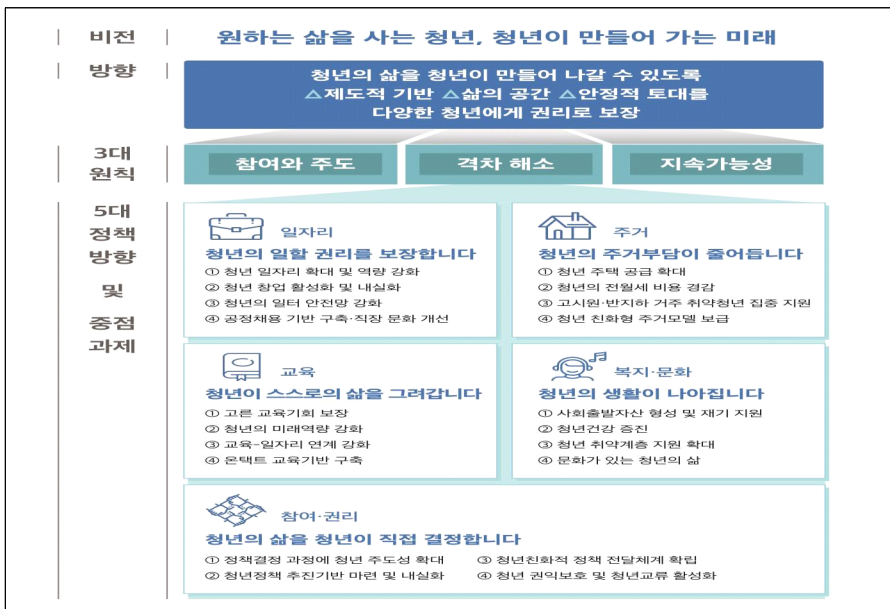
### □ 한계

-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정책 중심
-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정부부처 위주로 추진
- 코로나19 등 대처를 위한 고용정책 위주로 되어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 미흡

### □ 시사점

- 청년층 내에서 연령 구간별 정책요구 및 정책수요 차이 반영 필요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와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등 인식 변화와 고용시장에서 새로운 고용형태(비정형·비임금 노동) 증가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포스트 코로나19·4차산업혁명·기후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 ■ 제시자료 4 (PART 3 - 문항 4) : 정책의 비전 및 목표



## ■ 제시자료 5 (PART 3 - 문항 5) :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



## ■ 제시자료 6 (PART 4 - 문항 2~10) : 일자리 분야

### □ 정책과제 1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민간기업 연계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보호 강화
- 민관협업을 통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분야 중심의 실무형 훈련 확대를 통해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 지원

### □ 정책과제 2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 기술창업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교육, 자금 지원, 재창업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분야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 촉진

### □ 정책과제 3 :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청년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배달종사자 보호 등 청년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 정책과제 4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비리 신고체계 구축,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등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로여건이 우수한 기업 지원, 일·생활 균형 확대, 성평등 및 모성보호제도 개선 추진

## ■ 제시자료 7 (PART 4 - 문항 11~19) : 주거 분야

### □ 정책과제 1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청년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분양, 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 등 약 34만 호를 '27년까지 공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층 접근성 높임
- 대학 내외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

### □ 정책과제 2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주거 안정 지원
- 월세 지원, 저금리 대출, 청약통장 우대 등으로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 강화

### □ 정책과제 3 : 주거 취약청년 집중 지원

-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노후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 불법 건축물과 대학가 인근의 취약 주거지를 집중 단속하여 근본적인 개선 추진
- 허위 매물 단속, 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감독 강화를 통해 청년 임차인의 권리 보호

### □ 정책과제 4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청년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공유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기반 마련
- 지방 도시에 혁신공간과 주거플랫폼을 조성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 ■ 제시자료 8 (PART 4 - 문항 20~28) : 교육 분야

### □ 정책과제 1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 분야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며 부처 간 협업 확대
- 대학은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통해 핵심 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인재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

### □ 정책과제 2 : 고른 교육기회 보장

- 저소득층 대학생과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등록금 경감, 후학습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
- 지역 발전과 연계된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의 동반성장 추진
- 직업교육 혁신지구와 전문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기반의 실무형 인재 육성 강화

### □ 정책과제 3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고졸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및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속 지원하며, 취업지원관을 확대해 고용지원기반 강화
- 민간 협업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계약학과 확대
- 대학생과 청년의 진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탐색 학점제 확대, P-Tech 참여 학교 확대, 군 복무 청년의 사회 진출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 □ 정책과제 4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와 온택트 평생배움터를 강화하여 신산업과 핵심 기술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 취득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원격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격차 해소

## ■ 제시자료 9 (PART 4 - 문항 29~37) : 복지·문화 분야

### □ 정책과제 1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고, 병사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
-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취업준비생 생활비 지원, 채무조정 강화 및 실용금융 교육을 통해 재정적 안정과 자립 지원

### □ 정책과제 2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인상, 디딤씨앗통장 제도 개선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강화
- 고립·은둔청년과 청년한부모, 1인 가구를 위한 자립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우며,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빈곤청년을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와 자립지원 전달기관의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 지속

### □ 정책과제 3 : 청년건강 증진

-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와 중독 예방 및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신체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대하여 건강 증진 지원
- 청년 맞춤형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 관리 인프라 확장

### □ 정책과제 4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학 연계 교육, 인턴십, 창업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모험투자펀드를 통해 콘텐츠 제작 자금 공급
-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예술가와 창작자에게도 지원 확대
- 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인에게 창작준비, 기획전시, 발표 등 지원하며, 미디어 활동 촉진

## ■ 제시자료 10 (PART 4 - 문항 38~46) : 참여·권리 분야

### □ 정책과제 1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전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하고, 청년인재 정보풀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 제도 운영
-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버너스를 통해 개혁과제와 미래의제를 주도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정책과제 2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구직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며, 자원조성 방안 강구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청년 삶 기준선과 통계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강화
- 지역 청년정책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청년사업을 지원하며 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축

### □ 정책과제 3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이 모든 청년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체감도 높임
-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정착 지원, 지역 관광 홍보 및 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동 확대

### □ 정책과제 4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청년의 노동·금융·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하반기 교육훈련비 지원과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청년이 주제와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교류 촉진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수요자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우선, 정책평가 및 평가모형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 수요자 관점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논의하고, 평가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 수요자 중심 평가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개발을 위하여 구안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체제 및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해 AHP를 통한 평가가중치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을 위한 전문가 평가와 정책수요자인 청년 당사자 평가를 시행하였다. 수요자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와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정성평가로 운영하고, 청년 대상 수요자 평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수요와 욕구 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고객인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 평가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즉,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계 구축이란 비전 하에 6개 분야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년, 청년정책,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정책요구

## ABSTRACT

### **Study on Diagnosing Youth Policy Using a Consumer-Oriented Evaluation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youth policies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applying a consumer-oriented evaluation model that centers on the perspectives and needs of youth as the primary policy clients. First, prior studies and literature on policy evaluation and evaluation model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discussed the concept and scope of a consumer-oriented perspective in youth policy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consumer-oriented evaluation from program evaluation models, which serve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sumer-oriented evaluation model, the proposed structure and evaluation indicators were validated through a Delphi survey of experts. In addition, evaluation weights for the domains and indicators were deriv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developed model was then applied to diagnose youth policy through evaluations conducted both by experts and by youth as the policy clients. The consumer-oriented evaluation combined quantitative

assessments based on the indicators with qualitative evaluation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hile the youth evaluation additionally included surveys of policy consumer and needs.

Finally, by conducting diagnostic evaluations of youth policies centered on youth as policy clients and by incorporating diverse opinions from young people, the study identified policy tasks for improving youth policy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Based on the vision of establishing a youth policy framework centered on policy beneficiaries, a total of 30 policy tasks across six areas were proposed.

Key words: Youth, Youth Policy, Consumer-Oriented, Evaluation Model, Policy Needs





##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해정
-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연경·정송
-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 수 탁 과 제

### 〈일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호·박현정·김희정
-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 자 료 집

### 〈세미나〉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워크숍〉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럼〉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로키움〉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타자료집〉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 25-기본04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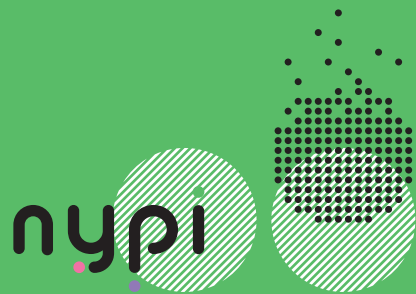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48-7 93330

연구보고25-기본04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48-7